

발간등록번호

11-1312000-000035-10

2015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이용자를 위하여

1. 통계표 및 도표 내의 숫자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 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통계표 및 도표에 사용된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 : 조사되었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0.0’ : 조사 결과 값이 0이거나 0에 근사한 경우
3. 본 조사에서 제시된 통계표 중 복수응답, 중복응답 설문은 설문의 구성비의 합계가 100을 초과할 수 있음
4.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임을 밝혀야 함

목 차

○ 조사개요	1
1. 조사목적	3
2. 조사체계	4
1) 조사대상	4
2) 조사기간	4
3) 조사기관	4
3. 표본설계	5
1) 민간사업체	5
2) 공공부문	7
3) 정보주체(일반국민)	7
4. 조사내용 및 항목	8
5. 실사진행	10
1) 조사방법	10
2) 조사절차	10
6. 자료검증 및 처리	11
1) 자료검증	11
2) 자료처리	11
7. 참고	12
1)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기초한 업종 재분류 현황	12
2) 주요 용어 및 정의	14

목 차

○ 조사결과_개인정보처리자

17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19
1) 개인정보 수집 대상	19
2) 개인정보 수집 경로	22
3) 개인정보 수집 목적	24
4) 개인정보 수집 방법	27
5) 개인정보 수집 근거	29
6)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인지 여부	32
7)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준수 여부	35
8) 개인정보 보유 현황	37
2.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위탁·파기	39
1) 제3자 제공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	39
2) 제3자 제공 현황	41
3) 제3자 제공 목적	43
4) 수집 목적 외 이용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	45
5) 수집 목적 외 이용 현황	47
6) 수집 목적 외 이용 목적	50
7)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공개	52
8)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방법(문서) 인지 여부	55
9)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방법(문서) 실시 여부	57
10) 개인정보 파기	59

목 차

○ 조사결과_개인정보처리자

3. 주민등록번호 및 민감정보	62
1) 주민등록번호 수집 목적	62
2)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65
3)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68
4) 선호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70
5) 민감정보 수집 목적	72
6) 민감정보 수집 근거	74
4. 영상정보 처리기기	76
1)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	76
2)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목적	79
3)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공개방법	81
4)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83
5. 안전성 확보 조치	86
1) 개인정보 저장 및 관리 프로그램(소상공인)	86
2)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소상공인 제외)	88
3)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현황	91
4) 암호화 대상 정보 암호화 현황	93
5)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 여부	96
6)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	98
6. 정보주체 권리보장	100
1) 정보주체 권리보장 인지 여부	100
2) 정보주체 권리보장 실시 여부	101

목 차

○ 조사결과_개인정보처리자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직 및 예산	103
1)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	103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여부	105
3) 개인정보보호 예산	109
8. 개인정보보호 교육	111
1)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111
2) 개인정보보호 교육 횟수	113
3)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	115
9. 법 인지도 및 애로사항	117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지 여부	117
2)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행(2016.01) 인지 여부	119
3)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인지('16.07부터)	121
4)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지	122
5)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요성	124
6)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정보 보유 및 평가실시	126
7) 향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의향	127
8) 개인정보보호법 제반 규정 이해 및 시행 애로사항	129
10. 개인정보 유출	132
1) 대규모 유출사고 원인	132
2) 개인정보 유출 시 현재의 처벌 강도	134
3)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	136

목 차

○ 조사결과_개인정보처리자

11. 빅데이터 분석	138
1)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경험	138
2)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처리	140
12. 정책 제언	142
1)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부정책	142
2) 개인정보보호법 및 제도에 대한 의견 및 개선사항	145

목 차

○ 조사결과_정보주체	147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149
1) 개인정보 제공 현황	149
2)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150
3)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인지	151
4)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이행	152
5)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인지	153
6) 사업자(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이행	154
7)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편리한 매체	155
2. 개인정보 침해 및 피해구제	156
1)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경험	156
2)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횟수	157
3) 개인정보 침해 시 유출 관련 통지 경험	158
4)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159
5)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원인	161
6)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	162
7)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 변화	163
3. 정보주체 권리보장	164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경험	164
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하지 않은 이유	165
4. 동의서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166
1) 동의서 확인	166
2) 동의서 미확인 이유	167
3) 개인정보처리방침 인지	168
4)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169
5)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	170

목 차

○ 조사결과_정보주체

5.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171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지 여부	171
2)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행(2016.01) 인지 여부	172
3)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4.08) 이후 사업자(공공기관) 변화	173
4) 개인정보보호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174
6.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	175
1)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경험	175
2) 향후 교육 받고 싶은 기관	176
3)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 인지 경로	177
4)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내용 인지 경로	178
7.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식 변화	179
1) 전년대비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실천 변화	179
2) 전년대비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절차 변화	180
3) 개인정보 처리절차 변화에 따른 불편함에 대한 의견	181
4)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기업(기관) 선호에 미치는 영향	182
8. 정책 제언	183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정책	183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	184

○ 부 록

185

목 차

○ 표목차

<표-1>	모집단 - 민간사업체	5
<표-2>	표본추출 - 민간사업체	6
<표-3>	공공부문 모집단 및 표본추출	7
<표-4>	조사 내용 및 항목 - 개인정보처리자	8
<표-5>	조사 내용 및 항목 - 정보주체	9
<표-6>	개인정보 수집 대상(%)-공공부문	21
<표-7>	개인정보 수집 대상(%)-사업체	21
<표-8>	개인정보 수집 경로(%)-공공부문	23
<표-9>	개인정보 수집 경로(%)-사업체	23
<표-10>	개인정보 수집 목적(%)-공공부문	26
<표-11>	개인정보 수집 목적(%)-사업체	26
<표-12>	개인정보 수집 방법(%)-공공부문	28
<표-13>	개인정보 수집 방법(%)-사업체	28
<표-14>	개인정보 수집 근거(%)-공공부문	31
<표-15>	개인정보 수집 근거(%)-사업체	31
<표-16>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인지 여부(%)-공공부문	34
<표-17>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인지 여부(%)-사업체	34
<표-18>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준수 여부(%)-공공부문	36
<표-19>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준수 여부(%)-사업체	36
<표-20>	개인정보 보유현황(%)-공공부문	38
<표-21>	개인정보 보유현황(%)-사업체	38
<표-22>	제3자 제공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공공부문	40
<표-23>	제3자 제공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사업체	40
<표-24>	제3자 제공 현황(%)-공공부문	42
<표-25>	제3자 제공 현황(%)-사업체	42

목 차

○ 표목차

<표-26> 제3자 제공 목적(%)-공공부문	44
<표-27> 제3자 제공 목적(%)-사업체	44
<표-28> 수집 목적 외 이용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공공부문	46
<표-29> 수집 목적 외 이용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사업체	46
<표-30>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현황(%)-공공부문	49
<표-31>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현황(%)-사업체	49
<표-32>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목적(%)-공공부문	51
<표-33>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목적(%)-사업체	51
<표-34>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공개(%)-공공부문	54
<표-35>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공개(%)-사업체	54
<표-36>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방법(문서) 인지 여부(%)-공공부문	56
<표-37>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방법(문서) 인지 여부(%)-사업체	56
<표-38>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방법(문서) 실시 여부(%)-공공부문	58
<표-39>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방법(문서) 실시 여부(%)-사업체	58
<표-40> 개인정보 파기(%)-공공부문	61
<표-41> 개인정보 파기(%)-사업체	61
<표-42> 주민등록번호 수집 목적(%)-공공부문	64
<표-43> 주민등록번호 수집 목적(%)-사업체	64
<표-44>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공공부문	67
<표-45>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사업체	67
<표-46>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제공 여부(%)-공공부문	69
<표-47>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제공 여부(%)-사업체	69
<표-48> 선호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공공부문	71
<표-49> 선호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사업체	71
<표-50> 민감정보 수집 목적(%)-공공부문	73

목 차

○ 표목차

<표-51> 민감정보 수집 목적(%)-사업체	73
<표-52> 민감정보 수집 근거(%)-공공부문	75
<표-53> 민감정보 수집 근거(%)-사업체	75
<표-54>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공개 장소)(%)-공공부문	77
<표-55>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비공개 장소)(%)-공공부문	77
<표-56>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공개 장소)(%)-사업체	78
<표-57>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비공개 장소)(%)-사업체	78
<표-58>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목적(%)-공공부문	80
<표-59>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목적(%)-사업체	80
<표-6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공개방법(%)-공공부문	82
<표-61>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공개방법(%)-사업체	82
<표-6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공공부문	85
<표-6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사업체	85
<표-64> 개인정보 저장 및 관리 프로그램(%)-사업체(소상공인)	87
<표-65>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공공부문	90
<표-66>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사업체	90
<표-67>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여부(%)-공공부문	92
<표-68>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여부(%)-사업체	92
<표-69> 암호화 대상 정보 암호화 현황('일부 암호화'+ '전부 암호화')(%) -공공부문 ..	95
<표-70> 암호화 대상 정보 암호화 현황('일부 암호화'+ '전부 암호화')(%) -사업체 ...	95
<표-71>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공공부문	97
<표-72>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사업체	97
<표-73>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공공부문	99
<표-74>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사업체	99
<표-75> 정보주체 권리보장 인지 및 실시 여부(%)-공공부문	102

목 차

○ 표목차

<표-76>	정보주체 권리보장 인지 및 실시 여부(%)-사업체	102
<표-77>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공공부문	104
<표-78>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사업체	104
<표-79>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업무전담 여부(%)	105
<표-8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여부 및 담당자 인원수(%)-공공부문 ...	107
<표-8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여부 및 담당자 인원수(%)-사업체	107
<표-82>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업무전담 여부(%)-공공부문	108
<표-83>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업무전담 여부(%)-사업체	108
<표-84>	개인정보보호 예산(%)-공공부문	110
<표-85>	개인정보보호 예산(%)-사업체	110
<표-86>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여부(%)-공공부문	112
<표-87>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여부(%)-사업체	112
<표-88>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시 횟수(%)-공공부문	114
<표-89>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시 횟수(%)-사업체	114
<표-90>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공공부문	116
<표-91>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사업체	116
<표-9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지 여부(%)-공공부문	118
<표-9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지 여부(%)-사업체	118
<표-94>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행(2016.01) 인지 여부(%)-공공부문	120
<표-95>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행(2016.01) 인지 여부(%)-사업체	120
<표-96>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인지(%)-공공부문	121
<표-97>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지 여부(%)-공공부문	123
<표-98>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지 여부(%)-사업체	123
<표-99>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요성(%)-공공부문	125
<표-100>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요성(%)-사업체	125

목 차

○ 표목차

<표-101>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정보 보유율 및 실시율(%)-사업체	126
<표-102>	향후 영향평가 실시 의향 및 실시기간(%)-공공부문	128
<표-103>	향후 영향평가 실시 의향 및 실시기간(%)-사업체	128
<표-104>	개인정보보호법 제반 규정 이해 및 시행 애로사항(1+2순위)(%)-공공부문 ..	130
<표-105>	개인정보보호법 제반 규정 이해 및 시행 애로사항(1+2순위)(%)-사업체 ..	130
<표-106>	개인정보보호법 제반 규정 이해 및 시행 애로사항(1순위)(%)-공공부문 ..	131
<표-107>	개인정보보호법 제반 규정 이해 및 시행 애로사항(1순위)(%)-사업체 ..	131
<표-108>	대규모 유출사고 원인(%)-공공부문	133
<표-109>	대규모 유출사고 원인(%)-사업체	133
<표-110>	유출 시 처벌 강도(%)-공공부문	135
<표-111>	유출 시 처벌 강도(%)-사업체	135
<표-112>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공공부문	137
<표-113>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사업체	137
<표-114>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경험(%)-공공부문	139
<표-115>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경험(%)-사업체	139
<표-116>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처리(%)-공공부문	141
<표-117>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처리(%)-사업체	141
<표-118>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정책(1+2+3순위)(%)-공공부문 ..	143
<표-119>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정책(1+2+3순위)(%)-사업체 ..	143
<표-120>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정책(1순위)(%)-공공부문 ..	144
<표-121>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정책(1순위)(%)-사업체 ..	144
<표-122>	개인정보보호법 및 제도에 대한 의견 및 개선사항(%)	145
<표-123>	개인정보 제공 현황(%)-성 · 연령별	149
<표-124>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성 · 연령별	150
<표-125>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인지 여부(%)-성 · 연령별 ..	151

목 차

○ 표목차

<표-126>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이행 여부(%)-성 · 연령별	152
<표-127>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인지 여부(%)-성 · 연령별	153
<표-128>	사업자(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이행 여부(%)-성 · 연령별	154
<표-129>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편리한 매체(%)-성 · 연령별	155
<표-130>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경험(‘있음’)(%)-성 · 연령별	156
<표-131>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횟수(‘4회 이상’)(%)-성 · 연령별	157
<표-132>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관련 통지 경험(%)-성 · 연령별	158
<표-133>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성 · 연령별	160
<표-134>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성 · 연령별	160
<표-135>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원인(%)-성 · 연령별	161
<표-136>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성 · 연령별	162
<표-137>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 변화(%)-성 · 연령별	163
<표-138>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청 경험(%)-성 · 연령별	164
<표-139>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청하지 않은 이유(%)-성 · 연령별	165
<표-140>	동의서 확인 여부(%)-성 · 연령별	166
<표-141>	동의서 미확인 이유(%)-성 · 연령별	167
<표-142>	개인정보처리방침 인지 여부(%)-성 · 연령별	168
<표-143>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여부(%)-성 · 연령별	169
<표-144>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성 · 연령별	170
<표-14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지 여부(%)-성 · 연령별	171
<표-146>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행(2016.01) 인지 여부(%)-성 · 연령별	172
<표-147>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4.08) 이후 사업자(공공기관)의 변화(%)-성 · 연령별	173
<표-148>	개인정보보호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성 · 연령별	174
<표-149>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경험(%)-성 · 연령별	175
<표-150>	향후 교육 받고 싶은 기관(%)-성 · 연령별	176

목 차

○ 표목차

<표-151>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 인지 경로(%)-성·연령별	177
<표-152>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내용 인지 경로(%)-성·연령별	178
<표-153>	전년대비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실천 변화(%)-성·연령별	179
<표-154>	전년대비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절차 변화(%)-성·연령별 ..	180
<표-155>	개인정보 처리절차 변화에 따른 불편함에 대한 의견(%)-성·연령별 ..	181
<표-156>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기업(기관) 선호에 미치는 영향(%)-성·연령별 ..	182
<표-15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정책(%)-성·연령별	183
<표-158>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	184

목 차

○ 그림목차

<그림-1> 개인정보 수집대상(%)	19
<그림-2> 개인정보 수집 대상(%)·사업체 규모별	20
<그림-3> 개인정보 수집 경로(%)	22
<그림-4> 개인정보 수집 목적(%)	24
<그림-5> 개인정보 수집 목적(%)·사업체 규모별	25
<그림-6> 개인정보 수집 방법(%)	27
<그림-7> 개인정보 수집 근거(%)	29
<그림-8> 개인정보 수집 근거(%)·사업체 규모별	30
<그림-9>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인지 여부(%)	32
<그림-10>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인지 여부(%)·사업체 규모별	33
<그림-11>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준수 여부(%)	35
<그림-12>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준수 여부(%)·사업체 규모별	35
<그림-13> 개인정보 보유 현황(%)	37
<그림-14> 개인정보 보유 현황(%)·사업체 규모별	37
<그림-15> 제3자 제공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	39
<그림-16> 제3자 제공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사업체 규모별	39
<그림-17> 제3자 제공 현황(%)	41
<그림-18> 제3자 제공 현황(%)·사업체 규모별	41
<그림-19> 제3자 제공 목적(%)	43
<그림-20> 수집 목적 외 이용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	45
<그림-21> 수집 목적 외 이용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사업체 규모별	45
<그림-22>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현황(%)	47
<그림-23>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현황(%)·사업체 규모별	48
<그림-24>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목적(%)	50
<그림-25>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공개(%)	52

목 차

○ 그림목차

<그림-26>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공개(%)·사업체 규모별	53
<그림-27>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방법(문서) 인지 여부(%)	55
<그림-28>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방법(문서) 실시 여부(%)	57
<그림-29>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방법(문서) 인지 및 실시 여부(%)·사업체 규모별 ...	57
<그림-30> 개인정보 파기(%)	59
<그림-31> 개인정보 파기(%)·사업체 규모별	60
<그림-32> 주민등록번호 수집 목적(%)	62
<그림-33> 주민등록번호 수집 목적(%)·사업체 규모별	63
<그림-34>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65
<그림-35>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사업체 규모별	66
<그림-36>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68
<그림-37>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사업체 규모별	68
<그림-38> 선호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70
<그림-39> 민감정보 수집 목적(%)	72
<그림-40> 민감정보 수집 근거(%)	74
<그림-41> 민감정보 수집 근거(%)·사업체 규모별	74
<그림-42>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	76
<그림-43>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목적(%)	79
<그림-44>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공개방법(%)	81
<그림-45>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공개방법(%)·사업체 규모별	81
<그림-46>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83
<그림-47>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사업체 규모별	84
<그림-48> 개인정보 저장 및 관리 프로그램(소상공인)(%)	86
<그림-49>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88
<그림-50> 개인정보보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사업체 규모별	89

목 차

○ 그림목차

<그림-51>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여부(%)	91
<그림-52> 암호화 대상 정보 암호화 현황(%)	93
<그림-53> 암호화 대상 정보 암호화 현황(%)·사업체 규모별	94
<그림-54>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	96
<그림-55>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사업체 규모별	96
<그림-56>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	98
<그림-57>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사업체 규모별 ..	98
<그림-58> 정보주체 권리보장 인지 여부(%)	100
<그림-59> 정보주체 권리보장 인지 여부(%)·사업체 규모별	100
<그림-60> 정보주체 권리보장 실시 여부(%)	101
<그림-61> 정보주체 권리보장 실시 여부(%)·사업체 규모별	101
<그림-62>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	103
<그림-6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여부(%)	105
<그림-64>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인원수(%)	105
<그림-65>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인원수(%)·사업체 규모별	106
<그림-66> 개인정보보호 예산(%)	109
<그림-67>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여부(%)	111
<그림-68>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여부(%)·사업체 규모별	111
<그림-69>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시 횟수·책임자 대상(%)	113
<그림-70>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시 횟수·직원대상(%)	113
<그림-71>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	115
<그림-7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지 여부(%)	117
<그림-7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지 여부(%)·사업체 규모별	117
<그림-74>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행(2016.01) 인지 여부(%)	119
<그림-75>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인지(%)	121

목 차

○ 그림목차

<그림-76>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지 여부(%)	122
<그림-77>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요성(%)	124
<그림-78> 향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의향(%)	127
<그림-79> 개인정보보호법 제반 규정 이해 및 시행 애로사항(%)	129
<그림-80> 대규모 유출사고 원인(%)	132
<그림-81> 유출 시 처벌 강도(%)	134
<그림-82>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	136
<그림-83>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경험(%)	138
<그림-84>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처리(%)	140
<그림-85>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정책(%)	142
<그림-86> 개인정보 제공 현황(%)	149
<그림-87>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150
<그림-88>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인지 여부(%)	151
<그림-89>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이행 여부(%)	152
<그림-90>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인지 여부(%)	153
<그림-91> 사업자(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이행 여부(%) ..	154
<그림-92>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편리한 매체(%)	155
<그림-93>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경험(%)	156
<그림-94>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횟수(%)	157
<그림-95>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관련 통지 경험(%)	158
<그림-96>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159
<그림-97>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159
<그림-98>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원인(%)	161
<그림-99>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	162
<그림-100>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 변화(%)	163

목 차

○ 그림목차

<그림-10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경험(%)	164
<그림-10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하지 않은 이유(%)	165
<그림-103> 동의서 확인 여부(%)	166
<그림-104> 동의서 미확인 이유(%)	167
<그림-105> 개인정보처리방침 인지 여부(%)	168
<그림-106>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여부(%)	169
<그림-107>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	170
<그림-108>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지 여부(%)	171
<그림-109>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행(2016.01) 인지 여부(%)	172
<그림-110>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4.08) 이후 사업자(공공기관)의 변화(%) ..	173
<그림-111> 개인정보보호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174
<그림-112>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경험(%)	175
<그림-113> 향후 교육 받고 싶은 기관(%)	176
<그림-114>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 인지 경로(%)	177
<그림-115>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내용 인지 경로(%)	178
<그림-116> 전년대비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실천 변화(%) ..	179
<그림-117> 전년대비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절차 변화(%)	180
<그림-118> 개인정보 처리절차 변화에 따른 불편함에 대한 의견(%)	181
<그림-119>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기업(기관) 선호에 미치는 영향(%)	182
<그림-120>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정책(%)	183

2015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시행되었다.
-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2014.8.7.시행),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 의무화(2016.1.1.시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 범죄 처벌 강화(2016.7.25.시행) 등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 이와 같이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년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공공기관,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령·정책·제도의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 본 조사의 추진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각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수준 파악
 - 각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조치현황 및 안전성 확보 현황
 - 개인정보보호 취약 분야 및 업종 파악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의 정책 요구사항 파악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인지도 및 인식 수준 파악

2. 조사체계

1) 조사대상

(가) 개인정보처리자

○ 민간사업체 : 1인 이상 사업체(업종별, 규모별 분류)

○ 공공부문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

(나) 정보주체

○ 만 12세 이상 일반국민(지역, 성별, 연령별 분류)

2) 조사기간

○ 2015년 9월 ~ 10월

3) 조사기관

(가) 주관기관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주관

(나) 전담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 학계, 전문기관, 컨설팅기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 및 실태조사 설계

3. 표본설계

1) 민간사업체

(가) 모집단

- 2015년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의 개인정보처리자 중 민간사업체의 모집단은 『2013년 전국사업체조사』를 기초로 활용함
-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별 분류는 4개 그룹(5명 미만, 5~49명, 50~299명, 300명 이상)으로 구분
- 사업체의 업종별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를 기초로 본 조사의 특성을 반영 10개 업종으로 재분류
 - 제조업, 전기/가스업, 유통/물류/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사교육, 보건/복지, 협회/단체

<표-1> 모집단 - 민간사업체

구 분	전체	5명 미만	5~49명	50~299명	300명 이상
전 체	2,954,246	2,452,359	476,769	23,601	1,517
제 조	370,616	234,282	125,810	9,824	700
전 기 / 가 스	1,668	605	723	311	29
유통/물류/도소매	1,332,027	1,203,893	122,290	5,585	259
숙 박 / 음 식	686,225	605,985	79,371	829	40
정 보 / 통 신	14,510	7,825	5,746	842	97
금 융 / 보 험	41,508	11,619	27,932	1,816	141
부 동 산 / 임 대	132,630	110,377	21,792	437	24
사 교 육	151,609	127,317	23,768	511	13
보 건 / 복 지	125,703	61,171	61,068	3,255	209
협 회 / 단 체	97,750	89,285	8,269	191	5

(나) 표본추출

- 2015년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의 개인정보처리자 중 민간사업체의 표본추출들은 『2013년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
- 사업체의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표본추출은 역등할당¹⁾을 활용하였으며, 각 셀별 최소 표본확보를 위해 $p=0.3$ 의 역등할당 추출

<표-2> 표본추출 - 민간사업체

구 분	전 체	5명 미만	5~49명	50~299명	300명 이상
전 체	2,500	1,207	825	327	141
제 조	365	153	126	59	27
전 기 / 가 스	83	25	27	21	10
유통/물류/도소매	442	248	125	49	20
숙 박 / 음 식	351	202	110	28	11
정 보 / 통 신	148	55	50	28	15
금 융 / 보 험	193	62	80	35	16
부 동 산 / 임 대	228	121	74	23	10
사 교 육	234	126	76	24	8
보 건 / 복 지	262	101	101	42	18
협 회 / 단 체	194	114	56	18	6

(다) 표본오차

- 허용 오차 $e = \pm Z_{\alpha/2} \times \sqrt{p(1-p)/n \times (1-n/N)}$

e : 허용 오차

$\pm Z_{\alpha/2}$: 95% 신뢰수준하의 표준화된 변수

N : 모집단수, n : 표본수

(라) 주요변수의 표본 오차

- 본조사의 주요 변수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인지 여부'의 표본 오차를 95% 신뢰수준에서 산출했을 때 $\pm 0.94\%$ 임

1) 역등할당(제공군 비례할당) : 표본 추출 시 과대 및 과소 표집을 방지하기 위해 비례할당이 아닌 제공군 비례할당 활용.

2) 공공부문

(가) 모집단 및 표본추출

- 국가기관, 지자체(광역/기초), 공공기관,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기본으로 실시
- 교육기관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5%를 지역별로 할당 추출

<표-3> 공공부문 모집단 및 표본추출

구분	기관		모집단	표본	표본추출	출처
국가 기관, 지자체	중앙 행정기관	헌법기관 중앙부처	4 48	4 48	전수조사 전수조사	대한민국 정부 (http://www.korea.go.kr)
	광역지자체		17	17	전수조사	행정자치부
	기초지자체		227	227	전수조사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공공 기관	공공기관		340	340	전수조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15년 공공기관 지정현황)
	지방공기업		400	400	전수조사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공기업현황)
	시도 교육청		17	17	전수조사	교육부
교육 기관	대학교		199	199	전수조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http://www.kcue.or.kr/index.htm)
	전문대		139	139	전수조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http://www.kcce.or.kr/)
	고교		2,375	128	할당추출	2014년 교육통계연보
	중고교		3,186	169	할당추출	
	초등학교		5,934	312	할당추출	
표본추출 계				2,000		

3) 정보주체(일반국민)

(가) 모집단 및 표본추출

- 『2014년 추계인구통계』를 기초로 인구통계의 특성을 추출변수로 활용

표본추출

- 2014년 추계인구통계 활용
- 다단계 층화추출

층화

- 17개 시도별 층화
- 성/연령별 층화

할당

- 층화 셀별 역등할당
- P=0.5

4. 조사내용 및 항목

○ 2015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는 기존 『2014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의 지표와 시계열 유지를 위해 2014년 조사지표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신규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최종 지표항목으로 설정

- 개인정보처리자 : 법 인지도, 보호기준 준수현황 및 안전성 확보조치, 자율규제 등
- 정보주체 : 법 인지도, 정보주체 권리행사 현황 및 장애요인, 침해 및 권리구제 현황 등

<표-4> 조사 내용 및 항목 - 개인정보처리자

법 주요 내용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행(2016.01)에 대한 인지도(2015년 신규) .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인지 및 필요성(2015년 신규)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인지(2015년 신규) .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 제3자 제공 제한 . 목적 외 이용 제한 .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방법 .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처리제한 규정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 제3자 제공 제한 . 목적 외 이용 제한 .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방법 .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 주민등록번호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 .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
안전성 확보 조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 확보조치 (암호화 등) . CCTV 안내판 설치 . 개인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 개인정보 수집 대상, 목적, 방법, 규모, 근거 . 주민번호 및 민감정보 수집 목적, 근거
보호체계 구축 및 자율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인력, 책임자, 예산 .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율규제 현황
정책 제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이행 시 애로사항 . 정책 제언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사고 관련 사항 .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2015년 신규)

<표-5> 조사 내용 및 항목 - 정보주체

법 주요내용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행(2016.01)에 대한 인지도(2015년 신규)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 주민번호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제한 ·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 ·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
개인정보처리자의 법령 준수 현황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수집 항목의 적정성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 주민번호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
정보주체 권리행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나 약관 확인 ·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
정보주체 권리행사 장애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서나 약관 확인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
개인정보 제공 및 침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제공 목적 · 개인정보 침해 경험 및 대응 조치 · 유출통지를 받은 경험 · 권리구제 절차 이용 현황
교육, 홍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하기 편리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은 경험 · 선호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식을 접하게 된 경로 · 고객 개인정보 보호가 기업 및 제품 선택에 주는 영향
법 시행 이후 변화 정책 제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 · 법 시행 후 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실천 전반 · 법 시행 후 개인정보 처리절차 변화에 대한 의견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4.08) 이후 기관의 실천 변화 ·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부 정책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것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사고 관련 사항

5. 실사진행

1) 조사방법

(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민간사업체)

○ 민간사업체 : 사업체 방문 면접조사(필요시 이메일, 팩스 조사 병행)

○ 공공부문 : 온라인 조사

(나) 정보주체(일반국민)

○ 일반국민 : 온라인 조사

2) 조사절차

(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민간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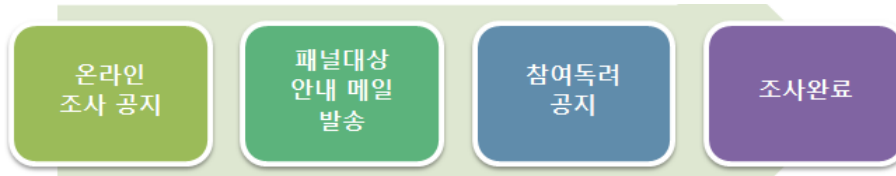
○ 민간사업체 조사절차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조사절차



(나) 정보주체(일반국민)



6. 자료검증 및 처리

1) 자료검증

- 면접조사 : 회수된 조사표의 30%에 대해 전화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 온라인조사 : 이중 확인 작업을 통한 정확한 검증 및 처리

2) 자료처리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전산처리



7. 참고

1)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기초한 업종 재분류 현황

한국표준산업분류		재분류
대분류	중분류(소분류)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사업	전기/가스/수도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유통/물류/도소매
운수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숙박/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부동산업/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소분류)일반 교습학원 (소분류)기타 교육기관 (소분류)교육지원 서비스업	사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복지
협회 및 단체	협회 및 단체	협회/단체

2) 주요 용어 및 정의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예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사진, CCTV 개인영상정보, 학력, 근무경력 등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다른 사업자, 기관, 단체, 개인)의 업무나 이익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예시) 신용카드 회사에서 자사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제휴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개인정보처리 위탁	·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를 대행하도록 제3자에게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 * 예시) 기업의 텔레마케팅 업무를 대행하도록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를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고유식별정보	·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있음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예시) 정치적 성향, 정당 및 노조가입, 장애 및 의료정보, 전과, 범죄경력, 종교
바이오 정보	· 지문·홍채·정맥·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침해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유출·노출 등을 통해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개인정보 분쟁조정	· 양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소송외적인 피해구제 절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침해 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업체(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처리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위탁, 파기, 안전한 관리,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공공기관은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2015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 조사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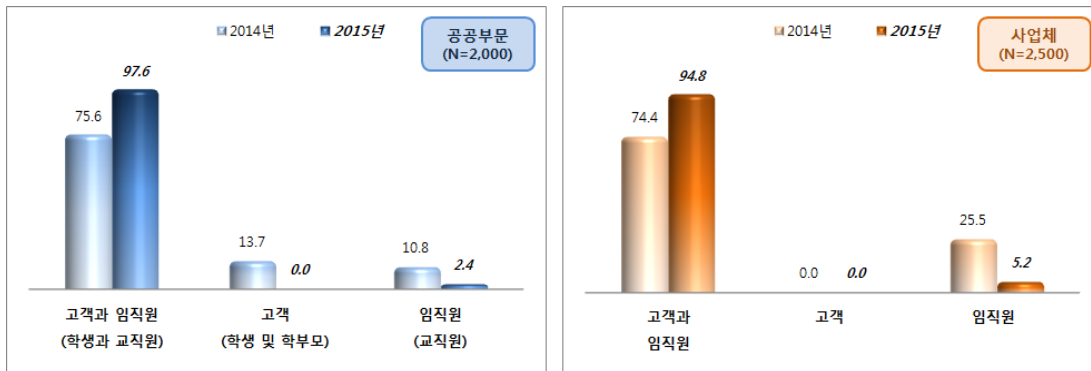
제1장 개인정보처리자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 수집 대상

- 개인정보 수집 대상에 대해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공공부문의 97.6%, 사업체의 94.8%가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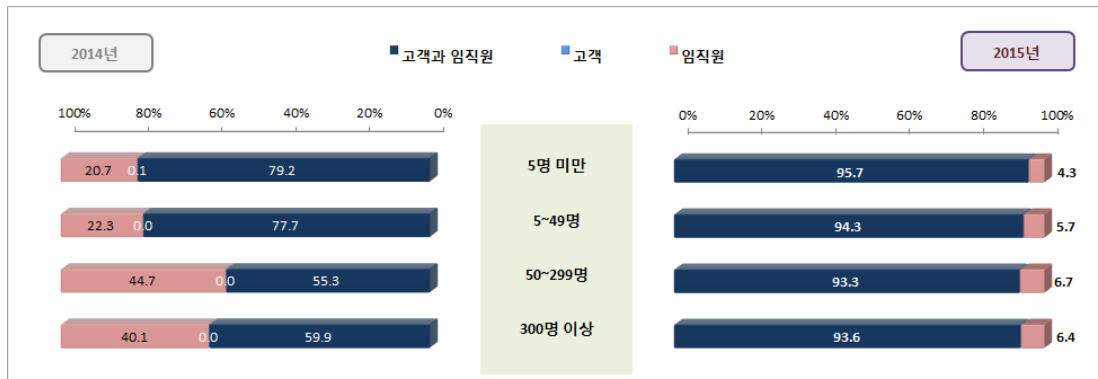
<그림-1> 개인정보 수집대상(%)



-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정보 수집 비율은 공공부문(97.6%)과 사업체(94.8%) 모두 전년대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22.0%, ▲20.4%). 공공기관과 사업체의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는 곳은 없으며, '임직원'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는 경우는 공공부문(2.4%)과 사업체(5.2%) 모두 전년대비 낮게 나타났다(각각 ▼8.6%, ▼20.3%).
-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정보 수집 비율은 공공기관의 '헌법기관2'(100.0%), '광역지자체'(100.0%), '기초지자체'(100.0%), '교육청'(100.0%), 교육기관(100.0%)의 모두와 사업체의 '전기/가스'(100.0%)에서 각각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헌법기관의 경우 표본크기가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이하동일)

<그림-2> 개인정보 수집 대상(%)-사업체 규모별



- 개인정보 수집 대상에 대해 사업체 규모별 조사 결과, '고객'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는 경우는 전년과 달리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과 임직원' 모두 수집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5명 미만'(▲16.5%), '5~49명'(▲16.6%), '50~299명'(▲38.0%), '300명 이상'(▲33.7%)).

<표-6> 개인정보 수집 대상(%)-공공부문

구 분		고객과 임직원 (학생 및 학부모와 교직원)	고객 (학생 및 학부모)	임직원 (교직원)
전 체		97.6	-	2.4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개	95.0	-	5.0
	헌법기관	100.0	-	0.0
	중앙행정기관	93.6	-	6.4
	광역시자체	100.0	-	0.0
	기초지자체	100.0	-	0.0
	공공기관	86.7	-	13.3
	지방공기업	99.4	-	0.6
	교육청	100.0	-	0.0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개	100.0	-	0.0
	대학교	100.0	-	0.0
	전문대학	100.0	-	0.0
	고등학교	100.0	-	0.0
	중학교	100.0	-	0.0
	초등학교	100.0	-	0.0

개인정보처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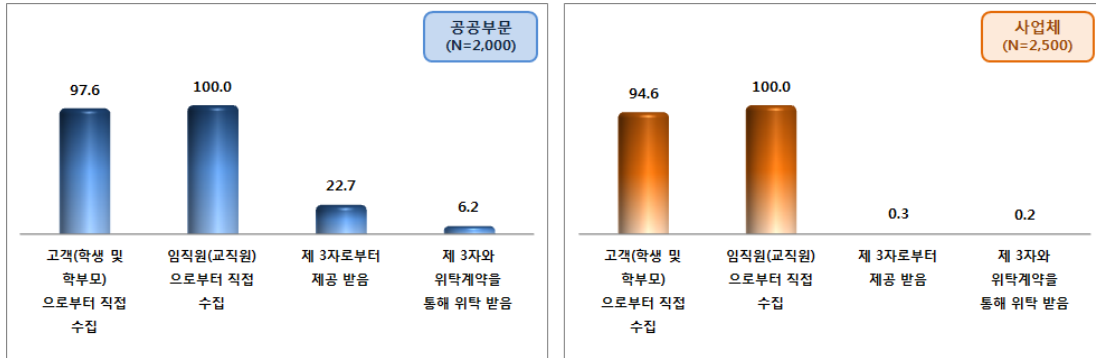
<표-7> 개인정보 수집 대상(%)-사업체

구 분		고객과 임직원	고객	임직원
전 체		94.8	-	5.2
업종	제조	91.0	-	9.0
	전기/가스	100.0	-	0.0
	유통/물류/도소매	95.2	-	4.8
	숙박/음식	98.9	-	1.1
	정보/통신	97.3	-	2.7
	금융/보험	92.7	-	7.3
	부동산/임대	91.2	-	8.8
	사교육	93.2	-	6.8
	보건/복지	98.1	-	1.9
	협회/단체	93.3	-	6.7
규모	5명 미만	95.7	-	4.3
	5~49명	94.3	-	5.7
	50~299명	93.3	-	6.7
	300명 이상	93.6	-	6.4

2) 개인정보 수집 경로

- 개인정보 수집 경로에 대해 공공부문과 사업체 모두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비율이 제3자에게 제공 받거나 위탁 받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3> 개인정보 수집 경로(%)



- 제3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위탁 받는 경우는 사업체(‘제3자로부터 제공’(0.3%), ‘제3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위탁 받음’(0.2%))보다 공공부문(‘제3자로부터 제공’(22.7%), ‘제3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위탁 받음’(6.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부문 중 ‘제3자로부터 제공 받음’은 ‘대학교’(100.0%)와 ‘전문대’(100.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8> 개인정보 수집 경로(%)-공공부문

구 분		고객(학생및학부모) 으로부터 직접 수집	임직원(교직원)으로 부터 직접 수집	제3자로부터 제공 받음	제3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위탁 받음
전 체		97.6	100.0	22.7	6.2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개	95.0	100.0	12.3	4.1
	헌법기관	100.0	100.0	0.0	0.0
	중앙행정기관	93.6	100.0	25.5	6.4
	광역시자체	100.0	100.0	29.4	11.8
	기초지자체	100.0	100.0	17.5	3.9
	공공기관	86.7	100.0	12.7	6.2
	지방공기업	99.4	100.0	6.5	2.0
	교육청	100.0	100.0	11.8	0.0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개	100.0	100.0	32.4	8.1
	대학교	100.0	100.0	100.0	25.3
	전문대학	100.0	100.0	100.0	24.6
	고등학교	100.0	100.0	5.2	1.7
	중학교	100.0	100.0	2.5	0.5
	초등학교	100.0	100.0	1.5	0.3

개인정보처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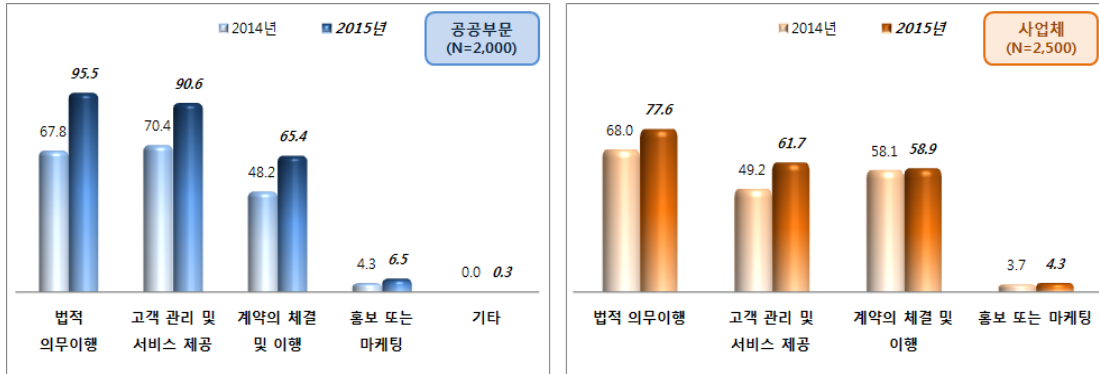
<표-9> 개인정보 수집 경로(%)-사업체

구 분		고객(학생및학부모) 으로부터 직접 수집	임직원(교직원)으로 부터 직접 수집	제3자로부터 제공 받음	제3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위탁 받음
전 체		94.6	100.0	0.3	0.2
업종	제조	91.0	100.0	0.0	0.0
	전기/가스	100.0	100.0	0.0	0.0
	유통/물류/도소매	94.8	100.0	0.7	0.2
	숙박/음식	98.9	100.0	0.0	0.0
	정보/통신	97.3	100.0	0.7	0.0
	금융/보험	92.7	100.0	0.5	0.0
	부동산/임대	90.8	100.0	0.0	0.4
	사교육	93.2	100.0	0.0	0.0
	보건/복지	98.1	100.0	0.8	0.4
	협회/단체	92.8	100.0	0.5	0.5
규모	5명 미만	95.4	100.0	0.6	0.2
	5~49명	94.3	100.0	0.1	0.0
	50~299명	93.3	100.0	0.0	0.0
	300명 이상	92.9	100.0	0.0	1.4

3) 개인정보 수집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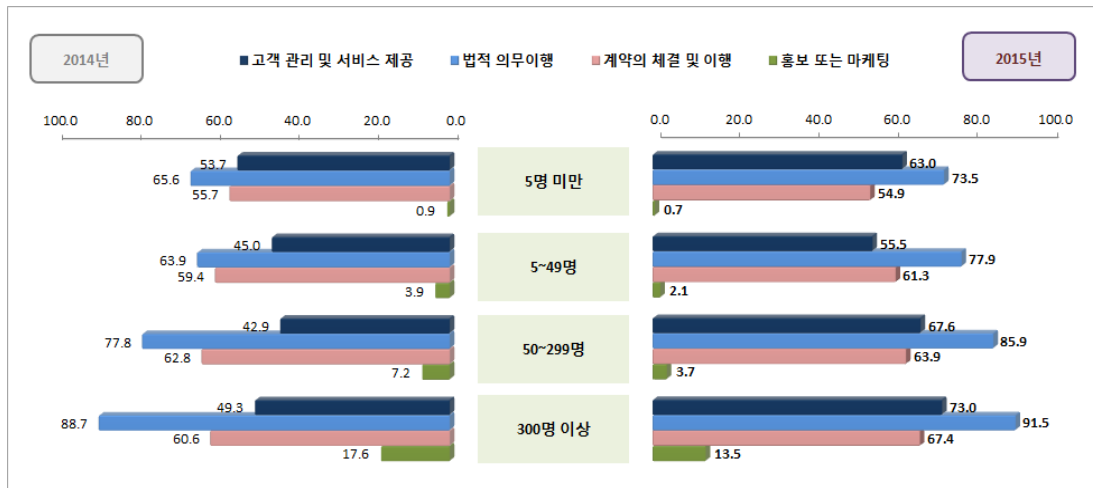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법적 의무이행’이 9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체에서도 ‘법적 의무이행’이 7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4> 개인정보 수집 목적(%)



- 기관별 응답에서는 공공기관은 전체적으로 ‘법적 의무이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역지자체’(100.0%)와 ‘기초지자체’(100.0%), ‘교육청’(100.0%)에서는 ‘고객관리 및 서비스 제공’도 높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업종별 응답에서는 ‘법적 의무이행’의 경우 ‘전기/가스’(96.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객관리 및 서비스 제공’은 ‘금융 및 보험’(84.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경우는 ‘금융 및 보험’(95.9%)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5> 개인정보 수집 목적(%) -사업체 규모별



-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대한 사업체 규모별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고객관리 및 서비스 제공’(‘5명 미만’(▲9.3%), ‘5~49명’(▲10.5%), ‘50~299명’(▲24.7%), ‘300명 이상’(▲23.7%))과 ‘법적 의무이행’(‘5명 미만’(▲7.9%), ‘5~49명’(▲14.0%), ‘50~299명’(▲8.1%), ‘300명 이상’(▲2.8%))이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홍보 또는 마케팅’(‘5명 미만’(▼0.2%), ‘5~49명’(▼1.8%), ‘50~299명’(▼3.5%), ‘300명 이상’(▼4.1%))의 비율은 전년 대비 낮게 나타났다.
- ‘법적 의무이행’과 ‘계약의 체결 및 이행’, ‘홍보 또는 마케팅’의 비율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10> 개인정보 수집 목적(%)-공공부문

구 분		법적 의무이행	고객관리 및 서비스 제공	계약의 체결 및 이행	홍보 또는 마케팅	기타
전 체		95.5	90.6	65.4	6.5	0.3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100.0	83.4	58.0	10.3	0.5
	헌법기관	100.0	50.0	50.0	0.0	25.0
	중앙행정기관	100.0	57.4	42.6	12.8	2.1
	광역지자체	100.0	100.0	70.6	23.5	0.0
	기초지자체	100.0	100.0	60.2	13.6	0.0
	공공기관	100.0	67.0	56.8	12.0	0.9
	지방공기업	100.0	90.9	60.2	5.1	0.0
	교육청	100.0	100.0	41.2	29.4	0.0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91.2	97.3	72.2	2.9	0.1
	대학교	100.0	100.0	41.9	6.5	0.5
	전문대학	100.0	100.0	35.4	2.3	0.0
	고등학교	99.4	100.0	99.4	1.7	0.0
	중학교	93.1	94.6	93.6	3.0	0.0
	초등학교	77.6	95.0	76.2	1.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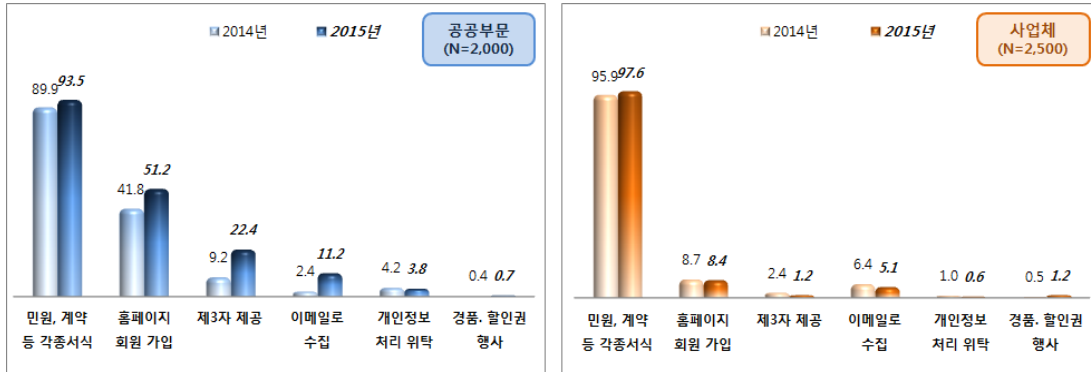
<표-11> 개인정보 수집 목적(%)-사업체

구 분		법적 의무이행	고객관리 및 서비스 제공	계약의 체결 및 이행	홍보 또는 마케팅	기타
전 체		77.6	61.7	58.9	2.3	-
업종	제조	76.2	70.1	57.0	2.2	-
	전기/가스	96.4	41.0	91.6	2.4	-
	유통/물류/도소매	64.5	80.1	58.6	2.0	-
	숙박/음식	86.9	28.5	54.4	1.1	-
	정보/통신	76.4	52.0	80.4	1.4	-
	금융/보험	92.2	84.5	95.9	5.7	-
	부동산/임대	74.1	26.8	85.5	0.4	-
	사교육	72.6	65.8	34.2	4.3	-
	보건/복지	84.4	77.9	20.2	3.4	-
	협회/단체	72.7	71.6	55.2	0.5	-
	5명 미만	73.5	63.0	54.9	0.7	-
규모	5~49명	77.9	55.5	61.3	2.1	-
	50~299명	85.9	67.6	63.9	3.7	-
	300명 이상	91.5	73.0	67.4	13.5	-

4) 개인정보 수집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은 '민원, 계약 등 각종 서식'에 의한 수집이 공공부문 93.5%, 사업체 97.6%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림-6> 개인정보 수집 방법(%)



- 공공부문의 경우, '민원, 계약 등 각종 서식'은 '헌법기관'(100.0%)과 '광역지자체'(100.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홈페이지 회원 가입'과 '제3자 제공'은 '광역지자체'(각각 64.7%, 35.3%)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민원, 계약 등 각종 서식'은 '제조'(100.0%)와 '전기/가스'(100.0%)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12> 개인정보 수집 방법(%)-공공부문

구 분		민원, 계약 등 각종서식	홈페이지 회원 가입	제3자 제공	이메일로 수집	개인정보 처리 위탁	경품/할인권 행사
전 체		93.5	51.2	22.4	11.2	3.8	0.7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개	89.9	50.1	11.5	8.3	4.9	0.7
	헌법기관	100.0	50.0	25.0	0.0	0.0	0.0
	중앙행정기관	91.5	48.9	21.3	8.5	2.1	2.1
	광역지자체	100.0	64.7	35.3	11.8	17.6	0.0
	기초지자체	97.1	47.6	18.0	7.3	6.8	0.5
	공공기관	82.7	64.2	11.4	15.4	6.8	0.6
	지방공기업	91.5	38.4	5.1	2.6	1.7	0.9
	교육청	88.2	41.2	11.8	0.0	5.9	0.0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개	96.8	52.2	32.5	13.8	2.8	0.6
	대학교	100.0	46.2	100.0	8.1	8.6	0.5
	전문대학	100.0	25.4	100.0	5.4	5.4	1.5
	고등학교	100.0	55.2	6.3	1.7	2.3	0.6
	중학교	96.6	74.4	3.0	27.1	0.0	0.5
	초등학교	92.4	50.9	0.9	18.5	0.6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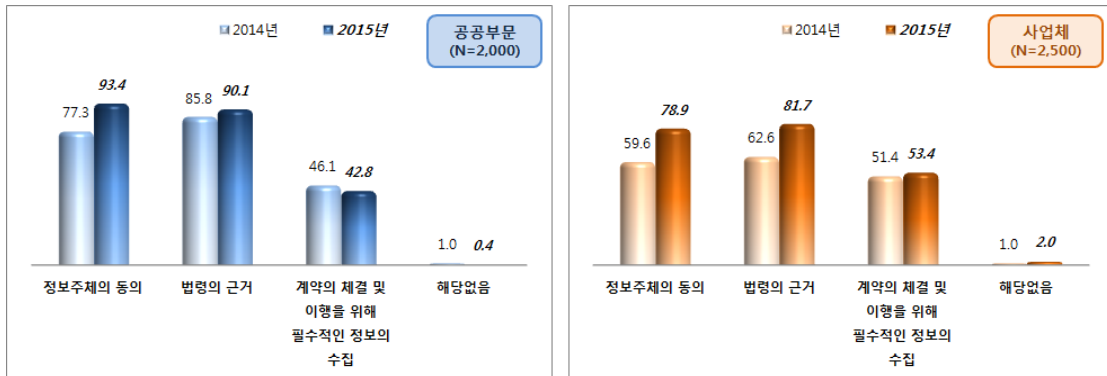
<표-13> 개인정보 수집 방법(%)-사업체

구 분		민원, 계약 등 각종서식	홈페이지 회원 가입	제3자 제공	이메일로 수집	개인정보 처리 위탁	경품/할인권 행사
전 체		97.6	8.4	1.2	5.1	0.6	1.2
업종	제조	100.0	8.8	0.3	10.1	0.0	1.6
	전기/가스	100.0	16.9	0.0	4.8	0.0	0.0
	유통/물류/도소매	98.0	3.4	0.2	4.3	0.2	1.8
	숙박/음식	98.6	2.8	0.0	0.3	0.0	1.7
	정보/통신	96.6	10.1	0.7	3.4	1.4	4.7
	금융/보험	99.5	2.1	1.6	0.0	1.0	0.0
	부동산/임대	99.1	2.2	0.0	3.1	0.4	1.3
	사교육	92.3	21.8	2.1	8.5	0.9	0.0
	보건/복지	93.9	10.3	5.3	3.8	2.3	0.4
	협회/단체	98.5	18.6	2.6	12.9	0.5	0.0
규모	5명 미만	98.8	3.8	0.4	3.8	0.2	0.4
	5~49명	96.5	6.7	1.8	5.5	0.6	1.1
	50~299명	96.0	16.5	1.8	8.0	1.2	2.1
	300명 이상	98.6	38.3	2.8	7.8	2.1	7.1

5) 개인정보 수집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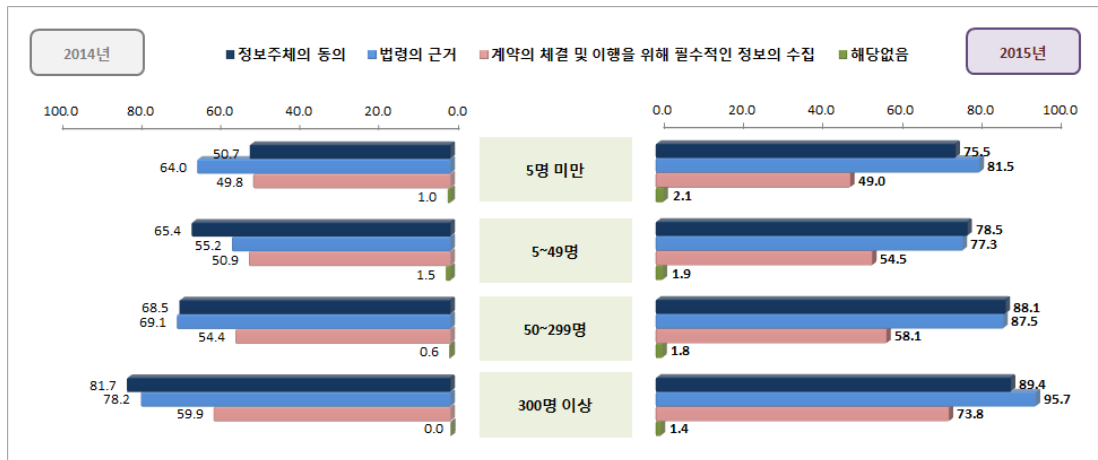
- 개인정보 수집 근거에 대해 공공부문은 '정보주체의 동의'(93.4%), 사업체는 '법령의 근거'(81.7%)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7>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전년대비, 공공부문과 사업체 모두 '정보주체의 동의'(공공부문(93.4%), 사업체(78.9%))와 '법령의 근거'(공공부문(90.1%), 사업체(81.7%))에 대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부문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는 '헌법기관'(100.0%)과 '광역시자치체'(100.0%), '교육청'(100.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법령의 근거'는 '헌법기관'(100.0%)과 '광역시자치체'(100.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금융/보험'이 다른 사업체에 비해 '정보주체의 동의'(93.8%)와 '법령의 근거'(95.9%),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의 수집'(92.2%)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8> 개인정보 수집 근거(%)-사업체 규모별



- 개인정보 수집 근거에 대한 사업체 규모별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법령의 근거’ (‘5명 미만’(81.5%), ‘5~49명’(77.3%), ‘50~299명’(87.5%), ‘300명 이상’(95.7%))와 ‘정보 주체의 동의’(‘5명 미만’(75.5%), ‘5~49명’(78.5%), ‘50~299명’(88.1%), ‘300명 이상’(89.4%))로 수집하는 경우가 전년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의 수집’은 ‘5명 미만’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대비 높게 나타났다.
- ‘정보주체의 동의’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의 수집’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14> 개인정보 수집 근거(%)-공공부문

구 분		정보주체의 동의	법령의 근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의 수집	해당 없음
전 체		93.4	90.1	42.8	0.4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개	90.2	89.7	48.3	0.7
	헌법기관	100.0	100.0	50.0	0.0
	중앙행정기관	95.7	97.9	38.3	0.0
	광역시자체	100.0	100.0	70.6	0.0
	기초지자체	89.3	99.0	55.3	0.5
	공공기관	94.4	85.8	48.1	0.6
	지방공기업	84.9	86.1	44.6	1.1
	교육청	100.0	88.2	47.1	0.0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개	96.4	90.4	37.7	0.0
	대학교	92.5	97.3	55.9	0.0
	전문대학	91.5	95.4	33.8	0.0
	고등학교	97.7	71.3	25.9	0.0
	중학교	98.0	88.2	38.9	0.0
	초등학교	98.8	95.9	34.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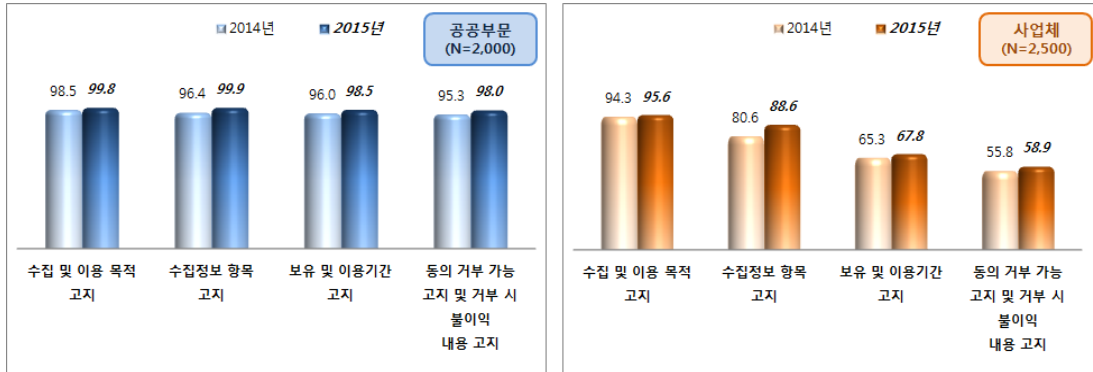
<표-15> 개인정보 수집 근거(%)-사업체

구 분		정보주체의 동의	법령의 근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의 수집	해당 없음
전 체		78.9	81.7	53.4	2.0
업종	제조	75.9	80.5	47.9	7.9
	전기/가스	84.3	89.2	89.2	0.0
	유통/물류/도소매	82.6	79.6	53.8	3.2
	숙박/음식	59.5	88.0	40.5	1.4
	정보/통신	90.5	74.3	70.9	0.7
	금융/보험	93.8	95.9	92.2	0.0
	부동산/임대	90.4	74.6	78.9	0.0
	사교육	80.3	70.5	24.8	0.0
	보건/복지	67.9	91.6	44.7	0.0
	협회/단체	85.1	74.2	35.6	0.0
규모	5명 미만	75.5	81.5	49.0	2.1
	5~49명	78.5	77.3	54.5	1.9
	50~299명	88.1	87.5	58.1	1.8
	300명 이상	89.4	95.7	73.8	1.4

6)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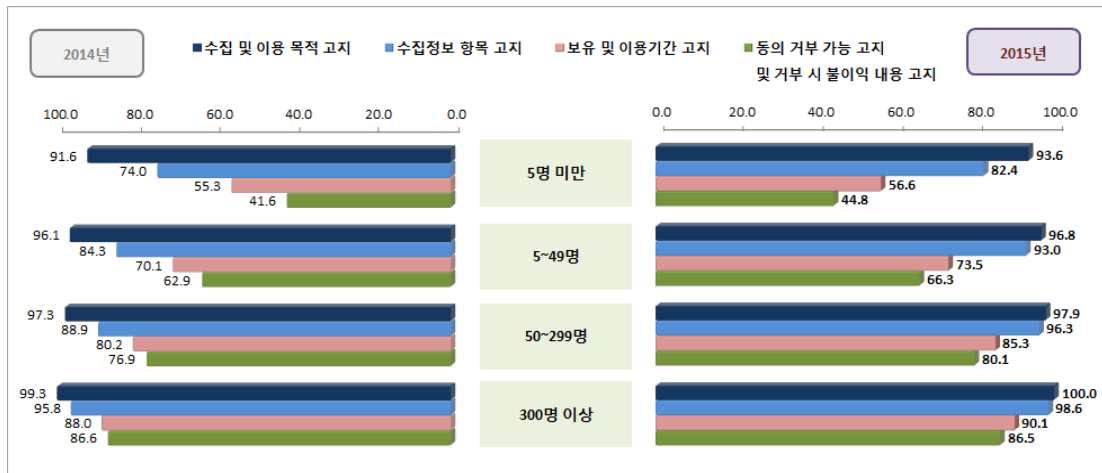
- 개인정보 수집 시 각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의 인지율은 공공부문이 사업체에 비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9>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인지 여부(%)



- 공공부문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시 각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 인지율은 ‘지방 공기업’이 다른 기관에 비해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교육기관에서는 ‘보유 및 이용기간 고지’와 ‘동의거부 가능 고지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고지’가 다른 항목 대비 낮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전반적으로 공공부문 보다 개인정보 수집 시 각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에 대한 인지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공공부문과 동일하게 ‘보유 및 이용기간 고지’와 ‘동의거부 가능 고지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고지’가 다른 항목 대비 낮게 나타났다.
- ‘수집 및 이용목적 고지’는 ‘금융/보험’(100.0%)과 ‘보건/복지’(100.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수집정보 항목 고지’는 ‘보건/복지’(100.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10>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인지 여부(%)-사업체 규모별



-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인지율에 대한 사업체 규모별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 대해 전년대비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집 및 이용 목적'의 고지는 전년과 동일하게 모든 규모에서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6>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인지 여부(%)-공공부문

구 분		수집 및 이용목적 고지	수집정보 항목 고지	보유 및 이용기간 고지	동의거부 가능 고지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고지
전 체		99.8	99.9	98.5	98.0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99.6	99.7	98.4	98.0
	헌법기관	100.0	100.0	100.0	100.0
	중앙행정기관	100.0	100.0	100.0	100.0
	광역시자체	100.0	100.0	100.0	100.0
	기초지자체	100.0	100.0	100.0	100.0
	공공기관	100.0	100.0	99.4	98.5
	지방공기업	98.9	99.1	96.3	96.0
	교육청	100.0	100.0	100.0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100.0	100.0	98.5	98.0
	대학교	100.0	100.0	100.0	99.5
	전문대학	100.0	100.0	100.0	100.0
	고등학교	100.0	100.0	98.3	97.1
	중학교	100.0	100.0	99.0	99.0
	초등학교	100.0	100.0	96.8	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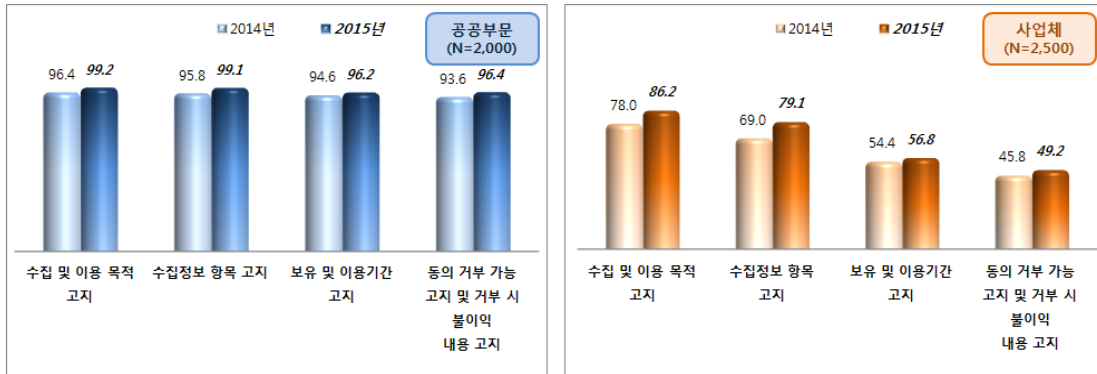
<표-17>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인지 여부(%)-사업체

구 분		수집 및 이용목적 고지	수집정보 항목 고지	보유 및 이용기간 고지	동의거부 가능 고지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고지
전 체		95.6	88.6	67.8	58.9
업종	제조	94.0	85.8	51.5	37.3
	전기/가스	98.8	97.6	77.1	65.1
	유통/물류/도소매	91.4	74.2	48.0	39.8
	숙박/음식	95.2	88.0	68.7	61.5
	정보/통신	93.9	92.6	71.6	70.3
	금융/보험	100.0	98.4	96.4	90.7
	부동산/임대	98.2	88.2	63.2	50.0
	사교육	97.9	96.2	88.5	85.5
	보건/복지	100.0	100.0	74.4	63.4
	협회/단체	92.8	87.1	78.4	67.5
	5명 미만	93.6	82.4	56.6	44.8
규모	5~49명	96.8	93.0	73.5	66.3
	50~299명	97.9	96.3	85.3	80.1
	300명 이상	100.0	98.6	90.1	86.5

7)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준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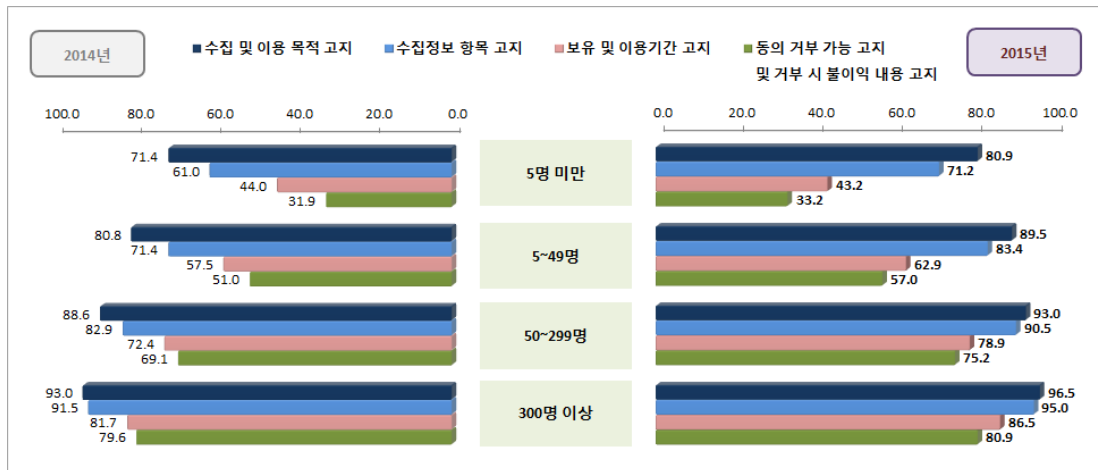
-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준수에 대해 공공부문과 사업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집 및 이용 목적 고지'와 '수집정보 항목 고지' 부문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1>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준수 여부(%)



-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준수에 대해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고지의무 준수율이 전년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모든 항목에서 준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12>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준수 여부(%)-사업체 규모별



<표-18>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준수 여부(%)-공공부문

구 분		수집 및 이용목적 고지	수집정보 항목 고지	보유 및 이용기간 고지	동의거부 가능 고지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고지
전 체		99.2	99.1	96.2	96.4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개	99.0	98.9	96.3	96.8
	헌법기관	100.0	100.0	100.0	100.0
	중앙행정기관	100.0	100.0	100.0	97.9
	광역지자체	100.0	100.0	100.0	100.0
	기초지자체	100.0	100.0	99.0	99.0
	공공기관	99.4	99.4	98.1	97.8
	지방공기업	97.7	97.4	92.3	94.0
	교육청	100.0	100.0	94.1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개	99.3	99.2	96.0	95.9
	대학교	100.0	100.0	99.5	98.9
	전문대학	97.7	97.7	96.9	97.7
	고등학교	99.4	98.9	96.0	96.0
	중학교	99.0	99.5	97.5	97.5
	초등학교	99.7	99.4	92.9	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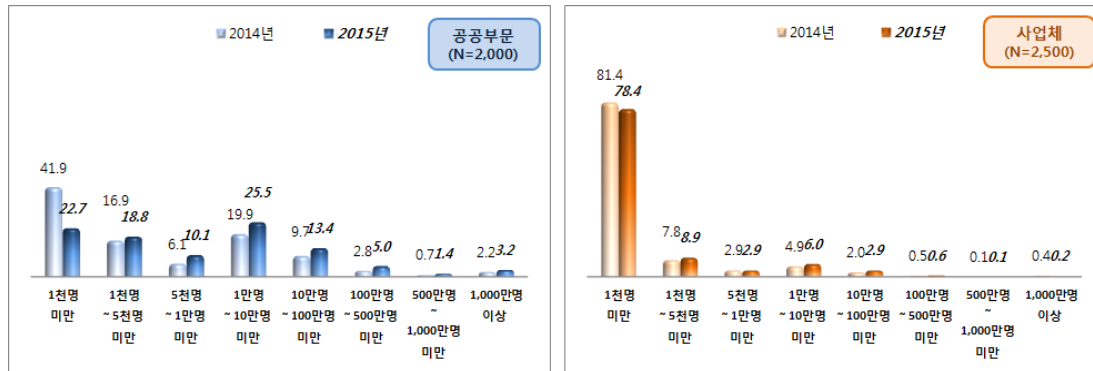
<표-19>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준수 여부(%)-사업체

구 분		수집 및 이용목적 고지	수집정보 항목 고지	보유 및 이용기간 고지	동의거부 가능 고지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고지
전 체		86.2	79.1	56.8	49.2
업종	제조	81.6	69.9	36.7	27.4
	전기/가스	91.6	90.4	74.7	61.4
	유통/물류/도소매	67.9	54.3	27.4	22.2
	숙박/음식	92.6	86.0	66.1	59.5
	정보/통신	93.2	91.2	68.2	66.9
	금융/보험	98.4	96.4	90.7	85.0
	부동산/임대	87.7	79.8	55.7	42.5
	사교육	94.9	90.6	76.1	72.2
	보건/복지	97.3	95.8	64.9	55.7
	협회/단체	77.8	71.6	61.9	50.5
	5명 미만	80.9	71.2	43.2	33.2
규모	5~49명	89.5	83.4	62.9	57.0
	50~299명	93.0	90.5	78.9	75.2
	300명 이상	96.5	95.0	86.5	80.9

8) 개인정보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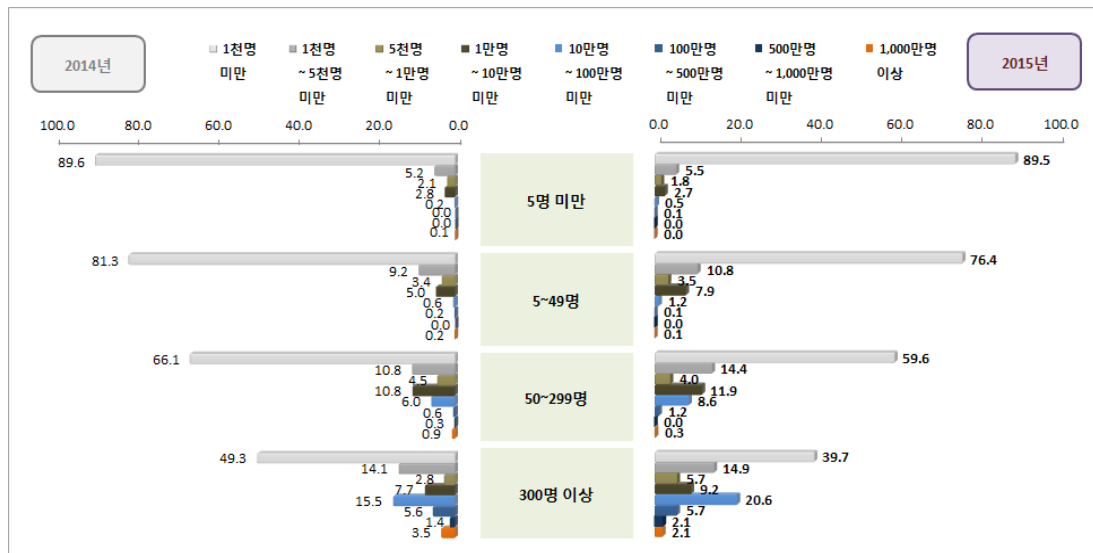
- 개인정보 보유 현황에 대해 공공부문은 '1천명~10만명 미만'(25.5%), 사업체는 '1천명 미만'(78.4%)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3> 개인정보 보유 현황(%)



- 사업체의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업체가 '1천명 미만'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개인정보 보유 현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4> 개인정보 보유 현황(%)-사업체 규모별



<표-20> 개인정보 보유현황(%)-공공부문

구 분		1천명 미만	1천명 ~ 5천명 미만	5천명 ~ 1만명 미만	1만명 ~ 10만명 미만	10만명 ~ 100만명 미만	100만명 ~ 500만명 미만	500만명 ~ 1,000만명 미만	1,000만명 이상
전 체		22.7	18.8	10.1	25.5	13.4	5.0	1.4	3.2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개	15.5	10.1	5.0	27.8	22.6	10.0	2.6	6.3
	헌법기관	0.0	0.0	0.0	0.0	25.0	25.0	0.0	50.0
	중앙행정기관	10.6	8.5	2.1	12.8	12.8	17.0	10.6	25.5
	광역지자체	0.0	0.0	0.0	11.8	17.6	47.1	5.9	17.6
	기초지자체	3.4	1.9	0.5	31.1	37.4	16.0	3.4	6.3
	공공기관	19.1	15.1	7.4	21.6	18.2	9.6	2.8	6.2
	지방공기업	19.9	11.6	6.3	35.2	19.0	4.3	0.9	2.8
	교육청	35.3	0.0	0.0	17.6	35.3	5.9	0.0	5.9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개	29.4	26.9	14.9	23.3	4.7	0.3	0.2	0.2
	대학교	4.3	14.5	14.0	44.1	19.9	1.6	0.5	1.1
	전문대학	2.3	15.4	16.9	56.9	8.5	0.0	0.0	0.0
	고등학교	48.9	39.1	5.7	5.7	0.6	0.0	0.0	0.0
	중학교	44.8	20.7	15.3	19.2	0.0	0.0	0.0	0.0
	초등학교	34.4	35.6	19.1	10.6	0.0	0.0	0.3	0.0

<표-21> 개인정보 보유현황(%)-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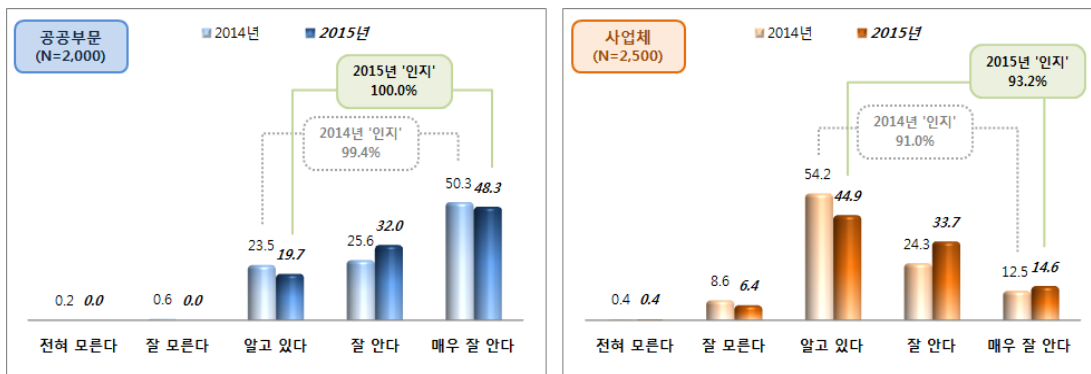
구 분		1천명 미만	1천명 ~ 5천명 미만	5천명 ~ 1만명 미만	1만명 ~ 10만명 미만	10만명 ~ 100만명 미만	100만명 ~ 500만명 미만	500만명 ~ 1,000만명 미만	1,000만명 이상
전 체		78.4	8.9	2.9	6.0	2.9	0.6	0.1	0.2
업종	제조	94.5	3.6	0.5	0.8	0.3	0.3	0.0	0.0
	전기/가스	68.7	7.2	0.0	12.0	12.0	0.0	0.0	0.0
	유통/물류/도소매	90.7	5.7	1.8	1.1	0.5	0.0	0.0	0.2
	숙박/음식	93.7	6.0	0.0	0.3	0.0	0.0	0.0	0.0
	정보/통신	84.5	7.4	1.4	0.7	4.7	0.7	0.7	0.0
	금융/보험	33.7	21.2	8.8	24.9	6.7	2.6	0.5	1.6
	부동산/임대	91.2	7.5	0.4	0.9	0.0	0.0	0.0	0.0
	사교육	88.0	4.3	1.7	3.0	2.1	0.4	0.4	0.0
	보건/복지	27.5	22.1	11.1	25.2	11.8	1.9	0.0	0.4
	협회/단체	78.9	10.8	4.6	3.1	2.1	0.5	0.0	0.0
규모	5명 미만	89.5	5.5	1.8	2.7	0.5	0.1	0.0	0.0
	5~49명	76.4	10.8	3.5	7.9	1.2	0.1	0.0	0.1
	50~299명	59.6	14.4	4.0	11.9	8.6	1.2	0.0	0.3
	300명 이상	39.7	14.9	5.7	9.2	20.6	5.7	2.1	2.1

2.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위탁·파기

1) 제3자 제공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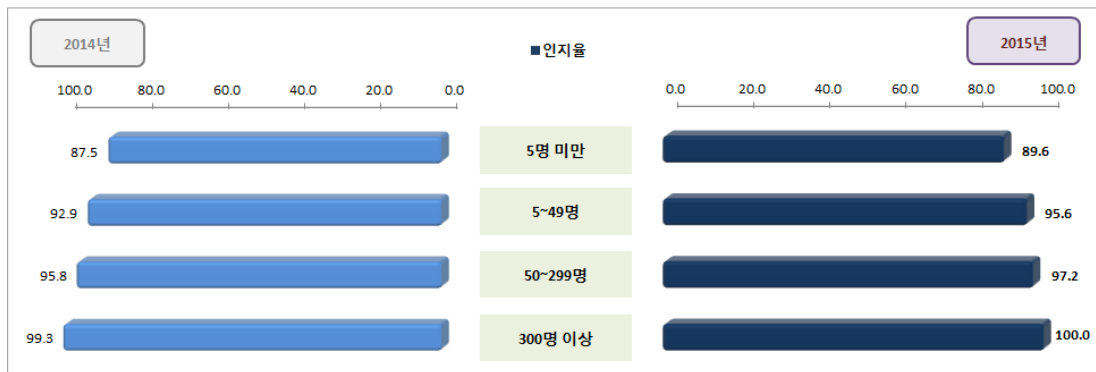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고지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공부문은 100.0%, 사업체는 93.2%가 인지³⁾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공공기관 0.6%p, 사업체 2.2%p가 각각 높게 나타난 결과이다.

<그림-15> 제3자 제공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율은 전년대비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림-16> 제3자 제공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사업체 규모별



3) 인지율 : '알고 있다'+ '잘 안다'+'매우 잘 안다'의 비율임.

<표-22> 제3자 제공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공공부문

구 분		(1)	(2)	(3)	(4)	(5)	(1)+(2)	(3)+(4)+(5)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알고 있다	잘 안다	매우 잘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전 체		-	-	19.7	32.0	48.3	-	100.0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	-	18.6	26.3	55.1	-	100.0
	헌법기관	-	-	0.0	0.0	100.0	-	100.0
	중앙행정기관	-	-	8.5	19.1	72.3	-	100.0
	광역지자체	-	-	17.6	5.9	76.5	-	100.0
	기초지자체	-	-	15.0	23.8	61.2	-	100.0
	공공기관	-	-	14.2	25.6	60.2	-	100.0
	지방공기업	-	-	27.3	31.5	41.2	-	100.0
	교육청	-	-	0.0	5.9	94.1	-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	-	20.8	37.4	41.8	-	100.0
	대학교	-	-	14.0	27.4	58.6	-	100.0
	전문대학	-	-	15.4	43.1	41.5	-	100.0
	고등학교	-	-	24.1	31.0	44.8	-	100.0
	중학교	-	-	21.7	36.0	42.4	-	100.0
	초등학교	-	-	24.4	44.7	30.9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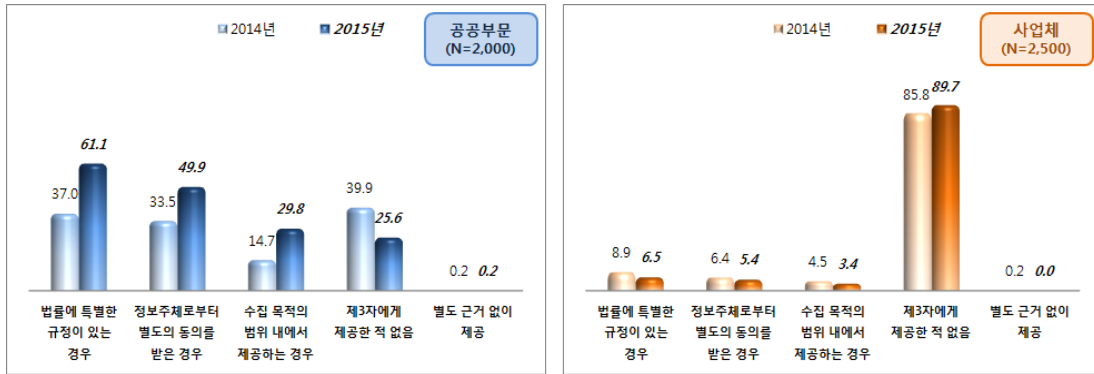
<표-23> 제3자 제공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사업체

구 분		(1)	(2)	(3)	(4)	(5)	(1)+(2)	(3)+(4)+(5)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알고 있다	잘 안다	매우 잘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전 체		0.4	6.4	44.9	33.7	14.6	6.8	93.2
업종	제조	1.4	13.7	52.9	29.9	2.2	15.1	84.9
	전기/가스	0.0	1.2	37.3	36.1	25.3	1.2	98.8
	유통/물류/도소매	0.9	12.9	52.0	26.0	8.1	13.8	86.2
	숙박/음식	0.3	3.4	34.5	37.6	24.2	3.7	96.3
	정보/통신	0.0	2.7	40.5	41.9	14.9	2.7	97.3
	금융/보험	0.0	0.0	45.1	35.2	19.7	0.0	100.0
	부동산/임대	0.0	1.8	43.0	39.0	16.2	1.8	98.2
	사교육	0.0	4.7	61.5	17.1	16.7	4.7	95.3
	보건/복지	0.0	0.4	37.8	46.9	14.9	0.4	99.6
	협회/단체	0.5	9.8	30.9	38.7	20.1	10.3	89.7
	5명 미만	0.6	9.8	53.9	26.9	8.8	10.4	89.6
규모	5~49명	0.4	4.0	41.8	37.0	16.8	4.4	95.6
	50~299명	0.3	2.4	29.4	45.6	22.3	2.8	97.2
	300명 이상	0.0	0.0	22.0	45.4	32.6	0.0	100.0

2) 제3자 제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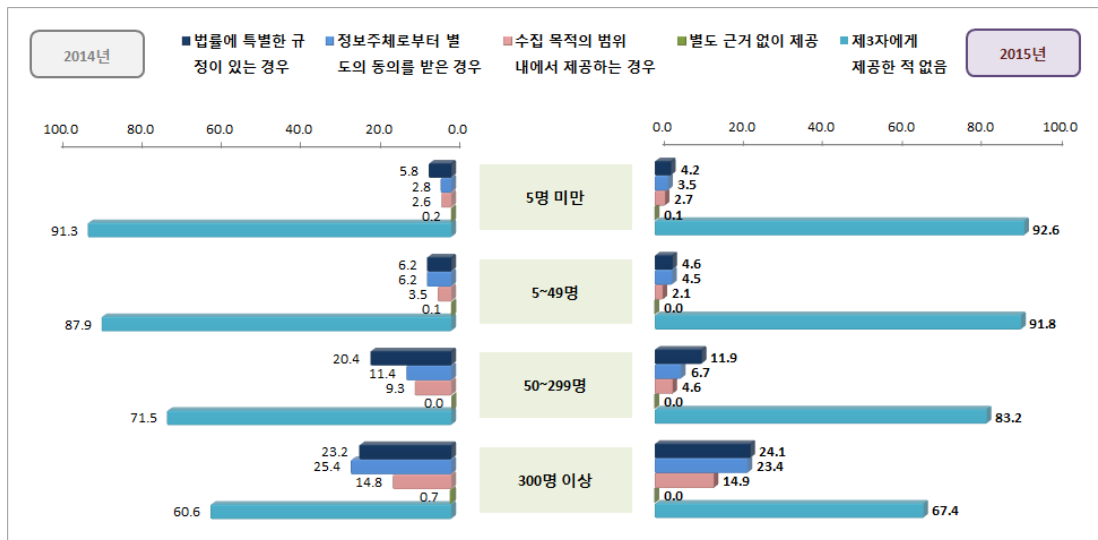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공공부문 61.1%, 사업체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3자에게 제공한 적 없음'은 공공부문(25.6%)보다 사업체(89.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7>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해 '제3자에게 제공한 적 없음'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모두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림-18> 제3자 제공 현황(%)-사업체 규모별



<표-24> 제3자 제공 현황(%)-공공부문

구 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별도 근거 없이 제공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없음
전 체		61.1	49.9	29.8	0.2	25.6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개	55.6	34.0	24.3	0.0	35.7
	헌법기관	50.0	25.0	50.0	0.0	50.0
	중앙행정기관	63.8	27.7	31.9	0.0	29.8
	광역시자체	88.2	29.4	41.2	0.0	11.8
	기초지자체	79.6	43.7	29.1	0.0	14.6
	공공기관	50.0	35.2	20.7	0.0	39.2
	지방공기업	42.6	28.4	22.4	0.0	48.0
	교육청	88.2	35.3	29.4	0.0	5.9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개	66.2	64.7	34.9	0.4	16.1
	대학교	79.0	72.0	43.0	0.0	8.6
	전문대학	80.8	64.6	38.5	0.0	5.4
	고등학교	27.0	53.4	24.7	0.0	32.2
	중학교	62.1	60.6	28.6	0.5	20.2
	초등학교	76.2	68.8	38.2	0.9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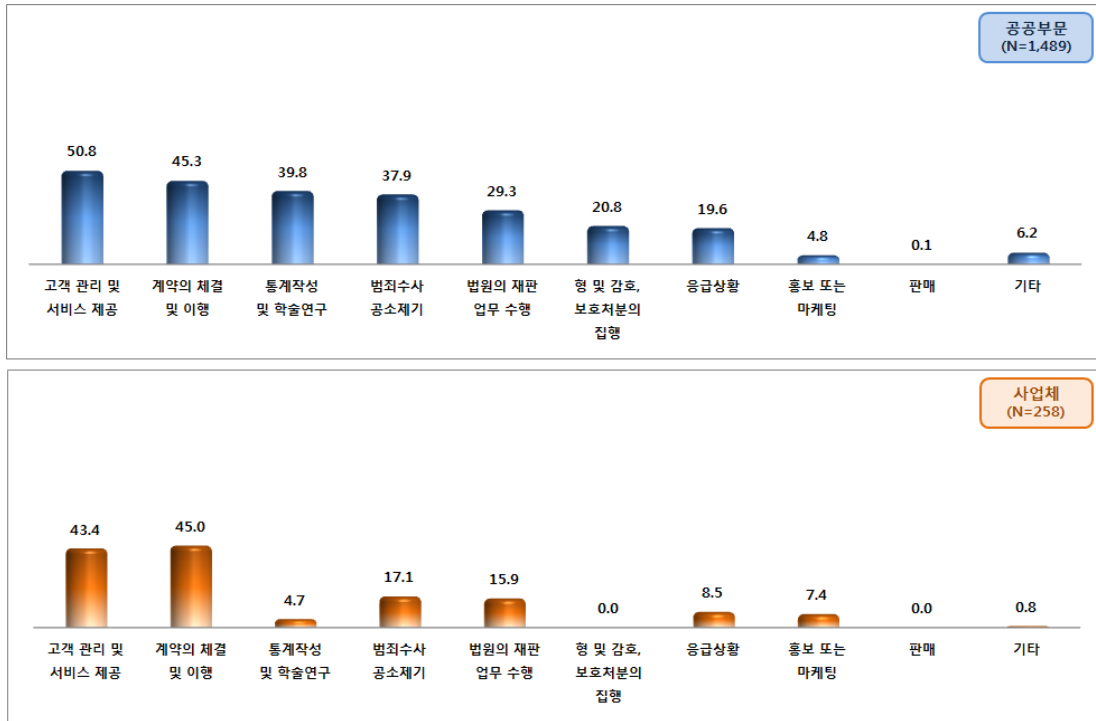
<표-25> 제3자 제공 현황(%)-사업체

구 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별도 근거 없이 제공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없음
전 체		6.5	5.4	3.4	0.0	89.7
업종	제조	1.6	1.4	1.6	0.0	97.5
	전기/가스	14.5	7.2	4.8	0.0	84.3
	유통/물류/도소매	1.6	1.6	0.7	0.0	97.7
	숙박/음식	0.0	0.3	0.0	0.0	99.7
	정보/통신	6.8	7.4	4.7	0.0	88.5
	금융/보험	19.2	19.2	7.3	0.0	72.0
	부동산/임대	11.8	8.8	7.0	0.0	75.4
	사교육	1.7	2.1	0.4	0.0	97.0
	보건/복지	13.7	10.7	8.0	0.0	81.7
	협회/단체	11.9	7.2	6.7	0.5	77.8
	5명 미만	4.2	3.5	2.7	0.1	92.6
규모	5~49명	4.6	4.5	2.1	0.0	91.8
	50~299명	11.9	6.7	4.6	0.0	83.2
	300명 이상	24.1	23.4	14.9	0.0	67.4

3) 제3자 제공 목적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에 대해 공공부문은 ‘고객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체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19> 제3자 제공 목적(%)



- 공공부문의 경우 ‘고객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계약의 체결 및 이행’(45.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39.8%), ‘범죄 수사·공소제기’(37.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객 관리 및 서비스 제공’(43.4%), ‘범죄수사·공소제기’(17.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26> 제3자 제공 목적(%)-공공부문

구 분		고객 관리 및 서비스 제공	계약의 체결 및 이행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형 및 감호, 보호 처분의 집행	응급 상황	홍보 또는 마케팅	판매	기타
전 체		50.8	45.3	39.8	37.9	29.3	20.8	19.6	4.8	0.1	6.2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개	35.5	35.0	35.2	48.7	31.8	14.5	9.5	4.5	0.2	11.1
	헌법기관	50.0	100.0	0.0	50.0	100.0	100.0	0.0	0.0	0.0	0.0
	중앙행정기관	36.4	27.3	24.2	57.6	27.3	18.2	15.2	0.0	0.0	12.1
	광역시·자치	46.7	66.7	40.0	66.7	46.7	6.7	13.3	6.7	0.0	0.0
	기초지자체	29.0	25.0	32.4	71.6	42.6	19.9	10.2	2.8	0.0	10.8
	공공기관	39.6	38.6	40.1	23.4	21.8	8.6	7.6	4.6	0.5	14.7
	지방공기업	36.1	35.5	37.7	53.0	32.2	15.3	9.8	7.1	0.0	8.2
	교육청	37.5	75.0	0.0	25.0	18.8	6.3	6.3	0.0	0.0	12.5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개	61.7	52.6	43.0	30.1	27.5	25.3	26.9	5.1	0.0	2.8
	대학교	57.6	60.0	42.9	21.8	14.7	8.2	10.0	18.2	0.0	7.1
	전문대학	61.0	45.5	49.6	26.8	23.6	22.0	14.6	4.9	0.0	7.3
	고등학교	32.2	77.1	4.2	8.5	6.8	8.5	8.5	1.7	0.0	1.7
	중학교	65.4	56.8	34.6	25.9	22.8	25.9	25.9	1.2	0.0	0.6
	초등학교	74.1	39.1	60.5	47.3	47.3	42.9	49.7	1.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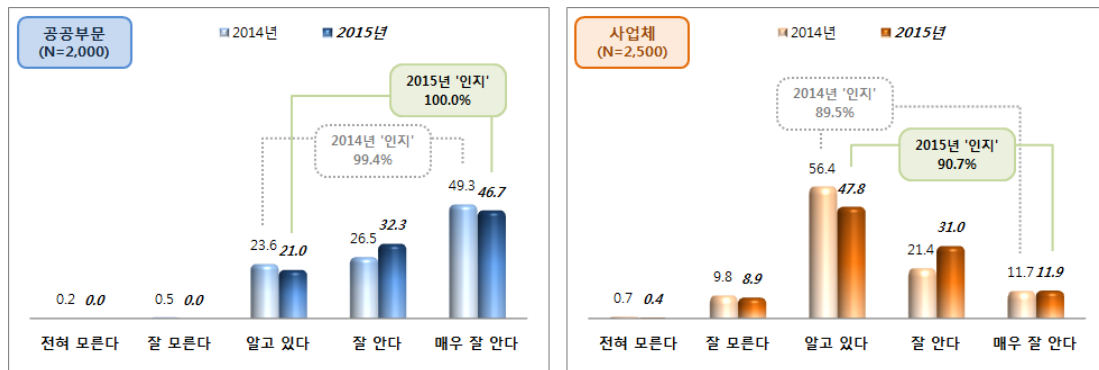
<표-27> 제3자 제공 목적(%)-사업체

구 분		고객 관리 및 서비스 제공	계약의 체결 및 이행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형 및 감호, 보호 처분의 집행	응급 상황	홍보 또는 마케팅	판매	기타
전 체		43.4	45.0	4.7	17.1	15.9	-	8.5	7.4	-	0.8
업종	제조	66.7	66.7	33.3	55.6	66.7	-	0.0	11.1	-	0.0
	전기/가스	61.5	30.8	23.1	15.4	0.0	-	0.0	0.0	-	0.0
	유통/물류/도소매	50.0	20.0	0.0	40.0	0.0	-	10.0	0.0	-	0.0
	숙박/음식	0.0	100.0	0.0	0.0	0.0	-	0.0	0.0	-	0.0
	정보/통신	70.6	29.4	5.9	17.6	0.0	-	0.0	17.6	-	0.0
	금융/보험	20.4	25.9	5.6	48.1	57.4	-	0.0	22.2	-	0.0
	부동산/임대	17.9	80.4	0.0	3.6	3.6	-	0.0	0.0	-	1.8
	사교육	57.1	42.9	0.0	0.0	0.0	-	0.0	0.0	-	0.0
	보건/복지	87.5	14.6	2.1	2.1	2.1	-	43.8	2.1	-	0.0
	협회/단체	32.6	67.4	2.3	2.3	2.3	-	0.0	4.7	-	2.3
규모	5명 미만	37.1	58.4	0.0	4.5	3.4	-	14.6	0.0	-	1.1
	5~49명	35.3	42.6	1.5	11.8	17.6	-	2.9	10.3	-	1.5
	50~299명	52.7	34.5	3.6	29.1	23.6	-	7.3	12.7	-	0.0
	300명 이상	56.5	34.8	19.6	34.8	28.3	-	6.5	10.9	-	0.0

4) 수집 목적 외 이용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고지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공기관의 100.0%, 사업체의 90.7%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공공기관은 0.6%p, 사업체는 1.2%p 높게 나타난 결과이다.

<그림-20> 수집 목적 외 이용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



- 사업체의 경우, '보건/복지'(100.0%)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80.0%)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21> 수집 목적 외 이용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사업체 규모별



- 사업체 규모별로는 전년대비 모든 규모에서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8> 수집 목적 외 이용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공공부문

구 분		(1)	(2)	(3)	(4)	(5)	(1)+(2)	(3)+(4)+(5)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알고 있다	잘 안다	매우 잘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전 체		-	-	21.1	32.3	46.7	-	100.0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	-	20.1	26.8	53.2	-	100.0
	헌법기관	-	-	0.0	0.0	100.0	-	100.0
	중앙행정기관	-	-	10.6	19.1	70.2	-	100.0
	광역지자체	-	-	17.6	5.9	76.5	-	100.0
	기초지자체	-	-	16.0	24.8	59.2	-	100.0
	공공기관	-	-	15.4	28.7	55.9	-	100.0
	지방공기업	-	-	29.0	29.3	41.8	-	100.0
	교육청	-	-	5.9	11.8	82.4	-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	-	22.0	37.4	40.7	-	100.0
	대학교	-	-	14.5	29.6	55.9	-	100.0
	전문대학	-	-	18.5	43.1	38.5	-	100.0
	고등학교	-	-	25.9	33.9	40.2	-	100.0
	중학교	-	-	21.2	35.5	43.3	-	100.0
	초등학교	-	-	25.9	42.4	31.8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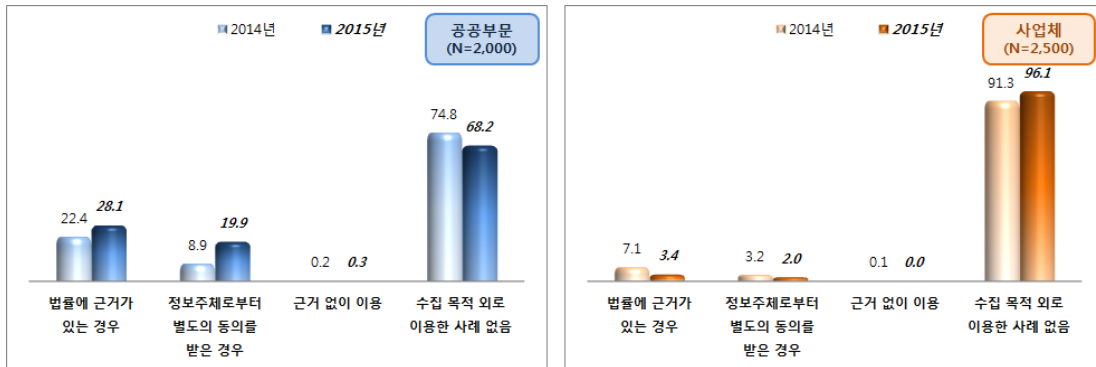
<표-29> 수집 목적 외 이용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사업체

구 분		(1)	(2)	(3)	(4)	(5)	(1)+(2)	(3)+(4)+(5)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알고 있다	잘 안다	매우 잘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전 체		0.4	8.9	47.8	31.0	11.9	9.3	90.7
업종	제조	1.1	18.9	55.9	21.4	2.7	20.0	80.0
	전기/가스	0.0	2.4	33.7	37.3	26.5	2.4	97.6
	유통/물류/도소매	0.7	19.5	54.5	20.4	5.0	20.1	79.9
	숙박/음식	0.3	6.6	33.9	39.0	20.2	6.8	93.2
	정보/통신	0.0	3.4	40.5	45.9	10.1	3.4	96.6
	금융/보험	0.0	0.5	44.6	38.9	16.1	0.5	99.5
	부동산/임대	0.0	3.5	39.9	41.7	14.9	3.5	96.5
	사교육	0.9	4.7	63.7	15.8	15.0	5.6	94.4
	보건/복지	0.0	0.0	49.2	40.8	9.9	0.0	100.0
	협회/단체	0.0	9.3	44.8	29.4	16.5	9.3	90.7
규모	5명 미만	0.4	14.1	56.8	21.6	7.0	14.5	85.5
	5~49명	0.5	5.9	43.0	36.4	14.2	6.4	93.6
	50~299명	0.3	1.2	35.8	45.0	17.7	1.5	98.5
	300명 이상	0.0	0.0	25.5	47.5	27.0	0.0	100.0

5) 수집 목적 외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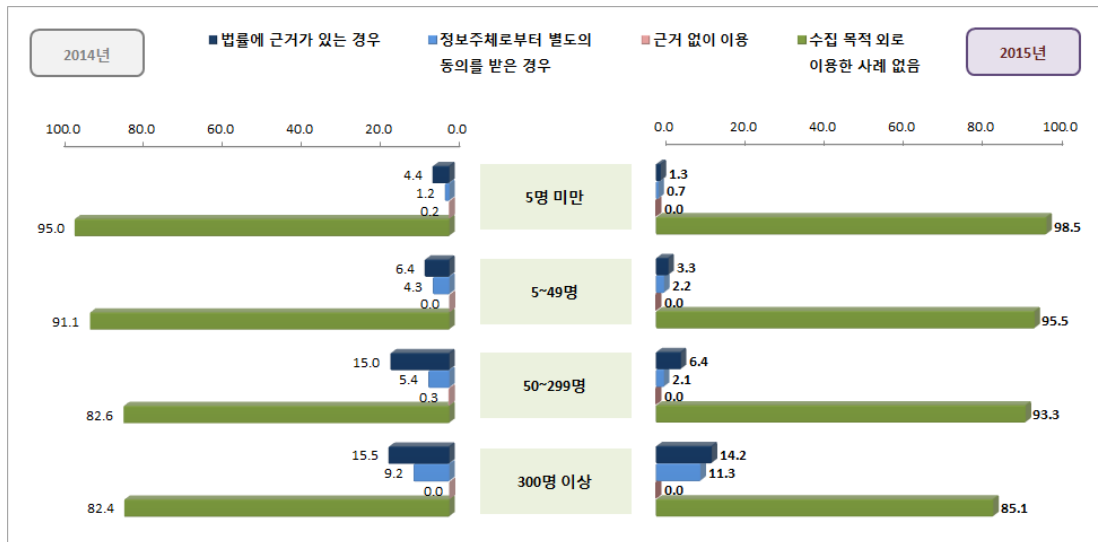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현황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공공기관 28.1%, 사업체 3.4%로 나타났다.

<그림-22>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현황(%)



-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없음'에 대해 공공부문(68.2%)은 전년대비 6.6%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96.1%)는 전년대비 4.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부문의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광역지자체'(각각 82.4%, 41.2%), 교육기관의 '대학교'(각각 49.5%, 43.0%)가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금융/보험' 업종 부문에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17.1%)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10.4%)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23>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현황(%)-사업체 규모별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현황은 대부분이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적 외 이용 사례가 있는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30>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현황(%)-공공부문

구 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근거 없이 이용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없음
전 체		28.1	19.9	0.3	68.2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개	30.0	16.5	0.2	67.7
	헌법기관	50.0	25.0	0.0	50.0
	중앙행정기관	36.2	17.0	0.0	61.7
	광역시자체	82.4	41.2	0.0	17.6
	기초지자체	50.0	25.7	0.0	48.1
	공공기관	14.8	8.3	0.0	83.0
	지방공기업	28.1	17.0	0.6	69.3
	교육청	41.2	23.5	0.0	52.9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개	26.2	23.0	0.3	68.5
	대학교	49.5	43.0	1.1	41.4
	전문대학	29.2	23.8	0.0	66.9
	고등학교	14.4	18.4	0.0	75.3
	중학교	29.1	21.7	0.0	66.5
	초등학교	16.8	15.0	0.3	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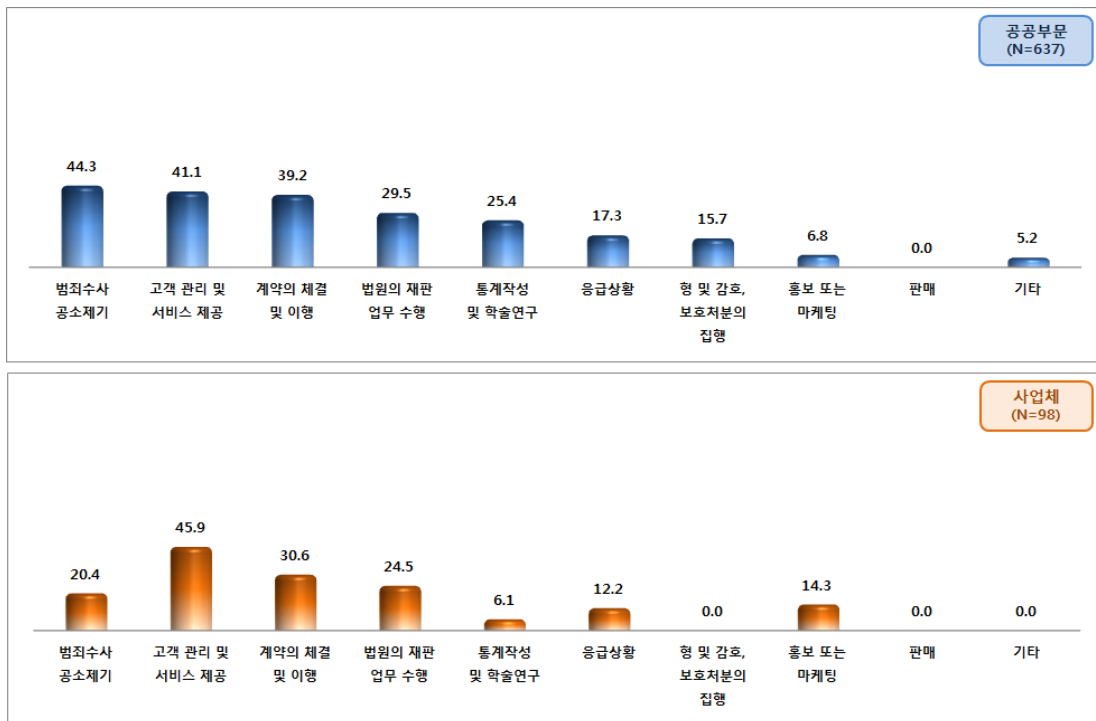
<표-31>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현황(%)-사업체

구 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근거 없이 이용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없음
전 체		3.4	2.0	0.0	96.1
업종	제조	1.6	1.4	0.0	98.4
	전기/가스	2.4	2.4	0.0	97.6
	유통/물류/도소매	0.7	0.9	0.0	99.1
	숙박/음식	0.3	0.0	0.0	99.7
	정보/통신	0.7	0.0	0.0	99.3
	금융/보험	17.1	10.4	0.0	79.8
	부동산/임대	1.3	1.8	0.0	97.4
	사교육	0.9	1.3	0.0	98.3
	보건/복지	9.2	3.8	0.0	90.5
	협회/단체	4.6	1.0	0.0	94.8
규모	5명 미만	1.3	0.7	0.0	98.5
	5~49명	3.3	2.2	0.0	95.5
	50~299명	6.4	2.1	0.0	93.3
	300명 이상	14.2	11.3	0.0	85.1

6) 수집 목적 외 이용 목적

- 공공부문의 경우 '범죄수사·공소제기'가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객 관리 및 서비스 제공'(41.1%), '계약의 체결 및 이행'(39.2%),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29.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고객 관리 및 서비스 제공'(45.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계약의 체결 및 이행'(30.6%),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24.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24>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목적(%)



<표-32>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목적(%)-공공부문

구 분		범죄 수사· 공소 제기	고객 관리 및 서비스 제공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응 급 상 황	형 및 감호, 보호 처분의 집행	홍보 또는 마케팅	판매	기타
전 체		44.3	41.1	39.2	29.5	25.4	17.3	15.7	6.8	5.2	5.2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62.5	27.6	28.5	38.1	22.8	11.2	13.8	7.7	6.4	6.4
	헌법기관	100.0	50.0	50.0	100.0	0.0	0.0	50.0	0.0	0.0	0.0
	중앙행정기관	77.8	22.2	22.2	38.9	5.6	16.7	16.7	0.0	5.6	5.6
	광역지자체	57.1	50.0	57.1	28.6	35.7	7.1	0.0	14.3	0.0	0.0
	기초지자체	76.6	16.8	18.7	37.4	15.0	9.3	8.4	1.9	7.5	7.5
	공공기관	40.0	30.9	27.3	40.0	29.1	9.1	14.5	9.1	10.9	10.9
	지방공기업	58.3	35.2	34.3	38.9	28.7	14.8	18.5	13.9	3.7	3.7
	교육청	50.0	12.5	50.0	25.0	25.0	0.0	25.0	0.0	12.5	12.5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26.8	54.2	49.5	21.2	28.0	23.1	17.5	5.8	4.0	4.0
	대학교	30.3	51.4	54.1	24.8	34.9	17.4	11.9	12.8	7.3	7.3
	전문대학	11.6	51.2	58.1	9.3	30.2	9.3	7.0	7.0	9.3	9.3
	고등학교	16.3	30.2	62.8	4.7	11.6	27.9	9.3	0.0	2.3	2.3
	중학교	26.5	66.2	29.4	22.1	22.1	23.5	25.0	1.5	0.0	0.0
	초등학교	38.7	64.5	48.4	33.9	32.3	38.7	32.3	1.6	0.0	0.0

개인정보처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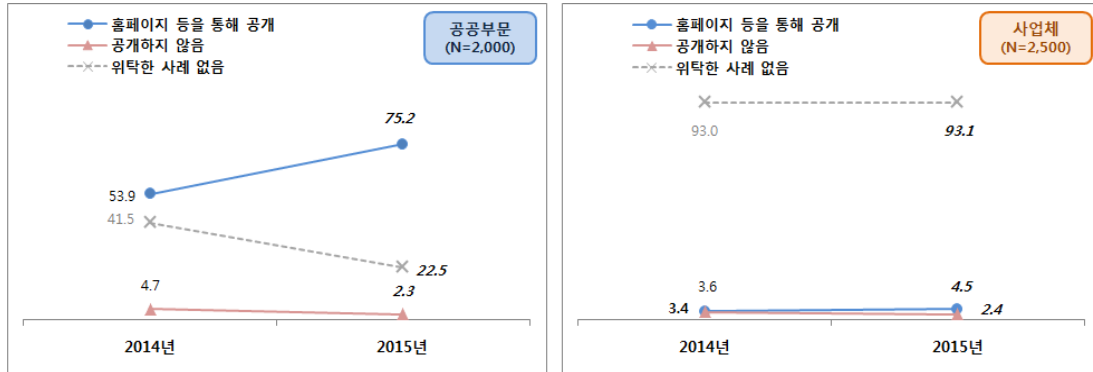
<표-33>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목적(%)-사업체

구 분		범죄 수사· 공소 제기	고객 관리 및 서비스 제공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응 급 상 황	형 및 감호, 보호 처분의 집행	홍보 또는 마케팅	판매	기타
전 체		20.4	45.9	30.6	24.5	6.1	12.2	-	14.3	-	-
업종	제조	16.7	33.3	33.3	33.3	33.3	33.3	-	0.0	-	-
	전기/가스	100.0	0.0	0.0	50.0	100.0	0.0	-	0.0	-	-
	유통/물류/도소매	25.0	50.0	0.0	0.0	0.0	0.0	-	50.0	-	-
	숙박/음식	0.0	0.0	100.0	0.0	0.0	0.0	-	0.0	-	-
	정보/통신	0.0	100.0	100.0	0.0	0.0	0.0	-	100.0	-	-
	금융/보험	35.9	20.5	28.2	46.2	2.6	0.0	-	28.2	-	-
	부동산/임대	0.0	50.0	50.0	0.0	0.0	0.0	-	0.0	-	-
	사교육	0.0	100.0	0.0	0.0	0.0	0.0	-	0.0	-	-
	보건/복지	4.0	88.0	16.0	8.0	4.0	40.0	-	0.0	-	-
	협회/단체	10.0	30.0	80.0	10.0	0.0	0.0	-	0.0	-	-
규모	5명 미만	5.6	50.0	50.0	5.6	5.6	22.2	-	0.0	-	-
	5~49명	8.1	56.8	32.4	18.9	0.0	5.4	-	21.6	-	-
	50~299명	36.4	27.3	31.8	45.5	0.0	4.5	-	13.6	-	-
	300명 이상	38.1	42.9	9.5	28.6	23.8	23.8	-	14.3	-	-

7)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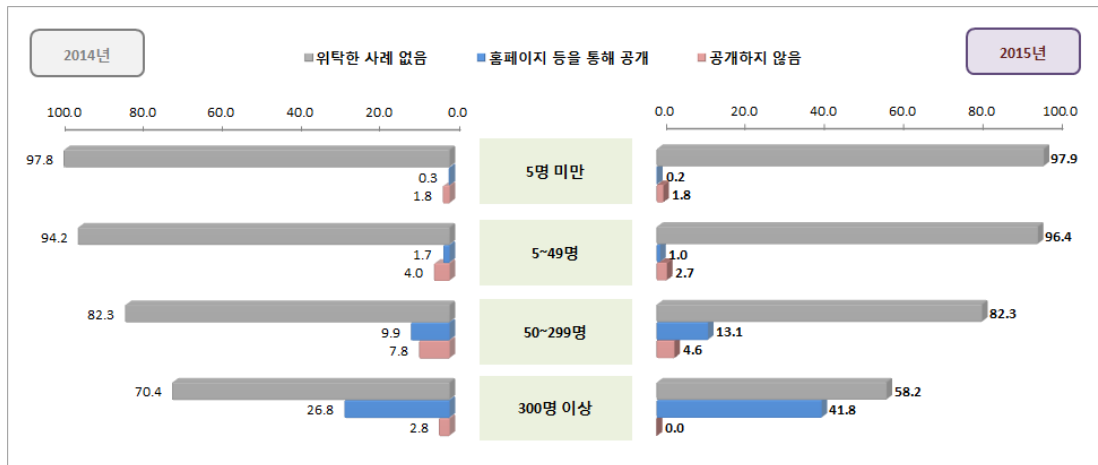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공개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가 공공 부문 75.2%, 사업체 4.5%로 나타났다.

<그림-25>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공개(%)



- 공공부문의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가 75.2%로 전년대비 21.3%p 높게 나타났으며, '위탁한 사례 없음'은 22.5%로 전년대비 19.0%p 낮게 나타났다.
-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는 공공기관의 '교육청'(100.0%), 교육기관의 '초등학교'(87.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위탁한 사례 없음'은 공공기관의 '지방공기업'(36.9%)과 교육기관의 '고등학교'(52.3%)가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가 4.5%로 전년대비 0.9%p 높게 나타났다으며, '위탁한 사례 없음'은 93.1%로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는 '전기/가스'(20.5%), '위탁한 사례 없음'은 '숙박/음식' (98.3%)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각각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26>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공개(%) -사업체 규모별



- 사업체 규모별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공개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위탁한 사례가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사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는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4>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공개(%)-공공부문

구 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공개하지 않음	위탁한 사례 없음
전 체		75.2	2.3	22.5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개	73.3	2.1	24.6
	헌법기관	75.0	0.0	25.0
	중앙행정기관	87.2	2.1	10.6
	광역시자체	94.1	0.0	5.9
	기초지자체	90.3	1.0	8.7
	공공기관	71.9	2.5	25.6
	지방공기업	60.5	2.6	36.9
	교육청	100.0	0.0	0.0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개	77.0	2.5	20.5
	대학교	85.5	1.6	12.9
	전문대학	78.5	4.6	16.9
	고등학교	43.1	4.6	52.3
	중학교	80.3	2.5	17.2
	초등학교	87.1	1.2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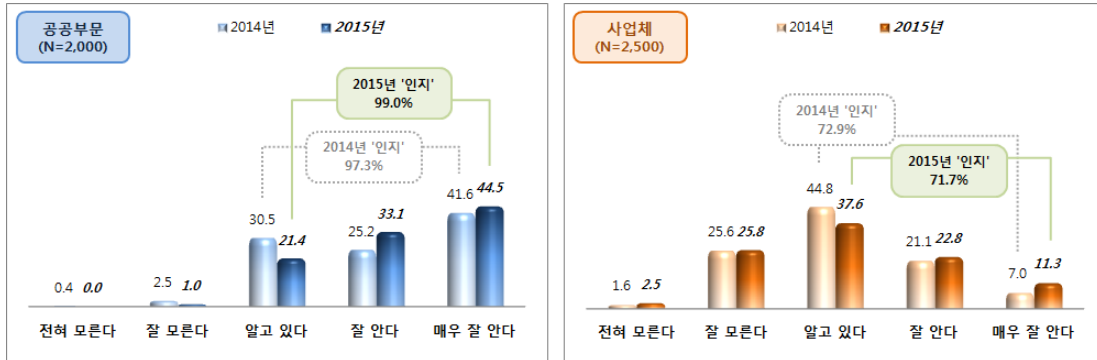
<표-35>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공개(%)-사업체

구 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공개하지 않음	위탁한 사례 없음
전 체		4.5	2.4	93.1
업종	제조	4.4	3.8	91.8
	전기/가스	20.5	3.6	75.9
	유통/물류/도소매	1.4	0.7	98.0
	숙박/음식	1.7	0.0	98.3
	정보/통신	12.2	0.0	87.8
	금융/보험	13.5	2.6	83.9
	부동산/임대	1.8	0.9	97.4
	사교육	3.0	2.1	94.9
	보건/복지	2.3	6.5	91.2
	협회/단체	3.6	5.2	91.2
규모	5명 미만	0.2	1.8	97.9
	5~49명	1.0	2.7	96.4
	50~299명	13.1	4.6	82.3
	300명 이상	41.8	0.0	58.2

8)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방법(문서) 인지 여부

-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각 중요사항에 대해 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공부문의 99.0%, 사업체의 71.7%가 인지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7>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방법(문서) 인지 여부(%)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의 문서화에 대한 인지율은 99.0%로 전년(97.3%) 대비 1.7%p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기관'(98.5%)과 '지방공기업'(98.9%)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100.0%로 높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의 문서화에 대한 인지율은 71.7%로 전년(72.9%) 대비 1.2%p 낮게 나타났으며, '금융/보험'(97.4%)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4) 인지율 : '알고 있다'+ '잘 안다'+ '매우 잘 안다' 비율임.

<표-36>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방법(문서) 인지 여부(%)-공공부문

구 분		(1)	(2)	(3)	(4)	(5)	(1)+(2)	(3)+(4)+(5)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알고 있다	잘 안다	매우 잘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전 체		-	1.0	21.6	33.1	44.5	1.0	99.1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	0.9	19.1	29.1	50.9	0.9	99.1
	헌법기관	-	0.0	0.0	0.0	100.0	0.0	100.0
	중앙행정기관	-	0.0	10.6	17.0	72.3	0.0	100.0
	광역지자체	-	0.0	17.6	5.9	76.5	0.0	100.0
	기초지자체	-	0.0	17.0	29.1	53.9	0.0	100.0
	공공기관	-	1.5	15.4	28.1	54.9	1.5	98.5
	지방공기업	-	1.1	26.1	33.8	38.9	1.1	98.9
	교육청	-	0.0	0.0	11.8	88.2	0.0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	1.0	23.8	36.8	38.4	1.0	99.0
	대학교	-	0.5	12.4	31.7	55.4	0.5	99.5
	전문대학	-	0.8	27.7	37.7	33.8	0.8	99.2
	고등학교	-	2.3	31.0	33.3	33.3	2.3	97.7
	중학교	-	0.5	25.6	29.1	44.8	0.5	99.5
	초등학교	-	0.9	23.8	45.6	29.7	0.9	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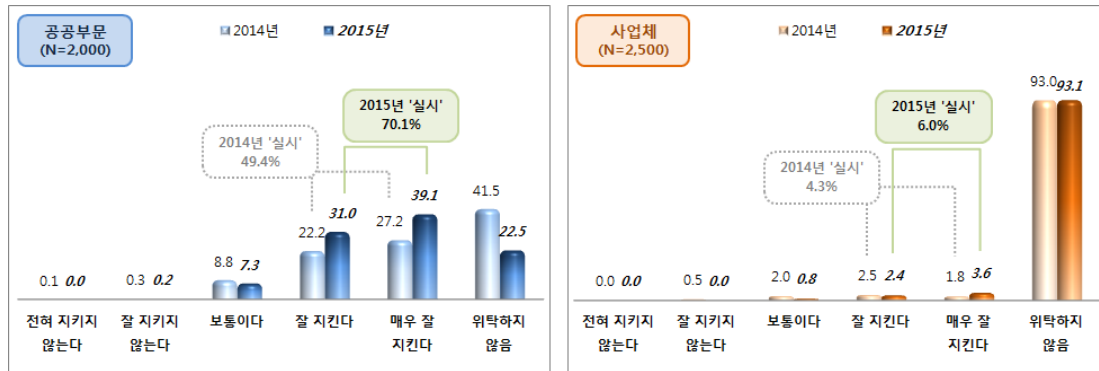
<표-37>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방법(문서) 인지 여부(%)-사업체

구 분		(1)	(2)	(3)	(4)	(5)	(1)+(2)	(3)+(4)+(5)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알고 있다	잘 안다	매우 잘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전 체		2.5	25.8	37.6	22.8	11.3	28.3	71.7
업종	제조	1.6	46.8	36.7	12.6	2.2	48.5	51.5
	전기/가스	0.0	32.5	27.7	21.7	18.1	32.5	67.5
	유통/물류/도소매	3.4	54.1	29.2	10.2	3.2	57.5	42.5
	숙박/음식	4.8	12.0	27.6	30.5	25.1	16.8	83.2
	정보/통신	0.0	14.9	39.2	29.1	16.9	14.9	85.1
	금융/보험	0.0	2.6	41.5	36.8	19.2	2.6	97.4
	부동산/임대	0.4	13.2	33.8	26.8	25.9	13.6	86.4
	사교육	1.3	15.8	55.6	23.1	4.3	17.1	82.9
	보건/복지	1.9	9.2	53.4	30.9	4.6	11.1	88.9
	협회/단체	7.7	24.7	37.1	22.7	7.7	32.5	67.5
규모	5명 미만	4.0	34.2	39.8	14.6	7.5	38.2	61.8
	5~49명	1.5	21.3	38.8	27.3	11.2	22.8	77.2
	50~299명	0.6	15.6	33.3	33.0	17.4	16.2	83.8
	300명 이상	0.0	3.5	22.0	43.3	31.2	3.5	96.5

9)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방법(문서) 실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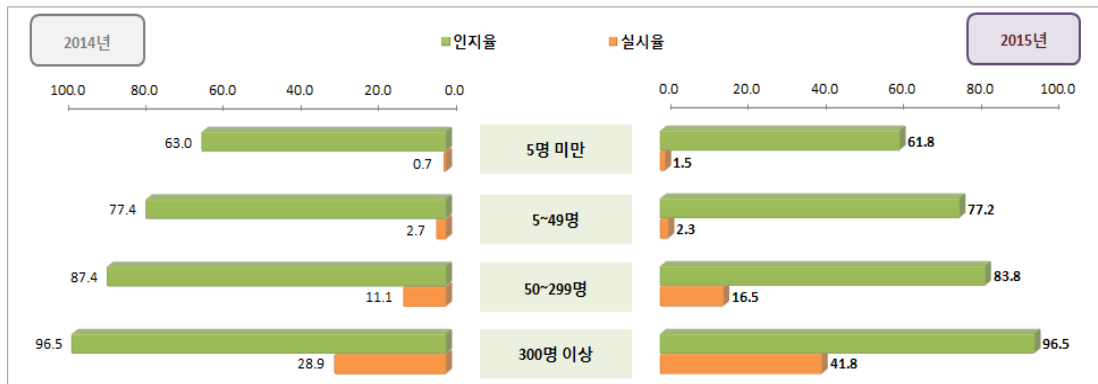
- 개인정보 처리 시 문서화 실시율⁵⁾에 대해 공공부문(70.1%)은 전년(49.4%) 대비 20.7%p, 사업체(6.0%)는 전년(4.3%) 대비 1.7%p 높게 나타났다.

<그림-28>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방법(문서) 실시 여부(%)



- 사업체 규모별 개인정보 처리 시 문서화에 대한 인지율과 실시율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림-29>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방법(문서) 인지 및 실시 여부(%)-사업체 규모별



5) 실시율 : '잘 지킨다'+ '매우 잘 지킨다' 비율임.

<표-38>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방법(문서) 실시 여부(%)-공공부문

구 분		(1) 전혀 지키지 않는다	(2) 잘 지키지 않는다	(3) 보통 이다	(4) 잘 지킨다	(5) 매우 잘 지킨다	(6) 위탁하지 않음	(1)+(2) 지키지 않음	(3) 보통	(4)+(5) 지킴
전 체		-	0.2	7.3	31.0	39.1	22.5	0.2	7.3	70.1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	0.2	4.9	27.5	42.8	24.6	0.2	4.9	70.3
	헌법기관	-	0.0	0.0	0.0	75.0	25.0	0.0	0.0	75.0
	중앙행정기관	-	0.0	6.4	19.1	63.8	10.6	0.0	6.4	83.0
	광역시자체	-	0.0	5.9	5.9	82.4	5.9	0.0	5.9	88.2
	기초지자체	-	0.5	6.8	37.4	46.6	8.7	0.5	6.8	84.0
	공공기관	-	0.3	4.3	27.2	42.6	25.6	0.3	4.3	69.8
	지방공기업	-	0.0	3.7	25.3	34.1	36.9	0.0	3.7	59.4
교육기관	교육청	-	0.0	11.8	11.8	76.5	0.0	0.0	11.8	88.2
	교육기관소계	-	0.1	9.5	34.3	35.6	20.5	0.1	9.5	69.9
	대학교	-	0.0	11.3	33.3	42.5	12.9	0.0	11.3	75.8
	전문대학	-	0.0	10.8	41.5	30.8	16.9	0.0	10.8	72.3
	고등학교	-	0.0	8.0	22.4	17.2	52.3	0.0	8.0	39.7
	중학교	-	0.0	15.3	26.6	40.9	17.2	0.0	15.3	67.5
	초등학교	-	0.3	5.3	42.6	40.0	11.8	0.3	5.3	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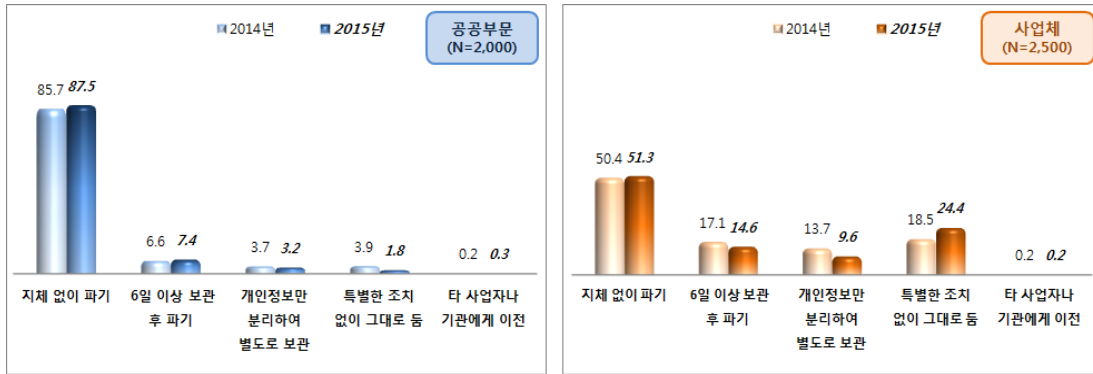
<표-39>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방법(문서) 실시 여부(%)-사업체

구 분		(1) 전혀 지키지 않는다	(2) 잘 지키지 않는다	(3) 보통 이다	(4) 잘 지킨다	(5) 매우 잘 지킨다	(6) 위탁하지 않음	(1)+(2) 지키지 않음	(3) 보통	(4)+(5) 지킴
전 체		0.0	0.0	0.8	2.4	3.6	93.1	0.0	0.8	6.0
업종	제조	0.0	0.3	1.9	3.0	3.0	91.8	0.3	1.9	6.0
	전기/가스	0.0	0.0	0.0	4.8	19.3	75.9	0.0	0.0	24.1
	유통/물류/도소매	0.0	0.0	0.5	0.9	0.7	98.0	0.0	0.5	1.6
	숙박/음식	0.0	0.0	0.0	0.3	1.4	98.3	0.0	0.0	1.7
	정보/통신	0.0	0.0	0.0	0.7	11.5	87.8	0.0	0.0	12.2
	금융/보험	0.0	0.0	2.1	5.2	8.8	83.9	0.0	2.1	14.0
	부동산/임대	0.0	0.0	0.4	0.4	1.8	97.4	0.0	0.4	2.2
	사교육	0.0	0.0	0.9	3.0	1.3	94.9	0.0	0.9	4.3
	보건/복지	0.0	0.0	0.8	5.0	3.1	91.2	0.0	0.8	8.0
	협회/단체	0.0	0.0	1.5	4.1	3.1	91.2	0.0	1.5	7.2
규모	5명 미만	0.0	0.0	0.6	1.1	0.4	97.9	0.0	0.6	1.5
	5~49명	0.0	0.1	1.2	1.1	1.2	96.4	0.1	1.2	2.3
	50~299명	0.0	0.0	1.2	7.0	9.5	82.3	0.0	1.2	16.5
	300명 이상	0.0	0.0	0.0	10.6	31.2	58.2	0.0	0.0	41.8

10) 개인정보 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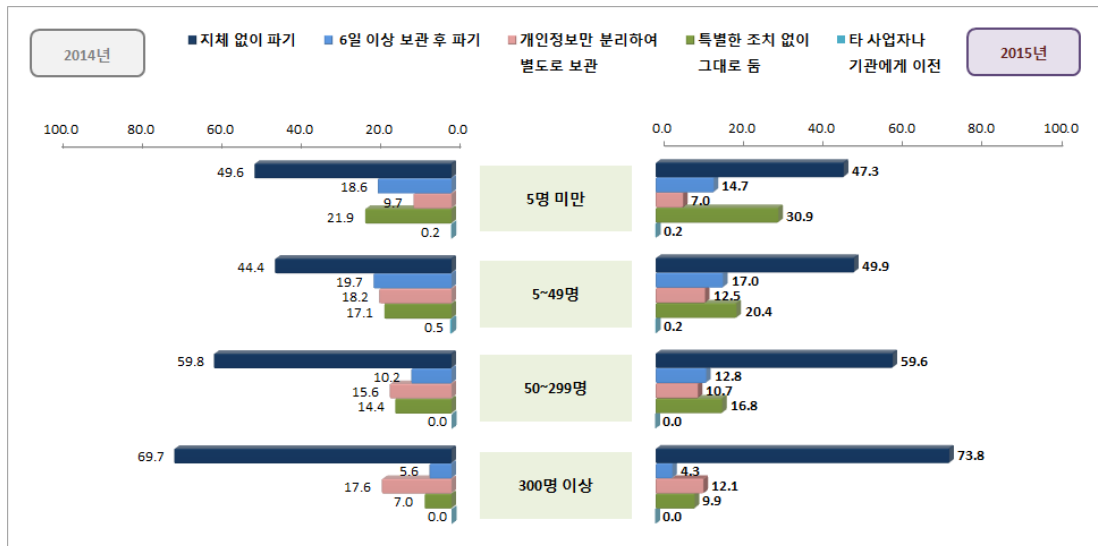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처리에 대해 공공부문(87.5%)과 사업체(51.3%)에서 모두 '지체 없이 파기'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30> 개인정보 파기(%)



- 공공부문의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지체 없이 파기'는 공공기관의 '헌법기관'(100.0%), '광역지자체'(94.1%), '교육청'(94.1%)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반면, '특별한 조치 없이 그대로 둠'은 공공기관의 '중앙행정기관'(4.3%)이 다른 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지체 없이 파기'는 '금융/보험'(83.9%) 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특별한 조치 없이 그대로 둠'은 '제조'(41.9%)와 '보건/복지'(41.2%), '유통/물류/도소매'(40.7%)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31> 개인정보 파기(%) -사업체 규모별



- 사업체 규모별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는 ‘특별한 조치 없이 그대로 둠’(‘5명 미만’ (30.9%), ‘5~49명’(20.4%), ‘50~299명’(16.8%), ‘300명 이상’(9.9%))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정보만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5명 미만’(7.0%), ‘5~49명’ (12.5%), ‘50~299명’(10.7%), ‘300명 이상’(12.1%))은 전년대비 모두 낮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특별한 조치 없이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0> 개인정보 파기(%)-공공부문

구 분		지체 없이 파기	6일 이상 보관 후 파기	개인정보만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	특별한 조치 없이 그대로 둠	타 사업자나 기관에게 이전
전 체		87.5	7.4	3.2	1.8	0.3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87.6	6.2	3.4	2.7	0.1
	헌법기관	100.0	0.0	0.0	0.0	0.0
	중앙행정기관	91.5	0.0	4.3	4.3	0.0
	광역지자체	94.1	0.0	5.9	0.0	0.0
	기초지자체	92.2	5.3	1.0	1.5	0.0
	공공기관	84.9	6.2	5.2	3.7	0.0
	지방공기업	86.1	8.0	3.1	2.6	0.3
	교육청	94.1	5.9	0.0	0.0	0.0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87.3	8.4	3.0	0.9	0.4
	대학교	82.3	10.8	4.8	1.6	0.5
	전문대학	78.5	10.0	7.7	3.8	0.0
	고등학교	81.6	12.6	4.6	0.6	0.6
	중학교	89.7	8.9	0.5	0.0	1.0
	초등학교	95.0	4.1	0.9	0.0	0.0

개인정보처리자

<표-41> 개인정보 파기(%)-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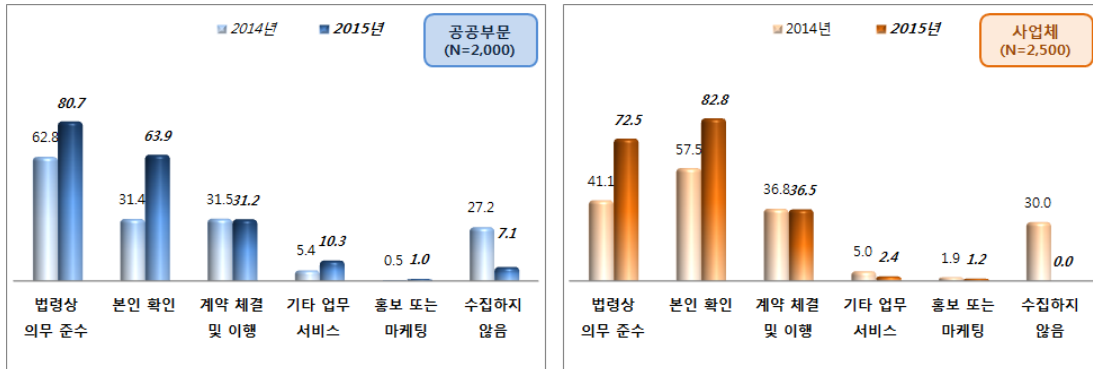
구 분		지체 없이 파기	6일 이상 보관 후 파기	개인정보만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	특별한 조치 없이 그대로 둠	타 사업자나 기관에게 이전
전 체		51.3	14.6	9.6	24.4	0.2
업종	제조	31.0	18.4	8.5	41.9	0.3
	전기/가스	38.6	13.3	37.3	10.8	0.0
	유통/물류/도소매	31.4	22.4	5.2	40.7	0.2
	숙박/음식	65.8	12.3	7.1	14.8	0.0
	정보/통신	77.0	14.9	2.7	5.4	0.0
	금융/보험	83.9	2.1	5.7	8.3	0.0
	부동산/임대	64.0	13.6	9.6	12.7	0.0
	사교육	65.8	20.5	9.0	4.7	0.0
	보건/복지	37.4	6.5	14.1	41.2	0.8
	협회/단체	47.9	11.9	17.5	22.7	0.0
규모	5명 미만	47.3	14.7	7.0	30.9	0.2
	5~49명	49.9	17.0	12.5	20.4	0.2
	50~299명	59.6	12.8	10.7	16.8	0.0
	300명 이상	73.8	4.3	12.1	9.9	0.0

3. 주민등록번호 및 민감정보

1) 주민등록번호 수집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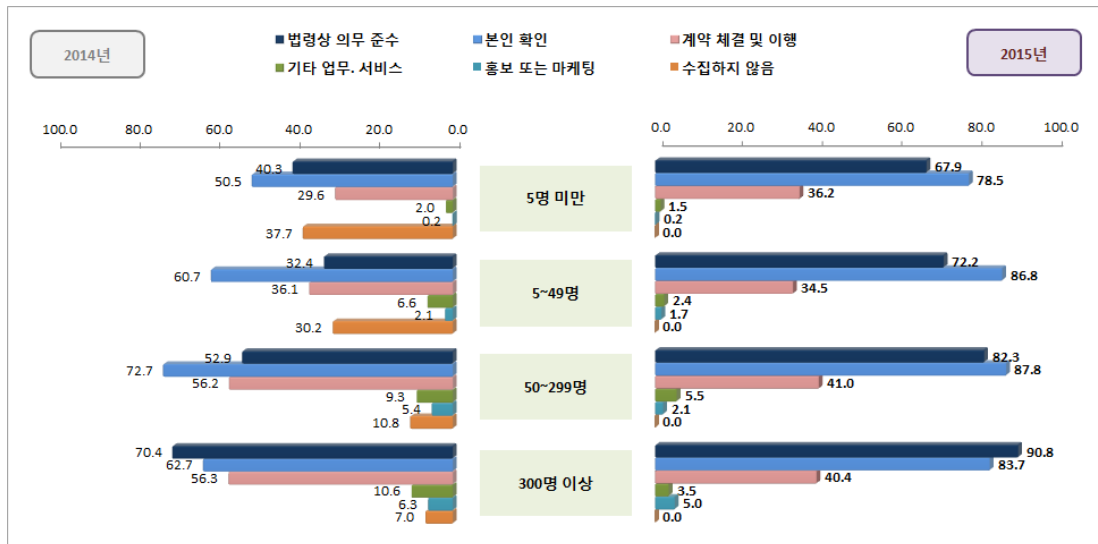
- 주민등록번호 수집 목적에 대해 공공부문은 '법령상 의무준수'(80.7%), 사업체는 '본인 확인'(82.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2> 주민등록번호 수집 목적(%)



- 공공부문의 경우, '법령상 의무준수'(80.7%)가 전년(62.8%) 대비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 확인'(63.9%)은 전년(31.4%) 대비 32.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법령상 의무준수'(72.5%)는 전년(41.1%) 대비 31.4%p, '본인 확인'(82.8%)은 전년(57.5%) 대비 25.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3> 주민등록번호 수집 목적(%) -사업체 규모별



- 주민등록번호 수집 목적에 대한 사업체 규모별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법령상 의무 준수’(‘5명 미만’(67.9%), ‘5~49명’(72.2%), ‘50~299명’(82.3%), ‘300명 이상’(90.8%))와 ‘본인 확인’(‘5명 미만’(78.5%), ‘5~49명’(86.8%), ‘50~299명’(87.8%), ‘300명 이상’(83.7%))을 위해 수집하는 경우가 전년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법령상 의무 준수’의 경우는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42> 주민등록번호 수집 목적(%)-공공부문

구 분		법령상 의무 준수	본인 확인	계약 체결 및 이행	기타 업무 서비스	홍보 또는 마케팅	수집하지 않음
전 체		80.7	63.9	31.2	10.3	1.0	7.1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77.1	45.9	29.2	9.1	0.9	14.6
	헌법기관	75.0	25.0	0.0	25.0	0.0	25.0
	중앙행정기관	87.2	40.4	23.4	10.6	2.1	6.4
	광역지자체	100.0	41.2	41.2	11.8	5.9	0.0
	기초지자체	98.5	53.4	40.3	10.7	1.5	0.0
	공공기관	90.7	58.0	29.0	12.3	0.6	0.0
	지방공기업	49.1	32.1	24.1	4.8	0.6	38.9
	교육청	88.2	35.3	11.8	5.9	0.0	0.0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83.9	80.7	33.0	11.3	1.0	0.0
	대학교	87.1	61.3	34.4	17.7	3.8	0.0
	전문대학	76.9	76.9	27.7	19.2	1.5	0.0
	고등학교	63.8	73.6	32.8	15.5	0.0	0.0
	중학교	86.7	88.7	41.9	3.9	0.0	0.0
	초등학교	93.5	91.8	29.1	7.1	0.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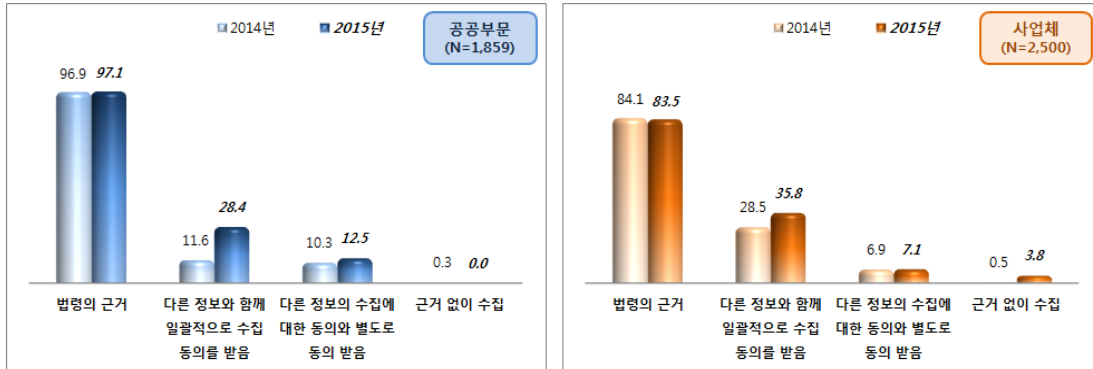
<표-43> 주민등록번호 수집 목적(%)-사업체

구 분		법령상 의무 준수	본인 확인	계약 체결 및 이행	기타 업무 서비스	홍보 또는 마케팅	수집하지 않음
전 체		72.5	82.8	36.5	2.4	1.2	-
업종	제조	79.2	91.0	24.4	1.1	0.3	-
	전기/가스	84.3	95.2	21.7	2.4	1.2	-
	유통/물류/도소매	74.9	83.3	38.9	0.0	0.2	-
	숙박/음식	78.1	68.7	29.6	0.9	0.6	-
	정보/통신	88.5	68.9	18.9	1.4	0.0	-
	금융/보험	85.0	92.2	92.7	3.1	10.9	-
	부동산/임대	57.0	85.1	39.9	5.7	0.9	-
	사교육	53.4	80.8	38.5	2.1	0.4	-
	보건/복지	74.4	90.1	35.1	7.6	0.0	-
	협회/단체	53.1	77.3	25.8	3.1	1.0	-
	5명 미만	67.9	78.5	36.2	1.5	0.2	-
규모	5~49명	72.2	86.8	34.5	2.4	1.7	-
	50~299명	82.3	87.8	41.0	5.5	2.1	-
	300명 이상	90.8	83.7	40.4	3.5	5.0	-

2)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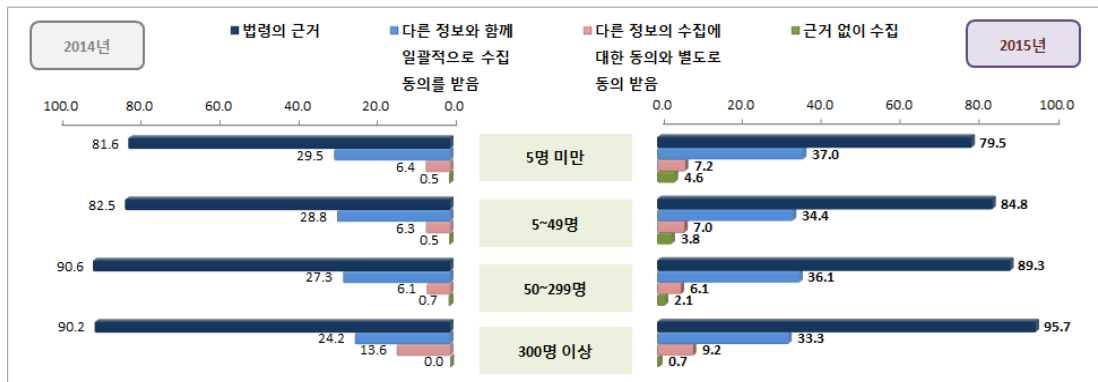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는 '법령의 근거'가 공공부문 97.1%, 사업체 8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4>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 공공부문의 경우, '법령의 근거'(97.1%)는 전년(96.9%)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정보와 함께 일괄적으로 수집 동의를 받음'(28.4%)은 전년(11.6%) 대비 16.8%p 높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법령의 근거'(83.5%)는 전년(84.1%)대비 0.6%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정보와 함께 일괄적으로 수집 동의를 받음'(35.8%)은 전년(28.5%) 대비 7.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령의 근거'는 '금융/보험'(98.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정보와 함께 일괄적으로 수집 동의를 받음'은 '유통/물류/도소매'(57.0%)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35>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사업체 규모별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에 대해 사업체 규모별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법령의 근거’와 ‘다른 정보와 함께 일괄적으로 수집 동의를 받음’은 전년대비 높게 나타났다.
- ‘다른 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 받음’은 ‘300명 이상’이 전년 (13.6%)에 비해 다소 감소한 9.2%로 나타났다.

<표-44>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공공부문

구 분		법령의 근거	다른 정보와 함께 일괄적으로 수집 동의를 받음	다른 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 받음	근거 없이 수집
전 체		97.1	28.4	12.5	-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개	97.6	14.8	12.1	-
	헌법기관	100.0	0.0	0.0	-
	중앙행정기관	100.0	4.5	11.4	-
	광역시자체	100.0	5.9	11.8	-
	기초지자체	100.0	15.0	13.1	-
	공공기관	97.2	14.8	12.0	-
	지방공기업	95.8	17.7	12.6	-
	교육청	88.2	11.8	0.0	-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개	96.8	39.3	12.9	-
	대학교	96.8	40.3	22.0	-
	전문대학	98.5	43.1	12.3	-
	고등학교	93.1	29.9	16.1	-
	중학교	96.6	35.0	8.4	-
	초등학교	98.2	44.7	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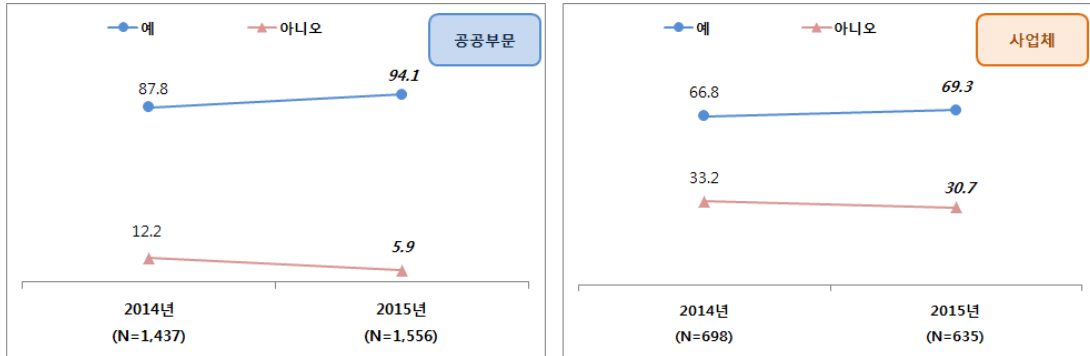
<표-45>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사업체

구 분		법령의 근거	다른 정보와 함께 일괄적으로 수집 동의를 받음	다른 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 받음	근거 없이 수집
전 체		83.5	35.8	7.1	3.8
업종	제조	82.5	51.5	2.5	3.8
	전기/가스	92.8	20.5	3.6	2.4
	유통/물류/도소매	84.2	57.0	4.8	4.3
	숙박/음식	89.5	13.4	3.4	4.0
	정보/통신	87.8	7.4	2.7	4.7
	금융/보험	98.4	39.4	26.9	0.0
	부동산/임대	78.9	23.7	7.9	5.3
	사교육	74.4	26.9	14.5	5.1
	보건/복지	74.4	46.9	3.8	0.4
	협회/단체	79.4	33.5	7.7	6.7
규모	5명 미만	79.5	37.0	7.2	4.6
	5~49명	84.8	34.4	7.0	3.8
	50~299명	89.3	36.1	6.1	2.1
	300명 이상	95.7	33.3	9.2	0.7

3)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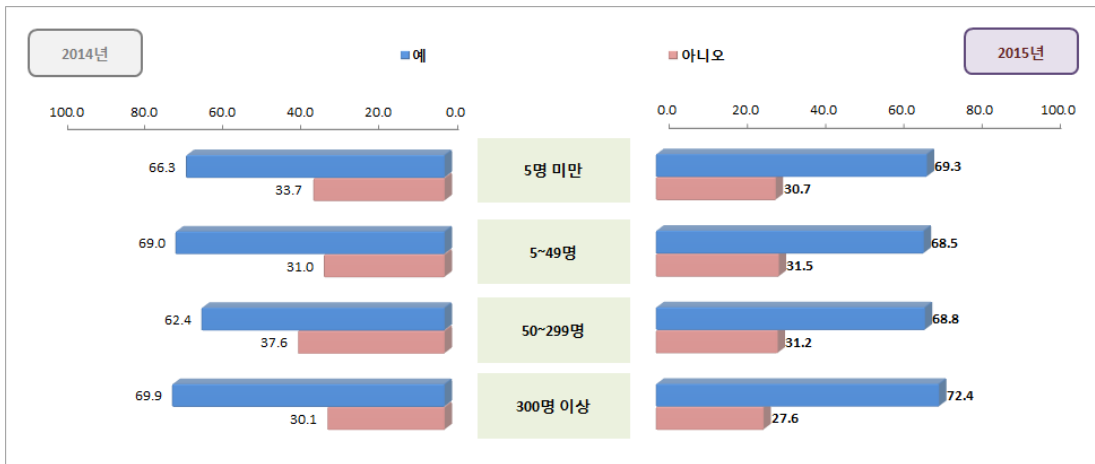
-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홈페이지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에 대해 공공부문의 94.1%, 사업체의 69.3%가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6>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에 대해 사업체 규모별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전년대비 대체수단의 제공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7>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사업체 규모별



<표-46>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제공 여부(%)-공공부문

구 분		예	아니오
전 체		94.1	5.9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93.7	6.3
	헌법기관	100.0	0.0
	부/처/청/위원회	96.3	3.7
	광역지자체	100.0	0.0
	기초지자체	96.2	3.8
	공공기관	91.6	8.4
	지방공기업	93.8	6.3
	교육청	85.7	14.3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94.4	5.6
	대학교	96.8	3.2
	전문대학	93.2	6.8
	고등학교	86.8	13.2
	중학교	94.4	5.6
	초등학교	97.6	2.4

개인정보처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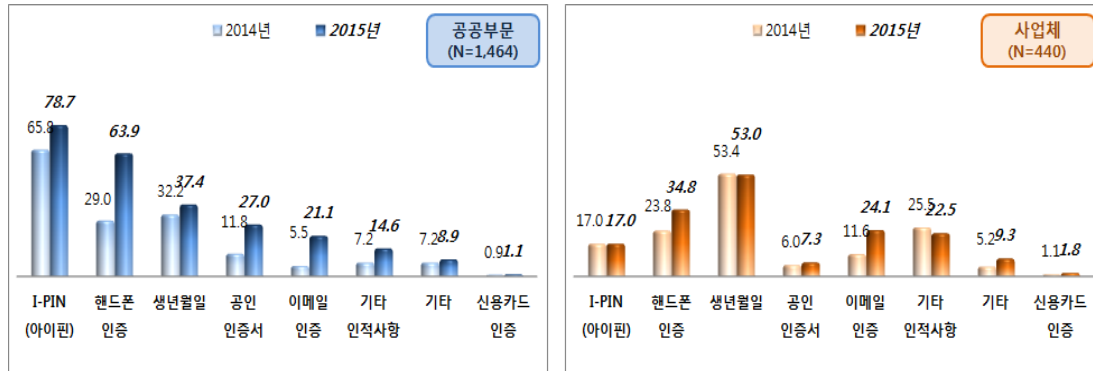
<표-47>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제공 여부(%)-사업체

구 분		예	아니오
전 체		69.3	30.7
업종	제조	63.2	36.8
	전기/가스	70.4	29.6
	유통/물류/도소매	74.5	25.5
	숙박/음식	47.1	52.9
	정보/통신	72.1	27.9
	금융/보험	48.7	51.3
	부동산/임대	61.1	38.9
	사교육	85.1	14.9
	보건/복지	79.0	21.0
	협회/단체	68.4	31.6
규모	5명 미만	69.3	30.7
	5~49명	68.5	31.5
	50~299명	68.8	31.2
	300명 이상	72.4	27.6

4) 선호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 선호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공공부문은 'I-PIN(아이핀)'(78.7%), '핸드폰 인증'(63.9%), '생년월일'(37.4%) 등의 순으로, 사업체는 '생년월일'(53.0%), '핸드폰 인증' (34.8%), '이메일 인증'(24.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38> 선호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표-48> 선호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공공부문

구 분		I-PIN (아이핀)	핸드폰 인증	생년월일	공인 인증서	이메일 인증	기타 인적 사항	신용카드 인증	기타
전 체		78.7	63.9	37.4	27.0	21.1	14.6	1.1	8.9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개	86.5	58.9	21.1	22.1	11.1	2.1	1.3	0.8
	헌법기관	100.0	50.0	0.0	50.0	0.0	0.0	0.0	0.0
	중앙행정기관	88.5	46.2	26.9	50.0	3.8	3.8	3.8	0.0
	광역시자체	100.0	83.3	25.0	41.7	8.3	8.3	0.0	0.0
	기초지자체	91.4	67.5	29.8	20.5	5.3	0.0	0.7	0.0
	공공기관	83.4	59.0	14.0	24.0	19.7	4.4	2.2	1.7
	지방공기업	85.0	53.3	21.7	14.4	6.7	0.6	0.6	0.6
	교육청	83.3	16.7	33.3	50.0	0.0	0.0	0.0	0.0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개	73.2	67.5	48.8	30.4	28.2	23.4	0.9	14.6
	대학교	66.9	56.2	24.0	21.5	14.0	6.6	1.7	52.1
	전문대학	76.5	70.6	30.9	13.2	14.7	8.8	4.4	61.8
	고등학교	60.3	39.7	32.5	19.2	15.2	6.6	0.0	7.9
	중학교	72.7	70.1	57.8	44.9	44.4	41.7	1.6	3.7
	초등학교	81.0	82.2	64.0	34.1	32.9	29.9	0.0	0.3

개인정보처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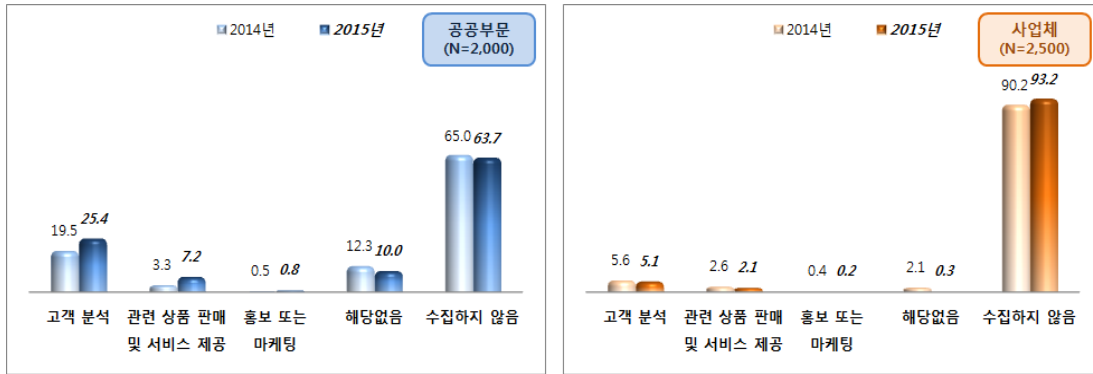
<표-49> 선호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사업체

구 분		I-PIN (아이핀)	핸드폰 인증	생년월일	공인 인증서	이메일 인증	기타 인적 사항	신용카드 인증	기타
전 체		17.0	34.8	53.0	7.3	24.1	22.5	1.8	9.3
업종	제조	4.7	51.2	60.5	4.7	48.8	37.2	0.0	0.0
	전기/가스	0.0	57.9	57.9	0.0	47.4	47.4	5.3	5.3
	유통/물류/도소매	21.1	55.3	36.8	2.6	44.7	23.7	2.6	28.9
	숙박/음식	12.5	37.5	62.5	0.0	12.5	50.0	6.3	0.0
	정보/통신	41.9	51.6	45.2	9.7	22.6	9.7	0.0	0.0
	금융/보험	13.5	18.9	43.2	40.5	8.1	5.4	2.7	2.7
	부동산/임대	27.3	27.3	63.6	9.1	27.3	9.1	0.0	0.0
	사교육	14.0	29.1	46.5	1.2	30.2	15.1	1.2	20.9
	보건/복지	11.4	21.5	64.6	5.1	5.1	16.5	1.3	0.0
	협회/단체	26.3	31.3	55.0	6.3	17.5	31.3	2.5	12.5
규모	5명 미만	8.5	26.4	49.1	5.7	27.4	31.1	0.0	8.5
	5~49명	15.8	32.1	53.3	5.5	22.4	23.0	1.2	13.9
	50~299명	24.5	37.7	56.6	8.5	17.9	17.9	1.9	5.7
	300명 이상	22.2	50.8	52.4	12.7	33.3	14.3	6.3	4.8

5) 민감정보 수집 목적

- 민감정보에 대해 ‘수집하지 않음’(공공기관 63.7%, 사업체 93.2%)을 제외하고, 수집하는 경우의 수집 목적은 ‘고객 분석’이 공공부문 25.4%, 사업체 5.1%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39> 민감정보 수집 목적(%)



- 공공부문의 경우,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가장 높은 ‘고객 분석’은 교육기관이 43.9%로 공공기관(5.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비율은 공공기관이 77.7%, 교육기관이 50.6%로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민감정보 수집 목적 중 ‘고객분석’은 ‘보건/복지’(42.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관련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은 ‘전기/가스’(16.9%)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0> 민감정보 수집 목적(%)-공공부문

구 분		고객 분석	관련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홍보 또는 마케팅	수집하지 않음	해당 없음
전 체		25.4	7.2	0.8	63.7	10.0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개	5.6	5.3	0.3	77.7	14.2
	헌법기관	0.0	0.0	0.0	75.0	25.0
	중앙행정기관	4.3	0.0	0.0	74.5	23.4
	광역시자체	0.0	5.9	0.0	64.7	29.4
	기초지자체	9.7	8.7	0.0	63.1	24.8
	공공기관	7.1	7.1	0.6	77.5	11.4
	지방공기업	2.6	2.6	0.3	87.5	8.0
	교육청	0.0	0.0	0.0	76.5	23.5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개	43.9	8.9	1.3	50.6	6.0
	대학교	30.6	3.8	1.1	57.5	15.1
	전문대학	20.8	9.2	0.8	73.1	7.7
	고등학교	16.1	1.1	0.0	79.3	4.6
	중학교	58.6	18.2	3.9	37.9	2.5
	초등학교	65.6	10.0	0.6	31.2	3.2

개인정보처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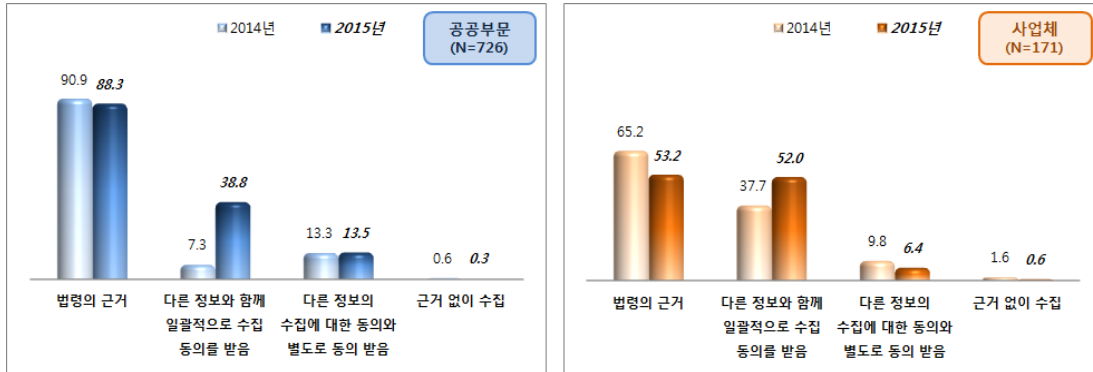
<표-51> 민감정보 수집 목적(%)-사업체

구 분		고객 분석	관련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홍보 또는 마케팅	수집하지 않음	해당 없음
전 체		5.1	2.1	0.2	93.2	0.3
업종	제조	0.3	0.0	0.0	99.7	0.0
	전기/가스	0.0	16.9	0.0	83.1	0.0
	유통/물류/도소매	0.9	0.9	0.0	98.6	0.2
	숙박/음식	0.3	0.0	0.0	99.7	0.0
	정보/통신	0.7	2.0	0.0	98.0	0.0
	금융/보험	2.1	3.1	1.0	94.3	1.0
	부동산/임대	0.9	0.4	0.0	97.8	0.9
	사교육	0.4	0.0	0.0	99.1	0.4
	보건/복지	42.7	9.2	1.1	51.9	0.8
	협회/단체	1.0	0.0	0.0	99.0	0.0
규모	5명 미만	6.4	0.5	0.2	93.2	0.3
	5~49명	3.6	1.6	0.1	95.5	0.0
	50~299명	4.3	5.8	0.3	91.1	0.3
	300명 이상	5.0	9.9	0.7	83.7	2.1

6) 민감정보 수집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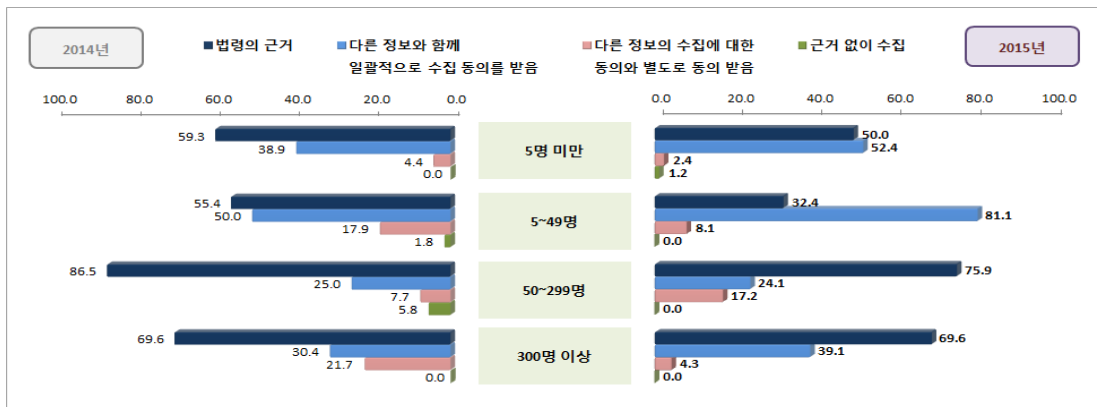
- 민감정보의 수집 근거는 '법령의 근거'가 공공부문 88.3%, 사업체 53.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40> 민감정보 수집 근거(%)



- 공공부문의 경우, 모든 기관에서 '법령의 근거'(88.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정보와 함께 일괄적으로 수집 동의를 받음'은 공공부문의 공공기관(15.7%)보다 교육기관(48.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다른 정보와 함께 일괄적으로 수집 동의를 받음'(52.0%)이 공공부문의 비율보다 13.2%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부문의 비율은 '제조'(100.0%)와 '협회/단체'(100.0%)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41> 민감정보 수집 근거(%)·사업체 규모별



- 민감정보 수집 근거는 '다른 정보와 함께 일괄적으로 수집 동의를 받음'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2> 민감정보 수집 근거(%)-공공부문

구 분		법령의 근거	다른 정보와 함께 일괄적으로 수집 동의를 받음	다른 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 받음	근거 없이 수집
전 체		88.3	38.8	13.5	0.3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개	90.3	15.7	19.0	0.0
	헌법기관	100.0	0.0	0.0	0.0
	중앙행정기관	83.3	8.3	25.0	0.0
	광역시자체	100.0	0.0	16.7	0.0
	기초지자체	93.4	19.7	18.4	0.0
	공공기관	87.7	16.4	17.8	0.0
	지방공기업	88.6	13.6	20.5	0.0
	교육청	100.0	0.0	25.0	0.0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개	87.5	48.6	11.2	0.4
	대학교	79.7	32.9	26.6	1.3
	전문대학	80.0	42.9	34.3	0.0
	고등학교	80.6	38.9	25.0	0.0
	중학교	93.7	46.0	5.6	0.8
	초등학교	88.9	57.7	3.4	0.0

개인정보처리자

<표-53> 민감정보 수집 근거(%)-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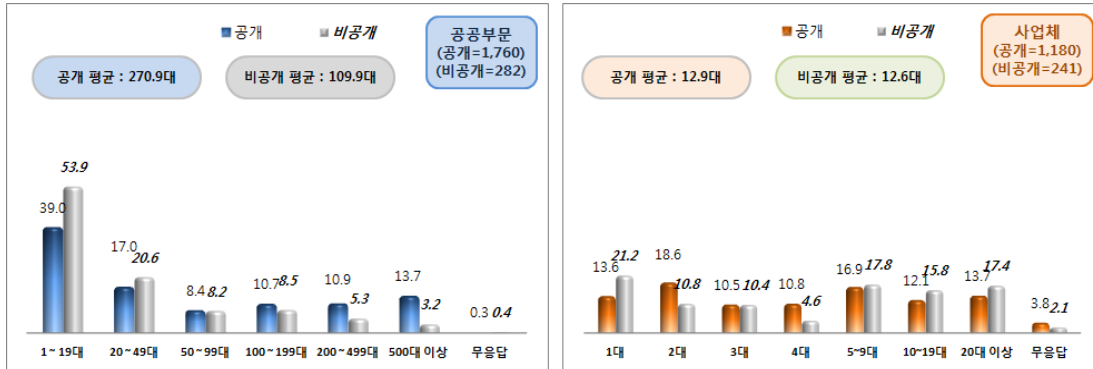
구 분		법령의 근거	다른 정보와 함께 일괄적으로 수집 동의를 받음	다른 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 받음	근거 없이 수집
전 체		53.2	52.0	6.4	0.6
업종	제조	0.0	100.0	0.0	0.0
	전기/가스	100.0	0.0	0.0	0.0
	유통/물류/도소매	16.7	83.3	16.7	0.0
	숙박/음식	100.0	0.0	0.0	0.0
	정보/통신	33.3	66.7	0.0	0.0
	금융/보험	90.9	18.2	54.5	0.0
	부동산/임대	40.0	20.0	20.0	20.0
	사교육	100.0	0.0	0.0	0.0
	보건/복지	46.0	60.3	2.4	0.0
	협회/단체	100.0	100.0	0.0	0.0
규모	5명 미만	50.0	52.4	2.4	1.2
	5~49명	32.4	81.1	8.1	0.0
	50~299명	75.9	24.1	17.2	0.0
	300명 이상	69.6	39.1	4.3	0.0

4. 영상정보 처리기기

1)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

-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 공공부문의 경우, '공개 장소'는 평균 270.9대, '비공개 장소'는 평균 109.9대, 사업체의 경우 '공개 장소'는 평균 12.9대, '비공개 장소'는 평균 12.6대로 나타났다.

<그림-42>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



<표-54>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공개 장소)(%)-공공부문

구 분		1~19대	20~49대	50~99대	100~199대	200~499대	500대 이상	무응답	평균(대)
전 체		39.0	17.0	8.4	10.7	10.9	13.7	0.3	270.9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16.1	16.3	9.3	12.1	16.7	29.0	0.5	540.8
	헌법기관	50.0	0.0	50.0	0.0	0.0	0.0	0.0	32.0
	중앙행정기관	12.0	20.0	0.0	24.0	16.0	28.0	0.0	501.4
	광역지자체	0.0	0.0	11.8	17.6	29.4	41.2	0.0	1,091.6
	기초지자체	2.0	7.4	4.5	9.9	22.8	53.0	0.5	693.3
	공공기관	28.0	24.3	12.6	15.1	10.9	8.4	0.8	350.3
	지방공기업	15.9	15.1	9.9	10.3	17.9	30.6	0.4	601.4
	교육청	37.5	43.8	18.8	0.0	0.0	0.0	0.0	36.8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56.1	17.5	7.7	9.7	6.6	2.3	0.1	69.9
	대학교	5.0	8.9	15.0	30.6	27.2	12.8	0.6	256.7
	전문대학	7.8	18.8	28.9	31.3	13.3	0.0	0.0	107.7
	고등학교	57.0	34.2	7.6	1.3	0.0	0.0	0.0	21.7
	중학교	72.8	25.7	1.0	0.5	0.0	0.0	0.0	16.1
	초등학교	91.2	8.8	0.0	0.0	0.0	0.0	0.0	11.4

<표-55>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비공개 장소)(%)-공공부문

구 분		1~19대	20~49대	50~99대	100~199대	200~499대	500대 이상	무응답	평균(대)
전 체		53.9	20.6	8.2	8.5	5.3	3.2	0.4	109.9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49.3	20.5	9.6	10.5	5.7	3.9	0.4	129.3
	헌법기관	100.0	0.0	0.0	0.0	0.0	0.0	0.0	9.0
	중앙행정기관	37.5	12.5	12.5	18.8	12.5	6.3	0.0	262.3
	광역지자체	33.3	66.7	0.0	0.0	0.0	0.0	0.0	26.0
	기초지자체	51.1	22.2	13.3	8.9	4.4	0.0	0.0	42.3
	공공기관	55.8	16.3	4.7	11.6	3.5	7.0	1.2	102.5
	지방공기업	42.3	22.5	14.1	9.9	8.5	2.8	0.0	203.3
	교육청	75.0	25.0	0.0	0.0	0.0	0.0	0.0	16.3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73.6	20.8	1.9	0.0	3.8	0.0	0.0	26.7
	대학교	65.0	25.0	0.0	0.0	10.0	0.0	0.0	49.5
	전문대학	66.7	25.0	8.3	0.0	0.0	0.0	0.0	18.9
	고등학교	81.3	18.8	0.0	0.0	0.0	0.0	0.0	11.1
	중학교	100.0	0.0	0.0	0.0	0.0	0.0	0.0	5.0
	초등학교	100.0	0.0	0.0	0.0	0.0	0.0	0.0	3.7

<표-56>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공개 장소)(%)-사업체

구 분		1대	2대	3대	4대	5~9대	10~19대	20대 이상	무응답	평균 (대)
전 체		13.6	18.6	10.5	10.8	16.9	12.1	13.7	3.8	12.88
업종	제조	13.8	22.2	9.5	16.9	17.5	7.4	7.9	4.8	7.08
	전기/가스	5.9	7.8	15.7	9.8	23.5	21.6	9.8	5.9	11.54
	유통/물류/도소매	14.3	18.9	13.8	11.7	23.5	8.7	7.1	2.0	6.23
	숙박/음식	7.9	18.1	8.8	8.8	16.7	15.8	20.5	3.3	29.32
	정보/통신	13.2	7.5	13.2	5.7	7.5	18.9	32.1	1.9	17.19
	금융/보험	24.4	34.4	3.3	5.6	7.8	11.1	5.6	7.8	4.61
	부동산/임대	10.0	15.0	10.0	10.0	12.5	10.0	27.5	5.0	16.67
	사교육	21.0	19.0	9.5	8.6	14.3	6.7	17.1	3.8	9.78
	보건/복지	9.6	10.3	11.6	13.7	17.8	19.2	14.4	3.4	12.42
	협회/단체	23.6	27.3	12.7	5.5	20.0	7.3	1.8	1.8	4.06
규모	5명 미만	25.3	26.4	14.0	11.6	14.9	3.3	1.7	2.8	3.92
	5~49명	10.9	18.3	12.7	14.0	20.7	10.9	9.6	2.9	8.19
	50~299명	6.9	11.0	5.3	6.5	18.8	22.4	23.7	5.3	16.81
	300명 이상	1.6	11.4	2.4	4.9	5.7	22.0	44.7	7.3	5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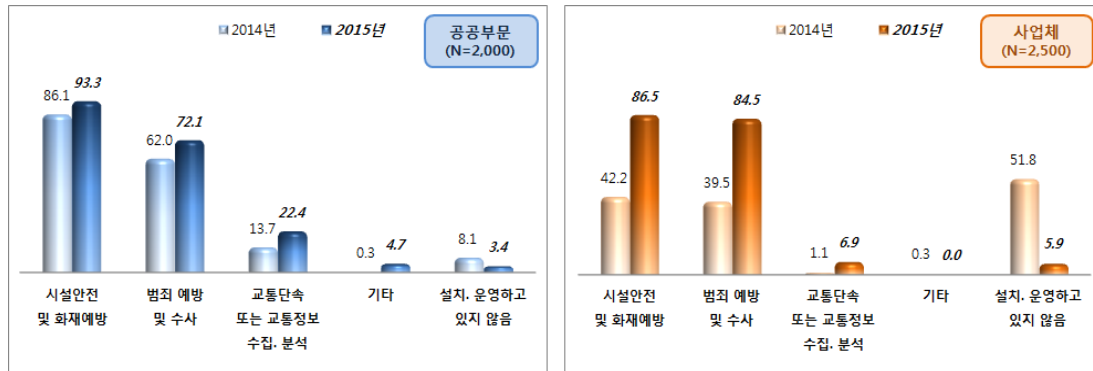
<표-57>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비공개 장소)(%)-사업체

구 분		1대	2대	3대	4대	5~9대	10~19대	20대 이상	무응답	평균 (대)
전 체		21.2	10.8	10.4	4.6	17.8	15.8	17.4	2.1	12.56
업종	제조	27.8	5.6	16.7	16.7	27.8	0.0	5.6	0.0	4.67
	전기/가스	28.6	14.3	14.3	0.0	42.9	0.0	0.0	0.0	3.14
	유통/물류/도소매	36.0	12.0	20.0	4.0	16.0	4.0	8.0	0.0	5.32
	숙박/음식	42.9	28.6	14.3	0.0	7.1	0.0	0.0	7.1	2.08
	정보/통신	66.7	11.1	22.2	0.0	0.0	0.0	0.0	0.0	1.56
	금융/보험	12.1	7.8	3.4	2.6	16.4	28.4	29.3	0.0	20.48
	부동산/임대	-	-	-	-	-	-	-	-	-
	사교육	0.0	0.0	0.0	0.0	100.0	0.0	0.0	0.0	5.00
	보건/복지	30.0	23.3	16.7	10.0	3.3	0.0	3.3	13.3	3.69
	협회/단체	0.0	0.0	14.3	4.8	42.9	19.0	19.0	0.0	9.90
규모	5명 미만	54.2	16.7	14.6	4.2	4.2	2.1	2.1	2.1	2.38
	5~49명	20.0	12.2	6.7	4.4	21.1	21.1	13.3	1.1	8.99
	50~299명	9.7	8.1	14.5	4.8	19.4	21.0	19.4	3.2	12.03
	300명 이상	2.4	4.9	7.3	4.9	24.4	12.2	41.5	2.4	33.28

2)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목적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목적에 대해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이 공공부문 93.3%, 사업체 86.5%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43>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목적(%)



- 공공부문의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과 '범죄 예방 및 수사'는 공공기관(각각 75.5%, 52.6%)보다 교육기관(각각 93.9%, 77.8%)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은 '전기/가스'(60.2%), '범죄 예방 및 수사'는 '숙박/음식'(58.7%)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58>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목적(%)-공공부문

구 분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 예방 및 수사	교통단속 또는 교통정보 수집. 분석	기타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음
전 체		85.0	65.7	20.4	4.3	12.0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75.5	52.6	31.6	3.4	22.1
	헌법기관	50.0	50.0	0.0	0.0	50.0
	중앙행정기관	53.2	17.0	2.1	2.1	46.8
	광역시자체	100.0	88.2	70.6	0.0	0.0
	기초지자체	92.7	89.3	81.6	6.8	1.9
	공공기관	71.6	40.1	13.3	2.5	26.2
	지방공기업	70.2	46.9	22.4	2.6	28.4
	교육청	94.1	29.4	17.6	5.9	5.9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93.9	77.8	9.9	5.1	2.5
	대학교	95.7	79.6	22.6	4.3	3.2
	전문대학	97.7	73.1	9.2	0.8	1.5
	고등학교	80.5	60.9	1.7	4.0	9.2
	중학교	95.1	83.7	7.9	6.4	0.5
	초등학교	97.6	83.8	8.5	7.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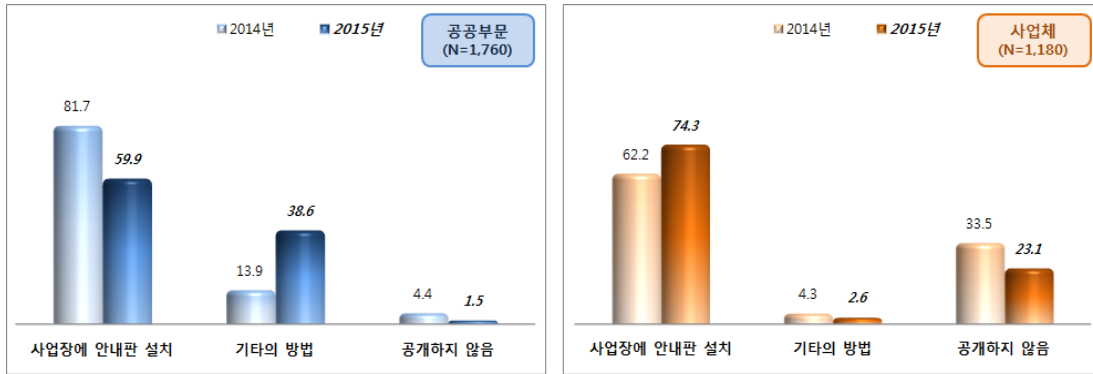
<표-59>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목적(%)-사업체

구 분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 예방 및 수사	교통단속 또는 교통정보 수집. 분석	기타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음
전 체		43.4	42.4	3.4	-	52.8
업종	제조	47.4	46.0	1.4	-	48.2
	전기/가스	60.2	47.0	6.0	-	38.6
	유통/물류/도소매	41.0	41.6	2.0	-	55.7
	숙박/음식	55.3	58.7	10.0	-	38.7
	정보/통신	31.1	32.4	8.8	-	64.2
	금융/보험	45.6	46.6	2.1	-	53.4
	부동산/임대	31.6	31.1	2.6	-	64.9
	사교육	40.2	34.2	0.4	-	55.1
	보건/복지	52.7	51.1	1.1	-	44.3
	협회/단체	25.3	20.6	2.6	-	71.6
	5명 미만	26.8	26.8	1.1	-	69.9
규모	5~49명	49.6	49.8	3.6	-	45.6
	50~299명	71.3	66.1	6.1	-	25.1
	300명 이상	84.4	78.0	16.3	-	12.8

3)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공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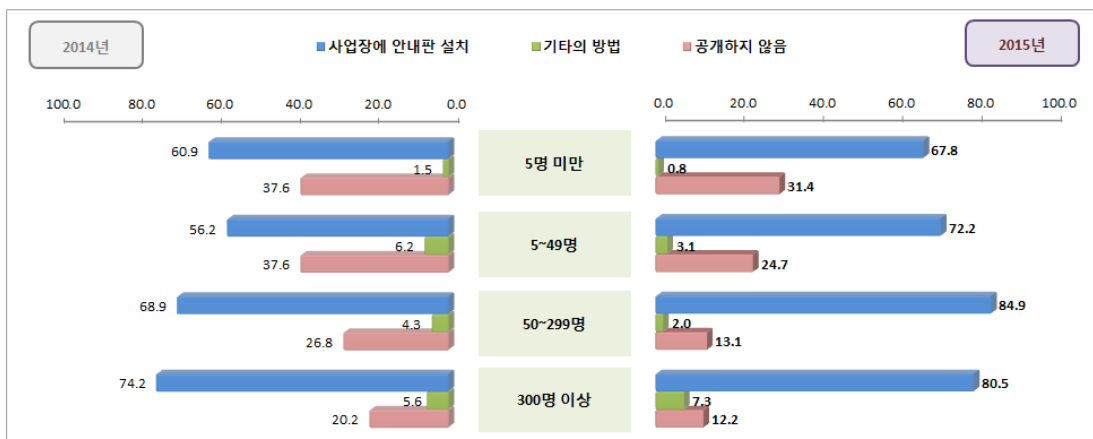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 '사업장에 안내판 설치'가 공공부문 59.9%, 사업체 74.3%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44>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공개방법(%)



- 사업체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공개하지 않음'이 23.1%로 공공부문(1.5%)보다 21.6%p 높게 나타났다.
- '사업장에 안내판 설치'의 경우 공공부문은 '헌법기관'(100.0%), 사업체는 '정보/통신' (94.3%)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림-45>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공개방법(%)-사업체 규모별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의 공개('사업장에 안내판 설치'(%)+'기타의 방법'(%))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6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공개방법(%)-공공부문

구 분		사업장에 안내판 설치	기타의 방법	공개하지 않음
전 체		59.9	38.6	1.5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개	68.0	29.9	2.1
	헌법기관	100.0	0.0	0.0
	중앙행정기관	68.0	28.0	4.0
	광역지자체	82.4	17.6	0.0
	기초지자체	62.4	37.6	0.0
	공공기관	70.7	26.8	2.5
	지방공기업	67.5	29.0	3.6
	교육청	87.5	12.5	0.0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개	53.8	45.2	1.0
	대학교	75.0	23.9	1.1
	전문대학	69.5	30.5	0.0
	고등학교	79.1	17.7	3.2
	중학교	41.6	57.4	1.0
	초등학교	32.2	67.6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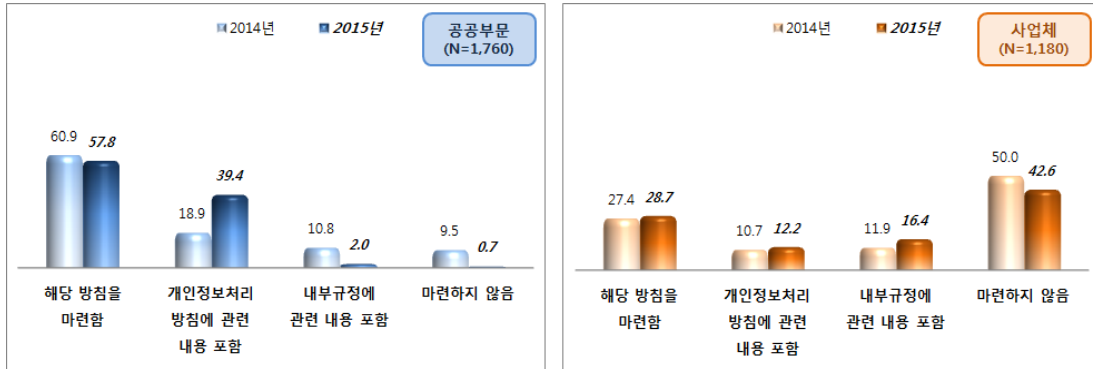
<표-61>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공개방법(%)-사업체

구 분		사업장에 안내판 설치	기타의 방법	공개하지 않음
전 체		74.3	2.6	23.1
업종	제조	69.3	2.6	28.0
	전기/가스	90.2	7.8	2.0
	유통/물류/도소매	54.1	1.0	44.9
	숙박/음식	80.9	0.9	18.1
	정보/통신	94.3	1.9	3.8
	금융/보험	85.6	1.1	13.3
	부동산/임대	90.0	0.0	10.0
	사교육	80.0	2.9	17.1
	보건/복지	70.5	7.5	21.9
	협회/단체	61.8	3.6	34.5
규모	5명 미만	67.8	0.8	31.4
	5~49명	72.2	3.1	24.7
	50~299명	84.9	2.0	13.1
	300명 이상	80.5	7.3	12.2

4)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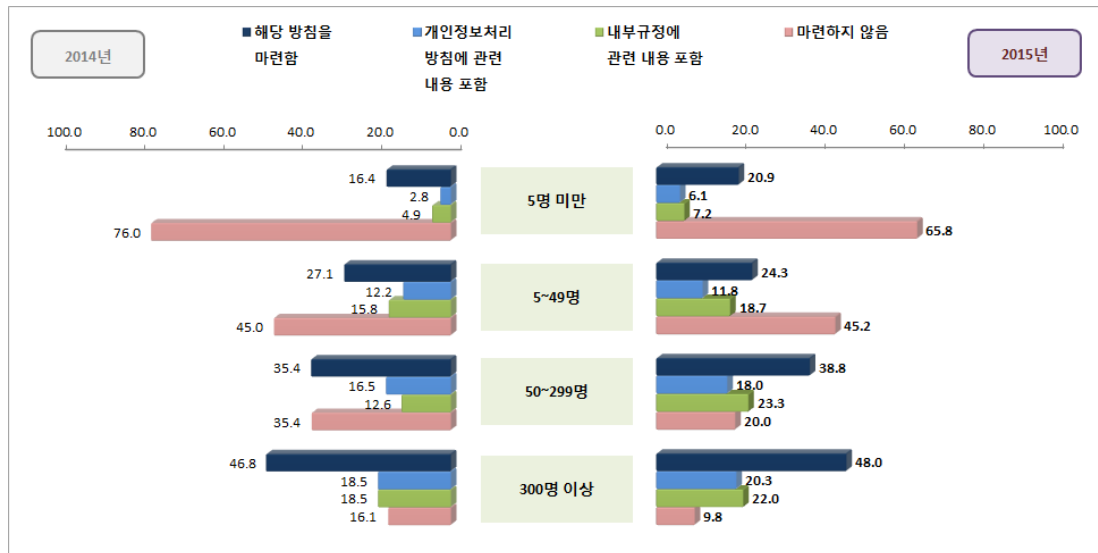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방침 마련에 대해 공공부문 57.8%, 사업체 28.7%가 해당 방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6>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공공부문의 경우, '해당방침을 마련함'(57.8%)이 전년(60.9%) 대비 3.1%p 낮게 나타났으며,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관련 내용포함'(39.4%)은 전년(18.9%) 대비 20.5%p 높게 나타났다. '마련하지 않음' 비율은 0.7%로 전년(9.5%) 대비 8.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해당방침을 마련함'은 '정보/통신'(60.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마련하지 않음'은 유통/물류/도소매(60.2%)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47>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사업체 규모별



- 사업체 규모별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의 마련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해당 방침을 마련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마련하지 않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6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공공부문

구 분		해당 방침을 마련함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관련 내용 포함	내부규정에 관련 내용 포함	마련하지 않음
전 체		57.8	39.4	2.0	0.7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70.1	27.0	1.9	1.1
	헌법기관	50.0	50.0	0.0	0.0
	중앙행정기관	68.0	20.0	4.0	8.0
	광역시자체	94.1	5.9	0.0	0.0
	기초지자체	81.2	17.3	1.0	0.5
	공공기관	73.2	21.8	3.3	1.7
	지방공기업	57.5	40.9	1.2	0.4
	교육청	62.5	37.5	0.0	0.0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48.6	48.8	2.2	0.5
	대학교	48.3	43.3	7.8	0.6
	전문대학	68.0	28.9	2.3	0.8
	고등학교	62.0	35.4	1.3	1.3
	중학교	36.6	62.9	0.5	0.0
	초등학교	42.2	56.9	0.6	0.3

개인정보처리
자

<표-6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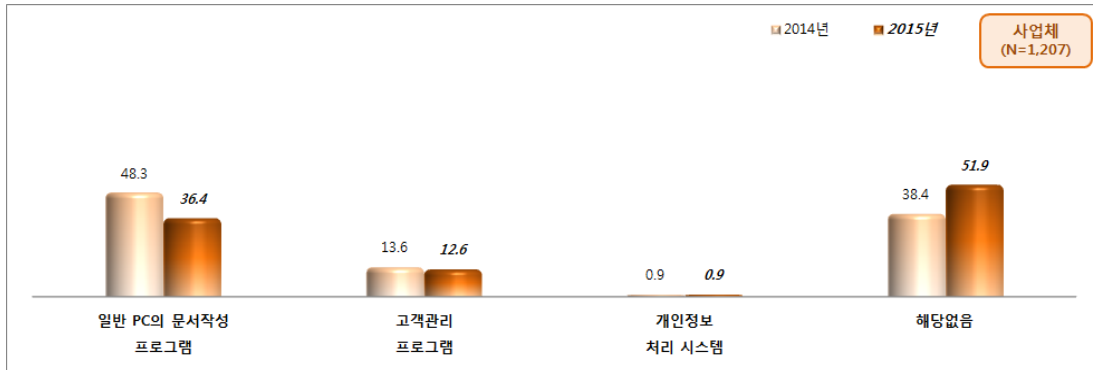
구 분		해당 방침을 마련함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관련 내용 포함	내부규정에 관련 내용 포함	마련하지 않음
전 체		28.7	12.2	16.4	42.6
업종	제조	23.3	14.8	18.5	43.4
	전기/가스	37.3	23.5	21.6	17.6
	유통/물류/도소매	20.4	5.6	13.8	60.2
	숙박/음식	14.4	13.0	15.3	57.2
	정보/통신	60.4	0.0	11.3	28.3
	금융/보험	44.4	23.3	27.8	4.4
	부동산/임대	28.8	7.5	18.8	45.0
	사교육	36.2	18.1	9.5	36.2
	보건/복지	35.6	11.0	13.7	39.7
	협회/단체	36.4	5.5	21.8	36.4
규모	5명 미만	20.9	6.1	7.2	65.8
	5~49명	24.3	11.8	18.7	45.2
	50~299명	38.8	18.0	23.3	20.0
	300명 이상	48.0	20.3	22.0	9.8

5.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정보 저장 및 관리 프로그램(소상공인)⁶⁾

- 소상공인의 경우 개인정보 저장 및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일반 PC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이 36.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8> 개인정보 저장 및 관리 프로그램(소상공인)(%)



- '일반 PC의 문서작성 프로그램'(36.4%) 이용은 전년(48.3%)대비 11.9%p 낮게 나타났으며, 업종별 이용 프로그램으로 '협회/단체'가 '일반 PC의 문서작성 프로그램'(85.1%), '보건/복지'가 '고객관리 프로그램'(71.3%), '정보/통신'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9.1%)을 각각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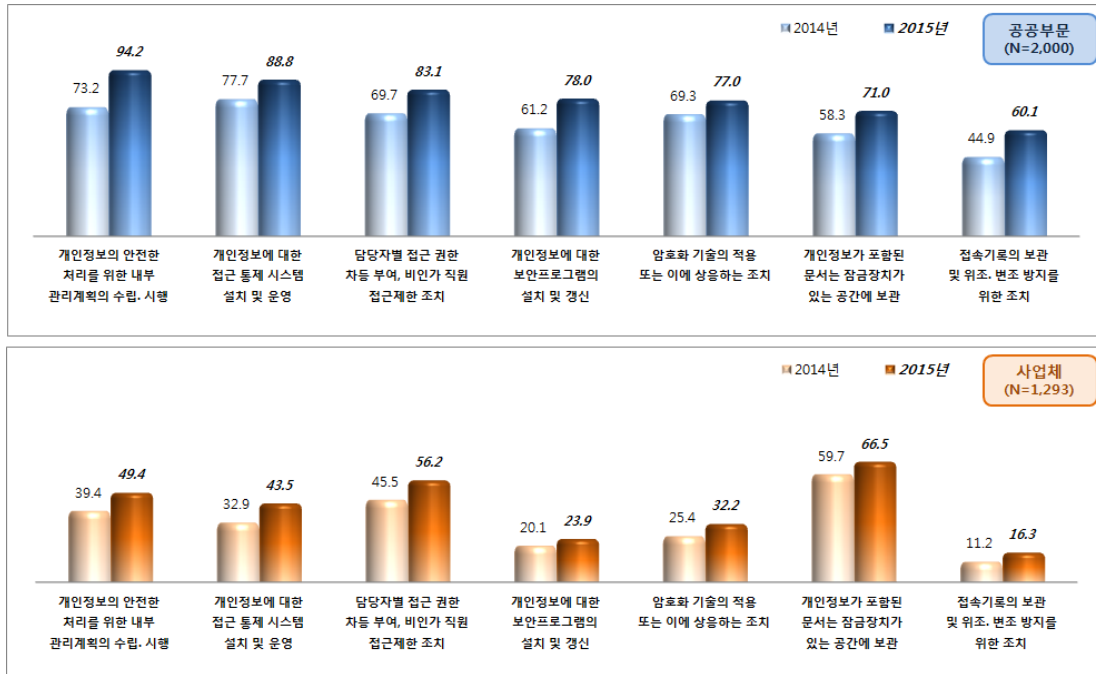
<표-64> 개인정보 저장 및 관리 프로그램(%)-사업체(소상공인)

구 분		일반 PC의 문서작성 프로그램	고객관리 프로그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해당없음
전 체		36.4	12.6	0.9	51.9
업종	제조	30.7	4.6	0.0	55.9
	전기/가스	12.0	0.0	0.0	68.2
	유통/물류/도소매	27.0	6.0	0.4	45.3
	숙박/음식	8.4	0.5	0.0	81.6
	정보/통신	65.5	23.6	9.1	29.8
	금융/보험	51.6	11.3	1.6	28.3
	부동산/임대	43.8	5.0	0.8	21.9
	사교육	46.0	22.2	0.8	19.3
	보건/복지	28.7	71.3	1.0	2.3
	협회/단체	85.1	2.6	0.9	8.1
	5명 미만	36.4	12.6	0.9	51.9
규모	5~49명	-	-	-	-
	50~299명	-	-	-	-
	300명 이상	-	-	-	-

2)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소상공인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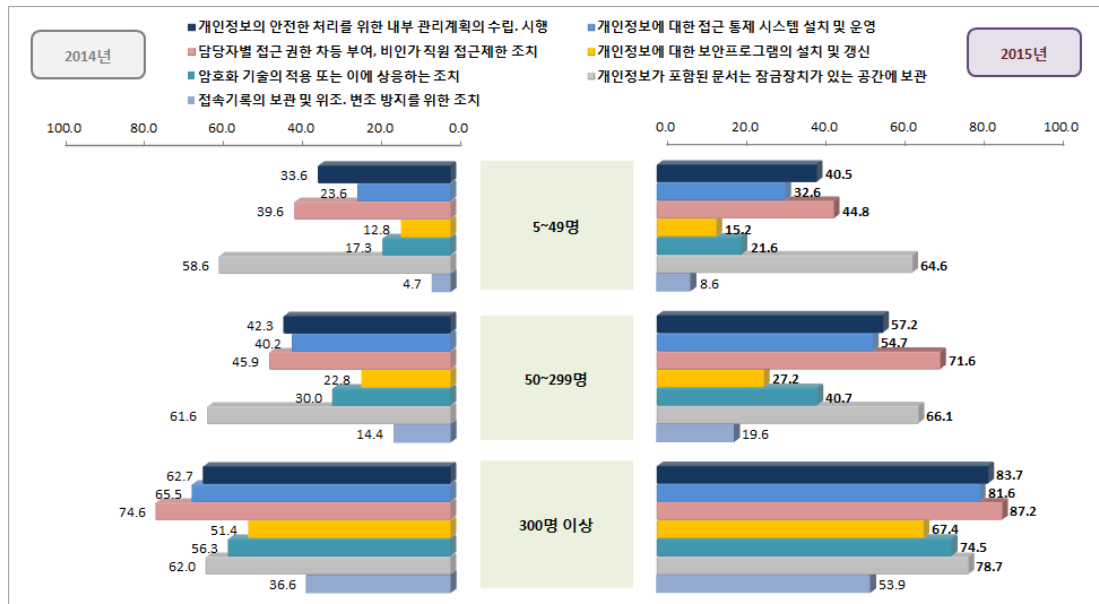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로 공공부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94.2%), 사업체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6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9>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 공공부문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은 ‘헌법기관’(100.0%)과 ‘광역지자체’(100.0%), ‘교육청’(100.0%)에서 높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은 ‘숙박/음식’(94.0%)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림-50> 개인정보보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사업체 규모별



- 사업체 규모별 개인정보보호의 안전한 관리 조치는 사업체 규모가 '5~49명'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64.6%)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체의 규모가 '50~299명'과 '300명 이상'은 '담당자별 접근 권한 자동 부여, 비인가 직원 접근 제한조치(각각 71.6%, 87.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65>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공공부문

구 분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담당자별 접근 권한 자동부여, 비인가 직원 접근제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전 체		94.2	88.8	83.1	78.0	77.0	71.0	60.1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개	92.0	89.3	84.8	82.9	81.0	72.1	67.1
	헌법기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앙행정기관	95.7	100.0	93.6	100.0	91.5	87.2	89.4
	광역지자체	100.0	100.0	100.0	88.2	94.1	88.2	88.2
	기초지자체	97.1	94.7	86.4	84.5	85.9	74.3	73.8
	공공기관	94.1	90.1	89.2	86.1	86.4	77.5	73.8
	지방공기업	85.8	83.2	77.8	76.4	71.3	63.6	53.1
	교육청	100.0	94.1	82.4	82.4	70.6	52.9	58.8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개	96.1	88.2	81.5	73.3	73.2	70.0	53.5
	대학교	95.7	93.5	83.9	83.9	73.7	60.8	50.5
	전문대학	96.9	97.7	88.5	74.6	74.6	56.9	54.6
	고등학교	89.7	63.8	59.2	55.7	48.9	59.2	23.6
	중학교	97.5	86.2	83.3	77.3	75.4	73.9	60.6
	초등학교	98.5	95.3	87.9	73.5	83.5	83.2	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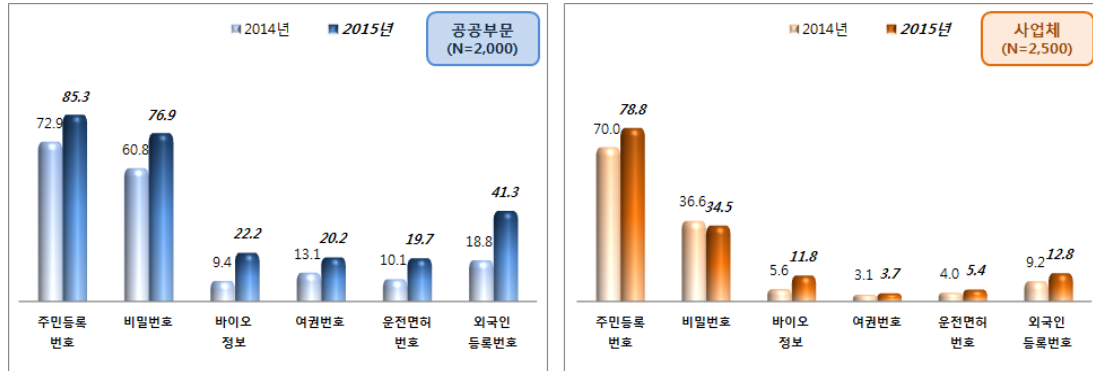
<표-66>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사업체

구 분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담당자별 접근 권한 자동부여, 비인가 직원 접근제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전 체		49.4	43.5	56.2	23.9	32.2	66.5	16.3
업종	제조	46.2	42.5	56.1	10.8	26.9	68.4	9.9
	전기/가스	63.8	77.6	91.4	60.3	62.1	82.8	44.8
	유통/물류/도소매	27.8	23.2	38.1	7.7	10.8	61.9	5.2
	숙박/음식	29.5	26.8	59.7	13.4	20.8	94.0	6.0
	정보/통신	83.9	78.5	87.1	32.3	50.5	67.7	30.1
	금융/보험	74.0	74.8	58.8	58.0	53.4	80.9	38.2
	부동산/임대	54.2	29.9	58.9	21.5	23.4	65.4	13.1
	사교육	32.4	25.9	40.7	21.3	29.6	50.0	12.0
	보건/복지	55.3	38.5	42.9	31.7	39.8	49.7	18.6
	협회/단체	61.3	62.5	72.5	16.3	41.3	42.5	12.5
규모	5명 미만	-	-	-	-	-	-	-
	5~49명	40.5	32.6	44.8	15.2	21.6	64.6	8.6
	50~299명	57.2	54.7	71.6	27.2	40.7	66.1	19.6
	300명 이상	83.7	81.6	87.2	67.4	74.5	78.7	53.9

3)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현황

-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율은 공공부문(85.3%)과 사업체(78.8%)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오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의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1>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여부(%)



<표-67>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여부(%)-공공부문

구 분		주민등록 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전 체		85.3	76.9	22.2	20.2	19.7	41.3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79.8	77.8	21.3	34.4	31.2	40.2
	헌법기관	50.0	50.0	25.0	50.0	50.0	50.0
	부/처/청/위원회	83.0	76.6	19.1	27.7	21.3	27.7
	광역시자체	100.0	70.6	41.2	88.2	76.5	82.4
	기초지자체	97.1	90.3	42.2	77.2	74.3	85.0
	공공기관	80.2	86.4	13.9	16.0	11.4	27.8
	지방공기업	68.2	65.6	15.6	25.9	24.7	26.7
	교육청	82.4	29.4	11.8	5.9	0.0	5.9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90.4	76.1	23.0	6.8	8.9	42.3
	대학교	95.2	87.1	11.3	25.3	12.9	68.8
	전문대학	100.0	73.8	15.4	9.2	6.2	40.8
	고등학교	75.9	35.6	12.1	4.6	2.3	8.6
	중학교	89.2	78.3	36.9	1.0	17.2	42.4
	초등학교	92.4	90.3	29.7	0.3	6.2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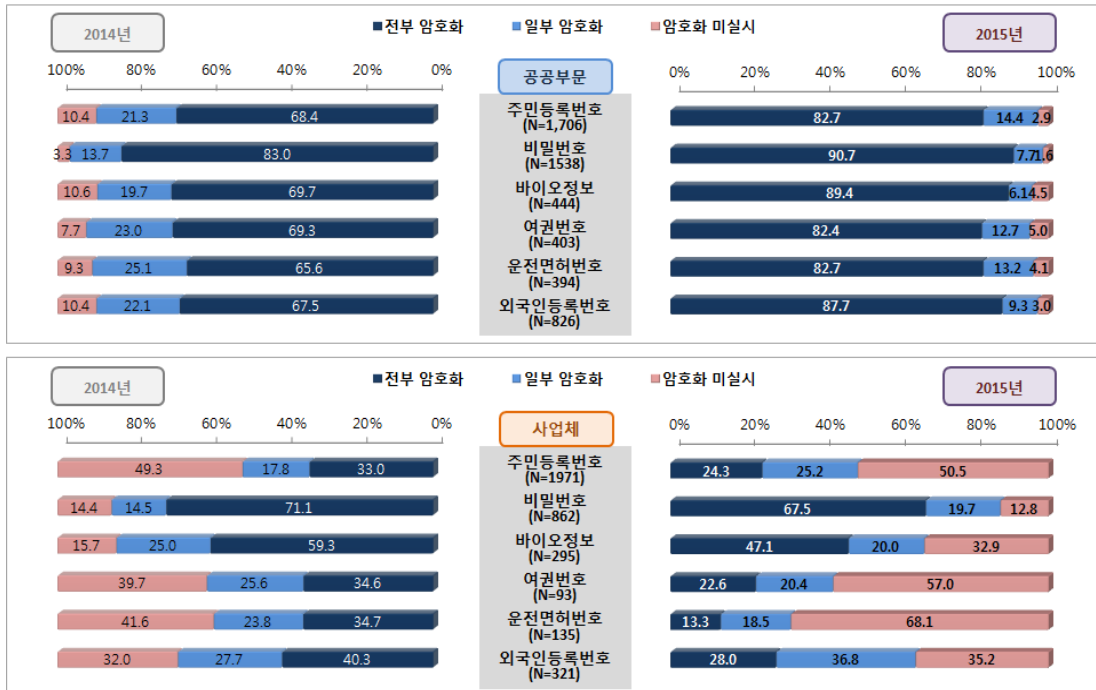
<표-68>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 여부(%)-사업체

구 분		주민등록 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전 체		78.8	34.5	11.8	3.7	5.4	12.8
업종	제조	86.8	34.8	9.6	1.9	2.7	13.7
	전기/가스	92.8	53.0	27.7	0.0	0.0	7.2
	유통/물류/도소매	68.6	14.0	6.6	4.3	13.8	4.5
	숙박/음식	73.5	15.7	2.3	4.6	1.7	5.1
	정보/통신	73.6	73.6	52.0	3.4	2.7	8.1
	금융/보험	97.9	42.5	9.8	15.0	16.6	40.9
	부동산/임대	73.7	33.8	1.3	0.4	1.8	1.8
	사교육	66.2	20.9	5.6	4.3	5.1	9.4
	보건/복지	95.8	66.0	32.8	1.9	2.3	38.5
	협회/단체	74.2	43.3	1.0	0.5	0.0	4.6
규모	5명 미만	67.7	21.7	8.7	2.4	2.9	8.9
	5~49명	86.8	39.4	9.3	3.9	5.0	12.2
	50~299명	93.0	54.4	19.3	4.6	11.6	20.2
	300명 이상	95.0	68.8	35.5	12.1	14.9	33.3

4) 암호화 대상 정보 암호화 현황

-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암호화 여부에 대해 모든 항목(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서 공공부문의 암호화 비율⁷⁾이 사업체의 암호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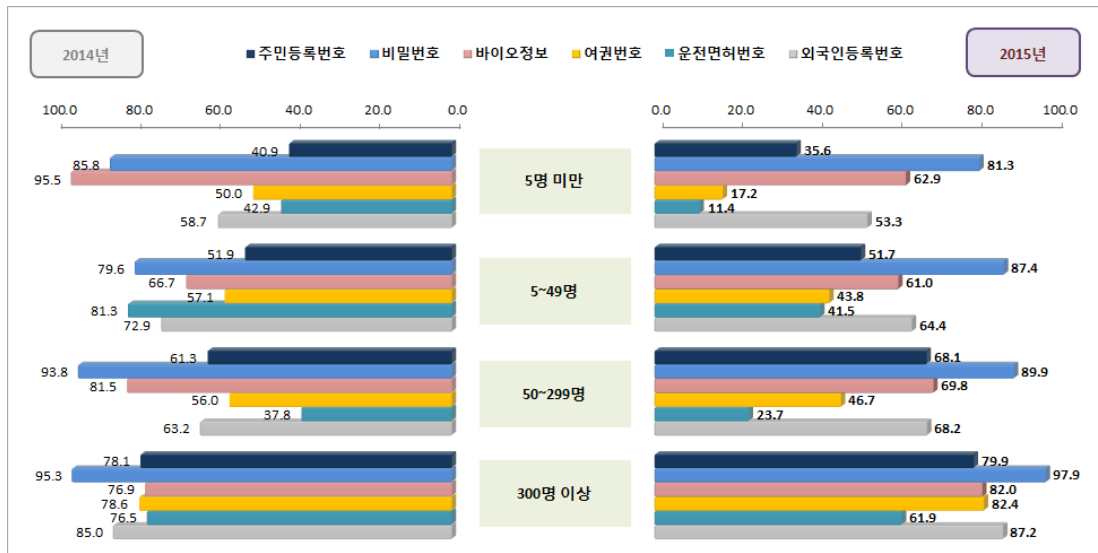
<그림-52> 암호화 대상 정보 암호화 현황(%)



- 공공부문의 경우 각 항목에 대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암호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암호화 대상 정보의 ‘전부 암호화’ 비율은 ‘비밀번호’(90.7%)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바이오정보’(89.4%), ‘외국인등록번호’(8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비밀번호’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암호화 비율이 전년대비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암호화 대상 정보의 ‘전부 암호화’ 비율은 공공부문과 동일하게 ‘비밀번호’(67.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7) 암호화 비율 : ‘일부 암호화’+‘전부 암호화’ 비율임.

<그림-53> 암호화 대상 정보 암호화 현황(%)-사업체 규모별



- 사업체 규모별 보유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규모가 클수록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암호화 현황이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작을수록 암호화 현황이 대부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9> 암호화 대상 정보 암호화 현황('일부 암호화'+ '전부 암호화')(%) - 공공부문

구 분		주민등록 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전 체		97.1	98.4	95.5	95.0	95.9	97.0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97.3	98.4	91.3	94.9	95.4	95.9
	헌법기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앙행정기관	94.9	94.4	100.0	92.3	90.0	92.3
	광역지자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지자체	99.5	97.3	90.8	95.0	94.8	95.4
	공공기관	95.4	99.3	88.9	86.5	89.2	93.3
	지방공기업	97.5	98.7	92.7	98.9	98.9	98.9
	교육청	100.0	100.0	50.0	100.0	97.8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96.9	98.3	99.2	95.7	91.7	97.9
	대학교	97.7	98.1	95.2	95.7	100.0	96.1
	전문대학	97.7	97.9	100.0	91.7	100.0	96.2
	고등학교	91.7	91.9	95.2	100.0	100.0	100.0
	중학교	97.2	100.0	100.0	100.0	100.0	98.8
	초등학교	98.1	99.0	100.0	100.0	100.0	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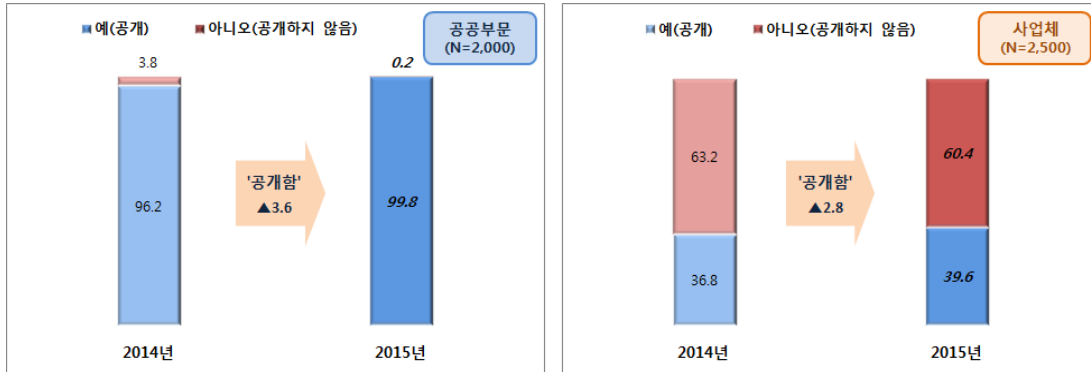
<표-70> 암호화 대상 정보 암호화 현황('일부 암호화'+ '전부 암호화')(%) - 사업체

구 분		주민등록 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전 체		49.5	87.2	67.1	43.0	31.9	64.8
업종	제조	34.1	91.3	88.6	28.6	10.0	46.0
	전기/가스	71.4	97.7	100.0	-	-	83.3
	유통/물류/도소매	18.8	69.4	34.5	21.1	13.1	20.0
	숙박/음식	26.4	70.9	25.0	50.0	16.7	61.1
	정보/통신	67.9	87.2	75.3	20.0	0.0	66.7
	금융/보험	91.0	95.1	42.1	65.5	75.0	94.9
	부동산/임대	44.6	79.2	100.0	100.0	75.0	50.0
	사교육	60.6	73.5	15.4	10.0	16.7	27.3
	보건/복지	79.3	94.2	68.6	80.0	66.7	66.3
	협회/단체	50.7	92.9	100.0	0.0	-	77.8
규모	5명 미만	35.6	81.3	62.9	17.2	11.4	53.3
	5~49명	51.7	87.4	61.0	43.8	41.5	64.4
	50~299명	68.1	89.9	69.8	46.7	23.7	68.2
	300명 이상	79.9	97.9	82.0	82.4	61.9	87.2

5)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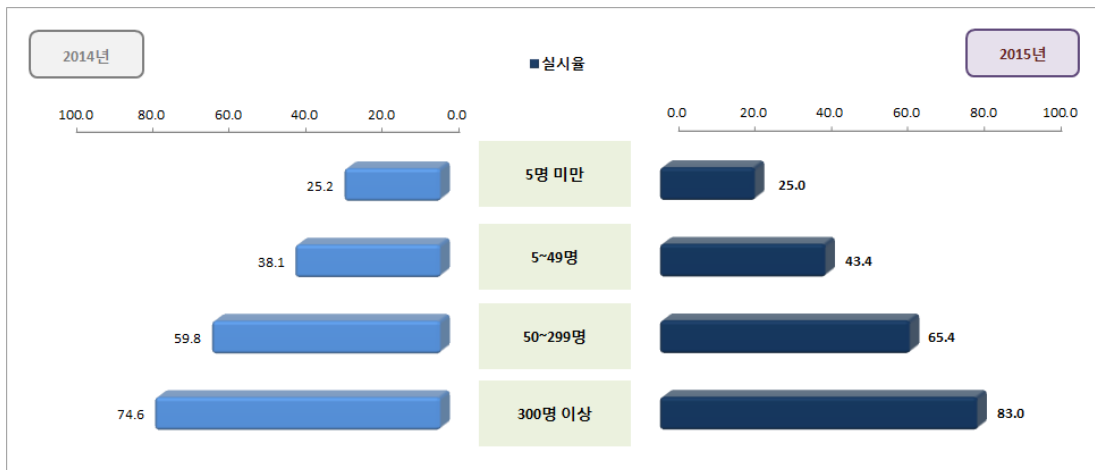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 및 공개에 대해 공공부문의 99.8%, 사업체의 39.6%가 작성 및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4>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 실시율은 99.8%로 전년 (96.2%)대비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부문 중 교육기관의 '초등학교'(98.8%)를 제외하고 모두 100.0%로 높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 실시율은 39.6%로 전년 (36.8%)대비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보험'(87.0%), '보건/복지'(80.2%)의 실시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5>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사업체 규모별



<표-71>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공공부문

구 분		예	아니오
전 체		99.8	0.2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100.0	0.0
	헌법기관	100.0	0.0
	중앙행정기관	100.0	0.0
	광역시자체	100.0	0.0
	기초지자체	100.0	0.0
	공공기관	100.0	0.0
	지방공기업	100.0	0.0
	교육청	100.0	0.0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99.6	0.4
	대학교	100.0	0.0
	전문대학	100.0	0.0
	고등학교	100.0	0.0
	중학교	100.0	0.0
	초등학교	98.8	1.2

개인정보처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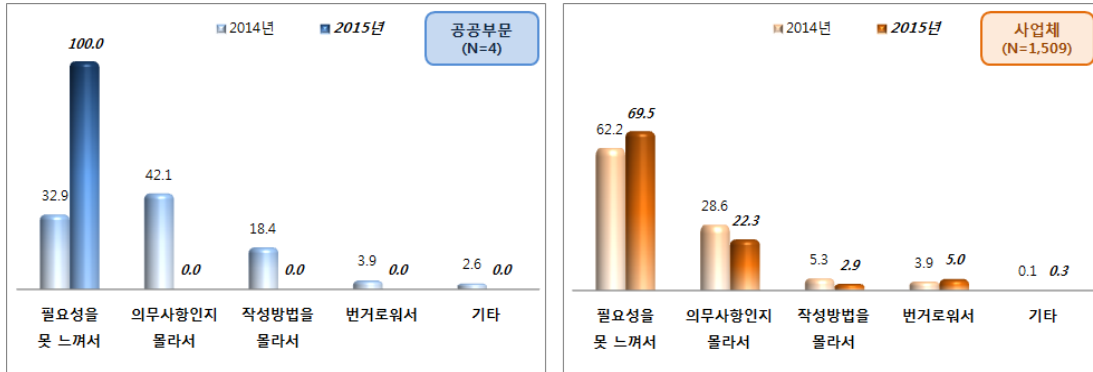
<표-72>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사업체

구 분		예	아니오
전 체		39.6	60.4
업종	제조	29.6	70.4
	전기/가스	51.8	48.2
	유통/물류/도소매	15.6	84.4
	숙박/음식	11.4	88.6
	정보/통신	45.3	54.7
	금융/보험	87.0	13.0
	부동산/임대	30.3	69.7
	사교육	56.8	43.2
	보건/복지	80.2	19.8
	협회/단체	43.3	56.7
규모	5명 미만	25.0	75.0
	5~49명	43.4	56.6
	50~299명	65.4	34.6
	300명 이상	83.0	17.0

6)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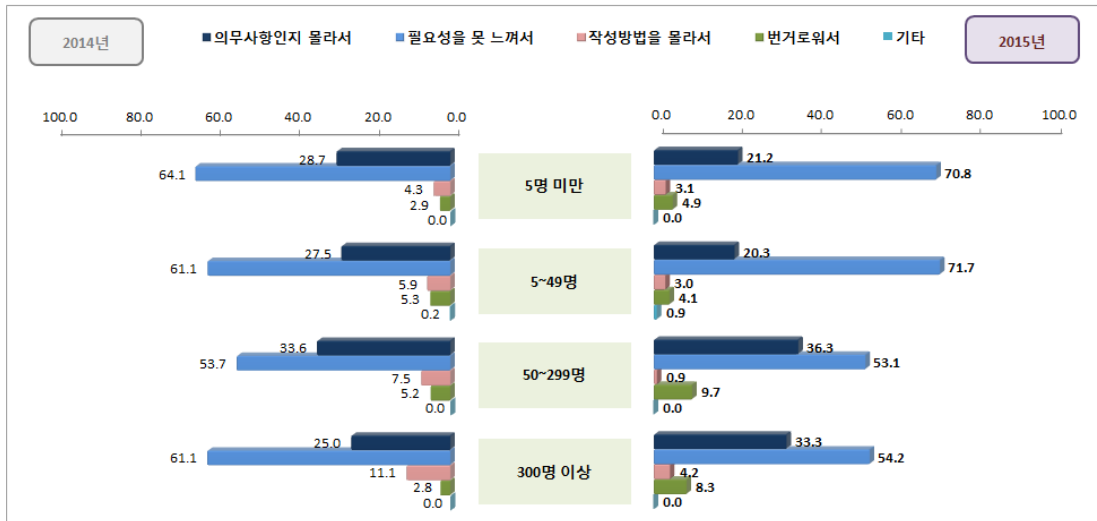
-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교육기관 중 '초등학교'(100.0%), 사업체(69.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6>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



- 사업체 규모별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무사항인지 몰라서'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00명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작성방법을 몰라서'(4.2%)가 다른 규모의 사업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57>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사업체 규모별



<표-73>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공공부문

구 분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의무사항인지 몰라서	작성방법을 몰라서	번거로워서	기타
전 체		100.0	-	-	-	-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	-	-	-	-
	헌법기관	-	-	-	-	-
	중앙행정기관	-	-	-	-	-
	광역시자체	-	-	-	-	-
	기초지자체	-	-	-	-	-
	공공기관	-	-	-	-	-
	지방공기업	-	-	-	-	-
	교육청	-	-	-	-	-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100.0	-	-	-	-
	대학교	-	-	-	-	-
	전문대학	-	-	-	-	-
	고등학교	-	-	-	-	-
	중학교	-	-	-	-	-
	초등학교	100.0	-	-	-	-

<표-74>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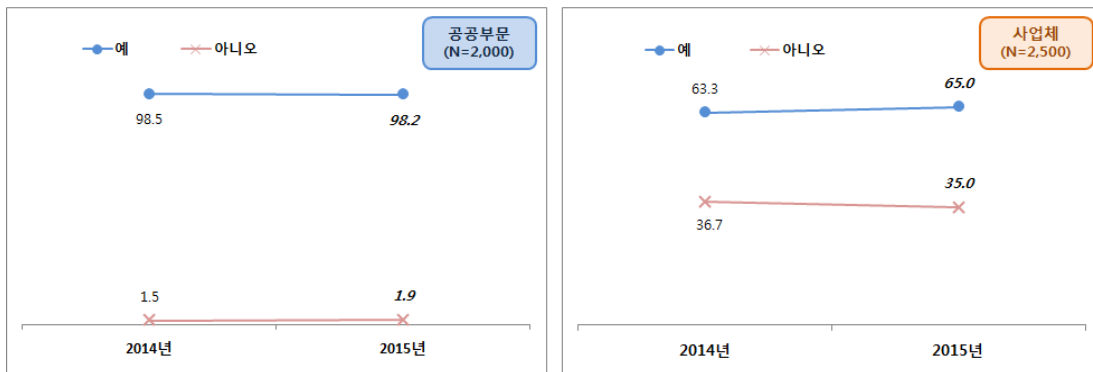
구 분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의무사항인지 몰라서	작성방법을 몰라서	번거로워서	기타
전 체		69.5	22.3	2.9	5.0	0.3
업종	제조	51.8	34.2	1.9	12.1	0.0
	전기/가스	87.5	12.5	0.0	0.0	0.0
	유통/물류/도소매	56.6	32.4	2.9	8.0	0.0
	숙박/음식	86.8	9.0	3.5	0.6	0.0
	정보/통신	90.1	7.4	0.0	2.5	0.0
	금융/보험	80.0	12.0	4.0	4.0	0.0
	부동산/임대	87.4	9.4	0.6	2.5	0.0
	사교육	80.2	7.9	6.9	1.0	4.0
	보건/복지	44.2	51.9	1.9	1.9	0.0
	협회/단체	58.2	31.8	6.4	3.6	0.0
규모	5명 미만	70.8	21.2	3.1	4.9	0.0
	5~49명	71.7	20.3	3.0	4.1	0.9
	50~299명	53.1	36.3	0.9	9.7	0.0
	300명 이상	54.2	33.3	4.2	8.3	0.0

6. 정보주체 권리보장

1) 정보주체 권리보장 인지 여부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 대한 인지율은 공공부문의 98.2%, 사업체의 65.0%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의 인지율은 전년(63.3%) 대비 1.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8> 정보주체 권리보장 인지 여부(%)



- 사업체 규모별 정보주체 권리보장 인지율은 전년대비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인지율은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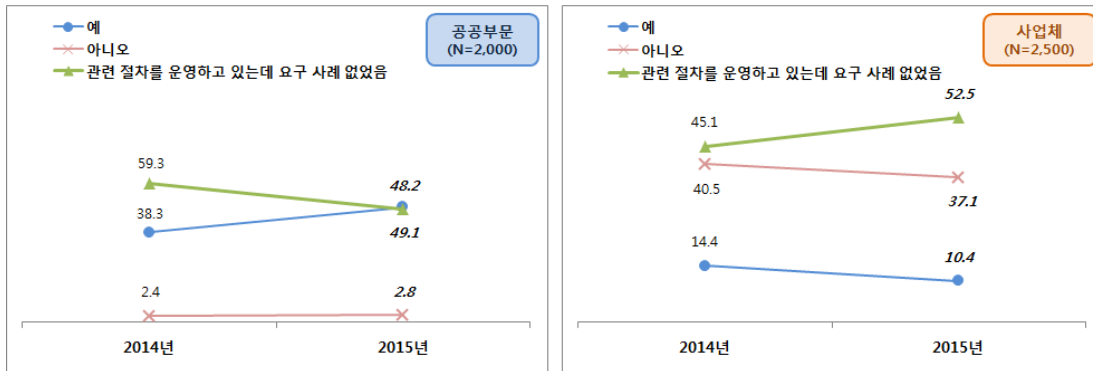
<그림-59> 정보주체 권리보장 인지 여부(%) - 사업체 규모별



2) 정보주체 권리보장 실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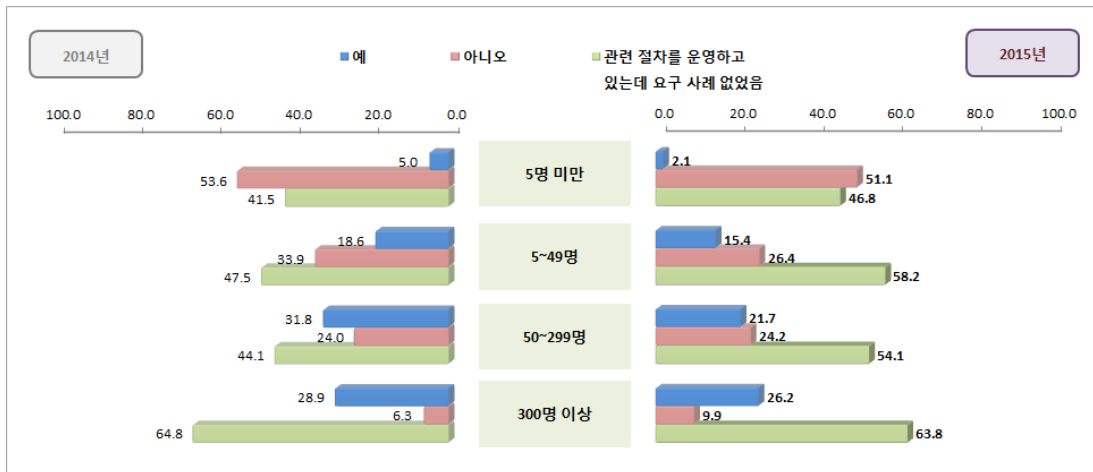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는가⁸⁾에 대해 공공부문의 97.3%, 사업체의 62.9%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60> 정보주체 권리보장 실시 여부(%)



- 사업체 규모별 정보주체 권리보장 실시율 또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실시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61> 정보주체 권리보장 실시 여부(%)-사업체 규모별



8) 정보주체 권리보장 실시비율 : '예'+ '관련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구 사례가 없었음' 비율임.

<표-75> 정보주체 권리보장 인지 및 실시 여부(%)-공공부문

구 분		인지여부		실시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관련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구 사례 없었음
전 체		98.2	1.9	49.1	2.8	48.2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98.4	1.6	47.6	2.6	49.8
	헌법기관	100.0	0.0	50.0	0.0	50.0
	중앙행정기관	100.0	0.0	57.4	0.0	42.6
	광역지자체	100.0	0.0	76.5	0.0	23.5
	기초지자체	99.0	1.0	57.3	1.9	40.8
	공공기관	99.1	0.9	38.9	1.2	59.9
	지방공기업	97.2	2.8	46.6	4.8	48.6
	교육청	100.0	0.0	58.8	0.0	41.2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97.9	2.1	50.5	2.9	46.6
	대학교	98.4	1.6	32.3	2.2	65.6
	전문대학	95.4	4.6	33.1	7.7	59.2
	고등학교	98.3	1.7	40.8	1.7	57.5
	중학교	97.5	2.5	63.1	2.5	34.5
	초등학교	98.5	1.5	64.7	2.4	32.9

<표-76> 정보주체 권리보장 인지 및 실시 여부(%)-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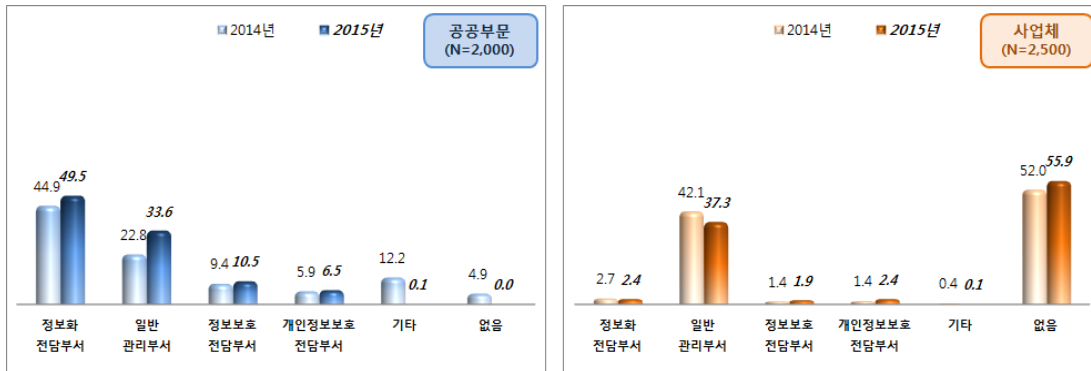
구 분		인지여부		실시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관련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구 사례 없었음
전 체		65.0	35.0	10.4	37.1	52.5
업종	제조	44.4	55.6	3.8	64.4	31.8
	전기/가스	66.3	33.7	10.8	33.7	55.4
	유통/물류/도소매	32.1	67.9	2.7	65.2	32.1
	숙박/음식	73.8	26.2	2.3	28.5	69.2
	정보/통신	98.0	2.0	12.8	5.4	81.8
	금융/보험	90.7	9.3	33.7	14.5	51.8
	부동산/임대	82.5	17.5	2.2	12.7	85.1
	사교육	84.6	15.4	19.2	15.8	65.0
	보건/복지	77.1	22.9	24.0	22.9	53.1
	협회/단체	51.0	49.0	10.3	59.3	30.4
규모	5명 미만	49.9	50.1	2.1	51.1	46.8
	5~49명	74.9	25.1	15.4	26.4	58.2
	50~299명	82.9	17.1	21.7	24.2	54.1
	300명 이상	95.0	5.0	26.2	9.9	63.8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직 및 예산

1)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

-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담당 부서에 대해 공공부문은 '정보화 전담부서'(49.5%), 사업체는 '일반 관리부서'(37.3%)에서 관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가 '없음'의 경우는 사업체가 55.9%로 나타났다.

<그림-62>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



- 공공부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의 운영은 '헌법기관'(25.0%)과 '중앙행정기관'(14.9%)이 다른 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의 운영은 '금융/보험'(9.8%)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가 '없음'의 경우는 '숙박/음식'(73.2%)과 '유통/물류/도소매'(73.1%)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77>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공공부문

구 분		정보화 전담부서	일반 관리부서	정보보호 전담부서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	기타	없음
전 체		49.5	33.6	10.5	6.5	0.1	-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51.0	29.5	11.4	8.1	0.1	-
	헌법기관	75.0	0.0	0.0	25.0	0.0	-
	중앙행정기관	48.9	8.5	27.7	14.9	0.0	-
	광역시자체	52.9	0.0	41.2	5.9	0.0	-
	기초지자체	70.9	14.1	9.7	5.3	0.0	-
	공공기관	48.5	31.5	11.7	8.0	0.3	-
	지방공기업	42.6	40.6	8.2	8.5	0.0	-
	교육청	29.4	41.2	17.6	11.8	0.0	-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48.0	37.4	9.7	4.9	0.0	-
	대학교	50.5	42.5	4.3	2.7	0.0	-
	전문대학	47.7	45.4	4.6	2.3	0.0	-
	고등학교	70.1	10.3	11.5	8.0	0.0	-
	중학교	61.1	20.7	13.3	4.9	0.0	-
	초등학교	27.6	55.3	11.5	5.6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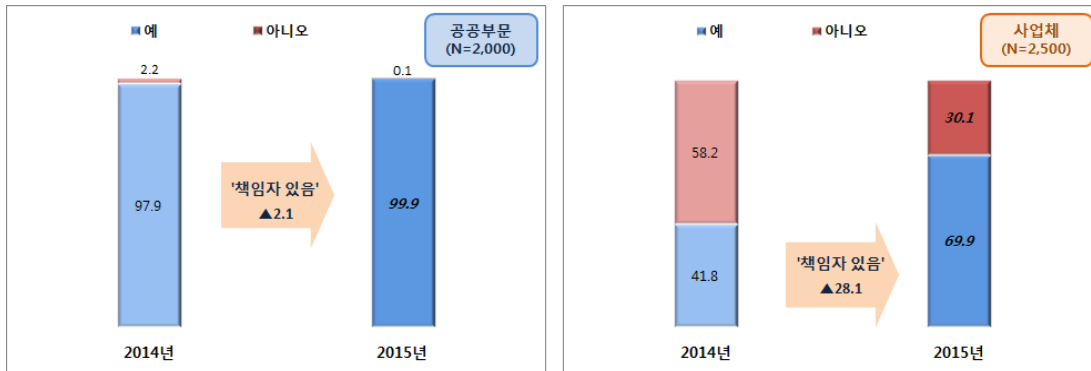
<표-78>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사업체

구 분		정보화 전담부서	일반 관리부서	정보보호 전담부서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	기타	없음
전 체		2.4	37.3	1.9	2.4	0.1	55.9
업종	제조	0.8	39.2	0.3	0.8	0.0	58.9
	전기/가스	3.6	55.4	3.6	8.4	0.0	28.9
	유통/물류/도소매	1.6	24.2	0.9	0.2	0.0	73.1
	숙박/음식	1.7	23.6	0.0	1.4	0.0	73.2
	정보/통신	2.7	37.8	6.1	8.8	0.7	43.9
	금융/보험	3.6	52.3	3.6	9.8	0.5	30.1
	부동산/임대	0.4	44.3	0.9	1.3	0.0	53.1
	사교육	3.0	38.9	2.1	3.0	0.0	53.0
	보건/복지	5.0	39.3	5.0	0.8	0.0	50.0
	협회/단체	4.1	52.6	1.5	0.5	0.0	41.2
규모	5명 미만	0.2	15.8	0.4	0.7	0.0	82.9
	5~49명	0.8	52.0	1.0	2.7	0.1	43.4
	50~299명	6.4	70.9	4.0	6.7	0.3	11.6
	300명 이상	20.6	57.4	14.9	5.7	0.0	1.4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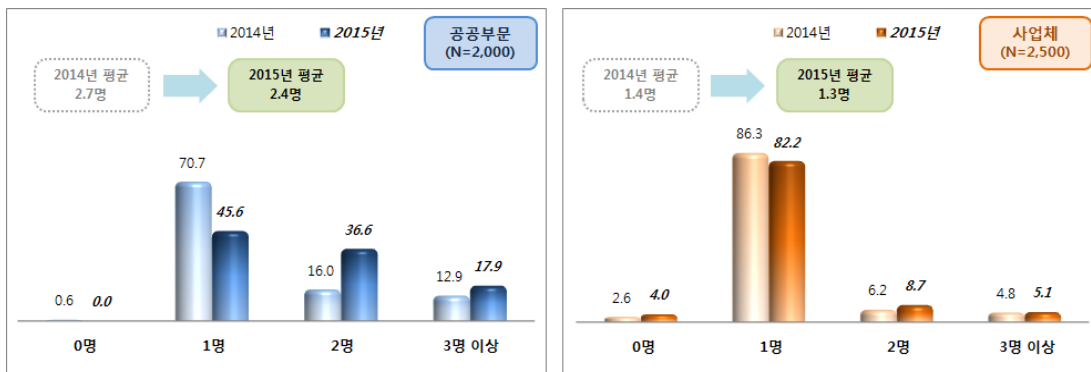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여부에 대해 공공부문의 99.9%, 사업체의 69.9%가 책임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6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여부(%)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인원수⁹⁾는 공공부문이 평균 2.4명, 사업체는 평균 1.3명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담 여부에 대해 공공부문은 담당자의 14.2%, 사업체는 담당자의 3.9%가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64>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인원수(%)



<표-79>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업무전담 여부(%)

담당자 업무전담 여부	예(업무 전담)		아니오(타업무병행)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공공부문	10.2	14.2	89.8	85.8
사업체	3.8	3.9	96.2	96.1

9) 담당자 인원수 : '0명', '없음',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평균 인원

<그림-65>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인원수(%)-사업체 규모별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0명'('5명 미만'(6.7%), '5~49명'(2.1%), '50~299명'(0.6%))인 경우는 사업체 규모가 '300명 이상'(0.0%)을 제외하고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0명'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유통/물류/도소매'(10.6%)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인원수는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0명' 또는 '1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2명'과 '3명 이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자 평균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금융/보험'(평균 2.2명)으로 나타났다.

<표-8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여부 및 담당자 인원수(%)-공공부문

구 분		책임자 여부		담당자 인원수				
		예	아니오	0명	1명	2명	3명 이상	평균인원(명) (0명제외)
전 체		99.9	0.1	-	45.6	36.6	17.9	2.4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100.0	0.0	-	51.2	30.1	18.7	2.6
	헌법기관	100.0	0.0	-	25.0	50.0	25.0	2.0
	중앙행정기관	100.0	0.0	-	40.4	27.7	31.9	4.1
	광역지자체	100.0	0.0	-	52.9	35.3	11.8	1.6
	기초지자체	100.0	0.0	-	61.7	24.8	13.6	2.5
	공공기관	100.0	0.0	-	41.7	32.1	26.2	3.2
	지방공기업	100.0	0.0	-	56.5	29.8	13.6	2.0
	교육청	100.0	0.0	-	29.4	58.8	11.8	2.1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99.9	0.1	0.0	40.3	42.7	17.0	2.2
	대학교	100.0	0.0	-	46.2	32.8	21.0	2.6
	전문대학	100.0	0.0	-	37.7	27.7	34.6	3.7
	고등학교	100.0	0.0	-	60.9	23.0	16.1	1.9
	중학교	100.0	0.0	-	36.9	50.2	12.8	1.9
	초등학교	99.7	0.3	0.0	29.4	59.4	11.2	1.9

개인정보처리자

<표-8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여부 및 담당자 인원수(%)-사업체

구 분		책임자 여부		담당자 인원수				
		예	아니오	0명	1명	2명	3명 이상	평균인원(명) (0명제외)
전 체		69.9	30.1	4.0	82.2	8.7	5.1	1.3
업종	제조	79.7	20.3	1.9	86.3	9.9	1.9	1.1
	전기/가스	91.6	8.4	1.2	62.7	21.7	14.5	1.9
	유통/물류/도소매	46.8	53.2	10.6	83.0	3.8	2.5	1.1
	숙박/음식	92.6	7.4	2.3	90.6	4.8	2.3	1.2
	정보/통신	96.6	3.4	0.7	82.4	9.5	7.4	1.3
	금융/보험	86.0	14.0	8.3	56.0	22.8	13.0	2.2
	부동산/임대	66.2	33.8	0.0	94.7	3.1	2.2	1.1
	사교육	35.9	64.1	0.4	85.5	6.4	7.7	1.4
	보건/복지	70.6	29.4	1.9	78.6	12.2	7.3	1.6
	협회/단체	61.9	38.1	7.2	78.4	8.8	5.7	1.3
규모	5명 미만	58.7	41.3	6.7	92.0	1.2	0.0	1.0
	5~49명	74.9	25.1	2.1	84.6	10.2	3.2	1.2
	50~299명	89.6	10.4	0.6	61.8	19.6	18.0	1.9
	300명 이상	90.8	9.2	0.0	31.9	38.3	29.8	3.6

<표-82>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업무전담 여부(%)-공공부문

구 분		예	아니오
전 체		14.2	85.8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18.7	81.3
	헌법기관	25.0	75.0
	중앙행정기관	31.9	68.1
	광역지자체	52.9	47.1
	기초지자체	19.4	80.6
	공공기관	15.7	84.3
	지방공기업	17.9	82.1
	교육청	11.8	88.2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10.0	90.0
	대학교	4.3	95.7
	전문대학	3.1	96.9
	고등학교	19.0	81.0
	중학교	13.8	86.2
	초등학교	8.8	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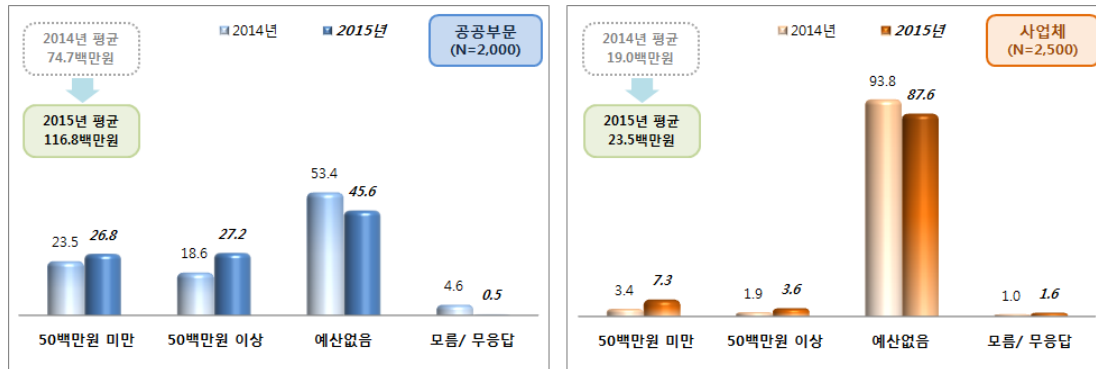
<표-83>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업무전담 여부(%)-사업체

구 분		예	아니오
전 체		3.9	96.1
업종	제조	1.4	98.6
	전기/가스	3.6	96.4
	유통/물류/도소매	1.6	98.4
	숙박/음식	4.6	95.4
	정보/통신	17.6	82.4
	금융/보험	6.7	93.3
	부동산/임대	3.5	96.5
	사교육	2.1	97.9
	보건/복지	3.1	96.9
	협회/단체	3.1	96.9
규모	5명 미만	1.5	98.5
	5~49명	3.3	96.7
	50~299명	8.6	91.4
	300명 이상	17.0	83.0

3) 개인정보보호 예산

- 개인정보보호 예산의 확보 규모에 대해 공공부문은 평균 116.8백만원, 사업체는 평균 23.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66> 개인정보보호 예산(%)



- 공공부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예산 확보 규모는 공공기관 평균 221.2백만원, 교육기관 평균 19.8백만원으로 나타나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공공부문 중 '광역지자체'(평균 598.6백만원)의 예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예산 확보 규모는 '금융/보험'이 평균 191.8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임대'가 평균 3.0백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사업체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84> 개인정보보호 예산(%)-공공부문

구 분		50백만원 미만	50백만원 이상	예산없음	모름/ 무응답	평균예산 (백만원)
전 체		26.8	27.2	45.6	0.5	116.8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32.7	43.7	22.8	0.8	221.2
	헌법기관	25.0	50.0	25.0	0.0	60.7
	중앙행정기관	23.4	68.1	8.5	0.0	584.9
	광역지자체	23.5	64.7	5.9	5.9	598.6
	기초지자체	35.4	58.7	5.3	0.5	110.9
	공공기관	29.0	46.0	24.1	0.9	399.8
	지방공기업	35.5	29.3	34.4	0.9	61.9
	교육청	47.1	29.4	23.5	0.0	123.6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21.3	11.6	67.0	0.1	19.8
	대학교	37.1	37.6	25.3	0.0	63.2
	전문대학	38.5	38.5	22.3	0.8	63.7
	고등학교	16.1	0.0	83.9	0.0	0.5
	중학교	16.3	0.0	83.7	0.0	0.6
	초등학교	11.8	0.0	88.2	0.0	0.7

<표-85> 개인정보보호 예산(%)-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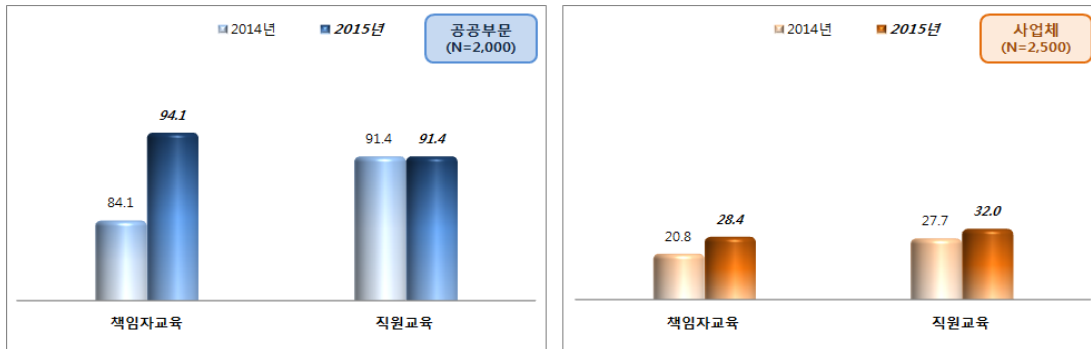
구 분		50백만원 미만	50백만원 이상	예산없음	모름/무응답	평균예산 (백만원)
전 체		7.3	3.6	87.6	1.6	23.5
업종	제조	4.1	5.2	89.9	0.8	22.1
	전기/가스	6.0	10.8	74.7	8.4	75.8
	유통/물류/도소매	5.0	1.4	93.2	0.5	3.4
	숙박/음식	2.6	2.6	94.6	0.3	4.2
	정보/통신	5.4	10.1	83.8	0.7	11.0
	금융/보험	9.8	8.8	73.1	8.3	191.8
	부동산/임대	4.8	0.9	93.9	0.4	3.0
	사교육	7.3	2.1	90.2	0.4	7.3
	보건/복지	24.4	1.5	72.9	1.1	3.5
	협회/단체	6.2	2.1	89.7	2.1	12.1
규모	5명 미만	1.9	0.0	97.9	0.2	0.1
	5~49명	5.2	0.6	93.1	1.1	0.7
	50~299명	19.3	6.4	71.3	3.1	10.2
	300명 이상	37.6	45.4	4.3	12.8	439.0

8. 개인정보보호 교육

1)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자 교육에 대해 공공부문의 94.1%, 사업체의 28.4%가 수행하고 있으며, 직원대상 교육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91.4%, 사업체의 32.0%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67>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여부(%)



- 공공부문의 경우, 책임자 교육 실시는 '헌법기관'(100.0%)과 '교육청'(100.0%), 직원대상 교육 실시는 '헌법기관'(100.0%)과 '광역지자체'(100.0%), '교육청'(100.0%)에서 실시율이 높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책임자와 직원대상 교육 실시 모두 '금융/보험'(각각 65.3%, 69.9%)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체의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교육 실시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68>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여부(%)-사업체 규모별



<표-86>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여부(%)-공공부문

구 분		책임자		직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94.1	5.9	91.4	8.6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93.4	6.6	94.4	5.6
	헌법기관	100.0	0.0	100.0	0.0
	중앙행정기관	93.6	6.4	91.5	8.5
	광역지자체	94.1	5.9	100.0	0.0
	기초지자체	95.1	4.9	95.1	4.9
	공공기관	93.2	6.8	95.1	4.9
	지방공기업	92.0	8.0	93.2	6.8
	교육청	100.0	0.0	100.0	0.0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94.8	5.2	88.6	11.4
	대학교	95.2	4.8	97.8	2.2
	전문대학	96.2	3.8	93.1	6.9
	고등학교	94.3	5.7	100.0	0.0
	중학교	96.6	3.4	94.1	5.9
	초등학교	93.2	6.8	72.6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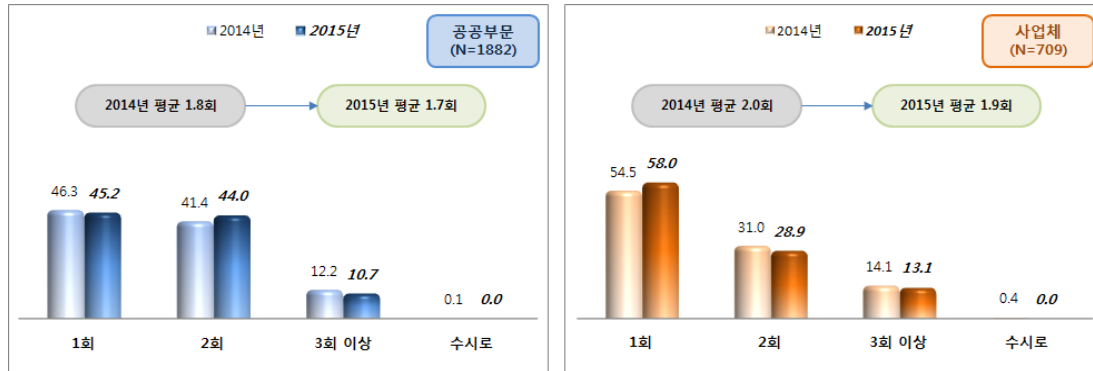
<표-87>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여부(%)-사업체

구 분		책임자		직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28.4	71.6	32.0	68.0
업종	제조	20.3	79.7	24.1	75.9
	전기/가스	44.6	55.4	49.4	50.6
	유통/물류/도소매	18.3	81.7	19.5	80.5
	숙박/음식	9.4	90.6	10.0	90.0
	정보/통신	31.1	68.9	31.8	68.2
	금융/보험	65.3	34.7	69.9	30.1
	부동산/임대	11.8	88.2	15.4	84.6
	사교육	42.7	57.3	44.4	55.6
	보건/복지	52.7	47.3	66.0	34.0
	협회/단체	24.2	75.8	28.4	71.6
	5명 미만	8.0	92.0	10.5	89.5
규모	5~49명	36.6	63.4	41.0	59.0
	50~299명	63.9	36.1	70.0	30.0
	300명 이상	71.6	28.4	74.5	25.5

2) 개인정보보호 교육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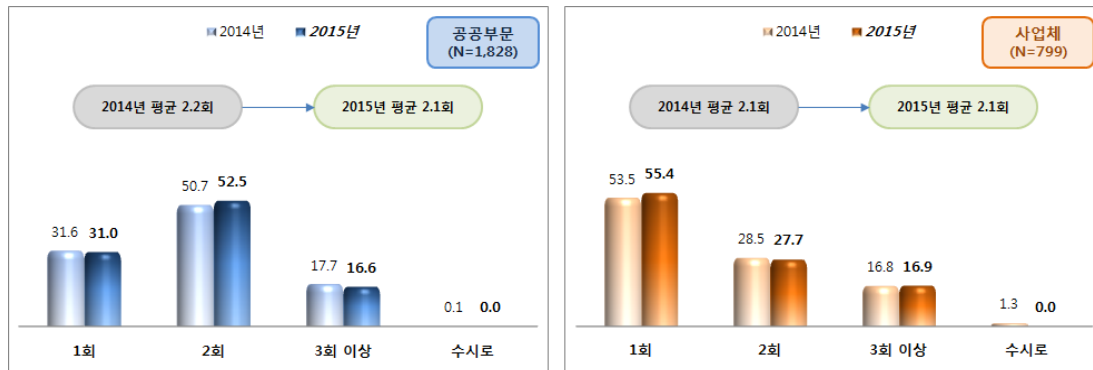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교육 횟수에 대해 공공부문은 평균 1.7회, 사업체는 평균 1.9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부문에서는 '광역지자체'가 2.3회, 사업체에서는 '금융/보험'이 3.4회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그림-69>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횟수-책임자 대상(%)



- 직원대상 교육 횟수에 대해 공공부문과 사업체 모두 평균 2.1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부문에서는 '헌법기관'이 3.8회, 사업체에서는 '금융/보험'이 4.2회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70>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횟수-직원대상(%)



<표-88>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횟수(%)-공공부문

구 분		책임자				직원			
		1회	2회	3회 이상	평균(회)	1회	2회	3회 이상	평균(회)
전 체		45.2	44.0	10.7	1.7	31.0	52.5	16.6	2.1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49.4	39.2	11.4	1.7	32.3	49.6	18.1	2.2
	헌법기관	25.0	75.0	0.0	1.8	25.0	50.0	25.0	3.8
	중앙행정기관	38.6	47.7	13.6	1.8	20.9	60.5	18.6	2.2
	광역지자체	31.3	37.5	31.3	2.3	17.6	35.3	47.1	2.6
	기초지자체	65.3	27.6	7.1	1.4	36.7	51.0	12.2	2.0
	공공기관	45.0	45.0	9.9	1.7	34.4	51.0	14.6	2.1
	지방공기업	46.3	39.2	14.5	1.8	29.6	46.6	23.8	2.4
	교육청	52.9	41.2	5.9	1.5	41.2	52.9	5.9	1.6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41.4	48.5	10.1	1.8	29.6	55.3	15.1	2.0
	대학교	42.4	41.2	16.4	1.9	31.3	56.0	12.6	1.9
	전문대학	47.2	32.8	20.0	1.9	45.5	48.8	5.8	1.6
	고등학교	41.5	48.8	9.8	1.8	20.7	58.6	20.7	2.4
	중학교	33.7	56.6	9.7	1.9	24.1	58.1	17.8	2.3
	초등학교	43.2	53.6	3.2	1.6	31.2	53.4	15.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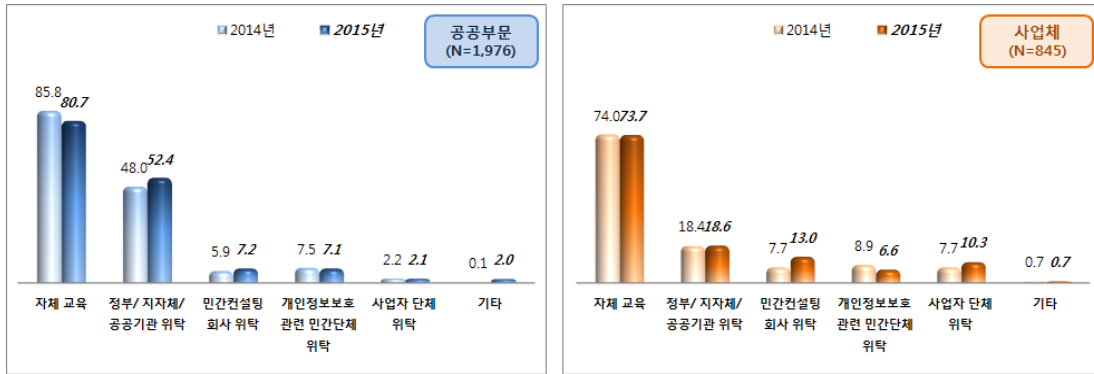
<표-89>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횟수(%)-사업체

구 분		책임자				직원			
		1회	2회	3회 이상	평균(회)	1회	2회	3회 이상	평균(회)
전 체		58.0	28.9	13.1	1.9	55.4	27.7	16.9	2.1
업종	제조	77.0	17.6	5.4	1.4	83.0	2.3	14.8	1.5
	전기/가스	40.5	45.9	13.5	1.8	36.6	39.0	24.4	2.1
	유통/물류/도소매	70.4	22.2	7.4	1.6	62.8	24.4	12.8	1.9
	숙박/음식	54.5	36.4	9.1	1.7	54.3	34.3	11.4	1.7
	정보/통신	52.2	37.0	10.9	1.8	53.2	40.4	6.4	1.6
	금융/보험	28.6	33.3	38.1	3.4	23.7	28.9	47.4	4.2
	부동산/임대	66.7	25.9	7.4	1.4	51.4	40.0	8.6	1.7
	사교육	66.0	28.0	6.0	1.4	67.3	26.0	6.7	1.5
	보건/복지	71.0	23.9	5.1	1.4	63.6	29.5	6.9	1.5
	협회/단체	46.8	38.3	14.9	1.9	49.1	36.4	14.5	1.8
	5명 미만	66.0	22.7	11.3	1.9	66.1	22.0	11.8	1.9
규모	5~49명	60.9	25.5	13.6	1.9	59.2	24.9	16.0	2.0
	50~299명	56.9	27.3	15.8	1.9	52.8	29.7	17.5	2.1
	300명 이상	43.6	48.5	7.9	1.8	36.2	39.0	24.8	2.5

3)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에 대해 '자체교육'이 공공부문 80.7%, 사업체 73.7%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위탁'(공공부문 52.4%, 사업체 18.6%)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71>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



- 공공부문의 경우, '자체 교육'은 공공기관(79.2%)보다 교육기관(82.1%)에서 활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위탁'은 교육기관(50.3%)보다 공공기관(54.6%)에서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자체 교육' (80.7%) 활용은 전년(85.8%)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위탁' (52.4%)은 전년(48.0%)대비 높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자체 교육'의 비율(73.7%)은 전년(74.0%)대비 소폭 낮게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전기/가스'(90.2%),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81.5%)에서 높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위탁'의 경우 업종별로는 '협회/단체'(40.6%)가 높게 나타났다.

<표-90>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공공부문

구 분		자체 교육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위탁	민간컨설팅 회사 위탁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간단체 위탁	사업자 단체 위탁	기타
전 체		80.7	52.4	7.2	7.1	2.1	2.0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79.2	54.6	10.3	8.5	2.8	2.2
	헌법기관	50.0	25.0	25.0	0.0	50.0	0.0
	중앙행정기관	66.0	59.6	17.0	6.4	0.0	2.1
	광역지자체	94.1	41.2	5.9	11.8	0.0	5.9
	기초지자체	83.0	60.2	3.9	6.8	0.0	0.5
	공공기관	77.3	51.9	18.9	10.2	6.5	2.8
	지방공기업	79.1	55.8	5.7	8.7	1.2	2.4
	교육청	100.0	23.5	0.0	0.0	0.0	5.9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82.1	50.3	4.3	5.8	1.4	1.8
	대학교	90.9	37.1	8.6	10.8	2.7	3.2
	전문대학	80.6	45.7	12.4	10.1	3.9	5.4
	고등학교	92.0	22.4	1.1	6.9	1.1	2.3
	중학교	82.8	57.6	1.0	4.4	0.0	0.5
	초등학교	72.3	69.3	2.4	1.8	0.6	0.0

<표-91>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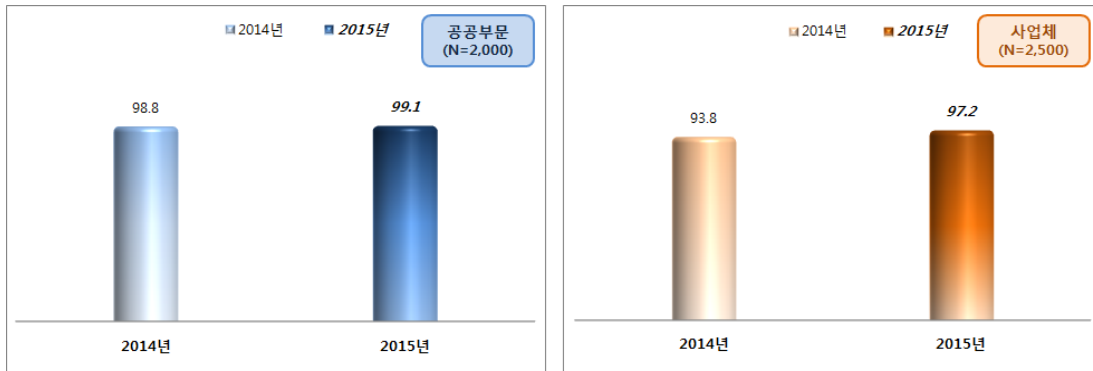
구 분		자체 교육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위탁	민간컨설팅 회사 위탁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간단체 위탁	사업자 단체 위탁	기타
전 체		73.7	18.6	13.0	6.6	10.3	0.7
업종	제조	89.0	5.5	11.0	2.2	4.4	0.0
	전기/가스	90.2	12.2	14.6	2.4	2.4	0.0
	유통/물류/도소매	68.1	8.5	17.0	7.4	13.8	2.1
	숙박/음식	85.0	35.0	5.0	15.0	2.5	2.5
	정보/통신	86.0	16.0	16.0	4.0	2.0	0.0
	금융/보험	85.4	21.2	8.8	3.6	10.2	1.5
	부동산/임대	77.5	12.5	15.0	10.0	7.5	0.0
	사교육	59.8	13.1	23.4	3.7	8.4	0.0
	보건/복지	64.6	23.8	10.5	11.0	21.5	0.6
	협회/단체	54.7	40.6	9.4	7.8	3.1	0.0
	5명 미만	66.7	15.0	8.8	6.8	10.2	0.0
규모	5~49명	71.4	20.6	13.1	4.3	9.7	1.1
	50~299명	77.9	17.9	14.2	6.7	10.0	0.8
	300명 이상	81.5	18.5	15.7	13.9	13.0	0.0

9. 법 인지도 및 애로사항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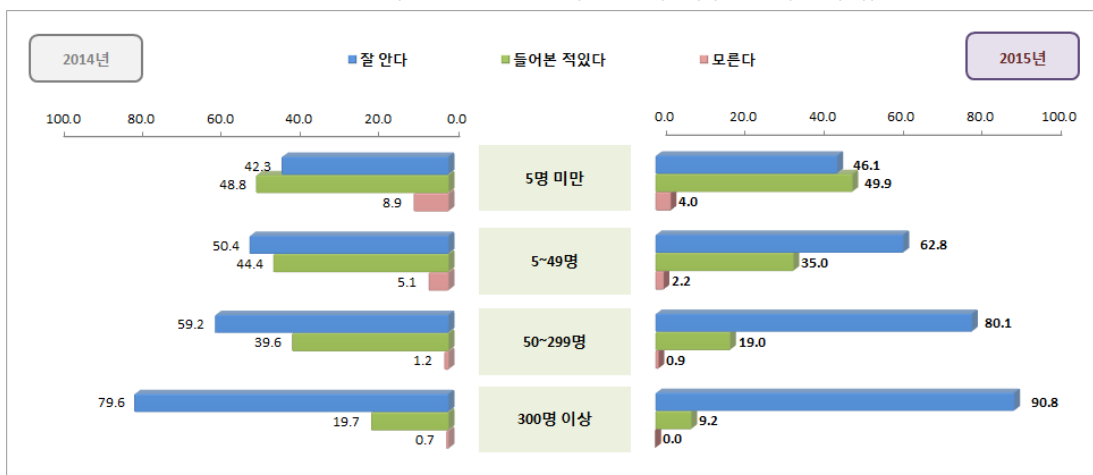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지에 대해 공공부문의 99.1%, 사업체의 97.2%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지율은 공공부문과 사업체 모두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7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지 여부(%)



- 사업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지에 대해 '전기/가스'(100.0%), '금융/보험' (100.0%)의 인지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체 규모에서는 규모가 작을수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해 '모른다'의 비율이 높게 (인지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7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지 여부(%)-사업체 규모별



<표-9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지 여부(%)-공공부문

구 분		(1)	(2)	(3)	(1)+(2)
		잘 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른다	인지
전 체		90.0	9.1	1.0	99.1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93.6	5.5	0.9	99.1
	헌법기관	100.0	0.0	0.0	100.0
	중앙행정기관	100.0	0.0	0.0	100.0
	광역지자체	100.0	0.0	0.0	100.0
	기초지자체	97.6	1.0	1.5	98.5
	공공기관	94.4	4.9	0.6	99.4
	지방공기업	89.2	9.7	1.1	98.9
	교육청	94.1	5.9	0.0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86.6	12.4	1.0	99.0
	대학교	96.2	2.7	1.1	98.9
	전문대학	96.2	3.1	0.8	99.2
	고등학교	86.2	10.9	2.9	97.1
	중학교	76.4	23.2	0.5	99.5
	초등학교	84.1	15.6	0.3	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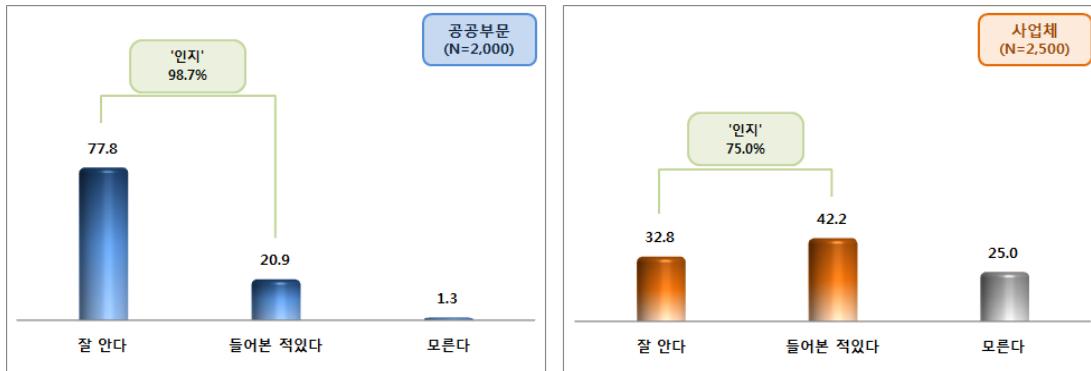
<표-9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지 여부(%)-사업체

구 분		(1)	(2)	(3)	(1)+(2)
		잘 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른다	인지
전 체		58.6	38.6	2.8	97.2
업종	제조	44.1	50.1	5.8	94.2
	전기/가스	48.2	51.8	0.0	100.0
	유통/물류/도소매	33.9	61.8	4.3	95.7
	숙박/음식	67.0	30.5	2.6	97.4
	정보/통신	66.2	32.4	1.4	98.6
	금융/보험	85.0	15.0	0.0	100.0
	부동산/임대	57.0	40.4	2.6	97.4
	사교육	56.0	40.2	3.8	96.2
	보건/복지	80.9	18.7	0.4	99.6
	협회/단체	74.2	24.7	1.0	99.0
	5명 미만	46.1	49.9	4.0	96.0
규모	5~49명	62.8	35.0	2.2	97.8
	50~299명	80.1	19.0	0.9	99.1
	300명 이상	90.8	9.2	0.0	100.0

2)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행(2016.01) 인지 여부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행(2016.01)에 대해 공공부문의 98.7%, 사업체의 75.0%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74>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행(2016.01) 인지 여부(%)



- 공공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행(2016.01)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99.1%)보다 교육기관(98.3%)의 인지율이 낮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행(2016.01)에 대해 '금융/보험' (99.5%)의 인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체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행의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94>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행(2016.01) 인지 여부(%)-공공부문

구 분		(1)	(2)	(3)	(1)+(2)
		잘 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른다	인지
전 체		77.8	20.9	1.3	98.7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87.4	11.7	0.9	99.1
	헌법기관	100.0	0.0	0.0	100.0
	중앙행정기관	97.9	2.1	0.0	100.0
	광역지자체	94.1	5.9	0.0	100.0
	기초지자체	94.7	5.3	0.0	100.0
	공공기관	87.3	11.7	0.9	99.1
	지방공기업	81.0	17.3	1.7	98.3
	교육청	94.1	5.9	0.0	100.0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68.8	29.4	1.7	98.3
	대학교	90.3	9.7	0.0	100.0
	전문대학	80.8	17.7	1.5	98.5
	고등학교	71.8	23.6	4.6	95.4
	중학교	61.1	37.4	1.5	98.5
	초등학교	55.6	42.9	1.5	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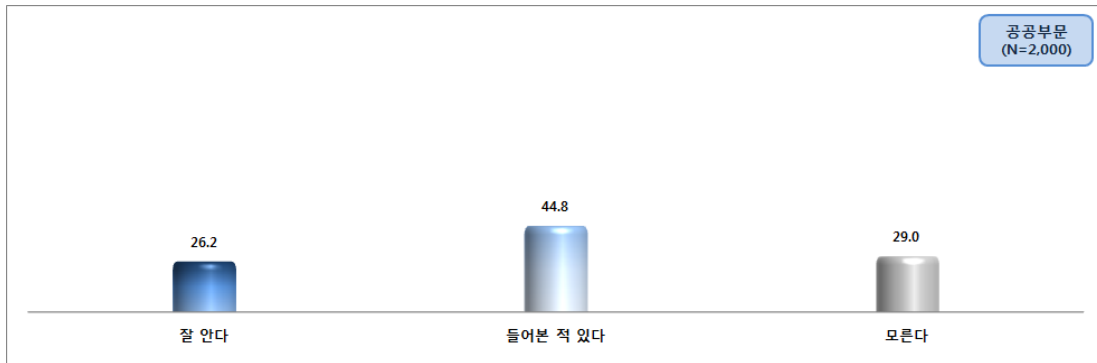
<표-95>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행(2016.01) 인지 여부(%)-사업체

구 분		(1)	(2)	(3)	(1)+(2)
		잘 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른다	인지
전 체		32.8	42.2	25.0	75.0
업종	제조	19.5	54.2	26.3	73.7
	전기/가스	15.7	63.9	20.5	79.5
	유통/물류/도소매	21.3	44.1	34.6	65.4
	숙박/음식	42.2	33.3	24.5	75.5
	정보/통신	34.5	58.1	7.4	92.6
	금융/보험	79.8	19.7	0.5	99.5
	부동산/임대	37.3	32.9	29.8	70.2
	사교육	39.3	44.0	16.7	83.3
	보건/복지	17.2	49.2	33.6	66.4
	협회/단체	34.5	30.9	34.5	65.5
	5명 미만	22.6	44.3	33.1	66.9
규모	5~49명	36.4	41.2	22.4	77.6
	50~299명	49.5	40.1	10.4	89.6
	300명 이상	60.3	34.0	5.7	94.3

3)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인지('16.07부터)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6.7.25부터는 개인정보처리가 수반되는 법령의 제·개정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인지 정도는 공공부문의 26.2%가 '잘 안다', 44.8%가 '들어본 적 있다'로 나타났다.

<그림-75>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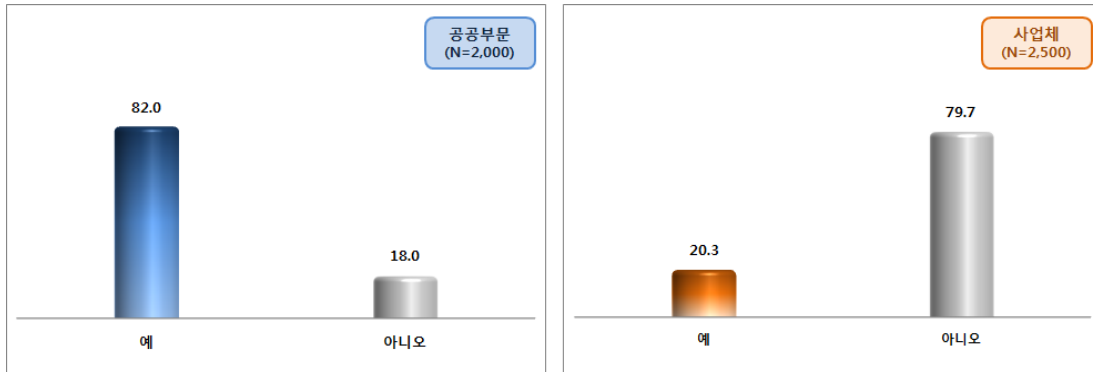
<표-96>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인지(%)-공공부문

구 분		(1) 모른다	(2) 들어본 적 있다	(3) 잘 안다	(1) 모른다	(2)+(3) 안다
전 체		29.0	44.8	26.2	29.0	71.0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33.2	41.1	25.7	33.2	66.8
	헌법기관	0.0	25.0	75.0	0.0	100.0
	중앙행정기관	17.0	51.1	31.9	17.0	83.0
	광역지자체	17.6	23.5	58.8	17.6	82.4
	기초지자체	32.0	44.7	23.3	32.0	68.0
	공공기관	36.1	38.0	25.9	36.1	63.9
	지방공기업	34.9	41.8	23.3	34.9	65.1
	교육청	23.5	35.3	41.2	23.5	76.5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25.1	48.3	26.6	25.1	74.9
	대학교	28.5	50.0	21.5	28.5	71.5
	전문대학	20.8	42.3	36.9	20.8	79.2
	고등학교	47.7	42.0	10.3	47.7	52.3
	중학교	25.6	46.8	27.6	25.6	74.4
	초등학교	12.9	53.8	33.2	12.9	87.1

4)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지

- 공공기관(의무) 및 사업자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공공부문은 82.0%, 사업체는 20.3%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76>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지 여부(%)



- 공공부문의 경우, 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공공기관(92.9%)이 교육기관(71.8%)보다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기관 중 '초등학교'의 경우 인지율이 64.1%로 타 기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영향평가 제도 인지율에 대해 '사교육'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금융/보험'(44.6%), '정보/통신'(3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97>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지 여부(%)-공공부문

구 분		예	아니오
전 체		82.0	18.0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92.9	7.1
	헌법기관	100.0	0.0
	중앙행정기관	100.0	0.0
	광역시자체	100.0	0.0
	기초지자체	98.1	1.9
	공공기관	94.1	5.9
	지방공기업	87.2	12.8
	교육청	94.1	5.9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71.8	28.2
	대학교	80.1	19.9
	전문대학	83.1	16.9
	고등학교	71.8	28.2
	중학교	70.0	30.0
	초등학교	64.1	35.9

개인정보처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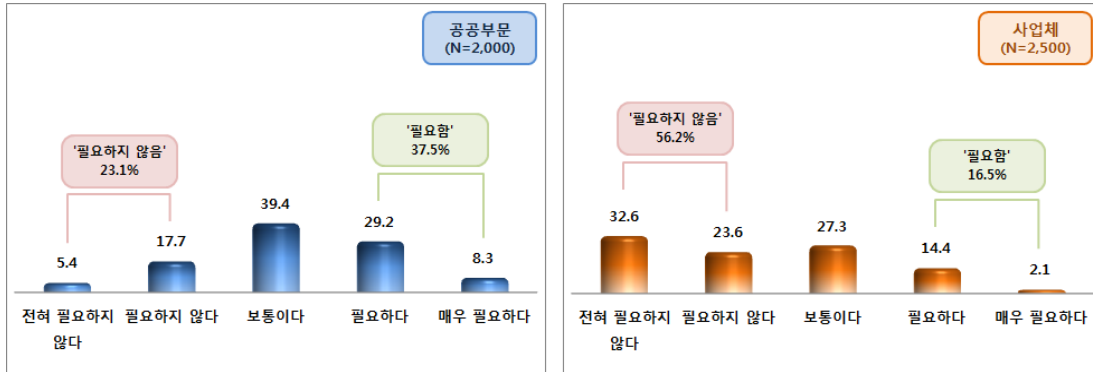
<표-98>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지 여부(%)-사업체

구 분		예	아니오
전 체		20.3	79.7
업종	제조	15.9	84.1
	전기/가스	25.3	74.7
	유통/물류/도소매	14.7	85.3
	숙박/음식	6.6	93.4
	정보/통신	37.8	62.2
	금융/보험	44.6	55.4
	부동산/임대	16.2	83.8
	사교육	45.7	54.3
	보건/복지	6.1	93.9
	협회/단체	20.1	79.9
규모	5명 미만	14.6	85.4
	5~49명	20.6	79.4
	50~299명	30.0	70.0
	300명 이상	45.4	54.6

5)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요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요성에 대해 공공부문 37.5%, 사업체 16.5%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77>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요성(%)



- 공공부문의 경우, '필요함¹⁰⁾'은 공공기관(43.6%)이 교육기관(31.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기관 중 '광역지자체'(82.4%)가 다른 기관에 비해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 반면,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공공기관 중 '기초지자체'(26.7%)와 교육기관 중 '초등학교'(42.9%)에서 높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요성에 대해 '사교육'이 35.0%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협회/단체'(27.8%), '금융/보험'(2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사업체의 규모별로는 '5명 미만'(13.8%)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0) '필요함' :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표-99>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요성(%)-공공부문

구 분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1)+(2) 필요	(3) 보통	(4)+(5) 불필요
전 체		8.3	29.2	39.4	17.7	5.4	37.5	39.4	23.1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개	11.6	32.1	38.5	15.5	2.4	43.6	38.5	17.9
	헌법기관	0.0	25.0	75.0	0.0	0.0	25.0	75.0	0.0
	중앙행정기관	19.1	48.9	19.1	10.6	2.1	68.1	19.1	12.8
	광역지자체	41.2	41.2	5.9	11.8	0.0	82.4	5.9	11.8
	기초지자체	6.8	27.7	38.8	22.3	4.4	34.5	38.8	26.7
	공공기관	13.6	38.3	39.2	6.5	2.5	51.9	39.2	9.0
	지방공기업	9.7	27.6	40.3	21.0	1.4	37.2	40.3	22.4
	교육청	23.5	5.9	58.8	11.8	0.0	29.4	58.8	11.8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개	5.2	26.4	40.3	19.7	8.3	31.7	40.3	28.1
	대학교	6.5	32.3	41.9	17.2	2.2	38.7	41.9	19.4
	전문대학	4.6	30.8	40.0	22.3	2.3	35.4	40.0	24.6
	고등학교	9.2	37.9	44.8	6.9	1.1	47.1	44.8	8.0
	중학교	6.9	23.6	38.9	22.7	7.9	30.5	38.9	30.5
	초등학교	1.8	17.4	37.9	25.0	17.9	19.1	37.9	42.9

<표-100>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요성(%)-사업체

구 분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1)+(2) 필요	(3) 보통	(4)+(5) 불필요
전 체		2.1	14.4	27.3	23.6	32.6	16.5	27.3	56.2
업종	제조	0.3	17.5	39.5	13.2	29.6	17.8	39.5	42.7
	전기/가스	3.6	9.6	21.7	6.0	59.0	13.3	21.7	65.1
	유통/물류/도소매	1.1	16.3	46.2	28.1	8.4	17.4	46.2	36.4
	숙박/음식	0.3	0.9	1.4	5.4	92.0	1.1	1.4	97.4
	정보/통신	0.7	4.1	23.6	52.7	18.9	4.7	23.6	71.6
	금융/보험	0.5	24.4	22.3	37.3	15.5	24.9	22.3	52.8
	부동산/임대	7.0	16.7	20.6	44.3	11.4	23.7	20.6	55.7
	사교육	2.1	32.9	49.1	15.0	0.9	35.0	49.1	15.8
	보건/복지	0.8	3.1	11.5	26.0	58.8	3.8	11.5	84.7
	협회/단체	9.3	18.6	21.1	20.1	30.9	27.8	21.1	51.0
규모	5명 미만	2.1	11.7	27.8	24.5	34.0	13.8	27.8	58.5
	5~49명	2.5	16.7	25.5	20.2	35.0	19.3	25.5	55.3
	50~299명	1.2	15.9	30.3	23.2	29.4	17.1	30.3	52.6
	300명 이상	2.1	19.9	27.0	35.5	15.6	22.0	27.0	51.1

6)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정보 보유 및 평가실행¹¹⁾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정보의 보유에 대해 사업체의 96.5%가 대상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평가 대상 정보 보유는 평균 2.2건으로 나타났으며, 영향평가 실시 비율은 0.9%로 나타났다.

<표-101>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정보 보유율 및 실시율(%)·사업체

구 분		대상정보 보유율							영향평가 실시율
		0건	1~9건	10~49건	50~99건	100건 이상	무응답	평균 보유 (건수)	
전 체		96.5	2.0	0.2	0.2	0.2	0.9	2.2	0.9
업종	제조	98.1	0.5	0.3	0.5	0.0	0.5	0.3	1.4
	전기/가스	89.2	1.2	0.0	0.0	0.0	9.6	0.0	0.9
	유통/물류/도소매	98.0	1.1	0.0	0.0	0.7	0.2	5.1	0.2
	숙박/음식	98.6	1.4	0.0	0.0	0.0	0.0	0.0	0.3
	정보/통신	93.2	6.8	0.0	0.0	0.0	0.0	0.1	6.1
	금융/보험	97.4	1.0	0.0	0.0	0.0	1.6	0.0	0.8
	부동산/임대	94.7	4.4	0.0	0.4	0.4	0.0	6.4	0.0
	사교육	96.6	2.1	0.4	0.4	0.4	0.0	4.8	0.4
	보건/복지	96.2	1.1	0.4	0.0	0.0	2.3	0.1	0.8
	협회/단체	93.8	3.6	1.0	0.0	0.5	1.0	2.9	1.0
규모	5명 미만	97.5	1.6	0.1	0.0	0.0	0.8	0.0	0.5
	5~49명	96.0	3.2	0.2	0.0	0.2	0.4	1.9	1.1
	50~299명	95.7	1.2	0.6	0.3	0.9	1.2	7.1	1.6
	300명 이상	92.9	0.7	0.0	2.1	0.7	3.5	11.8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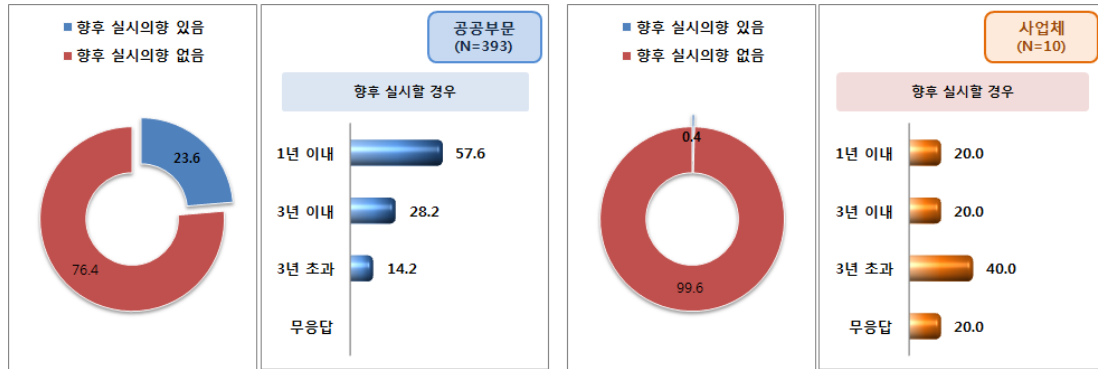
- 사업체의 업종별 영향평가 대상 정보 보유는 '부동산/임대'(평균 6.4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평가 실시율은 '정보/통신'(6.1%)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영향평가 대상 정보의 보유율과 영향평가 실시율은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11)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제8항(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에 따라 민간사업체도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실시하더라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영향평가 절차 및 체계와는 다를 수 있음

7) 향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의향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해 향후 실시 의향은 공공기관 23.6%, 사업체 0.4%로 낮게 나타났으며, 향후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공공부문은 '1년 이내' (57.6%), 사업체는 '3년 초과'(40.0%)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78> 향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의향(%)



<표-102> 향후 영향평가 실시 의향 및 실시기간(%)-공공부문

구 분		영향평가 실시 의향		향후 영향평가 실시기간			
		예	아니오	1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무응답
전 체		23.6	76.4	57.6	28.2	14.2	-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30.7	69.3	55.9	31.4	12.7	-
	헌법기관	0.0	100.0	-	-	-	-
	중앙행정기관	8.3	91.7	0.0	100.0	0.0	-
	광역지자체	100.0	0.0	100.0	0.0	0.0	-
	기초지자체	61.0	39.0	68.0	26.0	6.0	-
	공공기관	27.8	72.2	50.7	34.3	14.9	-
	지방공기업	18.6	81.4	39.3	37.5	23.2	-
	교육청	23.1	76.9	100.0	0.0	0.0	-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17.9	82.1	59.8	23.8	16.5	-
	대학교	43.4	56.6	68.1	17.4	14.5	-
	전문대학	45.9	54.1	68.0	20.0	12.0	-
	고등학교	15.7	84.3	27.3	36.4	36.4	-
	중학교	6.1	93.9	45.5	45.5	9.1	-
	초등학교	3.7	96.3	50.0	33.3	16.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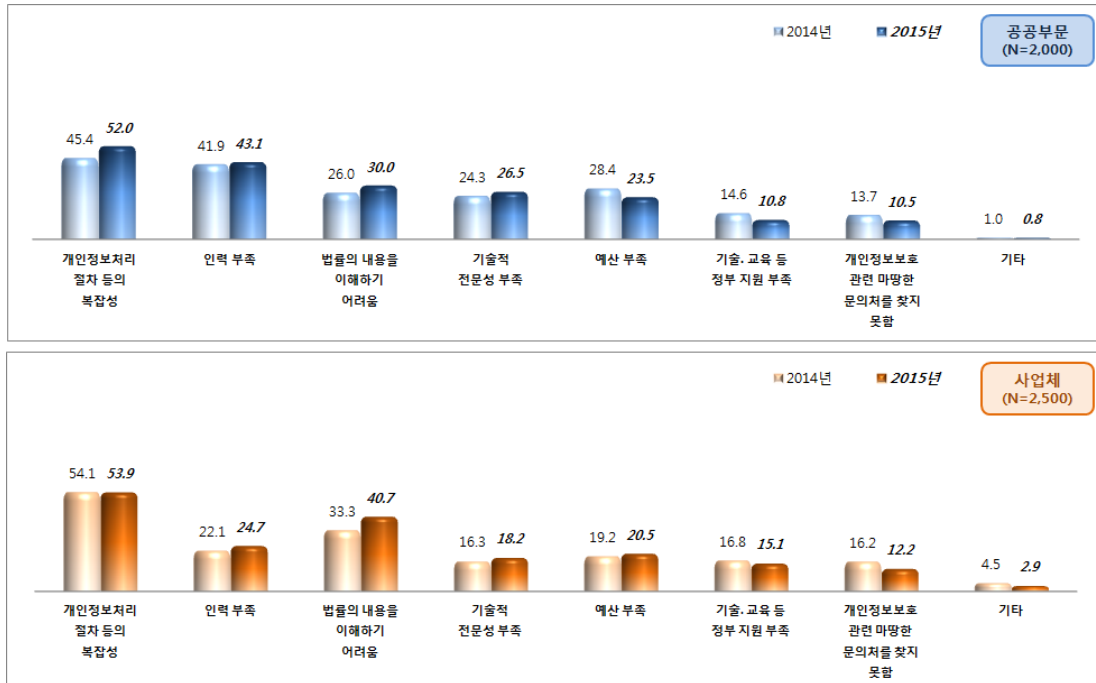
<표-103> 향후 영향평가 실시 의향 및 실시기간(%)-사업체

구 분		영향평가 실시 의향		향후 영향평가 실시기간			
		예	아니오	1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무응답
전 체		0.4	99.6	20.0	20.0	40.0	20.0
업종	제조	0.0	100.0	-	-	-	-
	전기/가스	0.0	100.0	-	-	-	-
	유통/물류/도소매	0.7	99.3	0.0	33.3	33.3	33.3
	숙박/음식	0.0	100.0	-	-	-	-
	정보/통신	0.0	100.0	-	-	-	-
	금융/보험	0.0	100.0	-	-	-	-
	부동산/임대	0.0	100.0	-	-	-	-
	사교육	0.9	99.1	0.0	0.0	50.0	50.0
	보건/복지	0.8	99.2	0.0	0.0	100.0	0.0
	협회/단체	1.6	98.4	66.7	33.3	0.0	0.0
규모	5명 미만	0.4	99.6	40.0	20.0	40.0	0.0
	5~49명	0.1	99.9	0.0	100.0	0.0	0.0
	50~299명	0.6	99.4	0.0	0.0	50.0	50.0
	300명 이상	1.5	98.5	0.0	0.0	50.0	50.0

8) 개인정보보호법 제반 규정 이해 및 시행 애로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의 제반 규정에 대해 이해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에 대해 공공부문과 사업체 모두 '개인정보처리 절차 등의 복잡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79> 개인정보보호법 제반 규정 이해 및 시행 애로사항(%)



- 공공부문의 경우, '개인정보처리 절차 등의 복잡성'이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력 부족'(43.1%)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30.0%), '기술적 전문성 부족'(26.5%), '예산 부족'(2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처리 절차 등의 복잡성'과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은 공공기관 보다 교육기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은 교육기관보다 공공기관에서 높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개인정보처리 절차 등의 복잡성'이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40.7%), '인력 부족'(2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04> 개인정보보호법 제반 규정 이해 및 시행 애로사항(1+2순위)(%)-공공부문

구 분		개인정보 처리 절차 등의 복잡성	인력 부족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기술적 전문성 부족	예산 부족	기술, 교육 등 정부 지원부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마땅한 문의처를 찾지 못함	기타
전 체		52.0	43.1	30.0	26.5	23.5	10.8	10.5	0.8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46.6	49.0	21.0	27.7	29.2	11.6	11.2	1.1
	헌법기관	75.0	25.0	0.0	50.0	25.0	25.0	0.0	0.0
	중앙행정기관	42.6	34.0	25.5	25.5	34.0	12.8	23.4	0.0
	광역지자체	64.7	35.3	11.8	47.1	17.6	5.9	11.8	0.0
	기초지자체	45.6	53.4	13.6	31.6	33.5	9.7	10.7	0.0
	공공기관	39.5	59.3	19.4	19.1	34.9	11.7	12.0	2.5
	지방공기업	51.7	40.3	26.4	33.0	22.2	12.8	9.7	0.6
	교육청	76.5	41.2	29.4	17.6	11.8	5.9	0.0	5.9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57.0	37.6	38.4	25.4	18.1	10.0	9.8	0.5
	대학교	38.7	43.0	22.6	23.1	45.7	9.1	11.8	1.1
	전문대학	40.8	57.7	17.7	24.6	33.1	10.0	8.5	0.8
	고등학교	64.4	27.0	47.1	37.4	5.2	13.2	4.0	0.0
	중학교	66.0	33.5	44.3	27.1	7.4	11.8	9.4	0.0
	초등학교	64.1	34.7	47.1	19.7	10.3	7.6	12.4	0.6

<표-105> 개인정보보호법 제반 규정 이해 및 시행 애로사항(1+2순위)(%)-사업체

구 분		개인정보 처리 절차 등의 복잡성	인력부족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기술적 전문성 부족	예산부족	기술, 교육 등 정부 지원부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마땅한 문의처를 찾지 못함	기타
전 체		53.9	24.7	40.7	18.2	20.5	15.1	12.2	2.9
업종	제조	53.7	24.9	48.8	20.5	23.3	11.0	12.3	1.4
	전기/가스	56.6	31.3	38.6	25.3	9.6	16.9	4.8	8.4
	유통/물류/도소매	53.2	28.7	47.3	18.8	21.3	10.4	13.3	2.7
	숙박/음식	62.1	9.1	57.5	14.2	12.3	12.0	16.0	2.3
	정보/통신	43.9	37.8	33.1	20.3	28.4	20.3	12.2	0.7
	금융/보험	56.5	19.2	28.5	28.5	16.6	25.4	8.3	3.1
	부동산/임대	46.5	28.5	30.7	20.6	28.5	11.4	10.1	1.3
	사교육	47.9	15.4	35.5	13.7	23.9	12.0	18.8	7.7
	보건/복지	65.3	29.8	30.9	13.4	13.4	26.0	8.4	1.9
	협회/단체	45.4	36.1	30.4	14.4	26.8	17.5	9.8	3.6
규모	5명 미만	57.2	24.5	47.8	13.1	17.2	9.4	13.7	3.9
	5~49명	52.7	22.5	40.1	19.0	23.4	16.0	12.7	1.8
	50~299명	50.2	31.2	27.2	25.4	26.9	21.1	8.6	2.1
	300명 이상	40.4	24.1	14.9	41.1	16.3	44.7	5.7	2.1

<표-106> 개인정보보호법 제반 규정 이해 및 시행 애로사항(1순위)(%) - 공공부문

구 분		개인정보 처리 절차 등의 복잡성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인력 부족	예산 부족	기술적 전문성 부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마땅한 문의처를 찾지 못함	기술, 교육 등 정부 지원부족	기타
전 체		27.6	22.6	21.6	13.0	9.1	3.2	2.6	0.4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개	27.4	14.5	26.5	16.0	8.8	3.7	2.5	0.6
	헌법기관	50.0	0.0	25.0	25.0	0.0	0.0	0.0	0.0
	중앙행정기관	25.5	19.1	17.0	21.3	10.6	2.1	4.3	0.0
	광역지자체	35.3	5.9	29.4	0.0	17.6	5.9	5.9	0.0
	기초지자체	25.2	11.2	30.6	17.5	10.2	2.9	2.4	0.0
	공공기관	23.8	12.3	31.8	20.7	4.3	4.3	1.5	1.2
	지방공기업	31.0	17.9	20.7	11.6	11.4	4.0	3.1	0.3
	교육청	41.2	23.5	17.6	0.0	11.8	0.0	0.0	5.9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개	27.8	30.2	16.9	10.2	9.4	2.6	2.7	0.2
	대학교	17.7	16.7	19.4	27.4	9.7	3.8	4.3	1.1
	전문대학	23.8	10.8	28.5	19.2	8.5	6.9	2.3	0.0
	고등학교	35.1	35.1	8.6	4.0	12.1	1.1	4.0	0.0
	중학교	33.5	35.5	13.3	3.0	10.8	1.5	2.5	0.0
	초등학교	27.6	39.4	17.6	4.7	7.4	1.8	1.5	0.0

<표-107> 개인정보보호법 제반 규정 이해 및 시행 애로사항(1순위)(%) - 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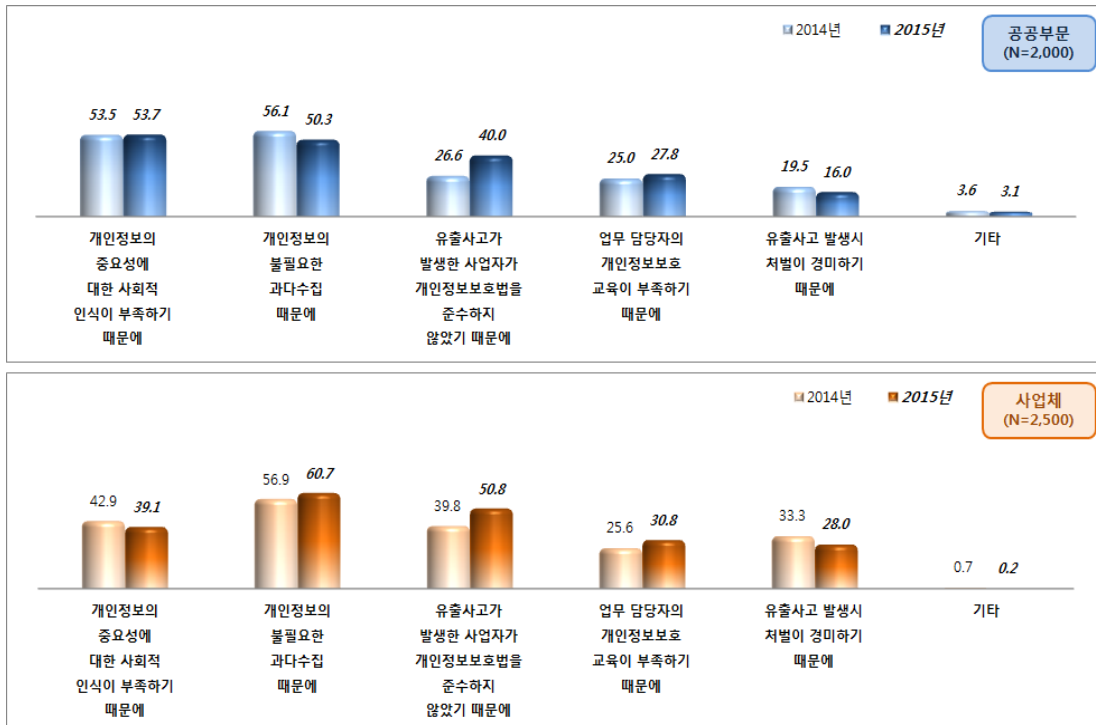
구 분		개인정보 처리 절차 등의 복잡성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인력 부족	예산 부족	기술적 전문성 부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마땅한 문의처를 찾지 못함	기술, 교육 등 정부 지원부족	기타
전 체		25.9	30.9	11.2	10.0	7.6	4.8	6.6	2.9
업종	제조	28.8	34.2	9.0	9.0	7.4	5.2	4.9	1.4
	전기/가스	15.7	27.7	16.9	3.6	14.5	2.4	10.8	8.4
	유통/물류/도소매	28.5	40.3	8.8	7.0	6.8	2.9	2.9	2.7
	숙박/음식	21.1	46.2	4.8	6.8	5.4	8.3	5.1	2.3
	정보/통신	15.5	29.7	14.9	17.6	11.5	2.7	7.4	0.7
	금융/보험	33.7	19.2	12.4	8.8	11.9	2.6	8.3	3.1
	부동산/임대	21.1	28.1	6.6	22.8	11.4	3.1	5.7	1.3
	사교육	22.6	26.9	8.1	11.5	6.0	10.3	6.8	7.7
	보건/복지	34.4	16.4	17.9	5.0	6.1	3.8	14.5	1.9
	협회/단체	26.3	17.5	25.3	12.9	3.1	4.1	7.2	3.6
	5명 미만	26.1	37.8	11.0	7.0	5.4	5.1	3.7	3.9
규모	5~49명	25.7	28.5	10.2	13.2	7.8	5.2	7.6	1.8
	50~299명	26.9	19.9	14.1	13.8	10.4	4.3	8.6	2.1
	300명 이상	23.4	12.1	11.3	8.5	19.1	2.1	21.3	2.1

10. 개인정보 유출

1) 대규모 유출사고 원인

- 대규모 유출사고 원인에 대해 공공부문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53.7%), 사업체는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과다수집 때문에’(60.7%)가 각각 높게 나타났다.

<그림-80> 대규모 유출사고 원인(%)



- 공공부문의 경우,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가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과다수집 때문에’(50.3%),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4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과다수집 때문에’가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50.8%),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3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08> 대규모 유출사고 원인(%)-공공부문

구 분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과다수집 때문에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기타
전 체		53.7	50.3	40.0	27.8	16.0	3.1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60.1	51.7	34.2	29.7	15.9	4.9
	헌법기관	100.0	75.0	50.0	50.0	25.0	0.0
	중앙행정기관	66.0	38.3	40.4	46.8	14.9	2.1
	광역지자체	70.6	52.9	47.1	41.2	29.4	0.0
	기초지자체	59.2	58.3	36.9	24.8	13.6	5.3
	공공기관	60.5	44.8	32.7	26.5	11.1	6.2
	지방공기업	59.1	55.1	31.3	31.8	21.6	4.0
	교육청	47.1	64.7	58.8	41.2	5.9	5.9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47.6	48.9	45.3	25.9	16.1	1.5
	대학교	51.6	57.0	40.3	22.6	27.4	3.2
	전문대학	56.2	56.9	27.7	39.2	13.8	3.8
	고등학교	56.3	54.6	32.8	19.0	9.2	0.6
	중학교	43.3	48.3	55.2	22.2	17.7	1.0
	초등학교	40.3	38.8	55.3	28.5	13.2	0.3

개인정보처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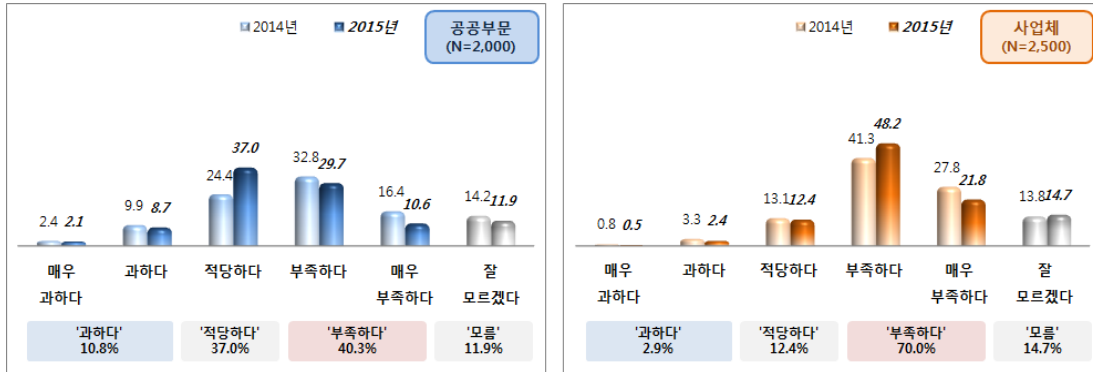
<표-109> 대규모 유출사고 원인(%)-사업체

구 분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과다수집 때문에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기타
전 체		39.1	60.7	50.8	30.8	28.0	0.2
업종	제 조	29.6	71.2	56.2	28.8	18.9	0.0
	전기/가스	24.1	34.9	94.0	20.5	33.7	0.0
	유통/물류/도소매	39.6	64.9	40.3	28.7	26.2	0.0
	숙박/음식	36.5	61.8	70.9	37.6	31.3	0.0
	정보/통신	30.4	50.0	52.0	38.5	18.2	0.0
	금융/보험	51.3	57.5	32.6	27.5	33.2	0.0
	부동산/임대	32.0	57.5	56.1	36.4	31.6	1.3
	사교육	51.7	61.1	50.0	33.8	43.2	0.0
	보건/복지	46.2	57.6	34.4	24.4	21.4	0.0
	협회/단체	44.8	58.8	44.3	27.8	29.4	0.5
	기타	39.1	60.7	50.8	30.8	28.0	0.2
규모	5명 미만	40.6	62.0	50.9	30.7	29.7	0.2
	5~49명	37.5	61.2	50.5	31.3	28.2	0.1
	50~299명	37.9	58.7	51.4	27.8	25.1	0.0
	300명 이상	38.3	51.1	51.1	36.9	19.1	0.0

2) 개인정보 유출 시 현재의 처벌 강도

- 개인정보 유출 시 해당 사업자(기관)의 처벌 강도에 대해 공공부문은 '과함'¹²⁾이 10.8%, '부족함'¹³⁾이 40.3%로 나타났으며, 사업체는 '과함'이 2.9%, '부족함'이 70.0%로 사업체의 경우, 공공부문보다 '부족함'의 비율이 29.7%p 높게 나타났다.

<그림-81> 유출 시 처벌 강도(%)



12) '과함' : '매우 과하다'+'과하다' 비율임.

13) '부족함' : '부족하다'+'매우 부족하다' 비율임.

<표-110> 유출 시 처벌 강도(%)-공공부문

구 분		(1)	(2)	(3)	(4)	(5)	(6)	(1)+(2)	(3)	(4)+(5)
		매우 과하다	과하다	적당 하다	부족 하다	매우 부족 하다	잘 모르 겠다	과함	적당함	부족함
전 체		2.1	8.7	37.0	29.7	10.6	11.9	10.8	37.0	40.3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3.0	9.5	37.3	28.3	11.6	10.2	12.5	37.3	39.9
	헌법기관	0.0	0.0	75.0	25.0	0.0	0.0	0.0	75.0	25.0
	중앙행정기관	2.1	10.6	40.4	29.8	6.4	10.6	12.8	40.4	36.2
	광역시자체	5.9	0.0	47.1	17.6	23.5	5.9	5.9	47.1	41.2
	기초지자체	2.9	9.7	44.7	24.3	5.8	12.6	12.6	44.7	30.1
	공공기관	4.3	10.2	32.7	29.3	13.6	9.9	14.5	32.7	42.9
	지방공기업	2.0	8.8	35.2	30.7	13.6	9.7	10.8	35.2	44.3
	교육청	0.0	17.6	52.9	17.6	5.9	5.9	17.6	52.9	23.5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1.3	7.8	36.7	30.9	9.7	13.6	9.1	36.7	40.6
	대학교	1.1	10.8	41.9	27.4	9.7	9.1	11.8	41.9	37.1
	전문대학	2.3	17.7	38.5	24.6	5.4	11.5	20.0	38.5	30.0
	고등학교	2.3	12.6	37.9	24.7	7.5	14.9	14.9	37.9	32.2
	중학교	0.5	4.9	40.9	29.6	13.8	10.3	5.4	40.9	43.3
	초등학교	0.9	1.8	30.0	39.1	10.0	18.2	2.6	30.0	49.1

개인정보처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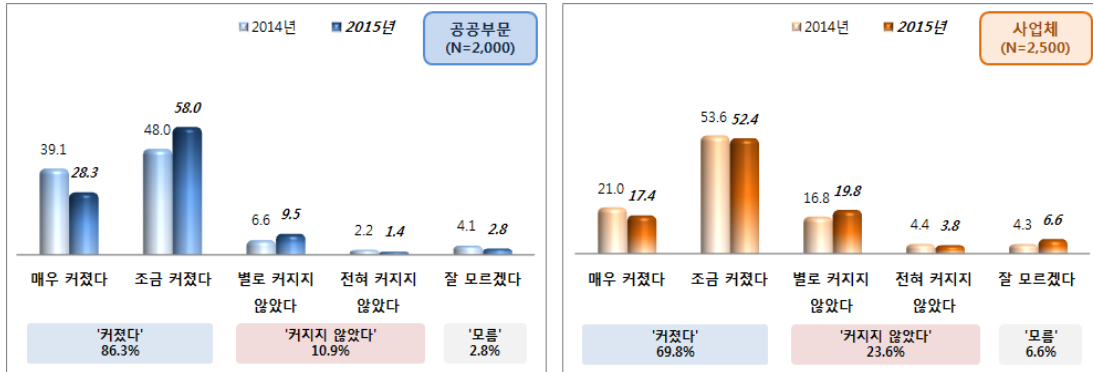
<표-111> 유출 시 처벌 강도(%)-사업체

구 분		(1)	(2)	(3)	(4)	(5)	(6)	(1)+(2)	(3)	(4)+(5)
		매우 과하다	과하다	적당 하다	부족 하다	매우 부족 하다	잘 모르 겠다	과함	적당함	부족함
전 체		0.5	2.4	12.4	48.2	21.8	14.7	2.9	12.4	70.0
업종	제조	0.0	0.5	15.9	48.2	24.1	11.2	0.5	15.9	72.3
	전기/가스	0.0	1.2	26.5	59.0	4.8	8.4	1.2	26.5	63.9
	유통/물류/도소매	0.9	3.2	8.8	49.3	29.9	7.9	4.1	8.8	79.2
	숙박/음식	0.0	0.6	7.1	55.3	14.5	22.5	0.6	7.1	69.8
	정보/통신	0.0	0.7	16.2	31.1	20.3	31.8	0.7	16.2	51.4
	금융/보험	1.0	5.7	22.3	54.9	14.0	2.1	6.7	22.3	68.9
	부동산/임대	0.4	0.4	2.6	53.9	19.7	22.8	0.9	2.6	73.7
	사교육	0.0	2.1	16.7	52.1	18.4	10.7	2.1	16.7	70.5
	보건/복지	0.0	4.2	9.9	37.8	29.0	19.1	4.2	9.9	66.8
	협회/단체	2.6	6.7	14.9	37.1	25.3	13.4	9.3	14.9	62.4
규모	5명 미만	0.4	1.7	9.7	47.6	21.0	19.6	2.2	9.7	68.5
	5~49명	0.5	2.5	13.6	47.9	25.3	10.2	3.0	13.6	73.2
	50~299명	0.3	3.4	16.2	52.6	19.3	8.3	3.7	16.2	71.9
	300명 이상	1.4	5.7	20.6	45.4	14.2	12.8	7.1	20.6	59.6

3)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

- 대규모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의 변화에 대해 공공부문은 '커졌다'¹⁴⁾가 86.3%, '커지지 않았다'¹⁵⁾가 10.9%로 나타났으며, 사업체는 '커졌다'가 69.8%, '커지지 않았다'가 23.6%로 나타났다.

<그림-82>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



- 공공부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의 비율은 '헌법기관'(100.0%), '중앙행정기관'(97.9%)이 다른 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기관'(87.9%)이 '교육기관'(84.7%)에 비해 '커졌다'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의 비율은 '금융/보험'(90.2%), '정보/통신'(84.5%)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경각심의 변화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4) '커졌다' : '매우 커졌다'+ '조금 커졌다' 비율임.

15) '커지지 않았다' : '별로 커지지 않았다'+ '전혀 커지지 않았다' 비율임.

<표-112>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공공부문

구 분		(1)	(2)	(3)	(4)	(5)	(1)+(2)	(3)+(4)
		매우 커졌다	조금 커졌다	별로 커지지 않았다	전혀 커지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커졌다	커지지 않았다
전 체		28.3	58.0	9.5	1.4	2.8	86.3	10.9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29.0	58.9	8.5	1.2	2.4	87.9	9.7
	헌법기관	25.0	75.0	0.0	0.0	0.0	100.0	0.0
	중앙행정기관	38.3	59.6	2.1	0.0	0.0	97.9	2.1
	광역시자체	52.9	35.3	5.9	0.0	5.9	88.2	5.9
	기초지자체	23.3	64.6	9.2	0.0	2.9	87.9	9.2
	공공기관	32.1	54.9	9.3	1.5	2.2	87.0	10.8
	지방공기업	27.8	59.7	8.2	2.0	2.3	87.5	10.2
	교육청	11.8	70.6	11.8	0.0	5.9	82.4	11.8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27.7	57.0	10.5	1.5	3.3	84.7	12.0
	대학교	39.8	52.7	3.8	1.6	2.2	92.5	5.4
	전문대학	21.5	63.8	11.5	0.8	2.3	85.4	12.3
	고등학교	25.9	56.3	6.9	0.6	10.3	82.2	7.5
	중학교	39.9	44.8	9.4	3.0	3.0	84.7	12.3
	초등학교	17.1	64.4	16.2	1.5	0.9	81.5	17.6

개인정보처리자

<표-113>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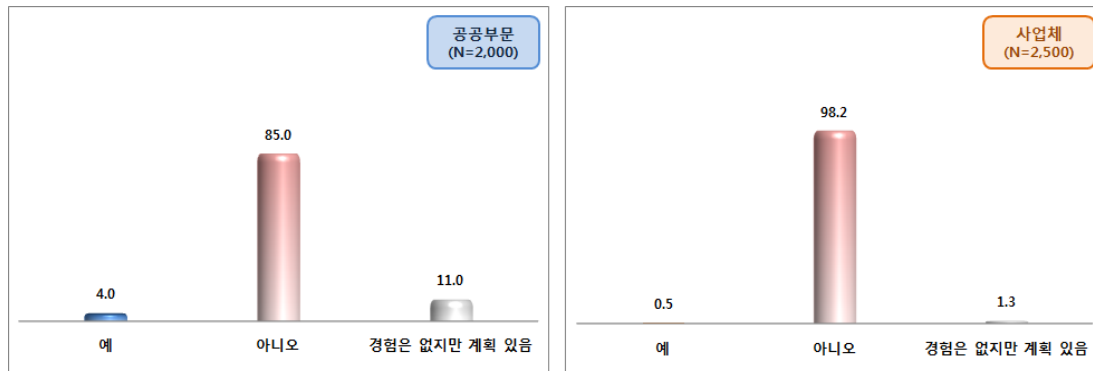
구 분		(1)	(2)	(3)	(4)	(5)	(1)+(2)	(3)+(4)
		매우 커졌다	조금 커졌다	별로 커지지 않았다	전혀 커지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커졌다	커지지 않았다
전 체		17.4	52.4	19.8	3.8	6.6	69.8	23.6
업종	제조	8.5	48.5	30.1	4.7	8.2	57.0	34.8
	전기/가스	7.2	39.8	45.8	2.4	4.8	47.0	48.2
	유통/물류/도소매	20.1	56.6	9.5	4.8	9.0	76.7	14.3
	숙박/음식	16.5	46.4	29.1	2.6	5.4	63.0	31.6
	정보/통신	20.9	63.5	8.1	4.7	2.7	84.5	12.8
	금융/보험	24.4	65.8	3.6	2.6	3.6	90.2	6.2
	부동산/임대	23.7	52.6	15.4	2.2	6.1	76.3	17.5
	사교육	15.4	56.4	17.9	3.4	6.8	71.8	21.4
	보건/복지	18.3	50.0	22.1	4.2	5.3	68.3	26.3
	협회/단체	18.0	42.8	25.3	5.7	8.2	60.8	30.9
규모	5명 미만	15.7	51.4	21.3	3.1	8.5	67.1	24.4
	5~49명	19.6	51.2	19.4	5.1	4.7	70.8	24.5
	50~299명	19.9	53.5	17.4	4.3	4.9	73.4	21.7
	300명 이상	13.5	65.2	14.9	1.4	5.0	78.7	16.3

11. 빅데이터 분석

1)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경험

- 빅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경험에 대해 공공부문 4.0%, 사업체 0.5%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부문의 11.0%는 향후 활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83>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경험(%)



<표-114>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경험(%)-공공부문

구 분		예	아니오	경험은 없지만 계획 있음
전 체		4.0	85.0	11.0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계	7.5	75.9	16.5
	헌법기관	0.0	100.0	0.0
	중앙행정기관	21.3	63.8	14.9
	광역시자체	29.4	17.6	52.9
	기초지자체	8.7	75.2	16.0
	공공기관	5.9	75.0	19.1
	지방공기업	6.0	81.5	12.5
	교육청	0.0	70.6	29.4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계	0.7	93.6	5.7
	대학교	1.6	83.3	15.1
	전문대학	0.8	90.8	8.5
	고등학교	0.6	93.7	5.7
	중학교	0.0	98.0	2.0
	초등학교	0.6	97.6	1.8

개인정보처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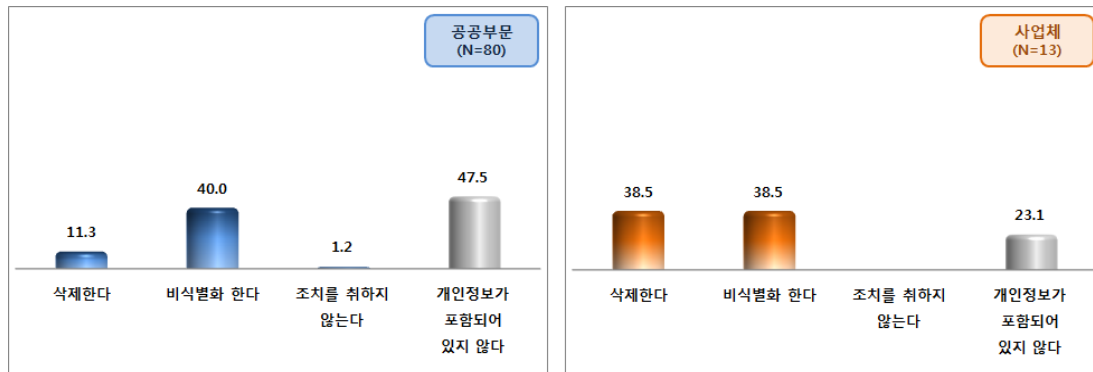
<표-115>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경험(%)-사업체

구 분		예	아니오	경험은 없지만 계획 있음
전 체		0.5	98.2	1.3
업종	제조	0.3	98.1	1.6
	전기/가스	0.0	100.0	0.0
	유통/물류/도소매	0.2	98.4	1.4
	숙박/음식	0.0	96.6	3.4
	정보/통신	1.4	98.0	0.7
	금융/보험	1.6	96.4	2.1
	부동산/임대	0.0	99.6	0.4
	사교육	0.4	99.1	0.4
	보건/복지	1.1	98.5	0.4
	협회/단체	1.0	99.0	0.0
규모	5명 미만	0.3	98.3	1.3
	5~49명	0.4	98.3	1.3
	50~299명	0.6	98.8	0.6
	300명 이상	2.8	95.0	2.1

2)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처리

- 분석 및 활용한 빅데이터에 개인정보의 포함 여부에 대해, 공공부문 47.5%, 사업체 23.1%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삭제하거나 비식별화 하는 것은 공공기관 51.3%, 사업체 77.0%가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84>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처리(%)



<표-116>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처리(%)-공공부문

구 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식별화 한다	삭제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전 체		47.5	40.0	11.3	1.2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개	49.3	42.5	6.8	1.4
	헌법기관	-	-	-	-
	중앙행정기관	50.0	50.0	0.0	0.0
	광역시자체	40.0	60.0	0.0	0.0
	기초지자체	44.4	44.4	5.6	5.6
	공공기관	57.9	42.1	0.0	0.0
	지방공기업	47.6	33.3	19.0	0.0
	교육청	-	-	-	-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개	28.6	14.3	57.1	0.0
	대학교	66.7	0.0	33.3	0.0
	전문대학	0.0	0.0	100.0	0.0
	고등학교	0.0	100.0	0.0	0.0
	중학교	-	-	-	-
	초등학교	0.0	0.0	100.0	0.0

<표-117>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처리(%)-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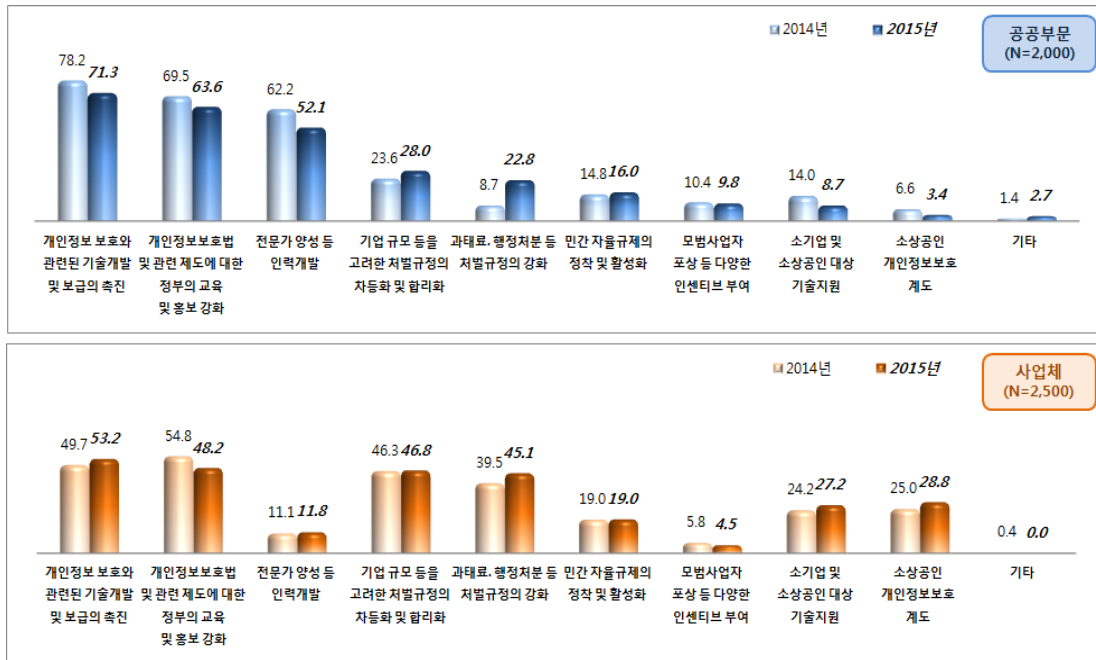
구 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식별화 한다	삭제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전 체		23.1	38.5	38.5	-
업종	제조	0.0	100.0	0.0	-
	전기/가스	-	-	-	-
	유통/물류/도소매	0.0	100.0	0.0	-
	숙박/음식	-	-	-	-
	정보/통신	0.0	0.0	100.0	-
	금융/보험	66.7	0.0	33.3	-
	부동산/임대	-	-	-	-
	사교육	100.0	0.0	0.0	-
	보건/복지	0.0	66.7	33.3	-
	협회/단체	0.0	50.0	50.0	-
규모	5명 미만	0.0	50.0	50.0	-
	5~49명	0.0	33.3	66.7	-
	50~299명	0.0	100.0	0.0	-
	300명 이상	75.0	0.0	25.0	-

12. 정책 제언

1)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부정책

-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부정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이 공공부문(71.3%)과 사업체(53.2%)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림-85>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정책(%)



- 공공부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71.3%),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의 교육 및 홍보 강화’(63.6%), ‘전문가 양성 등 인력개발’(52.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사업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53.2%),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의 교육 및 홍보 강화’(48.2%),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한 처벌규정의 차등화 및 합리화’(46.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118>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정책(1+2+3순위)(%)-공공부문

구 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의 교육 및 홍보강화	전문가 등 양성 인력개발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한 처벌 규정의 차등화 및 합리화	과태료, 행정처분 등 처벌 규정의 강화	민간 자율규제 의 정착 및 활성화	모범 사업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기술지원	소상공인 개인정보 보호 제도	기타
전 체		71.3	63.6	52.1	28.0	22.8	16.0	9.8	8.7	3.4	2.7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개	69.4	66.6	55.9	28.1	15.9	16.3	12.0	8.5	3.1	3.5
	헌법기관	100.0	50.0	75.0	25.0	0.0	0.0	0.0	0.0	0.0	0.0
	중앙행정기관	63.8	59.6	59.6	19.1	12.8	21.3	8.5	8.5	6.4	4.3
	광역지자체	76.5	70.6	70.6	5.9	11.8	5.9	0.0	17.6	0.0	5.9
	기초지자체	71.8	66.0	53.9	18.4	17.0	21.4	10.7	12.6	1.9	3.9
	공공기관	63.6	64.5	58.3	37.7	14.5	13.0	14.2	9.6	1.2	4.9
	지방공기업	73.6	70.7	53.4	27.8	17.0	16.8	12.2	5.1	5.4	1.4
	교육청	64.7	47.1	58.8	17.6	23.5	11.8	5.9	0.0	0.0	11.8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개	73.0	60.7	48.4	27.8	29.2	15.6	7.7	8.8	3.7	1.8
	대학교	74.7	56.5	41.4	26.9	26.9	21.5	8.1	6.5	0.0	5.4
	전문대학	76.2	42.3	45.4	43.1	19.2	19.2	9.2	8.5	3.8	2.3
	고등학교	85.6	78.2	62.6	15.5	7.5	14.4	10.3	4.0	1.1	2.3
	중학교	73.4	71.4	51.7	19.7	41.4	10.3	3.0	8.4	4.9	0.5
	초등학교	64.1	54.7	44.1	33.5	38.2	14.7	8.5	12.9	6.2	0.3

<표-119>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정책(1+2+3순위)(%)-사업체

구 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의 교육 및 홍보강화	전문가 등 양성 개발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한 처벌 규정의 차등화 및 합리화	과태료, 행정처분 등 처벌 규정의 강화	민간 자율규제 의 정착 및 활성화	모범 사업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기술지원	소상공인 개인정보 보호 제도	기타
전 체		53.2	48.2	11.8	46.8	45.1	19.0	4.5	27.2	28.8	-
업종	제조	56.7	35.6	3.0	39.5	54.8	20.0	4.7	38.6	41.6	-
	전기/가스	71.1	16.9	8.4	36.1	67.5	22.9	0.0	18.1	33.7	-
	유통/물류/도소매	43.2	53.6	9.7	57.5	52.0	17.4	6.3	21.5	34.2	-
	숙박/음식	51.3	40.5	3.4	43.0	45.6	13.4	2.0	29.1	41.9	-
	정보/통신	52.7	65.5	14.2	48.6	23.0	27.0	4.7	44.6	12.2	-
	금융/보험	62.7	68.9	27.5	50.3	36.8	17.6	3.6	6.2	11.9	-
	부동산/임대	58.3	44.7	5.7	52.2	36.0	19.3	5.7	42.1	20.2	-
	사교육	43.6	26.5	13.7	54.3	62.0	14.5	3.8	20.5	19.7	-
	보건/복지	59.5	65.3	25.6	36.6	25.2	32.1	5.7	19.8	22.5	-
	협회/단체	53.6	59.8	19.1	41.2	43.3	12.4	5.2	26.8	25.3	-
규모	5명 미만	45.9	47.6	7.2	48.6	50.1	15.6	3.7	28.7	33.5	-
	5~49명	56.0	46.2	12.6	45.6	43.6	21.1	3.8	27.9	30.1	-
	50~299명	69.1	51.7	21.1	42.5	35.5	26.0	7.0	22.0	17.1	-
	300명 이상	63.1	56.0	25.5	48.9	33.3	20.6	9.9	22.0	7.8	-

<표-120>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정책(1순위)(%) - 공공부문

구 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의 교육 및 홍보강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	전문가 등 양성 개발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한 처벌 규정의 차등화 및 합리화	민간 자율규제 의 정착 및 활성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기술지원	과태료, 행정처분 등 처벌 규정의 강화	모범 사업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소상공인 개인정보 보호 제도	기타
전 체		28.0	23.1	18.7	10.8	5.6	4.4	4.1	3.3	1.7	0.3
공공기관	공공기관소개	26.9	20.7	22.4	10.2	6.5	3.8	3.9	3.9	1.3	0.5
	헌법기관	25.0	25.0	50.0	0.0	0.0	0.0	0.0	0.0	0.0	0.0
	중앙행정기관	26.7	24.4	20.0	4.4	6.7	6.7	8.9	2.2	0.0	0.0
	광역시자체	41.2	5.9	35.3	0.0	0.0	11.8	0.0	0.0	0.0	5.9
	기초지자체	22.9	23.9	22.4	9.3	7.8	6.3	2.4	4.4	0.5	0.0
	공공기관	26.6	18.8	24.4	11.6	5.9	3.8	3.1	4.4	0.6	0.9
	지방공기업	28.9	21.2	19.8	10.6	6.6	1.7	4.6	3.7	2.6	0.3
	교육청	26.7	13.3	26.7	13.3	6.7	0.0	13.3	0.0	0.0	0.0
교육기관	교육기관소개	29.0	25.4	15.2	11.4	4.7	5.0	4.3	2.8	2.2	0.0
	대학교	25.4	26.6	19.2	12.4	4.0	4.0	6.8	1.7	0.0	0.0
	전문대학	15.4	32.5	14.6	16.3	7.3	4.1	3.3	4.9	1.6	0.0
	고등학교	38.2	25.4	20.2	5.2	4.6	2.9	0.0	2.9	0.6	0.0
	중학교	37.6	27.2	8.9	6.9	4.0	5.0	5.4	1.5	3.5	0.0
	초등학교	26.0	21.0	14.5	14.8	4.7	7.1	5.0	3.3	3.6	0.0

<표-121>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정책(1순위)(%) - 사업체

구 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의 교육 및 홍보강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	전문가 등 양성 개발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한 처벌 규정의 차등화 및 합리화	민간 자율규제 의 정착 및 활성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기술지원	과태료, 행정처분 등 처벌 규정의 강화	모범 사업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소상공인 개인정보 보호 제도	기타
전 체		12.3	22.2	2.0	18.4	3.1	5.0	30.0	0.4	6.6	-
업종	제조	4.7	24.4	0.5	14.0	1.9	8.5	34.5	0.3	11.2	-
	전기/가스	3.6	38.6	3.6	3.6	2.4	7.2	31.3	0.0	9.6	-
	유통/물류/도소매	10.6	16.5	1.8	22.4	2.5	1.8	36.4	0.9	7.0	-
	숙박/음식	15.7	18.8	0.9	16.5	2.3	5.4	34.5	0.0	6.0	-
	정보/통신	12.8	27.7	1.4	32.4	1.4	6.8	15.5	0.0	2.0	-
	금융/보험	14.5	33.2	3.1	20.2	2.1	2.6	21.2	0.0	3.1	-
	부동산/임대	6.6	22.8	0.4	31.1	3.9	6.6	25.9	0.0	2.6	-
	사교육	7.3	15.4	4.3	9.8	3.4	3.4	52.6	1.3	2.6	-
	보건/복지	26.0	21.8	3.4	14.5	8.8	5.0	11.1	0.4	9.2	-
	협회/단체	19.6	23.7	2.6	16.0	1.5	5.2	20.6	0.5	10.3	-
규모	5명 미만	11.9	15.7	1.1	17.6	2.7	5.7	36.1	0.3	8.9	-
	5~49명	11.3	25.0	2.3	20.0	3.3	4.0	28.0	0.2	5.9	-
	50~299명	14.1	34.6	2.4	16.5	4.6	4.3	19.9	0.9	2.8	-
	300명 이상	17.0	33.3	6.4	21.3	2.1	6.4	12.1	0.7	0.7	-

2) 개인정보보호법 및 제도에 대한 의견 및 개선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제도에 대한 의견 및 개선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제도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가 공공부문 30.0%, 사업체 26.7%로 높게 나타났다.

<표-122> 개인정보보호법 및 제도에 대한 의견 및 개선사항(%)

순위	공공부문 (N=981)	비율	순위	사업체 (N=52)	비율
1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30.0	1	개인정보 관련 홍보 강화	26.7
2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16.2	2	주민등록번호 요구 불편	10.0
3	관련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움	11.0	3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 지원	8.3
4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해자료 배포	6.4	4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 교육	6.7
5	정부의 예산 지원	5.8	5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 강화	6.7
6	현실적인 법 적용 및 개선	5.5	6	개인정보 처리절차 복잡	6.7
7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5	7	기술개발 자금 지원	6.7
8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담조직 운영	4.3	8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해 자료	3.3
9	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3.4	9	대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3.3
10	제도 및 이용절차의 개선	2.7	10	관련법의 내용이 어려움	3.3
11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1.9	11	처리절차 및 서류 간소화	3.3
12	기관 특성에 따라 차등 법 적용	1.8	12	관련법과 현실 업무시 차이	3.3
13	관련자 및 국민 의식개선	1.5	13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1.7
14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및 활성화	1.1	14	동의서 내용 축소	1.7
15	정부의 기술 지원	0.9	15	현실적인 관리 방안 마련	1.7
16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	0.7	16	암호화 프로그램 공개 및 배포	1.7
17	정부 및 담당자의 관리감독	0.5	17	업체 대표자의 개인정보 교육	1.7
18	자율적 관리 필요	0.3	18	기타	3.2
19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0.1			
20	기타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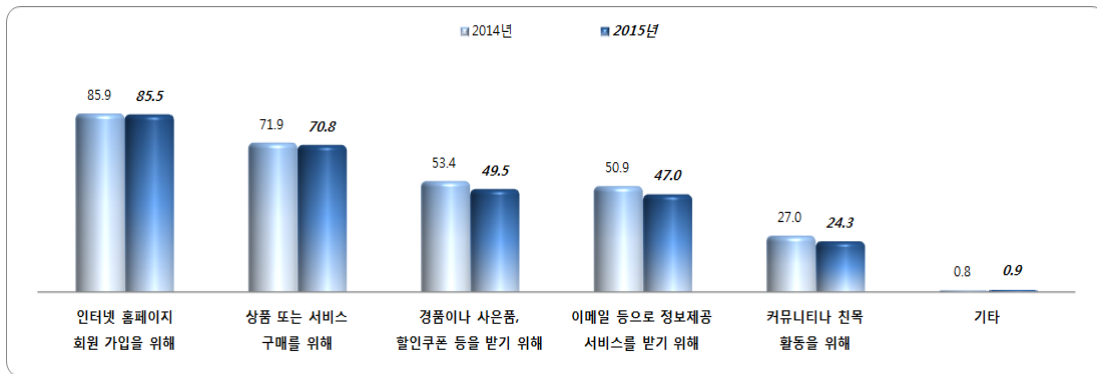
제2장 정보주체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 제공 현황

- 개인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위해'가 8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해'(70.8%), '경품이나 사은품, 할인쿠폰 등을 받기 위해'(49.5%), '이메일 등으로 정보제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47.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86> 개인정보 제공 현황(%)



-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는 '20대'(74.9%), 경품이나 사은품, 할인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40대'(55.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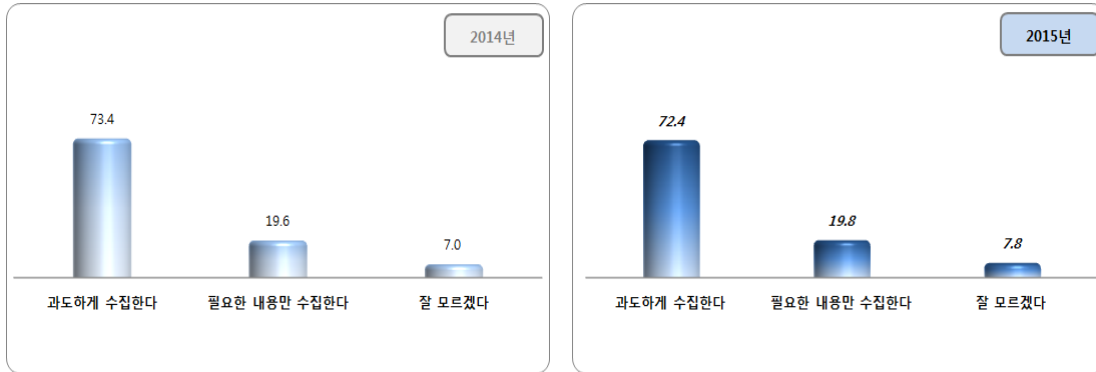
<표-123> 개인정보 제공 현황(%)·성·연령별

구 분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해	경품이나 사은품, 할인쿠폰 등을 받기 위해	이메일 등으로 정보제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	커뮤니티나 친목 활동을 위해	기타
전 체		85.5	70.8	49.5	47.0	24.3	0.9
성별	남성	85.4	70.4	49.2	48.4	28.3	1.0
	여성	85.6	71.3	49.8	45.5	20.1	0.9
연령	10대	88.2	72.3	45.4	51.6	24.8	1.5
	20대	85.8	74.9	44.2	38.9	25.2	1.4
	30대	88.0	73.1	50.6	44.1	23.2	0.2
	40대	86.5	73.1	55.7	40.1	23.5	0.5
	50대	82.8	68.7	51.4	52.5	26.2	1.1
	60대 이상	81.6	62.9	47.4	56.0	23.5	1.1

2)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에 대해 72.4%가 ‘과도하게 수집 한다’로 응답한 반면, ‘필요한 내용만 수집한다’는 19.8%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림-87>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에 대해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40대’(80.0%)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10대’는 ‘필요한 내용만 수집한다’(27.1%)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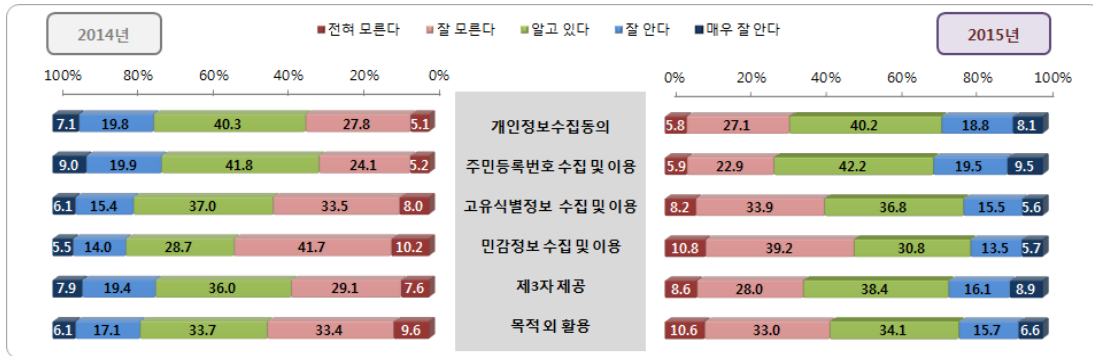
<표-124>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성·연령별

구 분		과도하게 수집한다	필요한 내용만 수집한다	잘 모르겠다
전 체		72.4	19.8	7.8
성별	남성	73.4	19.2	7.5
	여성	71.5	20.4	8.1
연령	10대	60.6	27.1	12.3
	20대	73.0	18.9	8.1
	30대	69.2	23.8	7.0
	40대	80.0	12.9	7.1
	50대	76.6	17.2	6.2
	60대 이상	72.1	21.0	6.9

3)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인지

-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기준에 대한 인지율¹⁶⁾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인지율이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50.0%)은 인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88>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인지 여부(%)



- 개인정보 처리기준 인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40대 이상'에서의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이하'에서의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목적 외 활용'(56.4%)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50.0%)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125>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인지 여부(%)·성·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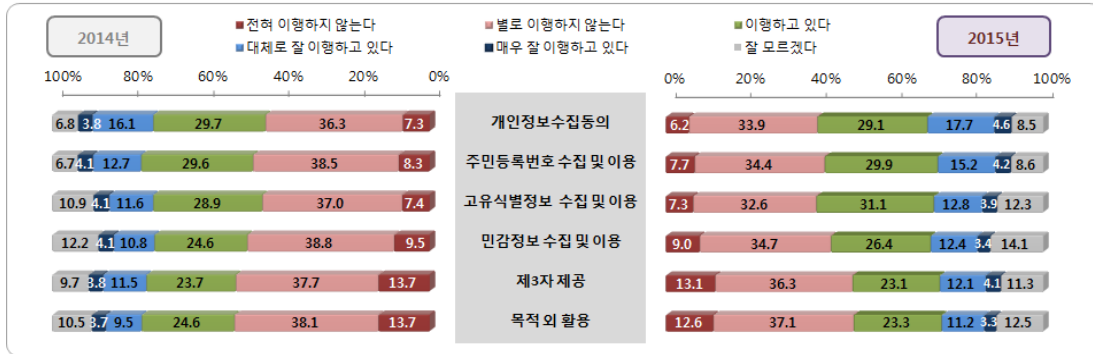
구 분		개인정보 수집동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활용
전 체		67.1	71.2	57.9	50.0	63.4	56.4
성별	남성	69.1	74.3	61.3	54.4	66.0	60.1
	여성	64.9	67.9	54.2	45.3	60.8	52.5
연령	10대	58.6	61.3	45.7	38.5	51.4	44.3
	20대	63.5	69.8	57.8	49.6	63.0	58.0
	30대	59.0	66.5	51.9	45.6	58.2	50.9
	40대	71.7	74.2	62.6	50.1	69.9	60.4
	50대	72.9	76.9	65.6	58.4	67.2	61.1
	60대 이상	74.3	76.2	60.7	55.6	68.0	61.4

16) 인지율 : '알고 있다'+ '잘 안다'+ '매우 잘 안다'

4)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이행

-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이행률¹⁷⁾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동의’ 처리기준 이행이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49.3%),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4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89>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이행 여부(%)



-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이행에 대해 ‘여성’보다 ‘남성’이 생각하는 이행정도가 높게 나타나며,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생각하는 이행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126>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이행 여부(%)·성·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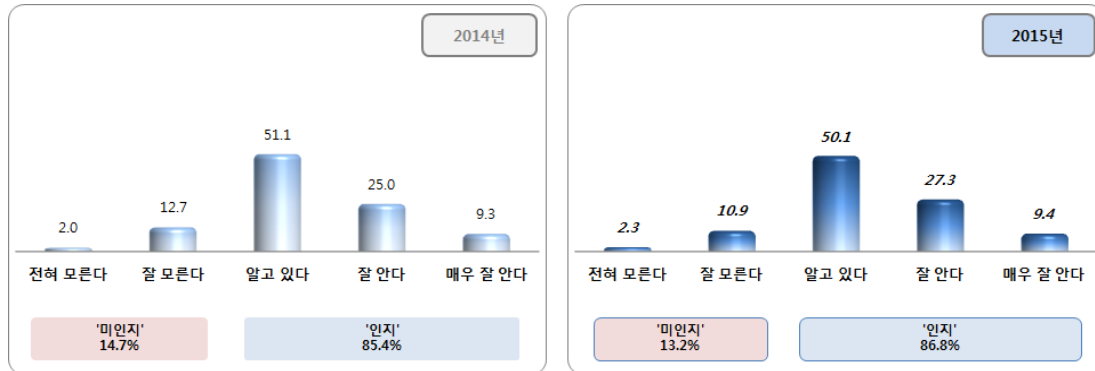
구 분		개인정보 수집동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활용
전 체		51.4	49.3	47.8	42.2	39.3	37.8
성별	남성	53.5	53.3	52.3	45.4	43.1	41.2
	여성	49.1	45.0	43.2	38.8	35.3	34.2
연령	10대	50.2	47.3	45.5	42.8	42.9	40.6
	20대	49.4	46.9	47.8	40.3	37.6	36.4
	30대	51.1	49.1	48.2	40.5	37.7	35.0
	40대	52.6	50.6	48.3	42.3	40.4	40.0
	50대	52.7	51.4	51.6	47.3	39.7	39.4
	60대 이상	51.5	49.3	45.2	39.9	37.7	35.4

17) 이행률 : ‘이행하고 있다’+‘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다’+‘매우 잘 이행하고 있다’

5)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인지

- 사업자(공공기관)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하는 사실에 대한 인지율¹⁸⁾은 86.8%로 나타났다.

<그림-90>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인지 여부(%)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인지율은 '여성'(85.2%)보다 '남성'(88.4%)이, 연령별로는 '30대'(89.5%)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127>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인지 여부(%)·성·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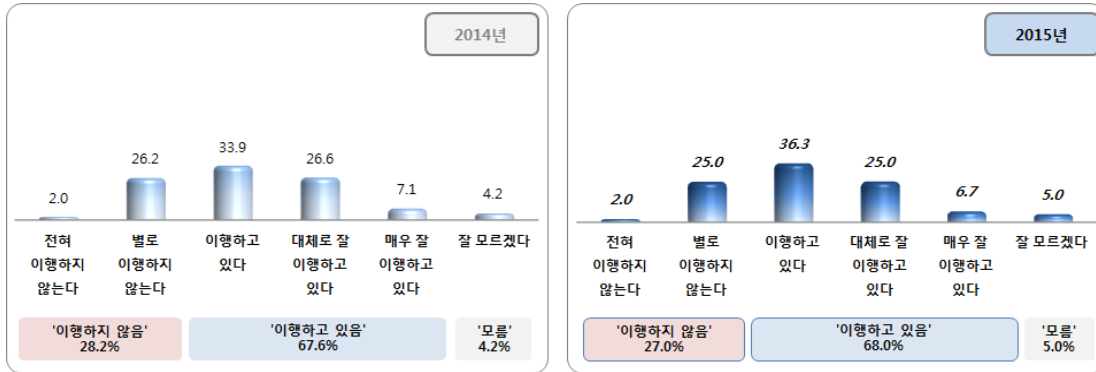
구 분		(1)	(2)	(3)	(4)	(5)	(1)+(2)	(3)+(4)+(5)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알고 있다	잘 안다	매우 잘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전 체		2.3	10.9	50.1	27.3	9.4	13.2	86.8
성별	남성	1.6	10.0	48.4	29.6	10.5	11.6	88.4
	여성	3.1	11.7	52.0	24.8	8.3	14.8	85.2
연령	10대	3.9	10.7	47.4	29.1	9.0	14.5	85.5
	20대	3.3	9.6	35.7	35.8	15.5	12.9	87.1
	30대	2.4	8.1	51.4	28.9	9.1	10.5	89.5
	40대	1.1	12.3	54.6	23.7	8.3	13.4	86.6
	50대	0.5	13.8	52.0	25.2	8.4	14.4	85.6
	60대 이상	3.4	10.3	57.1	22.4	6.8	13.7	86.3

18) 인지율 : '알고 있다'+ '잘 안다'+ '매우 잘 안다'

6) 사업자(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이행

- 사업자(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이행에 대해 ‘이행함’¹⁹⁾이 68.0%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대비 0.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91> 사업자(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이행 여부(%)



- 사업자(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이행에 대해 성별로는 ‘여성’(66.4%)보다 ‘남성’(69.7%), 연령별로는 ‘10대’(71.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128> 사업자(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이행 여부(%)-성·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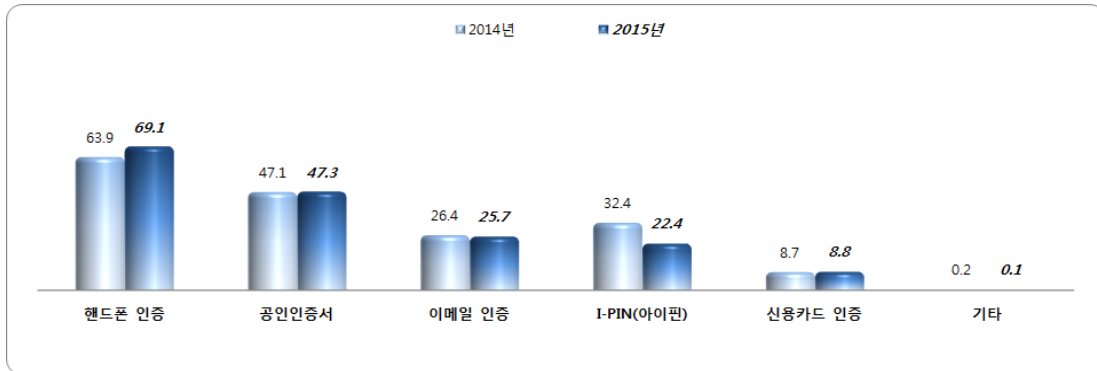
구 분		(1)	(2)	(3)	(4)	(5)	(6)	(1)+(2)	(3)+(4)+(5)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	별로 이행하지 않는다	이행하고 있다	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다	매우 잘 이행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이행하지 않음	이행함
전 체		2.0	25.0	36.3	25.0	6.7	5.0	27.0	68.1
성별	남성	1.2	24.2	35.4	27.3	6.9	4.8	25.5	69.7
	여성	2.9	25.7	37.2	22.6	6.5	5.1	28.6	66.4
연령	10대	2.2	18.4	36.6	29.0	6.2	7.5	20.6	71.9
	20대	1.8	21.7	30.2	30.2	9.1	7.1	23.5	69.4
	30대	1.7	24.9	39.5	21.4	8.1	4.4	26.5	69.1
	40대	2.6	25.6	40.9	21.5	5.2	4.3	28.2	67.6
	50대	1.3	29.5	31.1	27.0	6.9	4.3	30.7	65.0
	60대 이상	2.6	28.0	38.4	23.0	5.0	3.0	30.6	66.4

19) ‘이행함’ : ‘이행하고 있다’+‘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다’+‘매우 잘 이행하고 있다’

7)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편리한 매체

- 사업자(공공기관)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체수단 제공 방법 중 편리한 매체에 대해 '핸드폰 인증'이 6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인인증서'(47.3%), '이메일 인증'(2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92>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편리한 매체(%)



- 편리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핸드폰 인증'을 선호하나, '30대'는 '공인인증서'(53.0%)를, '10대'와 '20대'는 '이메일'(각각 31.2%, 30.9%)을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29>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편리한 매체(%)-성·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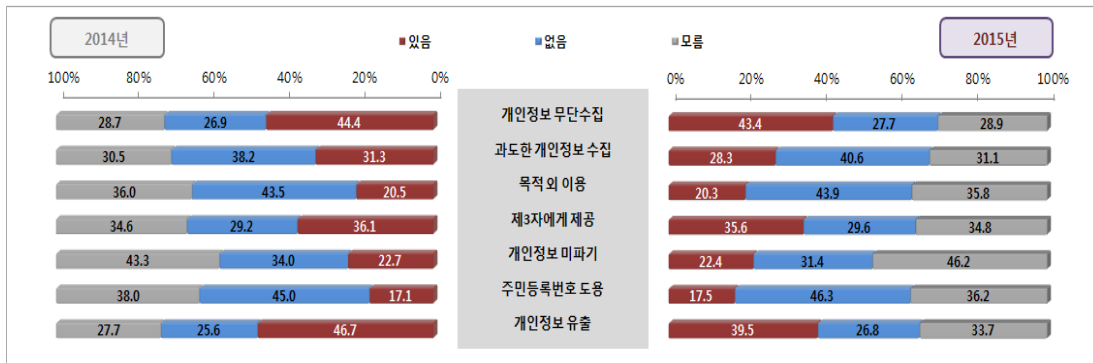
구 분		핸드폰 인증	공인인증서	이메일	I-PIN (아이핀)	신용카드 인증	기타
전 체		69.1	47.3	25.7	22.4	8.8	0.1
성별	남성	69.3	50.6	25.8	26.4	8.5	0.1
	여성	69.0	43.9	25.7	18.2	9.1	0.2
연령	10대	72.1	41.2	31.2	35.6	3.6	-
	20대	74.7	38.3	30.9	23.8	8.8	0.2
	30대	68.4	53.0	19.6	17.3	8.5	-
	40대	68.2	49.9	19.9	18.9	10.3	-
	50대	66.6	50.9	29.3	20.6	10.6	0.2
	60대 이상	66.0	48.1	26.0	21.3	9.8	0.3

2. 개인정보 침해 및 피해구제

1)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경험

-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경험에 대해 ‘개인정보 무단수집’ 경험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정보유출’(39.5%), ‘제3자에게 제공’(35.6%),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28.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93>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경험(%)



-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경험의 경우, ‘개인정보 무단수집’은 ‘30대’(48.8%), ‘개인정보 유출’은 ‘20대’(48.0%), ‘제3자에게 제공’은 ‘40대’(42.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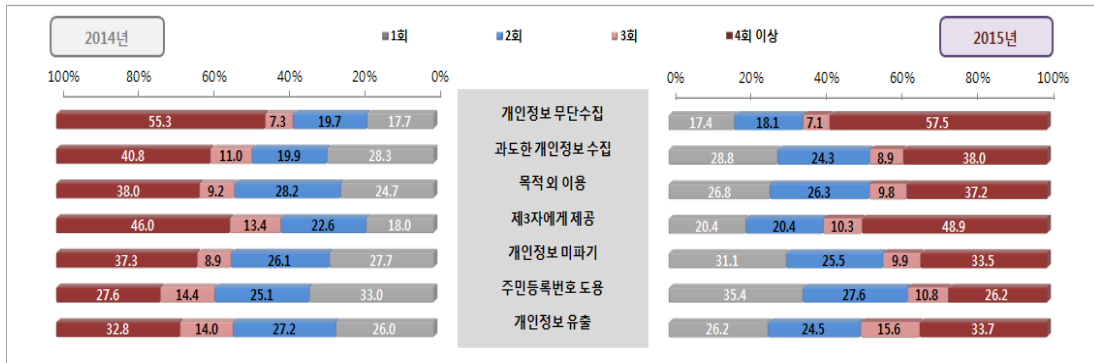
<표-130>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경험(‘있음’)(%)·성·연령별

구 분		개인정보 무단수집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 미파기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 유출
전 체		43.4	28.3	20.3	35.6	22.4	17.5	39.5
성별	남성	41.3	24.7	19.2	33.7	20.2	17.0	36.5
	여성	45.6	32.0	21.5	37.7	24.7	18.1	42.5
연령	10대	36.9	21.0	12.0	19.4	11.2	9.7	39.9
	20대	46.0	31.5	18.5	33.4	23.3	21.2	48.0
	30대	48.8	32.4	25.8	41.5	26.2	22.1	39.6
	40대	45.6	31.8	22.8	42.6	25.0	20.7	37.0
	50대	38.9	24.7	19.0	34.5	21.8	14.5	34.5
	60대 이상	42.9	26.4	21.4	38.0	24.5	15.1	39.1

2)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횟수

-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횟수에 대해 '4회 이상'의 비율은 '개인정보 무단수집'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3자에게 제공'(48.9%),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38.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두 전년대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94>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횟수(%)



- 1년간 개인정보 침해 유형(4회 이상)으로 '개인정보 무단수집'은 '10대'(63.9%), '제3자에게 제공'은 '30대'(57.5%),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30대'(44.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131>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횟수('4회 이상')(%)·성·연령별

구 분		개인정보 무단수집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 미파기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 유출
전 체		57.5	38.0	37.2	48.9	33.5	26.2	33.7
성별	남성	58.5	37.0	39.6	51.2	35.7	27.4	35.8
	여성	56.5	38.9	34.9	46.8	31.6	25.0	31.8
연령	10대	63.9	30.1	37.3	40.3	32.5	31.5	40.5
	20대	60.3	43.6	42.9	52.0	48.6	31.6	37.9
	30대	58.8	44.9	39.6	57.5	41.0	23.2	36.8
	40대	61.3	31.3	42.1	44.9	24.4	22.9	29.1
	50대	47.9	33.6	28.3	50.3	29.8	26.2	34.2
	60대 이상	52.8	41.9	31.4	43.8	26.3	26.2	24.3

3) 개인정보 침해 시 유출 관련 통지 경험

- 개인정보 침해 경험 시 유출과 관련하여 사업자(공공기관)의 유출통지를 받은 경험에 대해 59.0%가 통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년(59.7%)대비 0.7%p 낮게 나타났다.

<그림-95>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관련 통지 경험(%)



- 연령별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통지 경험은 상대적으로 '40대'가 70.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0대'가 46.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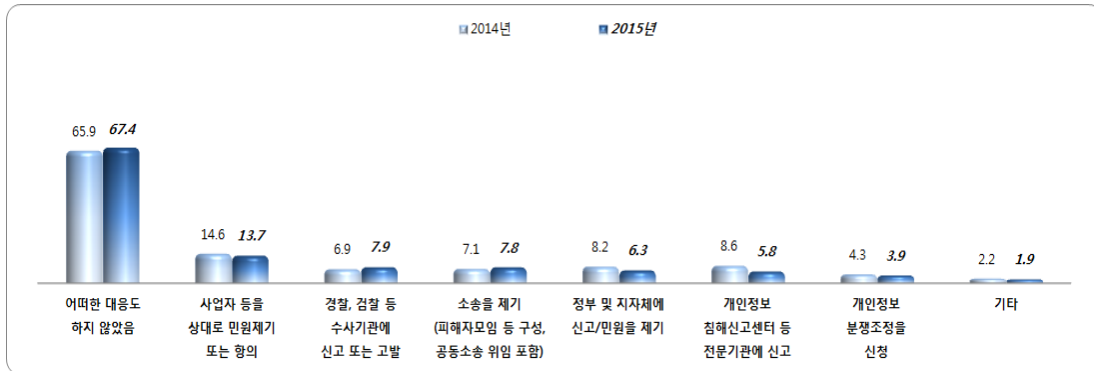
<표-132>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관련 통지 경험(%)·성·연령별

구 분		예	아니오
전 체		59.0	41.0
성별	남성	56.6	43.4
	여성	61.1	38.9
연령	10대	46.6	53.4
	20대	53.0	47.0
	30대	55.3	44.7
	40대	70.9	29.1
	50대	62.2	37.8
	60대 이상	64.1	35.9

4)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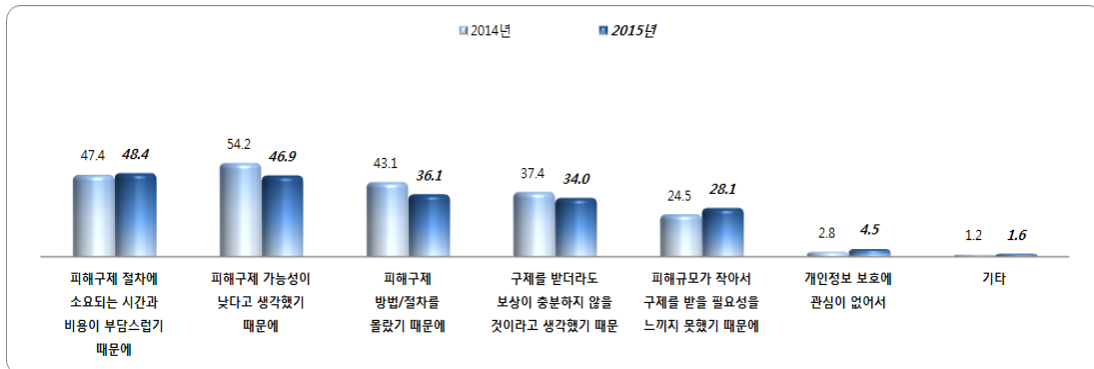
- 본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이후 피해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음'이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업자 등을 상대로 민원제기 또는 항의'(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96>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구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가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피해구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46.9%), '피해구제 방법/절차를 몰랐기 때문에'(36.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97>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30~40대'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0~20대'의 경우 '피해구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133>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성·연령별

구 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사업자 등을 상대로 민원제기 또는 항의를 하였다	경찰, 등 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하거나 또는 고발 하였다	소송을 제기하였다(피해자 모임 등을 구성, 공동소송 위임 포함)	정부 및 지자체에 신고 /민원을 제기 하였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 (☎118) 등 전문 기관에 신고 하였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을 신청 하였다	기타
전 체		67.4	13.7	7.9	7.8	6.3	5.8	3.9	1.9
성별	남성	63.8	17.2	8.1	10.1	7.1	6.5	4.6	1.1
	여성	70.8	10.3	7.7	5.7	5.5	5.1	3.2	2.6
연령	10대	69.4	10.5	10.9	3.4	9.8	6.9	4.7	3.8
	20대	70.7	11.5	8.4	6.4	6.8	11.0	4.7	3.3
	30대	67.5	14.5	8.5	9.3	6.0	2.6	3.7	2.1
	40대	68.3	13.3	6.1	9.0	6.4	5.4	2.5	0.2
	50대	67.3	13.0	8.0	10.3	5.3	4.9	3.2	-
	60대 이상	61.5	18.5	6.4	7.2	4.3	4.7	4.7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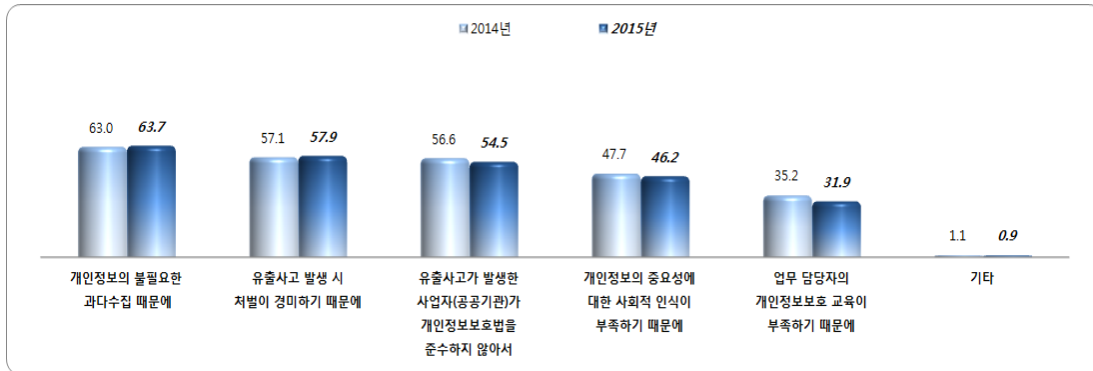
<표-134>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성·연령별

구 분		피해구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피해구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해구제 방법/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구제를 받더라도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피해규모가 작아서 구제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없어서	기타
전 체		48.4	46.9	36.1	34.0	28.1	4.5	1.6
성별	남성	47.7	48.3	36.7	33.7	27.7	5.2	1.5
	여성	48.9	45.8	35.5	34.2	28.5	3.8	1.7
연령	10대	50.9	55.7	49.9	50.9	28.2	5.8	-
	20대	45.5	56.0	37.4	39.0	21.4	5.3	0.7
	30대	55.9	48.2	39.5	37.7	22.7	1.7	-
	40대	57.1	39.5	33.4	28.9	26.3	8.7	4.5
	50대	36.7	41.5	25.1	18.8	33.7	2.2	2.2
	60대 이상	41.5	43.4	34.2	32.4	38.8	2.4	1.4

5)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원인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원인에 대해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과다수집 때문에’가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57.9%),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자(공공기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아서’(54.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98>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원인(%)



- 연령대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원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과다수집 때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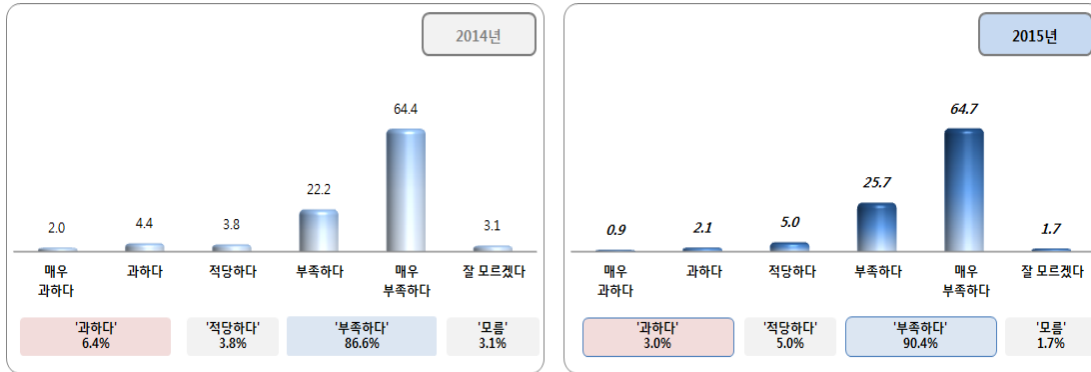
<표-135>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원인(%)·성·연령별

구 분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과다수집 때문에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자(공공기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타
전 체		63.7	57.9	54.5	46.2	31.9	0.9
성별	남성	63.3	57.6	57.6	45.6	33.3	1.2
	여성	64.1	58.2	51.2	46.8	30.4	0.7
연령	10대	65.8	57.7	49.4	45.7	31.7	0.5
	20대	67.2	65.2	57.6	53.7	37.9	1.3
	30대	66.9	55.2	49.3	42.2	29.8	1.3
	40대	59.7	57.2	57.6	48.6	32.3	0.9
	50대	60.5	54.3	56.9	47.5	29.9	1.3
	60대 이상	63.2	58.5	55.3	39.8	30.4	0.3

6)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현재 처벌 강도에 대해 90.4%가 '부족하다'²⁰⁾라고 응답하여 전년(86.6%) 대비 3.8%p 높게 나타났다.

<그림-99>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현재 처벌 강도에 대해 '부족하다'는 '20대 이상'의 모든 연령에서 9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과하다'²¹⁾는 '10~2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136>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성·연령별

구 분		(1)	(2)	(3)	(4)	(5)	(6)	(1)+(2)	(3)	(4)+(5)
		매우 과하다	과하다	적당하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잘 모르겠다	과하다	적당하다	부족하다
전 체		0.9	2.1	5.0	25.7	64.7	1.7	3.0	5.0	90.4
성별	남성	1.0	2.1	5.5	24.1	66.1	1.2	3.1	5.5	90.2
	여성	0.8	2.2	4.4	27.4	63.1	2.1	3.0	4.4	90.5
연령	10대	2.0	2.0	6.2	26.2	60.2	3.4	4.0	6.2	86.4
	20대	1.6	2.4	5.1	25.0	65.4	0.5	4.0	5.1	90.4
	30대	0.6	1.9	5.1	30.0	60.7	1.7	2.5	5.1	90.7
	40대	0.3	1.5	5.7	25.9	65.7	0.9	1.8	5.7	91.6
	50대	0.4	2.4	4.5	22.0	69.1	1.6	2.8	4.5	91.1
	60대 이상	0.8	2.8	3.2	24.8	66.1	2.3	3.6	3.2	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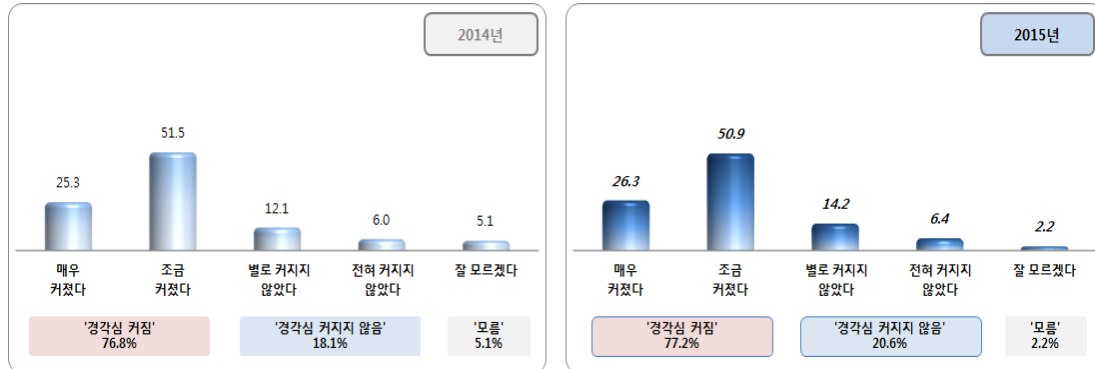
20) '부족하다' :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비율임.

21) '과하다' : '매우 과하다' + '과하다' 비율임.

7)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 변화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 변화에 대해 77.2%가 '커졌다'²²⁾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00>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 변화(%)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 변화에 대해서는 전 연령이 '커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이 80.7%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137>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 변화(%)·성·연령별

구 분		(1)	(2)	(3)	(4)	(5)	(1)+(2)	(3)+(4)
		매우 커졌다	조금 커졌다	별로 커지지 않았다	전혀 커지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커졌다	커지지 않았다
전 체		26.3	50.9	14.2	6.4	2.2	77.2	20.6
성별	남성	27.2	50.1	14.6	6.2	1.9	77.3	20.8
	여성	25.3	51.8	13.7	6.6	2.6	77.1	20.3
연령	10대	27.7	50.4	11.7	6.2	4.0	78.1	17.9
	20대	31.9	46.5	13.0	6.1	2.5	78.4	19.1
	30대	22.5	52.4	14.6	8.8	1.7	74.9	23.4
	40대	26.4	48.9	16.0	7.7	1.0	75.3	23.7
	50대	25.8	51.0	15.9	5.5	1.8	76.8	21.4
	60대 이상	24.5	56.2	12.9	3.8	2.6	80.7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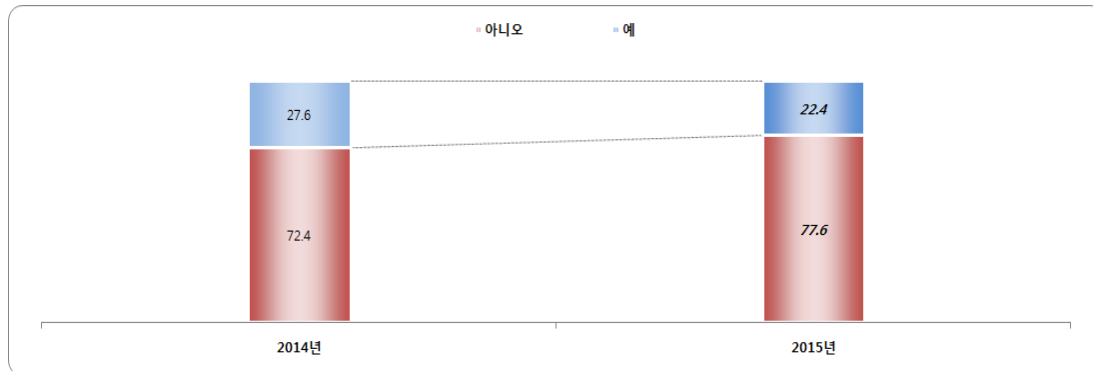
22) '커졌다' : '매우 커졌다'+'조금 커졌다' 비율임.

3. 정보주체 권리보장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경험

- 사업자(공공기관)에게 본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청한 경험에 대해 77.6%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0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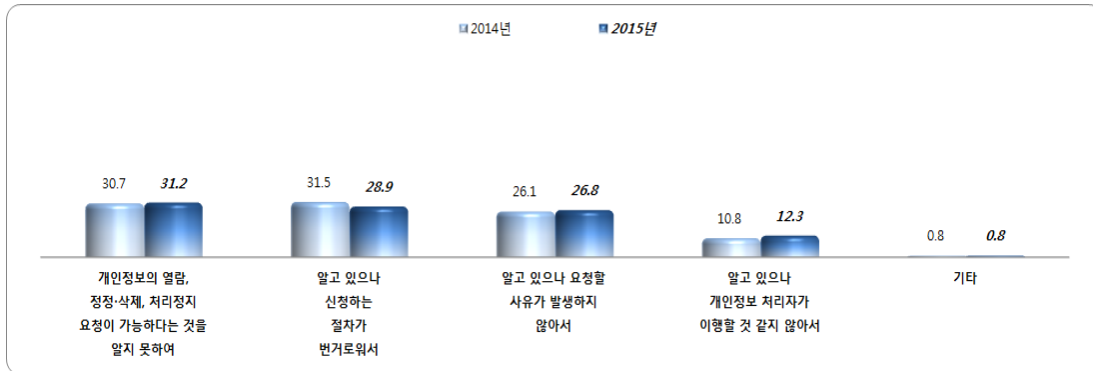
<표-138>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경험(%)-성·연령별

구 분		예	아니오
전 체		22.4	77.6
성별	남성	22.0	78.0
	여성	22.9	77.1
연령	10대	22.4	77.6
	20대	21.1	78.9
	30대	22.9	77.1
	40대	20.7	79.3
	50대	24.4	75.6
	60대 이상	23.2	76.8

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하지 않은 이유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31.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알고 있으나 신청하는 절차가 번거로워서’(28.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10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하지 않은 이유(%)



- 연령별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10대’~‘30대’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40대’는 ‘알고 있으나 신청하는 절차가 번거로워서’(33.7%), ‘50대’와 ‘60대 이상’은 ‘알고 있으나 요청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각각, 30.3%, 34.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139>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하지 않은 이유(%)·성·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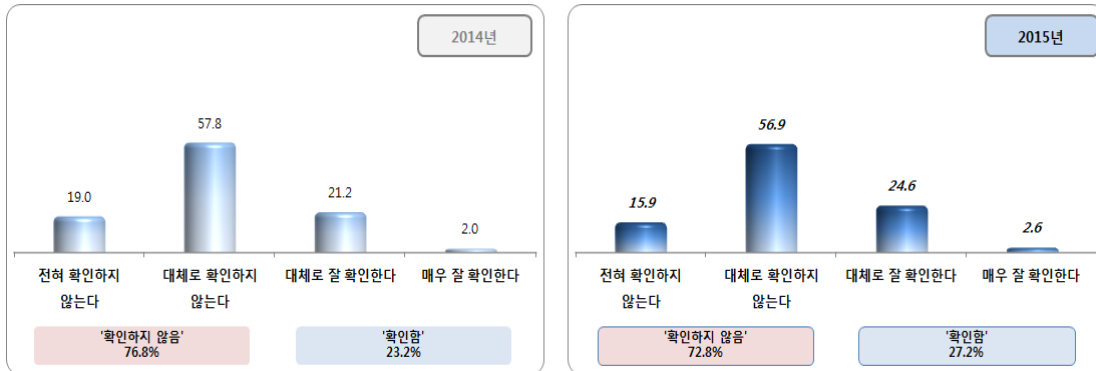
구 분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알고 있으나 신청하는 절차가 번거로워서	알고 있으나 요청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알고 있으나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행할 것 같지 않아서	기타
전 체		31.2	28.9	26.8	12.3	0.8
성별	남성	26.8	31.6	27.6	12.7	1.2
	여성	35.8	26.0	26.0	11.8	0.4
연령	10대	37.2	28.0	21.5	11.5	1.8
	20대	34.5	27.7	23.6	12.9	1.3
	30대	33.7	28.9	24.8	11.6	1.0
	40대	28.8	33.7	26.1	11.4	
	50대	26.8	28.5	30.3	13.8	0.6
	60대 이상	27.5	25.3	34.0	12.5	0.7

4. 동의서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1) 동의서 확인

-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의 확인에 대해 '확인하지 않음'²³⁾이 72.8%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대비 4.0%p 낮게 나타났다.

<그림-103> 동의서 확인 여부(%)



-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은 저연령보다 고연령의 '확인함'²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40> 동의서 확인 여부(%)·성·연령별

구 분		(1)	(2)	(3)	(4)	(1)+(2)	(3)+(4)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대체로 확인하지 않는다	대체로 잘 확인한다	매우 잘 확인한다	확인하지 않음	확인함
전 체		15.9	56.9	24.6	2.6	72.8	27.2
연령	남성	14.0	57.5	24.9	3.5	71.5	28.5
	여성	17.8	56.3	24.3	1.6	74.1	25.9
성별	10대	25.3	53.5	19.4	1.8	78.7	21.3
	20대	16.3	57.7	22.1	3.9	74.0	26.0
	30대	20.4	54.1	23.7	1.8	74.5	25.5
	40대	10.3	59.0	26.8	3.8	69.3	30.6
	50대	9.3	64.6	25.2	0.9	73.9	26.1
	60대 이상	16.2	51.5	29.2	3.1	67.7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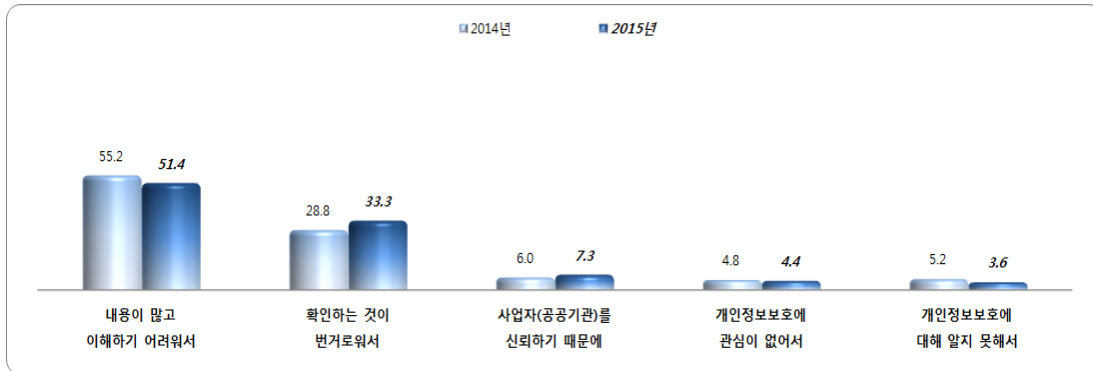
23) '확인하지 않음' :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대체로 확인하지 않는다' 비율임.

24) '확인함' : '대체로 잘 확인한다'+ '매우 잘 확인한다' 비율임.

2) 동의서 미확인 이유

-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워서'(33.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104> 동의서 미확인 이유(%)



-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미확인 이유로 모든 연령대에서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는 '50대'(55.3%),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워서'는 '40대'(38.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자(공공기관)를 신뢰하기 때문에'는 '60대 이상'(18.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141> 동의서 미확인 이유(%)·성·연령별

구 분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사업자 (공공기관)를 신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알지 못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없어서
전 체		51.4	33.3	7.3	4.4	3.6
연령	남성	50.2	33.1	7.8	5.1	3.9
	여성	52.6	33.5	6.8	3.7	3.3
성별	10대	52.1	35.4	3.7	5.3	3.4
	20대	48.7	36.8	6.7	5.1	2.6
	30대	53.1	33.3	3.5	5.8	4.3
	40대	51.7	38.3	3.9	2.5	3.6
	50대	55.3	29.8	8.6	3.8	2.5
	60대 이상	46.4	25.8	18.4	4.0	5.4

3) 개인정보처리방침 인지

- 사업자(공공기관)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는 49.1%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대비 3.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05> 개인정보처리방침 인지 여부(%)



- 개인정보처리방침 인지에 대해 '고연령'의 인지율이 '저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대'(40.1%)의 인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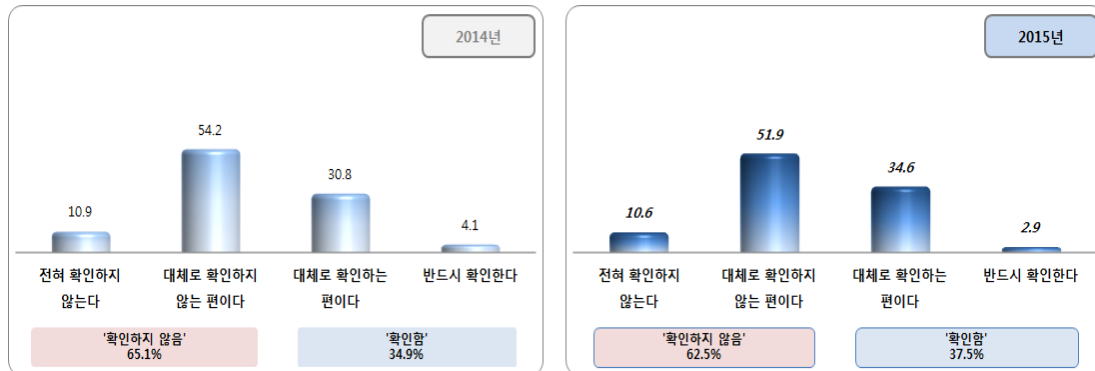
<표-142> 개인정보처리방침 인지 여부(%)·성·연령별

구 분		예	아니오
전 체		49.1	50.9
성별	남성	53.7	46.3
	여성	44.2	55.8
연령	10대	40.1	59.9
	20대	47.7	52.3
	30대	46.4	53.6
	40대	51.7	48.3
	50대	52.1	47.9
	60대 이상	54.5	45.5

4)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 사업자(공공기관)가 작성 및 공개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확인 여부는 '확인한다'가 37.5%로 전년대비 2.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06>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여부(%)



- '확인한다'(37.5%)의 비율은 '남성'(37.8%)과 '여성'(37.0%)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50대'(41.5%)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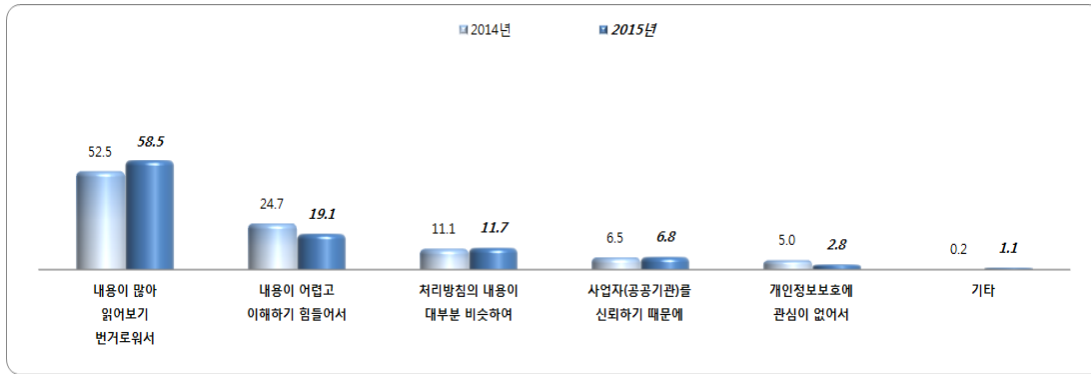
<표-143>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여부(%)·성·연령별

구 분		(1)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2) 대체로 확인하지 않는 편이다	(3) 대체로 확인하는 편이다	(4) 반드시 확인한다	(1)+(2) 확인하지 않음	(3)+(4) 확인함
전 체		10.6	51.9	34.6	2.9	62.5	37.5
성별	남성	8.5	53.7	34.4	3.4	62.2	37.8
	여성	13.3	49.7	34.8	2.2	63.0	37.0
연령	10대	17.6	47.9	33.2	1.3	65.5	34.5
	20대	10.8	51.4	33.9	3.9	62.2	37.8
	30대	11.3	55.5	31.6	1.6	66.8	33.2
	40대	6.7	51.8	37.9	3.6	58.5	41.5
	50대	8.2	50.3	37.6	3.9	58.5	41.5
	60대 이상	12.2	53.5	31.9	2.4	65.6	34.4

5)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

- ‘확인하지 않는다’(62.5%)의 이유로 ‘내용이 많아 읽어보기 번거로워서’가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내용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어서’(19.1%), ‘처리방침의 내용이 대부분 비슷하여’(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107>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



<표-144>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성·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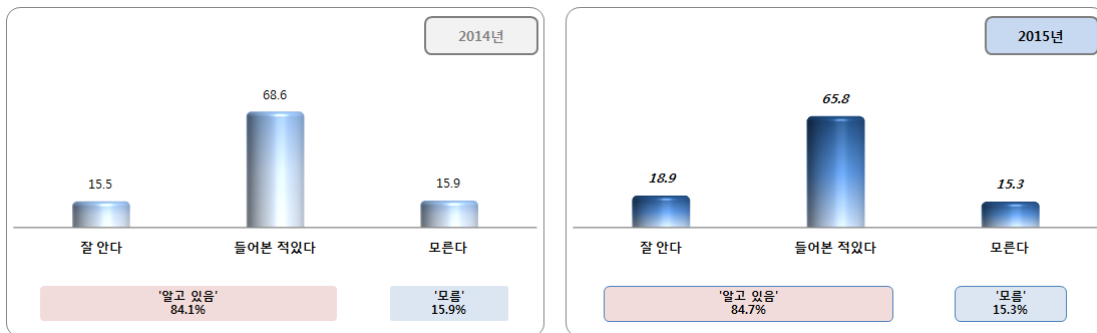
구 분		내용이 많아 읽어보기 번거로워서	내용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처리방침의 내용이 대부분 비슷하여	사업자(공공 기관)를 신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없어서	기타
전 체		58.5	19.1	11.7	6.8	2.8	1.1
성별	남성	55.4	19.3	13.4	7.9	2.4	1.7
	여성	62.4	18.9	9.5	5.5	3.4	0.3
연령	10대	63.6	28.7	5.7	-	2.0	-
	20대	66.7	13.6	14.7	1.8	1.4	1.8
	30대	54.6	27.8	11.1	2.9	2.1	1.5
	40대	60.6	16.6	12.0	5.2	3.7	1.8
	50대	62.8	12.1	11.6	8.4	4.7	0.3
	60대 이상	46.7	18.3	13.3	18.6	2.4	0.7

5.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지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해 84.7%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중 '잘 안다'의 비율이 18.9%로 이는 전년 대비 3.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08>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지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인지율'(84.7%)은 '여성'(81.8%)보다 '남성'(87.3%)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92.2%)의 인지율이 가장 높고, '10대'(70.6%)의 인지율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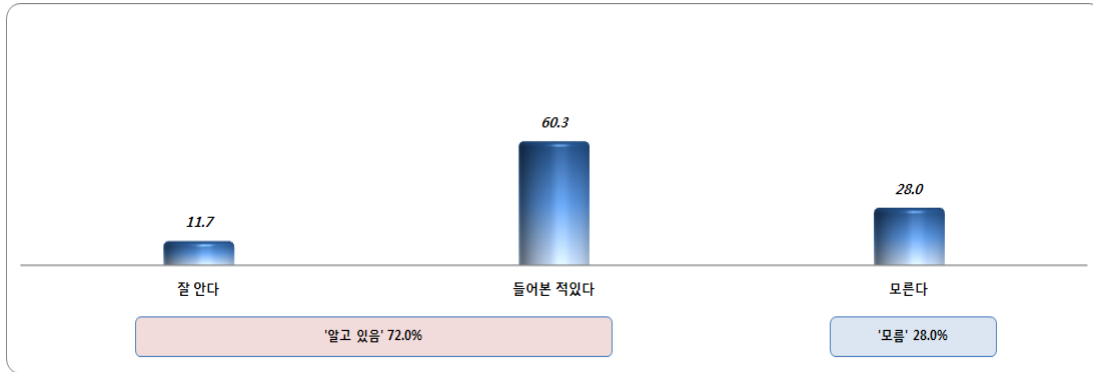
<표-14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지 여부(%)·성·연령별

구 분		(1) 잘 안다	(2) 들어본 적 있다	(3) 모른다	(1)+(2) 인지
전 체		18.9	65.8	15.3	84.7
성별	남성	21.0	66.3	12.6	87.3
	여성	16.6	65.2	18.2	81.8
연령	10대	9.2	61.4	29.4	70.6
	20대	18.7	58.1	23.2	76.8
	30대	16.5	67.3	16.2	83.8
	40대	19.5	71.4	9.1	90.9
	50대	22.5	69.7	7.7	92.2
	60대 이상	25.2	64.3	10.6	89.5

2)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행(2016.01) 인지 여부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행(2016.01)에 대한 인지율은 72.0%로 나타났다.

<그림-109>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행(2016.01) 인지 여부(%)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행(2016.01)에 대한 인지율은 '여성'(70.7%)보다 '남성'(73.3%)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78.8%)이 가장 높고 '10대'(66.3%)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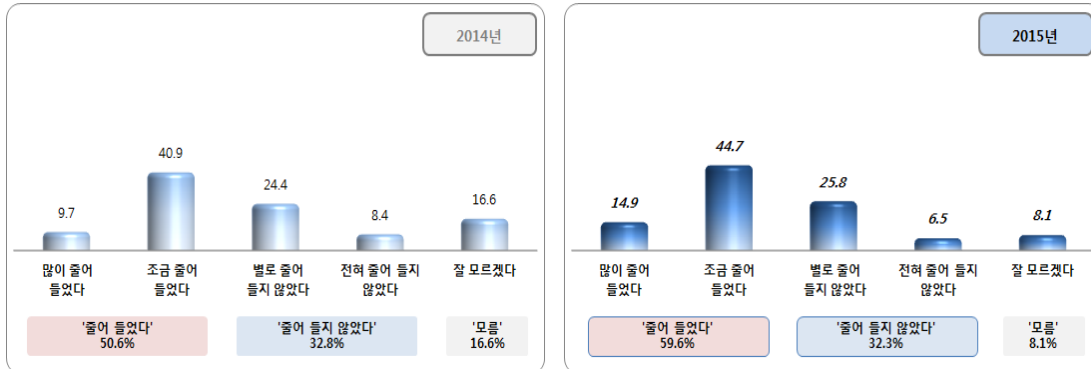
<표-146>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행(2016.01) 인지 여부(%)·성·연령별

구 분		(1) 잘 안다	(2) 들어본 적 있다	(3) 모른다	(1)+(2) 인지
전 체		11.7	60.3	28.0	72.0
성별	남성	14.8	58.5	26.7	73.3
	여성	8.4	62.3	29.3	70.7
연령	10대	6.4	59.9	33.8	66.3
	20대	11.7	60.9	27.4	72.6
	30대	13.1	57.4	29.6	70.5
	40대	7.9	60.7	31.4	68.6
	50대	14.0	61.3	24.8	75.3
	60대 이상	16.8	62.0	21.2	78.8

3)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4.08) 이후 사업자(공공기관) 변화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2014.08)된 이후 사업자(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변화에 대해 59.6%가 '줄어 들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110>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4.08) 이후 사업자(공공기관)의 변화(%)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4.08) 이후 사업자(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줄지 않았다'는 '50대'(35.4%)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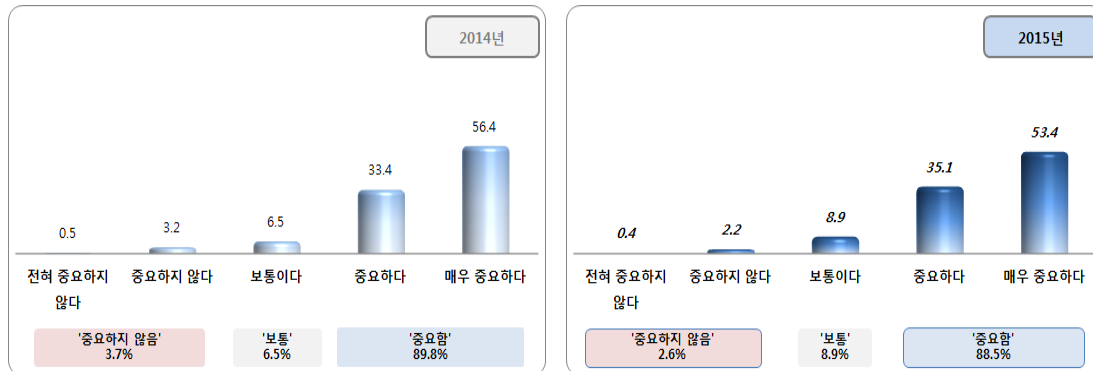
<표-147>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4.08) 이후 사업자(공공기관)의 변화(%)·성·연령별

구 분		(1)	(2)	(3)	(4)	(5)	(1)+(2)	(3)+(4)
		많이 줄어 들었다	조금 줄어 들었다	별로 줄어 들지 않았다	전혀 줄어 들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줄었다	줄지 않았다
전 체		14.9	44.7	25.8	6.5	8.1	59.6	32.3
성별	남성	16.2	43.5	25.6	6.8	7.9	59.7	32.4
	여성	13.5	46.0	25.9	6.1	8.5	59.5	32.0
연령	10대	12.5	40.1	19.8	5.0	22.6	52.6	24.8
	20대	15.0	44.6	25.5	8.1	6.8	59.6	33.6
	30대	16.3	44.3	27.2	6.8	5.4	60.6	34.0
	40대	17.8	43.8	27.9	6.9	3.6	61.6	34.8
	50대	13.4	45.9	28.4	7.0	5.3	59.3	35.4
	60대 이상	13.5	48.8	24.2	4.9	8.6	62.3	29.1

4) 개인정보보호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도에 대해 88.5%는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11> 개인정보보호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도에 대해 '여성'(89.2%)이 '남성'(87.8%)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48> 개인정보보호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성·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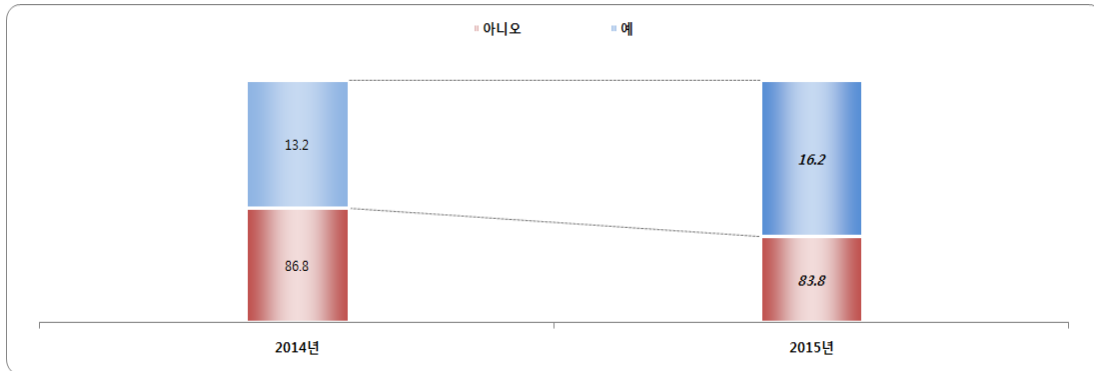
구 분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1)+(2) 중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5) 중요하다
전 체		0.4	2.2	8.9	35.1	53.4	2.6	8.9	88.5
성별	남성	0.3	1.9	10.0	37.8	50.0	2.2	10.0	87.8
	여성	0.5	2.5	7.8	32.2	57.0	3.0	7.8	89.2
연령	10대	0.3	3.4	7.9	37.1	51.3	3.7	7.9	88.4
	20대	0.2	1.8	9.7	37.4	50.9	2.0	9.7	88.3
	30대	0.3	2.0	11.4	40.4	45.9	2.3	11.4	86.3
	40대	0.2	1.0	8.9	37.8	52.1	1.2	8.9	89.9
	50대	0.2	1.7	9.5	31.2	57.4	1.9	9.5	88.6
	60대 이상	1.3	3.7	5.4	26.5	63.1	5.0	5.4	89.6

6.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

1)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경험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에 대해 16.2%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대비 3.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12>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경험(%)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경험은 '30대'에서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은 9.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험률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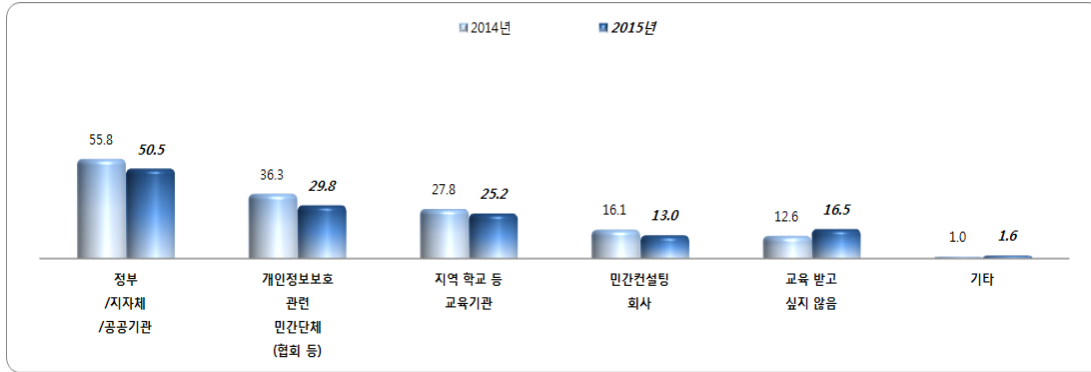
<표-149>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경험(%)-성·연령별

구 분		예	아니오
전 체		16.2	83.8
성별	남성	17.1	82.9
	여성	15.2	84.8
연령	10대	15.4	84.6
	20대	14.8	85.2
	30대	24.4	75.6
	40대	14.1	85.9
	50대	18.5	81.5
	60대 이상	9.2	90.8

2) 향후 교육 받고 싶은 기관

- 향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 교육 받고 싶은 기관에 대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간단체(협회 등)’(29.8%), ‘지역 학교 등 교육기관’(25.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113> 향후 교육 받고 싶은 기관(%)



- 향후 교육 받고 싶은 기관에 대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 ‘50대 이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간단체(협회 등)’은 ‘40대’, ‘지역 학교 등 교육기관’은 ‘10대’에서 각각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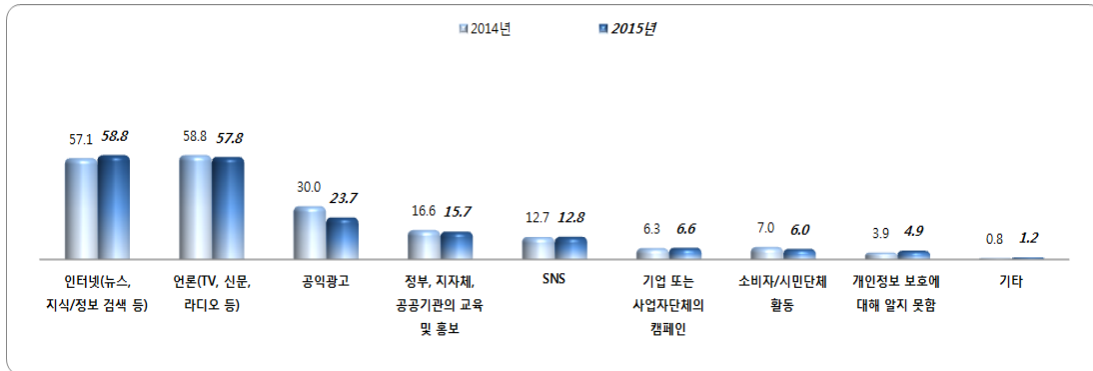
<표-150> 향후 교육 받고 싶은 기관(%)·성·연령별

구 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간단체(협회 등)	지역 학교 등 교육기관	민간컨설팅 회사	교육 받고 싶지 않음	기타
전 체		50.5	29.8	25.2	13.0	16.5	1.6
성별	남성	52.8	30.1	21.4	14.9	15.8	2.1
	여성	48.0	29.5	29.2	11.0	17.3	1.0
연령	10대	45.1	29.4	41.5	14.5	17.2	2.7
	20대	49.7	31.8	26.8	10.1	20.0	0.6
	30대	45.6	28.5	20.9	15.9	18.2	0.8
	40대	47.4	32.6	23.3	13.4	15.9	2.3
	50대	53.5	31.7	19.9	11.1	13.6	1.6
	60대 이상	61.2	24.5	22.6	12.8	14.7	1.5

3)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 인지 경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 인지 경로에 대해 ‘인터넷(뉴스, 지식/정보 검색 등)’이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언론(TV, 신문, 라디오 등)’(57.8%), ‘공익광고’(23.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114>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 인지 경로(%)



-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지 경로에 대해 ‘50대 이상’은 ‘언론(TV, 신문, 라디오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10~40대’는 ‘인터넷(뉴스, 지식/정보 검색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알지 못함’은 ‘10~20대’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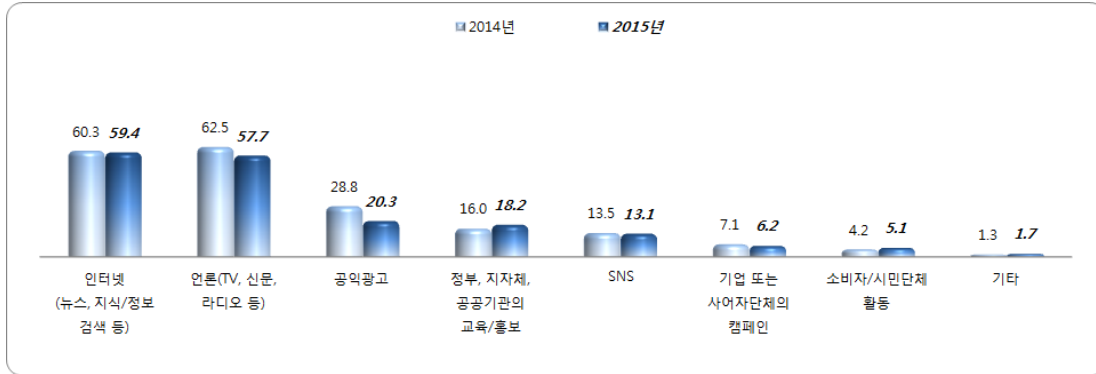
<표-151>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 인지 경로(%)·성·연령별

구 분		인터넷 (뉴스, 지식/ 정보 검색 등)	언론 (TV, 신문, 라디오 등)	공익 광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의 교육 및 홍보	SNS	기업 또는 사업자 단체의 캠페인	소비자/ 시민 단체 활동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알지 못함	기타
전 체		58.8	57.8	23.7	15.7	12.8	6.6	6.0	4.9	1.2
성별	남성	63.1	59.0	22.5	17.0	13.0	6.9	6.3	4.1	1.0
	여성	54.3	56.6	24.9	14.4	12.5	6.3	5.6	5.7	1.3
연령	10대	53.7	39.3	26.1	13.8	26.6	4.6	4.4	8.3	0.5
	20대	57.6	51.9	18.4	12.6	18.4	6.0	2.9	8.6	2.4
	30대	60.6	53.6	20.8	16.7	9.8	6.3	4.5	4.7	2.4
	40대	64.0	61.2	21.6	12.8	7.7	8.8	7.2	3.7	0.9
	50대	56.0	64.2	26.9	20.2	9.2	8.7	9.0	2.3	0.6
	60대 이상	59.3	72.9	28.8	17.8	8.9	4.4	7.1	2.8	0.3

4)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내용 인지 경로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내용의 인지 경로에 대해 '인터넷(뉴스, 지식/정보검색 등)'을 통해서가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언론(TV, 신문, 라디오 등)'(57.7%) '공익광고'(20.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115>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내용 인지 경로(%)



- 개인정보보호법 인지 경로에 대해 '50대 이상'은 '언론(TV, 신문, 라디오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10~40대'는 '인터넷(뉴스, 지식/정보 검색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152>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내용 인지 경로(%)·성·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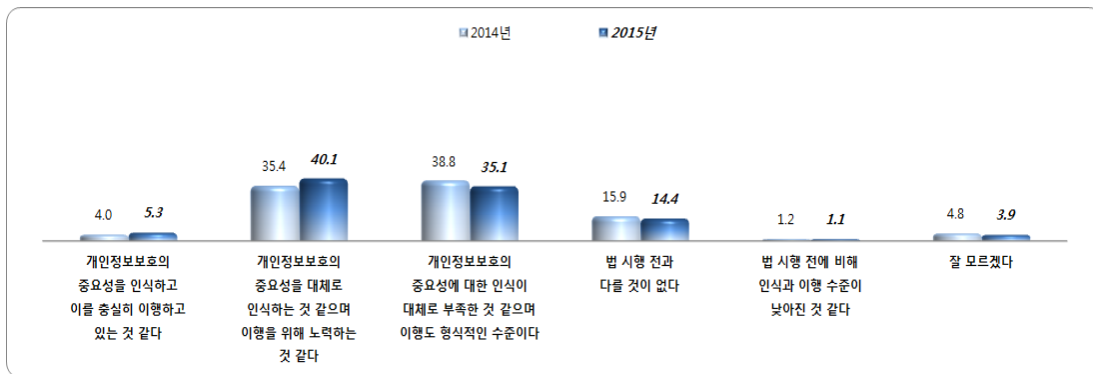
구 분		인터넷 (뉴스, 지식/정보 검색 등)	언론 (TV, 신문, 라디오 등)	공익광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의 교육 및 홍보	SNS	기업 또는 사업자 단체의 캠페인	소비자/ 시민단체 활동	기타
전 체		59.4	57.7	20.3	18.2	13.1	6.2	5.1	1.7
성별	남성	64.3	58.0	22.1	20.3	11.9	6.8	6.4	1.4
	여성	53.8	57.3	18.3	15.9	14.6	5.6	3.7	2.0
연령	10대	59.7	40.7	22.1	16.4	21.8	4.6	2.5	1.6
	20대	58.0	49.2	18.6	14.7	17.9	2.5	4.2	3.1
	30대	60.2	49.8	15.3	18.8	11.3	4.9	4.0	1.0
	40대	60.9	59.2	19.1	16.2	7.7	7.7	6.7	2.7
	50대	55.8	66.9	24.2	23.9	11.4	8.9	7.0	1.0
	60대 이상	61.9	72.4	22.3	18.2	12.2	7.5	5.2	0.9

7.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식 변화

1) 전년대비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실천 변화

- 전년대비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실천 변화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대체로 인식하는 것 같으며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가 40.1% (전년대비 ▲4.7%p)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부족한 것 같으며, 이행도 형식적인 수준이다’가 35.1%(전년 대비 ▼3.7%p), ‘법 시행 전과 다를 것이 없다’가 14.4%(전년대비 ▼1.5%p)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116> 전년대비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실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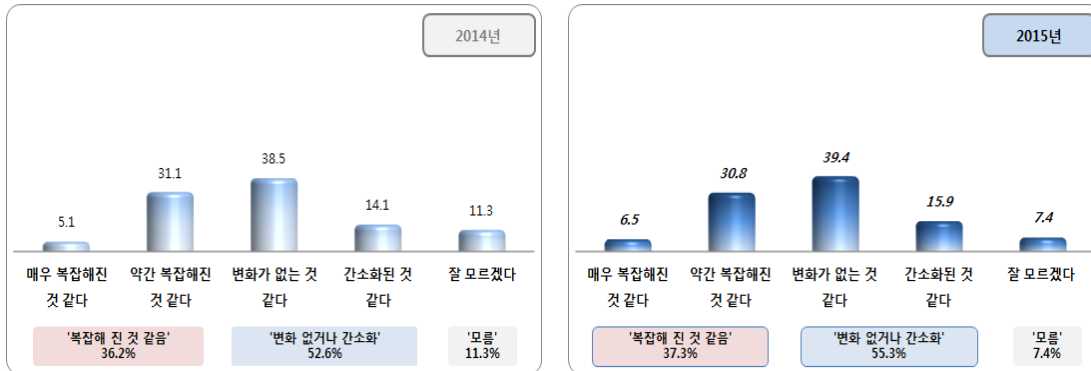
<표-153> 전년대비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실천 변화(%)·성·연령별

구 분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대체로 인식하는 것 같으며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부족한 것 같으며 이행도 형식적인 수준이다	법 시행 전과 다를 것이 없다	법 시행 전에 비해 인식과 이행 수준이 낮아진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전 체		5.3	40.1	35.1	14.4	1.1	3.9
성별	남성	4.9	41.5	35.3	13.2	0.8	4.4
	여성	5.7	38.7	34.9	15.8	1.5	3.3
연령	10대	5.5	33.5	33.8	16.9	1.2	9.0
	20대	5.7	40.4	32.1	16.6	1.4	3.7
	30대	4.5	37.1	37.1	15.8	1.1	4.5
	40대	4.4	40.2	37.3	13.9	1.0	3.1
	50대	5.7	43.5	32.9	13.4	1.5	3.0
	60대 이상	6.4	45.0	36.6	10.6	0.5	0.9

2) 전년대비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절차 변화

- 전년대비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절차 변화에 대해 37.3%가 '복잡해짐'으로 느끼고, 55.3%가 '변화가 없거나 간소화' 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17> 전년대비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절차 변화(%)



- 전년대비 '복잡해짐'(37.3%)은 1.1%p 높게 나타났으며, '변화가 없거나 간소화'(55.3%)는 2.7%p 낮게 나타났다.
- '복잡해짐'(37.3%)은 '60대 이상'(39.5%)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변화가 없거나 간소화'는 '40대'(59.8%)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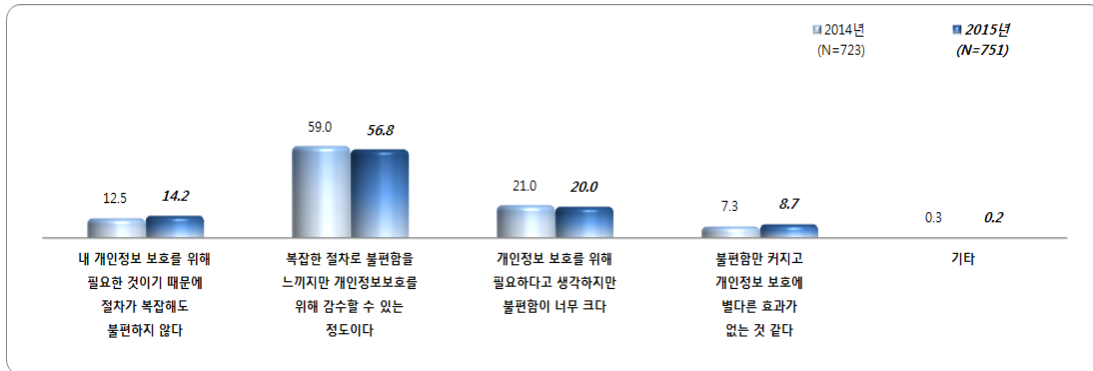
<표-154> 전년대비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절차 변화(%)-성·연령별

구 분		(1) 매우 복잡해진 것 같다	(2) 약간 복잡해진 것 같다	(3) 변화가 없는 것 같다	(4) 간소화된 것 같다	(5) 잘 모르겠다	(1)+(2) 복잡해짐	(3)+(4) 변화 없거나 간소화
전 체		6.5	30.8	39.4	15.9	7.4	37.3	55.3
성별	남성	5.9	32.9	37.8	15.5	7.9	38.8	53.3
	여성	7.2	28.7	41.1	16.4	6.6	35.9	57.5
연령	10대	7.6	24.3	35.8	18.7	13.6	31.9	54.5
	20대	8.4	30.0	37.4	15.4	8.8	38.4	52.8
	30대	6.9	31.4	41.7	13.1	6.9	38.3	54.8
	40대	8.0	28.6	43.9	15.9	3.6	36.6	59.8
	50대	1.3	37.0	41.2	16.5	4.0	38.3	57.7
	60대 이상	7.1	32.4	34.6	16.5	9.4	39.5	51.1

3) 개인정보 처리절차 변화에 따른 불편함에 대한 의견

- 개인정보 처리절차가 복잡해졌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처리절차 변화에 따른 불편함에 대해 질문한 결과, 56.8%가 ‘복잡한 절차로 불편함을 느끼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감수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118> 개인정보 처리절차 변화에 따른 불편함에 대한 의견(%)



- 전년대비 ‘복잡한 절차로 불편함을 느끼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감수할 수 있다’(56.8%)는 전년대비 2.2%p 낮게 나타났으며, ‘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도 불편하지 않다’(14.2%)는 1.7%p 높게 나타났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불편함’(20.0%)은 전년대비 1.0%p 낮게 나타났으며, ‘불편함만 커지고 개인정보보호에 별다른 효과 없음’(8.7%)은 1.4%p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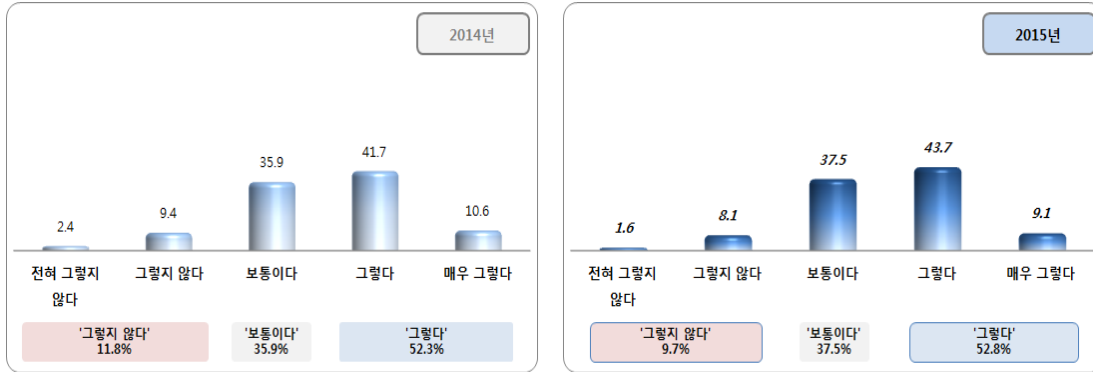
<표-155> 개인정보 처리절차 변화에 따른 불편함에 대한 의견(%)-성·연령별

구 분		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도 불편하지 않다	복잡한 절차로 불편함을 느끼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감수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불편함이 너무 크다	불편함만 커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기타
전 체		14.2	56.8	20.0	8.7	0.2
성별	남성	13.8	60.3	15.2	10.4	0.2
	여성	14.7	52.9	25.4	6.8	0.3
연령	10대	17.1	48.6	22.5	11.9	-
	20대	17.2	53.2	20.3	7.9	1.4
	30대	13.3	62.9	17.5	6.2	0.1
	40대	15.2	57.5	20.1	7.1	-
	50대	11.0	59.3	20.7	9.0	-
	60대 이상	12.9	56.0	19.9	11.3	-

4)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기업(기관) 선호에 미치는 영향

-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고객정보)의 안전한 관리 이행이 기업 이미지 또는 제품(서비스)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52.8%가 '영향 있음'²⁵⁾으로 응답하였다.

<그림-119>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기업(기관) 선호에 미치는 영향(%)



- '영향 있음'(그렇다)의 비율은 '50대'(58.8%)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20대'(50.2%)에서 낮게 나타났다.

<표-156>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기업(기관) 선호에 미치는 영향(%)-성·연령별

구 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5) 그렇다
전 체		1.6	8.1	37.5	43.7	9.1	9.7	37.5	52.8
성별	남성	1.6	8.6	37.9	43.6	8.3	10.2	37.9	51.9
	여성	1.5	7.5	37.4	43.8	9.8	9.0	37.4	53.6
연령	10대	2.7	7.8	39.0	39.0	11.5	10.5	39.0	50.5
	20대	0.8	10.8	38.2	41.1	9.1	11.6	38.2	50.2
	30대	0.4	6.9	39.1	46.8	6.8	7.3	39.1	53.6
	40대	0.4	7.7	39.7	44.2	8.0	8.1	39.7	52.2
	50대	0.6	8.0	32.6	47.4	11.4	8.6	32.6	58.8
	60대 이상	4.8	7.7	37.1	42.2	8.2	12.5	37.1	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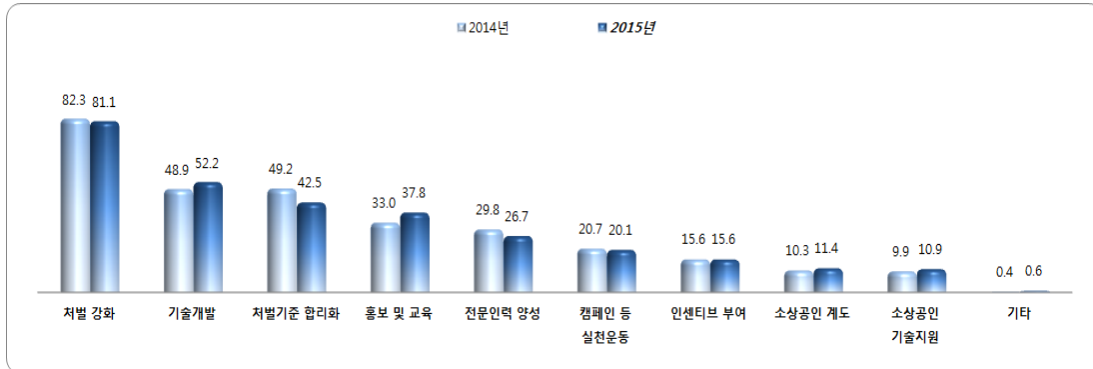
25) '영향 있음' : '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임.

8. 정책 제언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정책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처벌 강화'가 8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술개발'(52.2%), '처벌기준 합리화'(42.5%), '홍보 및 교육'(37.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120>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정책(%)



- '처벌 강화'와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60대 이상', '처벌기준 합리화'는 '30대', '홍보 및 교육'은 '40대', '전문인력 양성'은 '20대'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표-15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정책(%)-성·연령별

구 분		처벌 강화	기술 개발	처벌 기준 합리화	홍보 및 교육	전문 인력 양성	캠페인 등 실천 운동	인센티브 부여	소상공인 제도	소상공인 기술지원	기타
전 체		81.1	52.2	42.5	37.8	26.7	20.1	15.6	11.4	10.9	0.6
성별	남성	79.8	54.2	43.0	38.3	27.7	17.9	15.0	10.7	11.3	0.8
	여성	82.4	50.0	42.1	37.2	25.6	22.3	16.2	12.0	10.5	0.4
연령	10대	82.3	48.3	42.7	39.0	27.5	23.1	18.5	8.0	10.1	0.5
	20대	81.6	54.1	42.9	37.2	31.2	11.2	15.2	12.6	11.7	1.1
	30대	77.2	49.9	47.0	38.2	21.5	17.3	16.5	14.4	15.6	0.8
	40대	80.1	50.0	44.5	39.6	26.5	19.3	12.9	13.5	11.2	0.6
	50대	82.7	52.2	38.5	35.5	28.3	27.3	14.6	10.4	9.1	0.2
	60대 이상	83.3	58.8	39.2	37.1	25.9	22.0	16.6	8.3	7.4	0.5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유출원인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강화를 통한 재발방지’(40.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부의 철저한 관리 노력 필요’(23.3%) 등으로 나타났다.

<표-158>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

순위	의견	비율 (%)
1	유출원인에 대한 처벌강화 및 규제강화를 통한 재발방지	40.8
2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처리자 및 정부의 철저한 관리 노력 필요	23.3
3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축소 및 이용 절차 간소화	8.4
4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안 및 관리시스템의 개발/강화	7.5
5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해를 위한 (정보주체 및 처리자) 교육 및 홍보 시행	7.1
6	현실적인 적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및 정책 연구	3.3
7	개인정보를 대신할 수 있는 신규 대체수단 개발	3.0
8	개인정보 유출 시 현실성 있는 사후보상 및 피해구제 정책 마련	2.6
9	개인정보 처리/관리 등 관련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부서 설치	1.8
10	개인정보의 이용/유출 시 사실전달 등 신속한 대응 필요	0.7
11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 금지(오/남용 금지)	0.7
12	정보처리자 및 정부의 철저한 관리 노력 필요	0.1
13	기타	0.7

부 록



조 사 표

개인정보처리자

<p>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 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 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p>	<p>주 관 기 관 : 행 정 자 치 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담 기 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조 사 기 관 : - - - - -</p>	<p>ID:</p>
--	--	------------

2015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 민간사업자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자) -

부
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동으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과 보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 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 응답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경영, 인사, 정보화 분야 책임자가 답변

2015년 9월

행정자치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주관기관 : 행 정 자 치 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담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 조사기관 :
- ☎ 문의전화 :



개인정보(일반)

1. 귀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십니까? ()

*개인 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예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사진, CCTV 개인영상정보, 학력, 근무경력 등
--------	--

① 예 ⇒ 1-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설문 종료

1-1. 귀사에서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구 분	수집여부
고객(학생 및 학부모)	()
임직원(교직원)	()

1-2. 귀사에서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구 분	해당여부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	()
임직원으로부터 직접 수집	()
제3자(다른 회사, 기관 등)로부터 제공 받음	()
제3자(다른 회사, 기관 등)와 위탁계약을 통해 위탁 받음	()

2. 귀사는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십니까?(복수선택 가능)

- ①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② 고객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③ 홍보 또는 마케팅 ()
 ④ 법적 의무이행* () ⑤ 기타(직접기입:)

* “법적 의무이행” 의 예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명부 작성을 위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3. 귀사는 어떤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십니까?(복수선택 가능)

- ① 홈페이지 회원 가입 () ② 민원·계약 등 각종서식 ()
 ③ 이메일로 수집 () ④ 경품·할인권 행사 ()
 ⑤ 기업(기관)의 업무나 이익을 위해 다른 사업자나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음1) ()
 ⑥ 타 사업자(기관)의 업무처리를 대행하기 위해 타 사업자(기관)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음2) ()
- 1) 사업자(공공기관)가 자신의 업무나 이익을 위해 제3자(다른 사업자기관단체·개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에 해당됨
 예시) 보험회사에서 텔레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제휴 신용카드사로부터 회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제공받는 행위
- 2) 타 사업자(기관)의 업무처리를 대행하기 위해 타 사업자(기관)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에 해당됨
 예시) 기업의 텔레마케팅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4.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 ① 1천명 미만 | ② 1천명 이상~5천명 미만 |
| ③ 5천명 이상~1만명 미만 | ④ 1만명 이상~10만명 미만 |
| ⑤ 10만명 이상~100만명 미만 | ⑥ 100만명 이상~500만명 미만 |
| ⑦ 500만명 이상~1,000만명 미만 | ⑧ 1,000만명 이상 |

5. 귀사는 어떤 근거에 의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복수선택 가능)
- ① 정보주체*(고객, 임·직원)의 동의 ()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② 법령의 근거*()

*법률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시)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 “행정자치부장관은 …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법령에서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 예시) 학원법 제13조 :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인적사항을...게시하여야 한다”

→ 인적사항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수집 필요

- ③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의 수집 ()

예시) 택배업체의 경우 고객과 배송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수취인)의 이름과 주소지 필요

- ④ 해당 없음 ()

☞ 위 ①, ②, ③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6.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알고 있으며 실시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구 분		인지여부		실시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	수집·이용 목적 고지	①	②	①	②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고지	①	②	①	②
3	보유 및 이용기간 고지	①	②	①	②
4	동의 거부 가능 고지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불이익 내용 고지	①	②	①	②

주인등록번호 및 민감정보

7. 귀사는 어떤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까?(복수선택 가능)

- ① 본인 확인 () ⇒ 7-1번으로 이동 ② 계약 체결 및 이행 () ⇒ 7-1번으로 이동
③ 홍보 또는 마케팅 () ⇒ 7-1번으로 이동 ④ 법령상 의무 준수 () ⇒ 7-1번으로 이동
⑤ 기타 업무서비스 () ⇒ 7-1번으로 이동 ⑥ 수집하지 않음 () ⇒ 8번으로 이동

7-1. 귀사가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몇 건입니까?

- ① 고객 ()건
② 임직원 ()건

7-2. 귀사는 어떤 근거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까?(복수선택 가능)

- ① 법령의 근거 ()
② 다른 정보와 함께 일괄적으로 수집 동의를 받음 ()
③ 다른 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 받음 ()
④ 근거 없이 수집 ()

8. 귀사는 귀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 ① 예 ⇒ 8-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9번으로 이동
③ 홈페이지 회원 가입 없음 ⇒ 9번으로 이동

8-1. 귀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은 무엇입니까?(복수선택 가능)

- ① 생년월일 () ② 이메일 인증 () ③ 기타 인적사항(닉네임, 주소 등) ()
④ 공인인증서 () ⑤ I-PIN(아이핀) () ⑥ 핸드폰 인증 ()
⑦ 신용카드 인증 () ⑧ 기타(직접기입 :)

9. 귀사는 어떤 목적으로 **민감정보***를 수집합니까?(복수선택 가능)

*민감 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예시) 정치적 성향, 정당 및 노조가입, 장애 및 의료정보, 전과, 범죄경력, 종교
-----------	--

- ① 고객 분석 () ⇒ 9-1번으로 이동
② 홍보 또는 마케팅 () ⇒ 9-1번으로 이동
③ 관련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 ⇒ 9-1번으로 이동
④ 해당 없음 () ⇒ 9-1번으로 이동
⑤ 수집하지 않음 () ⇒ 10번으로 이동

9-1. 귀사는 어떤 근거에 의해 **민감정보**를 수집하십니까?(복수선택 가능)

- ① 법령의 근거 ()
② 다른 정보와 함께 일괄적으로 수집 동의를 받음 ()
③ 다른 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 받음 ()
④ 근거 없이 수집 ()

제3자 제공

10.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다음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알고 있습니까? ()

*제3자 제공	사업자(공공기관)가 제3자(다른 사업자·기관·단체·개인)의 업무나 이익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 예시) 신용카드 회사에서 자사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제휴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	---

고지 내용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 동의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알고 있다 ④ 잘 안다 ⑤ 매우 잘 안다

11. 귀사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가 있다면 다음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복수선택 가능)

-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 ④ 별도 근거 없이 제공 ()
⑤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없음 ()

- 11-1. 귀사는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까?(복수선택 가능)

- ①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② 고객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③ 홍보 또는 마케팅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
⑤ 범죄수사·공소제기 () ⑥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
⑦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 () ⑧ 응급상황 ()
⑨ 판매 () ⑩ 기타(직접기입 :)

목적 외 이용

12.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다음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알고 있습니까? ()

*수집 목적 외 이용	예시) 물품 배송 목적으로 수집한 고객의 주소를 홍보 목적의 문자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	--

고지 내용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 동의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알고 있다 ④ 잘 안다 ⑤ 매우 잘 안다

13. 귀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적이 있다면, 다음 중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
 ③ 근거 없이 이용 ()
 ④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없음 () ⇒ 14번으로 이동

13-1. 귀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 외에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합니까?(복수선택 가능)

- ①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② 고객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③ 홍보 또는 마케팅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
 ⑤ 범죄수사·공소제기 () ⑥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
 ⑦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 () ⑧ 응급상황 ()
 ⑨ 판매 () ⑩ 기타(직접기입:)

위탁 • 파기

14.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 대해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인터넷 홈페이지, 관보, 신문 등)하여야 합니다. 귀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

- 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② 공개하지 않음 ③ 위탁한 사례 없음

15.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이 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알고 있으며 실시하고 있습니까? 인지여부 (), 실시여부 ()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감독 등

인지 여부					실시 여부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알고 있다	잘 안다	매우 잘안다	전혀 지키지 않는다	잘 지키지 않는다	보통이다	잘 지킨다	매우 잘 지킨다	위탁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16. 귀사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 ①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 ② 6일 이상 보관 후 파기

- ③ 개인정보만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
⑤ 특별한 조치 없이 그대로 둠

④ 타 사업자나 기관에게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17. 귀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18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17-1번으로 이동

17-1. 귀사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여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의무사항인지 몰라서
②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③ 번거로워서
④ 작성방법을 몰라서
⑤ 기타(직접기입 :)

조직 • 예산

18. 귀사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

- ①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
② 정보보호 전담부서
③ 정보화 전담부서(전산실, 정보화전략실 등)
④ 일반 관리부서(총무부, 사업부, 영업부 등)
⑤ 기타(직접기입 :)
⑥ 없음

19. 귀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

20. 귀사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몇 명이며, 전담으로 업무를 수행합니까?

인원수	전담여부
(직접기입 : 명)	① 예 ② 아니오(타업무 병행)

21. 귀사는 2015년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

*개인정보 보호 예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 도입·유지보수,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컨설팅, 자체점검 비용 등
----------------	---

- ① () 원 ② 예산 없음

안전성 확보 조치

□ 소상공인*만 답변(소상공인이 아닌 경우는 23번으로 이동)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

22. 귀사는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까?(복수선택 가능)

1	일반 PC의 문서작성 프로그램 (글, MS워드,엑셀 등) ()	일반적인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작성, 저장, 관리하는 경우
2	고객관리 프로그램 ()	프로그램 판매업체로부터 고객관리 프로그램(약국, 병원, PC방, 부동산, 학원용 등)을 구매하여 운영하거나, 웹 호스팅 서비스에 접속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경우
3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오라클, MS-SQL, DB2, Informix 등 활용) ()	기업 등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4	해당없음()	

23. 귀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중 어떤 조치들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해당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복수선택 가능)

- 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시스템(방화벽 또는 침입방지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 ③ 담당자별로 접근 권한을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인가되지 않은 직원은 접근제한 조치 ()
- ④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지문·홍채·정맥·음성 등 신체적, 행동적 특징 정보)를 저장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보조저장매체(USB 등)를 통해 전송·전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방식으로 암호화해야 함

- ⑤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 ⑥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 ⑦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 ()

24. 귀사는 다음의 암호화 대상 정보 중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정보를 암호화 하고 있습니까?

암호화 대상 정보		보유여부		암호화 현황		
		예	아니오	전부 암호화	일부*** 암호화	암호화 미실시
1	주민등록번호	①	②	①	②	③
2	비밀번호*	①	②	①	②	③
3	바이오정보**	①	②	①	②	③
4	여권번호	①	②	①	②	③
5	운전면허번호	①	②	①	②	③
6	외국인등록번호	①	②	①	②	③

*비밀번호	웹사이트 회원 비밀번호, 인사관리 및 고객관리 시스템 로그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련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지문·홍채·정맥·음성·팔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일부 암호화	예시) 고객 및 임직원 주민등록번호 중 고객 주민등록번호만 암호화 전체 고객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분만 암호화 등

교육 • 자율규제

25. 귀사는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한다면 몇 회 실시합니까?

구분		실시 여부		실시 횟수
		예	아니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①	②	연 ()회
2	직원대상 교육	①	②	연 ()회

26. 귀사는 어떤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합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위탁 ()
- ② 민간컨설팅 회사 위탁 ()
- ③ 사업자 단체(협회, 협의회 등) 위탁 ()
- ④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간단체(협회 등) 위탁 ()
- ⑤ 기타 기관 위탁 ()
- ⑥ 자체 교육 ()

정보주체 권리보장

27.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로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고 있으며 실시하고 있습니까?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	법률에 따라 열람 등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제38조 참조)
-----------------	---

인지여부		실시여부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③ 관련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구 사례 없었음

영상정보 처리기기

28. 귀사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총 몇 대입니까?

① 공개된 장소() 대 ② 공개되지 않은 장소() 대 ③ 없음 ⇒ 30번으로 이동

*공개된 장소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2조 참조)
---------	--

28-1. 귀사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네트워크 카메라 등)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복수선택 가능)

① 범죄 예방 및 수사 () ⇒ 28-1번으로 이동

②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 28-1번으로 이동

③ 교통단속 또는 교통정보 수집·분석 () ⇒ 28-1번으로 이동

④ 기타(직접기입 :) () ⇒ 28-1번으로 이동

⑤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음 () ⇒ 29번으로 이동

28-2. 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습니까? ()

① 사업장에 안내판 설치

② 기타의 방법(신문 또는 관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으로 공개

③ 공개하지 않음

29. 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였습니까? ()

① 해당 방침을 마련함

②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련 내용 포함

③ 사내규정에 관련 내용 포함

④ 마련하지 않음

법 시행 및 애로사항

30. 귀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
 ① 모른다 ② 들어본 적 있다 ③ 잘 안다
3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6.1.1.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① 모른다 ② 들어본 적 있다 ③ 잘 안다
32.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개인정보과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영향평가)
-----------------	--

인지여부		영향평가 필요성				
① 예	② 아니오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33.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수는 몇 개입니까? 그 중 영향평가를 실시한 개인정보파일은 몇 개입니까?
- ① 대상 개인정보파일 수(개) ② 실시 개인정보파일 수(개)

영향평가의 대상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제 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	---

34. 향후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향후 _____ 년 이내) ② 아니오
35. 귀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이해하고 시행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② 개인정보처리 절차 등의 복잡성

- ③ 예산 부족 ④ 인력 부족
- ⑤ 기술적 전문성 부족 ⑥ 개인정보보호 관련 마땅한 문의처를 찾지 못함
- ⑦ 기술·교육 등 정부 지원 부족 ⑧ 기타(직접기입 : _____)

정책 제언

36.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부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 ① 과태료 행정처분 등 처벌규정의 강화
- ②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한 처벌규정의 차등화 및 합리화
- ③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
- ④ 소상공인 개인정보보호 제도
- 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기술지원
- ⑥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의 교육 및 홍보 강화
- ⑦ 민간 자율규제의 정착 및 활성화
- ⑧ 모범사업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⑨ 전문가 양성 등 인력개발
- ⑩ 기타 ()

37. 개인정보보호법 혹은 제도에 대한 의견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개인정보 유출사고

38. 귀사는 최근 대규모 유출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과다수집 때문에 ()
- ②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자(공공기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
- ③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
- ④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
- ⑤ 유출사고 발생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
- ⑥ 기타직접기입 : ()

39. 귀사는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시 현재의 처벌 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과하다 () ② 과하다 () ③ 적당하다 ()
④ 부족하다 () ⑤ 매우 부족하다 () ⑥ 잘 모르겠다 ()

40. 귀사는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이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습니까?

- ① 매우 커졌다 () ② 조금 커졌다 () ③ 별로 커지지 않았다 ()
④ 전혀 커지지 않았다 () ⑤ 잘 모르겠다 ()

빅데이터 분석

41. 귀사는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계획 없음) ③ 경험은 없지만 계획 있음

42. 귀사가 분석·활용한 빅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십니까? ()

- ① 삭제한다 ② 비식별화(마스킹, 총계처리 등) 한다
③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④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응답자 통계

DQ1. 사업체 형태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 등 법인 ③ 기타()
DQ2. 사업체 분류(업종)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⑤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⑥ 건설업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운수업 ⑨ 숙박 및 음식점업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⑪ 금융 및 보험업 ⑫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⑮ 교육 서비스업 ⑯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⑱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⑲ 기타
DQ3. 사업체 규모(인원) ※ 정규직 및 비정규직 모두 포함	_____ 명
DQ4. 회사 규모	2014년 매출액 : _____ 원
DQ5. 본사 소재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DQ6. 인터넷 홈페이지 보유여부	① 보유 ② 미보유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보주체

<p>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p>	<p>주 관 기 관 : 행 정 자 치 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담 기 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조 사 기 관 : _____</p>	ID:
--	--	-----

2015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 일반국민 (정보주체)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동으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과 보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 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9월

행정자치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주관기관 : 행 정 자 치 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담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 조사기관 :
- ☎ 문의전화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 본 설문조사는 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귀하가 소속된 사업체나 공공기관과는 무관하게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실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1. 귀하는 주로 어떤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개인 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예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사진, CCTV 개인영상정보, 학력, 근무경력 등
--------	--

- ①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해 () ②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위해 ()
 ③ 이메일 등으로 정보제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 () ④ 커뮤니티나 친목 활동을 위해 ()
 ⑤ 경품이나 사은품, 할인쿠폰 등을 받기 위해 () ⑥ 기타(직접기입 :)

2. 귀하는 1번에서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동의서*나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십니까? ()

*개인 정보 수집 동의	사업자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고객, 임·직원 또는 민원인 등에게 ①수집·이용 목적, ②수집 항목, ③보유 및 이용기간, ④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르는 불이익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

- ①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 2-1번으로 이동 ② 대체로 확인하지 않는다 ⇒ 2-1번으로 이동
 ③ 대체로 잘 확인한다 ⇒ 3번으로 이동 ④ 매우 잘 확인한다 ⇒ 3번으로 이동

2-1.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동의서나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사업자(공공기관)을 신뢰하기 때문에 ②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알지 못해서
 ③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없어서 ④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⑤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3. 귀하는 사업자(공공기관)* 등에 제공한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업자 (공공기관)	귀하가 소속된 사업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귀하가 일상생활에서 상품,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해 경험하는 전체 사업체와 공공기관의 보호수준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설문항목도 동일)
**수집 항목	사업자(공공기관)은 수집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 항목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함 예시) 택배업체에서 물품 배송에 불필요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됨

- ① 과도하게 수집한다 ② 필요한 내용만 수집한다 ③ 잘 모르겠다

4. 다음은 사업자(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기준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자(공공기관)가 해당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자(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			귀하는 해당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사업자(공공기관)는 해당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른 다	잘 모른 다	알고 있다	잘 안다	매우 잘 안다	전혀 이행 하지 않는 다	별로 이행 하지 않는 다	이행 하고 있다	대체 로 잘 이행 하고 있다	매우 잘 이행 하고 있다	잘 모르 겠다
1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르는 불이익을 정보주체 ¹⁾ (고객, 민원인 등)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2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법령에 수집·이용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3	고유식별정보 ²⁾ 수집·이용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수집·이용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고유식별정보 ²⁾ 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4	민감정보 ³⁾ 수집·이용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수집·이용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민감정보 ³⁾ 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5	제3자 제공 ⁴⁾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⁴⁾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6	목적 외 활용 ⁵⁾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 ⁵⁾ 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 1)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2) 고유식별정보 :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있음
- 3)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4) 제3자 제공 : 사업자(공공기관)가 제3자(다른 사업자·기관·단체·개인)의 업무나 이익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
- 예시) 신용카드 회사에서 자사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제휴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 5) 목적 외 활용 예시 :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물품 배송 목적으로 수집한 고객의 전화번호를 홍보 목적의 문자 메시지 전송에 활용하는 것

5. 사업자(공공기관)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공인인증서, I-PIN(아이핀), 이메일, 핸드폰, 신용카드)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응답해주시시오

귀하는 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사업자(공공기관)는 해당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알고 있다	잘 안다	매우 잘 안다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	별로 이행하지 않는다	이행하고 있다	대체로 잘 이행 하고 있다	매우 잘 이행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6. 귀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가장 사용이 편리한 매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선택 가능)

- ① 공인인증서 () ② I-PIN(아이핀) () ③ 이메일 인증 ()
 ④ 핸드폰 인증 () ⑤ 신용카드 인증 () ⑥ 기타(직접기입 :)

침해 및 피해구제

7. 귀하는 지난 1년간 본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험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유형으로 몇 번 정도 침해되었습니까?

*개인정보 침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유출·노출 등으로 인해 정보주체가 자기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
----------	--

침해유형		예시	침해 경험			침해 횟수			
			있음	없음	모름	1회	2회	3회	4회 이상
1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홍보 문자 전송 등)	①	②	③	①	②	③	④
2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입사(또는 아르바이트) 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필수 기재 사항으로 지정 * 주민등록번호는 입사지원 시가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필요한 정보	①	②	③	①	②	③	④
3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	환자 진료예약을 위해 수집한 연락처를 동의를 받지 않고 병원 홍보 목적으로 활용	①	②	③	①	②	③	④
4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의 없이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제휴 보험사 등에 제공	①	②	③	①	②	③	④
5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미파기	홈페이지 회원 탈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유	①	②	③	①	②	③	④
6	주민등록번호 도용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가입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개인정보 유출	관리자 과실 해킹 등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인에게 노출되거나 이용되는 것	①	②	③	①	②	③	④

⇒ “침해 경험”에서 모두 ‘②없음’이나 ‘③모름’으로 응답한 경우, 8번으로 이동

⇒ “7) 개인정보 유출”에 침해경험이 ‘①있다’고 응답한 경우, 7-1번으로 이동

⇒ 그 외에 문항에만 응답한 경우, 7-2번으로 이동

7-1. 귀하는 해당 사업자(공공기관)로부터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통지(항목, 경위, 구제절차 등)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

- [illegible]

7-2. 귀하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것을 알고 난 이후 피해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였다 ()
- ② 정부 및 지자체에 신고·민원을 제기하였다 ()
- ③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118) 등 전문기관에 신고하였다 ()
- ④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 ⑤ 소송을 제기하였다(피해자모임 등을 구성, 공동소송 위임 포함) ()
- ⑥ 사업자 등을 상대로 민원제기 또는 항의를 하였다 ()
- ⑦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 ⇒ 7-2-1번으로 이동
- ⑧ 기타 직접기입 : () ⇒ 8번으로 이동

⇒ 8번으로 이동

⇒ 7-2-1번으로 이동

⇒ 8번으로 이동

*개인정보 분쟁조정	<p>소송외적인 피해구제 절차로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가능(www.kopico.or.kr)</p> <p>위원회는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p>
------------	--

7-2-1. 귀하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피해구제 방법/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
- ② 피해구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 ③ 구제를 받더라도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
- ④ 피해구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
- ⑤ 피해규모가 작아서 구제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
- ⑥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없어서 ()
- ⑦ 기타(직접기입 :)

8. 귀하는 최근 대규모 유출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과다수집 때문에 ()
- ②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자(공공기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
- ③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
- ④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
- ⑤ 유출사고 발생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
- ⑥ 기타(직접기입 :)

9. 귀하는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시 현재의 처벌 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과하다 () ② 과하다 () ③ 적당하다 ()
 ④ 부족하다 () ⑤ 매우 부족하다 () ⑥ 잘 모르겠다 ()

10. 귀하는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이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습니까?

- ① 매우 커졌다 () ② 조금 커졌다 () ③ 별로 커지지 않았다 ()
 ④ 전혀 커지지 않았다 () ⑤ 잘 모르겠다 ()

정보주체 권리보장

11. 귀하는 사업자(공공기관)에게 본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청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예 ⇒ 12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11-1번으로 이동

11-1.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② 알고 있으나 요청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③ 알고 있으나 신청하는 절차가 번거로워서
 ④ 알고 있으나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행할 것 같지 않아서
 ⑤ 기타(직접기입 :)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

12. 귀하는 사업자(공공기관)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업자(공공기관)는 해당 업체(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처리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위탁, 파기, 안전한 관리,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함

- ① 예 ⇒ 12-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13번으로 이동

12-1. 귀하는 사업자(공공기관)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십니까? ()

- ①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 12-1-1번으로 이동
 ② 대체로 확인하지 않는 편이다 ⇒ 12-1-1번으로 이동
 ③ 대체로 확인하는 편이다 ⇒ 13번으로 이동
 ④ 반드시 확인한다 ⇒ 13번으로 이동

12-1-1. 귀하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사업자(공공기관)를 신뢰하기 때문에 ②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이 없어서
③ 내용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④ 내용이 많아 읽어보기 번거로워서
⑤ 처리방침의 내용이 대부분 비슷하여 ⑥ 기타(직접기입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13.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

- ① 모른다 ② 들어본 적 있다 ③ 잘 안다

1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6.1.1.부터는 사업자(공공기관)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 ① 모른다 ⇒ 16번으로 이동 ② 들어본 적 있다 ③ 잘 안다

15. 귀하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복수선택 가능)

- ① 공익광고 () ② 언론(TV, 신문, 라디오 등) ()
③ 인터넷(뉴스, 지식·정보 검색 등) () ④ SNS ()
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교육·홍보 () 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의 캠페인 ()
⑦ 소비자/시민단체 활동 () ⑧ 기타(직접기입 :)

16. 귀하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14.8.7) 사업자(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얼마나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많이 줄어들었다. ② 조금 줄어들었다. ③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④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⑤ 잘 모르겠다.

17. 귀하는 개인정보보호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교육 · 홍보

18. 귀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에 참여하거나 관련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18-1. 귀하가 향후 교육을 받고 싶다면 어떤 기관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 ② 민간컨설팅 회사 ()
③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간단체(협회 등) () ④ 지역 학교 등 교육기관 ()
⑤ 기타(직접기입 :) ⑥ 교육 받고 싶지 않음 ()

19. 귀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복수선택 가능)

- ① 공익광고 ()
- ② 언론(TV, 신문, 라디오 등) ()
- ③ 인터넷(뉴스, 지식·정보 검색 등) ()
- ④ SNS ()
- 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교육·홍보 ()
- 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의 캠페인 ()
- ⑦ 소비자/시민단체 활동 ()
- ⑧ 기타(직접기입 :)
- 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알지 못함

인식 변화

20. 귀하는 작년대비 사업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어떻게 변화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 같다
- ②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대체로 인식하는 것 같으며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 ③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부족한 것 같으며 이행도 형식적인 수준이다
- ④ 법 시행 전과 다를 것이 없다
- ⑤ 법 시행 전에 비해 인식과 이행 수준이 낮아진 것 같다
- ⑥ 잘 모르겠다

21. 귀하는 작년대비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절차가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복잡해진 것 같다 ⇒ 21-1번으로 이동 ② 약간 복잡해진 것 같다 ⇒ 21-1번으로 이동
③ 변화가 없는 것 같다 ⇒ 22번으로 이동 ④ 간소화된 것 같다 ⇒ 22번으로 이동
⑤ 잘 모르겠다 ⇒ 22번으로 이동

21-1. 귀하는 작년대비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절차가 복잡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도 불편하지 않다
- ② 복잡한 절차로 불편함을 느끼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다
- ③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불편함이 너무 크다
- ④ 불편함만 커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같다
- ⑤ 기타(직접기입 :)

22. 귀하는 고객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기업(기관)선호 및 제품(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정책 제언

2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부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 ① **[처벌 강화]** 고의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무단 수집·이용·제공, 유출 등)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 ② **[처벌기준 합리화]** 침해된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건수, 해당 사업자(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처벌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 ③ **[기술개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적극 보급해야 한다
- ④ **[소상공인 계도]** 생업으로 바빠서 법을 알지 못하고 지키기도 어려운 소상공인은 처벌하기 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를 잘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어야 한다
- ⑤ **[소상공인 기술지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기술 보급, 상담,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⑥ **[홍보 및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널리 알리고 교육해야 한다
- ⑦ **[캠페인 등 실천운동]** 민간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자 대상 캠페인 실천 운동 등을 추진해야 한다
- ⑧ **[인센티브 부여]** 개인정보 보호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우수기업은 표창을 주는 등 적극 격려해야 한다
- ⑨ **[전문인력 양성]**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고 기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⑩ 기타(직접기입 : _____)

2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응답자 통계

DQ1. 직업	① 남 ② 여
DQ2. 연령	만 _____ 세
DQ3. 최종 학력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학재학 ④ 대졸 ⑤ 대학원(석사)재학 ⑥ 대학원(석사)졸업 이상
DQ4. 거주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DQ5. 직업	① 무직 ② 학생 ③ 전업주부 ④ 자영업 ⑤ 회사원 ⑥ 기타()
DQ6. 가구 월소득	① 1백만원 미만 ② 1백~2백만원 미만 ③ 2백~3백만원 미만 ④ 3백~4백만원 미만 ⑤ 4백~5백만원 미만 ⑥ 5백~6백만원 미만 ⑦ 6백~7백만원 미만 ⑧ 7백~8백만원 미만 ⑨ 8백~9백만원 미만 ⑩ 9백~1천만원 미만 ⑪ 1천만원 이상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